

최종 보고서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 도입 실증연구

2020.2. ~ 2020.9.

연구책임자: 지병근(조선대학교)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 도입 실증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연구책임자: 지병근(조선대학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지 병 근
공동연구원	송 경 오
공동연구원	안 병 철
공동연구원	이 건 근
공동연구원	이 대 용
공동연구원	조 윤 형
공동연구원	최 선
공동연구원	최 흥 엽
연구보조원	류 경 훈
연구보조원	황 소 미

요약문

I.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의 도입 및 운영효과 검증

-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에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다양한 핵심요소들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과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파일럿 연구(pilot study)임
- 공영형 사립대는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대학유형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기 이전에 ‘예비시험(pre-test)’의 필요성이 있음
- 예비시험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용성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수립을 위한 운영모델의 개발

- 본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세부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함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다양한 핵심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하고자 함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1)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국가재정부담, 2) 사립대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3) ‘일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편중 지원, 4) 부실사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 조선대학교 사례 분석의 장점

-공영형 사립대학에 부합하는 민립대학의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 : 조선대학교는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민립대학의 특성을 갖고 있음. 조선대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한 민립대학임. 다만, 민립이라는 법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통상적으로 사립대학으로 분류되어 왔음.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민립대학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와 부합함

-대학구성원 강한 추진 의지와 높은 수용성 : 본 대학교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제도에 관해 근래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관해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음

나. 연구의 내용

○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요소 분석

-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일반적으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대학재정을 지원하고,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참여시켜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정부영역에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에 대학운영시스템을 개편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핵심요소에는 공익인사의 법인이사회 참여, 재정투명성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등이 포함되며, 대학의 특성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 요소 및 실행 항목

- 본 연구는 ① 법인조직 차원에서 공익인사의 참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② 재정 투명성 차원에서 재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③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대학의 공적 역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④ 대학 특성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실행 항목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함

■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요소 및 실행항목

핵심요소	기실행/ 실행예정 항목
법인이사회 구성	-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며 공익이사로 이사회 구성 - 이사회 임원 증원 및 연임제한 권고
재정투명성	- 대학평의회 내실화 -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재정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기여	- 대학의 공적 역할 - 지방정부, 지역산업체, 지역시민사회와의 연계
대학 특성	- 민립 대학 정체성 강화 - 대학 구성원의 실행 의지 구축

다.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에 관한 시범운영 계획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하고자 함

- 법인조직 운영계획 및 가설

• 공익이사 및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 및 운영

•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 제한(권고)

• 법인조직 차원의 연구 가설 :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제도 및 개방감사 제도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 재정위원회 신설·운영계획 및 가설

•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재정 차원의 연구 가설 :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 운영의 책무성을 높일 것이다

- 지역사회기여 차원의 운영계획 및 가설

•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강화

• 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 지역사회기여 차원의 연구 가설 :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과 지역사회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공영형 사립대학의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들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함

- 사전/사후 패널(panel) 조사를 실시함. 교수, 직원, 학생 등의 학내구성원이 참여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동일한 집단에 대해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 도입을 전후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변화요인을 분석함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시민들이 사립대(법인, 재정, 지역사회기여도 등) 및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함
-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법인조직 차원에서 이사, 이사회에 참여한 공적인사, 개방감사, 이사회 직원 등, 재정 차원에서는 재정위원회 위원, 유관업무 담당직원, 이사회 참관인, 시민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운영 평가분석을 실시함
- 초점집단조사(Focus Group Investigation, FGI)를 실시함. 공영형사립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교수들과 구분되는 학생들과 직원들의 기대와 우려를 파악하기 위한 집단별 초점집단 조사를 시행함

○ 법인조직 차원 성과평가 방법

- 사전/사후 패널조사
- FGI 조사

○ 재정투명성 차원 성과평가 방법

- 사전/사후 패널조사
- FGI 조사

○ 지역사회기여 차원 성과평가 방법

- 사전/사후 패널조사
- FGI 조사

II.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핵심 요소 경험

가. 운영: 대학자치와 민주적 대학경영

- 조선대학교는 1988년 민주화 이후 다른 사립대학과 달리 민립대학으로서 공영형 사립대와 유사한 특성을 갖추고 있었음. 조선대학교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장기간의 임시이사체제(1988-2010)를 경험하면서 ‘박철웅 일가’에 의해 족벌사학으로 전락했던 구체제를 청산하고 호남인이 대학의 주인이라는 설립정신을 구현해야한다는 의식이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됨으로써 더 이상 ‘구체제로의 회귀’를 갈망하거나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구성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학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자협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대학발전을 위한 경영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1988년 이후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사운영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이 실현되어왔으며, 1990년 대학 최초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공정한 교수공채 시스템이 구축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대학본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 대학평의회를 통해 학칙의 제개정을 심의하거나 대학의 예결산을 자문하고 있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대학 구성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

나. 한계 : 이사회와 불안정성과 대학자치기구의 기능 제약

- 2010년 정이사체제로 이행한 이후 비리로 물러난 구경영진측이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당성이 취약한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분으로 3기 정이사를 정상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등 대학을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함(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이명박 정부 인사인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가 정이사체제에서 조선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임)
- 총장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학내 파벌들이 이사회에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 이사진과 결탁하여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학내 갈등이 심화됨(총장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제2기 정이사체제에서는 구경영진 추천이사가 주도하면서 이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이 극대화 되었으며, 외부인사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형성되고 이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성이 강화되며 일종의 ‘학내 구성원 중심주의’가 형성됨. 이러한 경향성은 2018년 중반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임시이사체제에서도 지속됨
- 대학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이나 자문기관이라는 제한된 권한, 그리고 운영상의 미숙으로 사실상 대학본부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수동적 기관에 머무르게 하였음

다. 과제: 이사회 정상화 및 대학자치기구의 기능 강화

-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정당성을 갖춘 정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내부의 상호존중과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제기함. 대학 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함
- 대학자치기구에 대한 존중과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기함. 대학재정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됨

Ⅲ. 공영형 사립대 핵심 요소 실행결과

가. 재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로서 재정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을 위해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투명한 대학 재정정책을 지향하는 것임. 대학재정위원회설치는 대학 재정시스템의 제도설계이며, 이러한 제도설계는 대학재정결정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대학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것임.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재정위원회를 신설하고 2차례 개최 운영하였음
- 국립대학법인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국립대학회계법과 인천대와 전남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였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등 사립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비교분석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 기존의 학내 재정관련 사안을 심의 혹은 자문하는 기관의 기능을 비교함. 이를 토대로 조선대학교의 정관 개정안 및 재정위원회 신설안을 제안함
- 연구단이 주최한 공청회와 교무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 기능 중복과 재정위원회의 심의사항들 가운데 이사회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음. 규정안 마련 과정에서 네 가지 쟁점(심의사항의 범위, 위원장 호선여부, 학내구성원 대비 외부위원의 수, 시행시한)이 제기 되었으며, 특히 학내 구성단위별 위원 배분, 외부인사의 규모 등에 관한 이견이 제기되었음. 조선대 대학본부는 위원회 위원 규모의 확대가 소집 요건 충족을 포함한 운영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음
-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성과로는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효율적인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임

나. 이사회 시민 참관인 제도 도입

- 공청회를 통해 이사회 참관인제도, 학내 구성원 단위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지역 사회 자문단 구성 및 의견 청취 등을 제안함. 이사회에 시민들의 참관을 2회(각 2인 참여) 실시하였음. 시민단체들 가운데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기관의 인사들을 초빙함
- 이사회 시민 참관인 제도를 통해 지역민들이 조선대의 현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사회는 참관인들의 존재만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게 됨. 다만, 학내 구성원의 참관 필요성, 이사회의 비공개 사안 참관 허용문제가 제기됨

다.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이사 후보추천

- 대학평의원회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 2인을 추천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들과 근본적인 불신관계에 놓여있는 ‘구경영진’ 측 인사들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함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후보추천이 이루어졌으며, 공영형 사립대의 위상에 조응하는 후보추천을 위해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후보추천 요청공문을 보냄. 개방이사후보로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추천함(6인 가운데 2인)
- 구경영진 측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이 최소화됨으로써 구성원과의 갈등 완화, 시민단체 대표의 정이사 선임으로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등이 가능해짐. 다만, 개방이사 및 정이사 후보 추천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은 물론 후보 추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라. 이사회 개혁

- 이사회 연임제한, 학내 구성원 단위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자문단 구성 및 의견 청취 등이 제안됨. 이사회는 중임 제한에 소극적이었으며,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기에 논의되기 어려웠음
- 개방감사 1인 추가 선임은 그 필요성에 대한 학내 공감대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정이사체제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

마.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 2020년 1학기에만 조선대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MOU 체결은 100여건에 달함.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단순 상호교류협력 이외에 광주광역시와의 인공지능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상호협력, 전남도청과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공동 협력 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과의 선취업 후학습 진흥 협약 등이 있음
- 대학 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하여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링크+ 등 지역산업계와의 협조 관계를 구축함

바. 기타

- 교원인사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총장의 과도한 개입을 피하고 학과의 의지를 존중함으로써 학내갈등 요인이 감소함
- 연구윤리연구원을 신설하여 대학의 연구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역대학에 모범사례를 제공함 다만, 여전히 연구윤리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함
-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급 제도나 교내 연구비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년계열 교수 대신 비정년계열 교수를 충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려움

IV. 공영형사립대에 대한 인식

가. 사립대학

- 시민들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음.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반면, 시민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시민 및 학내구성원들은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공익이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냄

나. 공영형사립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사립대 정책(직원 91.8%, 교원 86.5%, 학생 85.0%, 시민 74.2%)과 조선대의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직원 94.1%, 교원 90.8%, 학생 88.8%, 시민 82.7%)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와 지지(학내 구성원>시민)
- 다만,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하며 추가적인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다수임. 이는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이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공영형사립대가 대학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음

다. 재정위원회 도입 등 법인 개혁

- 재정위원회의 도입이 대학재정의 효율적 배분,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도

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큼

-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참관허용과 이사중임 제한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시민들은 지역사회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인사, 교원과 직원은 총장의 이사참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음

V. 정책 제안

가. 이사회 참관인 제도

- 이사회가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데 구속감을 느낌. 이사회가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을 다룰 경우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회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참관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학부모, 학내구성원 단위 대표 등 학내외 인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세력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함. 참관인 제도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나. 재정위원회

-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범위의 조정이 필요함
-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재정위원회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과 재정위원회를 대학 혹은 법인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대학산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재정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고, 법인 산하에 둘 경우 이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러한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으나 독립성의 제약이 불가피함
-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외부인사의 참여만으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 측에서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1인의 외부인사는 추천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위원추천단위 구체적 명시)
- 외부인사가 대학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전문경력인사의 위원 참여)
- 부적절한 위원의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임명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해촉 규정마련, 위원의 사임 혹은 위원정원의 2/3 동의 조건).

- 위원회가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이사 증원 및 이사회 중임 제한

- 사립대학은 이사들의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이사회 내부의 담합을 통해 임기를 영구화할 위험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중임 혹은 연임의 횟수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정이사들의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을 1회만 허용하는 방안(총 6년 이내)이 권장할 만함
- 물론 사립학교의 이사임기에 관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정관 재개정을 통해 연임제한을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이사의 기본 규범으로 여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 공익이사의 경우 이를 기본 자격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고, 미국의 상원처럼 1/3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선대의 경우 정이사가 9인 정원이고 개방이사가 3인이기에 공영형사립대의 공익이사 비율이 50%로 명시될 경우 사립대학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사는 1인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립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증원이 불가피함

라. 구경영진측 추천인사를 배제한 정이사체제로의 발전

-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과 근본적인 불신관계에 놓여있는 구경영진측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이사회가 대학경영의 정당성(legitimacy)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음
-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대체로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음
- 구경영진측 추천을 받은 인사가 스스로 이들과의 단절을 선언할 수 있도록 견인이 필요함

마. 학내 구성원 단위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 이사회가 대학경영의 주체로서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통상적으로 이사들은 평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일부 인사들과의 사적인 회합을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급급하며, 공식적인 학내 구성원 대표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이며, 이들과의 만남은 주로 이미 심각한 갈등상황에 이른 후에나 이루어짐

- 학내 구성원 대표들 역시 이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꺼리며 이사회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음
- 이사회가 일상적으로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내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바.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관 반영, 지역사회 자문단 구성 및 연구기관 지원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원 및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
- 대학의 발전계획 및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명시 권고
- 이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대학경영을 하려면 학내 구성원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통상적으로 이사진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나 경제계 인사들과 골프회동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편향된 의견만을 들을 가능성이 높음
- 조선대의 경우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를 포함하는 자문단 구성이 필요함

사. 총장선출제도의 민주주의 심화 및 정책 선거

- 선거제도의 민주화(피선거권, 선거권 확대-실질적인 시민 참여 허용, 비정년계열/비정규직 선거권 부여, 외부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등)
-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과정 제도화(개별 접촉보다 정책토론회 활성화)
- 파벌 형성 및 갈등 억제(3회 미만 후보출마 허용)
- 총장과 이사회 간의 역(권한과 책임 구분)을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 공영형사립대 정책과 관련 제안: 공영형사립대정책의 과감한 추진

- 대학교 이외에 법인산하 전문대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있을 경우 재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함
-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전폭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성공여부는 사립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재정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에 대한 지지를 창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영형사립대에 참여하려는 대학들이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이후의 과제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공영형사립대 핵심 요소 도입 실증 연구 개요>

항목	도입요소	세부 실행 내용	미이행 요소 및 장애요인	성과 및 한계(*)	제도개선 제안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공익적 인사의 이사회 참여 및 이사회 참관제 도입	○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출신 공익적 인사들로 이사회 구성	- 이행 - 구경영진의 측의 이사 추천 및 이에 대한 구경영진 반발로 인한 학내 갈등 위험	• 이사회 의 정당성 확보로 구경영진과의 갈등 근절 • 학내 안정화 * 구경영진 측 1인 추천	○ 불법비리행위로 퇴출된 구경영진의 정이사 추천권 배제 혹은 최소화 ○ 이사회와 구성원 대표 간 협의 정례화
		○ 개방이사의 민주적 선출 및 지역 시민단체 출신 인사 추천	- 이행	•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개방이사 선출 • 시민단체 출신 인사 추천으로 시민사회와 교감형성 * 충분한 공모기간 부재	○ 충분한 공모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광주광역시 광역시장 개방이사 후보추천 요청	- 미이행: 미추천으로 개방이사 후보에 지자체 추천인사가 포함되지 못함	• 최초의 지자체 추천인사의 개방이사 참여 요청 시도 실패 * 충분한 추천 요청기간 부족 * 지자체 추천 의지 불신	○ 지자체의 고등교육 책임성 제고 ○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시의회 조례 제정
		○ 이사회 참관제도 시행	- 이행	• 참관인제 도입에 따른 정제된 이사회 운영(공정성 증대) • 지역사회 요구 반영 가능성 제고(개방적 이미지 제고, 혁신 의지 공포) * 참관인 선정 시 개방성 부족	○ 참관인 선정 기준 구체화(학내인사 참관) ○ 방청인 제도 도입을 통한 개방성 강화 고려 ○ 비공개사안 선정 기준 마련
	(2)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 제한(권고)	○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 제한(권고) -법인의 사유화 방지 및 공익이사 참여기회 확대	- 권고 이행 - 정이사체제 이행기로 인해 논의가 지연됨 - 이사회 정원의 한계로 추가 개방감사의 수 늘리기 어려움	•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고려한 이사정수 조정의 필요성 및 사유화 방지책으로 중임제한에 대한 학내외의 지지 확인 • 법인개혁 논의 토대 마련 * 이사회의 논의 기피성향	○ 사유화에 악용되는 이사 연임/중임 제한 법제화 ○ 이사 연임/중임 제한 사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미국의 상원처럼 1/3씩 순차적으로 이사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항목	도입요소	세부 실행 내용	미이행 요소 및 장애요인	성과 및 한계(*)	제도개선 제안
민주적 대학운영	(1) 민주적 총장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이후 9회의 총장직선제 경험 ○ 교수, 직원, 학생, 총동창회 회원 선출권 부여 ○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선출규정 초안 제정, 이사회가 이를 존중 	-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행정의 민주적 책임성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 선출직 ‘강한 총장’을 통한 이사회 독단경영 견제 * 피선거권 및 선거권 제약, 제한된 정책선거, 교외 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 ‘민주주의의 과부하(democratic overload)’, 파벌형성과 논공행상, 개혁 회피, 이사회 간의 갈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제도의 민주화(피선거권, 선거권 확대-실질적인 시민 참여 허용, 비정년계열/비정규직 선거권 부여, 외부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등), ○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과정 제도화(개별접촉보다 정책토론회 활성화) ○ 파벌 형성 및 갈등 억제(3회 미만 후보출마 허용)
	(2) 공정하고 자율적인 교원 공채 및 연구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자율성 존중 교원인사 ○ 연구윤리 확립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자율성을 존중한 교원인사 관행확립으로 채용투명성 및 학내갈등 완화 • 연구윤리연구원 신설(2020.3.1.)에 따른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지역대학 모범 사례 창출(독립성, 학부/대학원/연구원으로 대상 확대, 위원의 전문성 강화) * 대학-학과 발전계획 충돌(재정악화로 학과 요구 교수충원의 어려움) * 연구윤리 기준에 대한 합의형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의 교수임용 권한 남용 방지책 마련(공채심사 시 가부 결정권만 부여, 학과교수들에게 거부권 부여 및 기준 마련) ○ 구체적인 연구윤리 기준 마련

항목	도입요소	세부 실행 내용	미이행 요소 및 장애요인	성과 및 한계(*)	제도개선 제안
재정투명성	(1)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통해 신장설 운영(법인정관 개정, 위원회 규정 신설)	- 이행 - 17명으로 구성, 외부위원 5인 포함 - 법인 정관 개정, 위원회 규정 신설 - 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회 운영경험 축적 재정투명성 강화, 재정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논의 가능해짐(외부 회계사 참여) 장기적인 대학재정 기획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등심위/대평과 기능중복 * 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충돌 요인 존재 * 외부인사들에게 충분한 재정 정보 제공 기피 성향 존재 * 이사회에 권한 침해 가능성 * 재정위원회 결정의 사립학교 이사회 구속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심위/대평과 기능 중복 조정 ○ 적절한 수의 외부 인사 및 재정전문가 참여 제도화 및 외부인사 추천 권한 분산 ○ 이사가 참여하는 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 확보
지역사회 기여	(1)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강화	○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 실행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산업계와 협력 활성화(2020.3.1 이후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등 관공서 혹은 민간기관 75개와 MOU 체결) *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구체화 노력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원 및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 ○ 대학의 발전계획 및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명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2) 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 산업, 고교교육, 체육/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통한 공적 기능 수행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13년 연속 선정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선정 * 지역의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실행계획 마련을 통한 공적 기능의 강화 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공공성 지향 명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목차

요약문.....	vi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3. 연구 방법.....	11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II. 선행연구 분석 및 검토	
1.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17
2. 공영형 사립대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19
3. 선행연구 분석결과.....	24
III. 조선대학교의 경험: 공영형 사립대 요소	
1. 조선대학교의 민주화 및 법인 정상화 과정.....	26
2. 대학 자치와 총장 선거.....	26
3. 투명한 대학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29
4. 민주적 대학혁신.....	32
5. 민주적 개방이사 선출 및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36
6. 소결: 성과와 과제.....	38
IV.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 실행	
1. 재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41
2.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 및 운영.....	88
3. 2020년 민주적 개방이사 선출과 공익이사 포함 정이사 체제 구성.....	91
4. 총장선임.....	96
5. 지역사회 기여.....	101
6. 소결.....	105
V. 인식조사 결과	
1. 공영형 사립대 인식조사 개요: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및 내용.....	108
2. 응답자 특성.....	111
3. 분석 결과 I : 기초 통계	118
4. 분석 결과 II : 공영형 사립대 효과에 대한 인과성 분석_사전설문.....	149

5. 추가 분석 결과: 광주전남과 전국 시민들의 인식 조사.....	157
6. 소결: 공영형 사립대 인식.....	200
VI.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1. 재정위원회 위원 심층인터뷰.....	203
2. 이사회 참관인 심층인터뷰.....	213
3. FGI 결과.....	224
VII. 결론	
1.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요소 경험.....	239
2. 공영형 사립대 핵심 요소 실행결과.....	241
3. 공영형사립대에 대한 인식.....	247
4. 정책 제안.....	248
언론보도자료	
1.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관련 언론 보도자료(종합).....	252
2.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관련 언론 보도자료(목록).....	256
3.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관련 언론 보도자료(세부).....	264
부록	281
참고문헌	407

표 목록

<표 1-1>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2018년).....	4
<표 1-2>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 요소 및 실행항목.....	5
<표 1-3> 재정위원회 구성안(2020.2.18.).....	8
<표 1-4>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안, 2020.2.18.).....	9
<표 1-5> 공영형 사립대학 연구모형.....	10
<표 2-1> 선행연구 내용 정리.....	22
<표 2-2> 선행연구 분석 결과.....	24
<표 3-1>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기능.....	27
<표 3-2>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개정2019.03.25.).....	27
<표 3-3> 조선대 총장선거 구성원 단위별 선출권 비율 및 선출방식(제8대~제17대:1988~2019).....	28
<표 3-4> 등록금심의위원회 세칙.....	29
<표 3-5-1> 전체 연구과제 및 산학공동연구과제 연구수주(건, 연구비).....	31
<표 3-5-2> 특허 및 기술이전(건, 등록료, 수입료).....	31
<표 3-5-3>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및 자회사 현황.....	31
<표 3-5-4> 조선대학교 산학협력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일부 발취).....	32
<표 3-6-1> 국민공익형 이사제의 공통요건과 세부 구성내용.....	33
<표 3-6-2>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2018년).....	34
<표 3-7> 조선대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2018).....	34
<표 3-8> 조선대 혁신위원회 관련 일정.....	35
<표 3-9> 개방이사의 정수에 관한 정관규정.....	37
<표 3-10> 정이사후보 추천 인원(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추천요청).....	38
<표 4-1> 인천대와 조선대의 재무관련 정관 규정.....	42
<표 4-2> 국립대학회계법의 재정위원회 설치 규정.....	43
<표 4-3> 전국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구성현황.....	44
<표 4-4> 재정위원회 관련 규정안 비교.....	48
<표 4-5>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구성 규정(안).....	54
<표 4-6> 타대학 등록금 심의 관련 정관 규정.....	58
<표 4-7> 재정위원회의 공영화 요소 비교(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대비).....	65
<표 4-8> 대학재정 기구의 장단점 비교.....	66
<표 4-9> 정관변경 및 제 규정 제·개정안.....	67
<표 4-10>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가칭)재정위원회 비교.....	68
<표 4-11> (가칭)재정위원회 신설관련 관계자 간담회 토론내용.....	71
<표 4-12> (가칭)재정위원회 신설관련 관계자 간담회 토론결과.....	72
<표 4-13> (가칭)재정위원회 관련 대학본부 의견 청취결과.....	74
<표 4-14>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76

<표 4-15>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명단.....	80
<표 4-16> 대학재정기구 조정안.....	85
<표 4-17> 대학본부 설치 vs 법인이사회 설치 비교.....	87
<표 4-18> 개방이사 후보 선출 경과.....	93
<표 4-19> 조선대학교 MOU 체결(2020.3.1.~20207.21 현재).....	103
<표 4-20> 2020학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105
<표 5-1> 응답자 구성.....	111
<표 5-2-1> 응답자-교원.....	112
<표 5-2-2> 응답자-직원.....	114
<표 5-2-3> 응답자-학생.....	116
<표 5-2-4> 응답자-시민.....	117
<표 5-3-1> 사립대학의 투명성.....	118
<표 5-3-2>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	119
<표 5-3-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120
<표 5-3-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121
<표 5-3-5>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122
<표 5-3-6> 정부 재정지원 및 공익인사 참여.....	123
<표 5-4-1> 조선대학교 운영 전반.....	124
<표 5-4-2> 조선대학교 재정 운영.....	125
<표 5-4-3>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	126
<표 5-4-3-1>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_1순위만.....	127
<표 5-5-1>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	128
<표 5-5-2> 공영형 사립대학 사전 정보 획득 경로.....	129
<표 5-5-3> 문재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정책 취지 공감.....	130
<표 5-5-4>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한 선호도.....	132
<표 5-5-5>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이사회의 대학운영.....	133
<표 5-5-6> 사립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인식.....	134
<표 5-5-7>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시 기대효과.....	135
<표 5-5-8> 재정위원회 구성.....	136
<표 5-5-9> 재정위원회 도입과 사립대 재정 운영.....	137
<표 5-5-10> 공영형 사립대의 사회적 책임.....	139
<표 5-5-1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개방형 설문 내용 분석.....	144
<표 5-5-12> 광주/전남 대표 사립대학.....	146
<표 5-5-13> 광주/전남 대표 대학(1순위/2순위).....	147
<표 5-5-14> 지난 10년 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147
<표 5-5-15>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148
<표 5-5-16>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중요성.....	148

<표 5-6-1> 사립대학 현황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1).....	150
<표 5-6-2> 사립대학 현황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2).....	150
<표 5-6-3>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 신뢰도 분석 결과.....	151
<표 5-6-4> 재정위원회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152
<표 5-6-5>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과 사회적 책임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152
<표 5-6-6> 변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153
<표 5-6-7> 변수들 간 상관관계 결과.....	155
<표 5-6-8> 회귀분석 결과.....	156
<표 5-7-1> 광주·전남 조사 응답자 구성.....	157
<표 5-7-2> 전국 조사 응답자 구성.....	158
<표 5-8-1> 사립대학의 투명성: 광주전남.....	159
<표 5-8-2> 사립대학의 민주성: 광주전남.....	159
<표 5-8-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광주전남.....	160
<표 5-8-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광주전남.....	160
<표 5-8-5>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광주전남.....	160
<표 5-8-6>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공익인사 참여: 광주전남.....	161
<표 5-8-7>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 광주전남.....	162
<표 5-8-8>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공감: 광주전남.....	162
<표 5-8-9>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 광주전남.....	162
<표 5-8-10>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 광주전남.....	163
<표 5-8-11>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기대효과: 광주전남.....	165
<표 5-8-12>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광주전남.....	166
<표 5-8-13> 지역발전을 위한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중요도: 광주전남.....	167
<표 5-8-14> 조선대학교 인지도: 광주전남.....	167
<표 5-8-15>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선호도: 광주전남.....	167
<표 5-8-16> 조선대학교 운영 전반: 광주전남.....	168
<표 5-8-17> 조선대학교 재정운영: 광주전남.....	169
<표 5-8-18>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 광주전남.....	170
<표 5-8-19> 광주전남 시민인식 조사 주요문항 긍정/부정 경향.....	172
<표 5-9-1> 사립대학의 투명성: 전국.....	174
<표 5-9-2> 사립대학의 민주성: 전국.....	175
<표 5-9-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전국.....	175
<표 5-9-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전국.....	176
<표 5-9-5>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전국.....	177
<표 5-9-6>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 전국.....	178
<표 5-9-7> 이사회에 공익인사 참여: 전국.....	178
<표 5-9-8>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 전국.....	179

<표 5-9-9>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공감: 전국.....	180
<표 5-9-10>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투명성): 전국.....	180
<표 5-9-11>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민주성): 전국.....	181
<표 5-9-12>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사회적 책무성): 전국.....	182
<표 5-9-13>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공익형 이사 참여): 전국.....	182
<표 5-9-14>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이사회 외부참관 허용): 전국.....	183
<표 5-9-15>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이사회 이사 정수 확대): 전국.....	183
<표 5-9-16>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이사의 중임/연임 2회 제한): 전국.....	184
<표 5-9-17>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총장의 당연직 이사 참여): 전국.....	185
<표 5-9-18>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지역사회 대표인사의 참여): 전국.....	185
<표 5-9-19> 독단적 운영방식 및 투명/민주적 사립대학 육성: 전국.....	186
<표 5-9-20> 지방사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촉진: 전국.....	187
<표 5-9-21>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지역인재 육성 노력): 전국.....	187
<표 5-9-22>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대학시설 개방): 전국.....	188
<표 5-9-23>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전국.....	189
<표 5-9-24>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지자체/시민사회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전국.....	189
<표 5-9-25> 사립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중요성: 전국.....	190
<표 5-9-26> 사립대학의 재정운영(효율적 운영): 전국.....	191
<표 5-9-27> 사립대학의 재정운영(투명한 공개): 전국.....	191
<표 5-9-28> 사립대학의 재정운영(민주적 수립/집행): 전국.....	192
<표 5-9-29>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지역사회 기여방안 포함): 전국.....	192
<표 5-9-30>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적절한 감시와 견제): 전국.....	193
<표 5-9-31> 사립대학의 재정운영(별도 감시/감독 장치 필요): 전국.....	194
<표 5-9-32>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총장 추천 인사 참여): 전국.....	194
<표 5-9-33>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구성원들의 의견반영): 전국.....	195
<표 5-9-34>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전문가의 참여): 전국.....	196
<표 5-9-35>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지역사회 시민단체 참여): 전국.....	196
<표 5-9-36>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외부인사 참여): 전국.....	197
<표 5-9-37> 전국 시민인식 조사 주요문항 긍정/부정 경향.....	198
<표 10-1> 재정위원 인터뷰 일정.....	203
<표 10-2> 이사회 참관 및 인터뷰 일정.....	214
<표 10-3> FGI 참가자.....	225
<표 10-4> FGI 일정.....	225
<표 10-5>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정리.....	235
<표 11-1>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요소 기존경험 요약.....	239
<표 11-2>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 효과 연구 개요.....	243

그림 목록

<그림 1-1>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연구의 목적.....	1
<그림 1-2>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연구의 필요성.....	2
<그림 3-1> 혁신위원회 출범식(2019.12.4.).....	35
<그림 4-1> 제1차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2020.05.08.).....	81
<그림 4-2> 제2차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2020.05.18.).....	82
<그림 4-3> 대학본부-재정위원회.....	87
<그림 4-4> 법인이사회-재정위원회.....	87
<그림 4-5> 제5차 조선대학교 이사회(2020.04.23.).....	90
<그림 4-6> 제6차 조선대학교 이사회(2020.05.21.).....	91
<그림 5-1> 사립대학의 투명성.....	118
<그림 5-2>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	119
<그림 5-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120
<그림 5-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121
<그림 5-5>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122
<그림 5-6> 정부 재정지원 및 공익인사 참여.....	123
<그림 5-7>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_1순위만.....	128
<그림 5-8>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	129
<그림 5-9> 공영형 사립대학 사전 정보 획득 경로.....	130
<그림 5-10> 문재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정책 취지 공감.....	131
<그림 5-11>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한 선호도.....	132
<그림 5-12>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이사회의 대학운영.....	133
<그림 5-13>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시 기대효과.....	136
<그림 5-14> 재정위원회 도입과 사립대 재정 운영.....	138
<그림 5-15> 공영형 사립대의 사회적 책임.....	139
<그림 5-16> 전체(교원, 직원, 학생, 시민)-워드클라우드.....	141
<그림 5-17> 교원-워드클라우드.....	141
<그림 5-18> 직원-워드클라우드.....	142
<그림 5-19> 학생-워드클라우드.....	143
<그림 5-20> 시민-워드클라우드.....	143
<그림 5-2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빈도분석.....	145
<그림 5-22>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범주화 분석.....	146
<그림 5-23> 광주전남 시도민 사립대 인식.....	173
<그림 5-24> 광주전남 시도민 사립대 재정지원 및 문재인 정부 공영형사립대 정책 취 지 공감.....	173
<그림 5-25> 광주전남 시도민 조선대 공영형사립대전환 인식.....	174
<그림 5-26> 전국시민 사립대 인식.....	199

<그림 5-27> 전국시민 사립대 재정지원 및 문재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정책취지 공감.....	199
<그림 5-28> 전국시민 교육환경개선 및 공영형 사립대 전환 인식.....	200
<그림 6-1> 재정위원 인터뷰(2020.05.18.).....	204
<그림 6-2> 제5차 이사회 참관 인터뷰(2020.04.23.).....	214
<그림 6-3> 제6차 이사회 참관 인터뷰(2020.05.21.).....	215
<그림 6-4> 학생 및 직원대상 FGI(2020.07.14.~07.15.).....	226

부록 목록

<부록 1> 추진 일정.....	281
<부록 2-1> 사전조사 설문 문항.....	284
<부록 2-2> 사후조사 설문 문항.....	299
<부록 2-3> 광주전남 시민대상 설문 문항.....	306
<부록 2-4> 전국 시민대상 설문 문항.....	313
<부록 3>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 [시론].....	319
<부록 4-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2020.03.26.).....	324
<부록 4-2-1>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011.01.~2020.05.).....	325
<부록 4-2-2>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330
<부록 4-3-1> 조선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및 시행세칙.....	332
<부록 4-3-2> 공영형사립대형 총장선출모델(안).....	340
<부록 4-4> 조선대학교 개방이사 초빙 공고 알림(2020.03.10.).....	350
<부록 5-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오해들.....	351
<부록 5-2>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 실증연구 최종보고회(2020.8.27.) 발표문.....	354
<부록 6-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교원 응답).....	372
<부록 6-2>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직원 응답).....	379
<부록 6-3>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학생 응답).....	382
<부록 6-4>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시민 응답).....	386
<부록 6-5>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재정위원 인터뷰.....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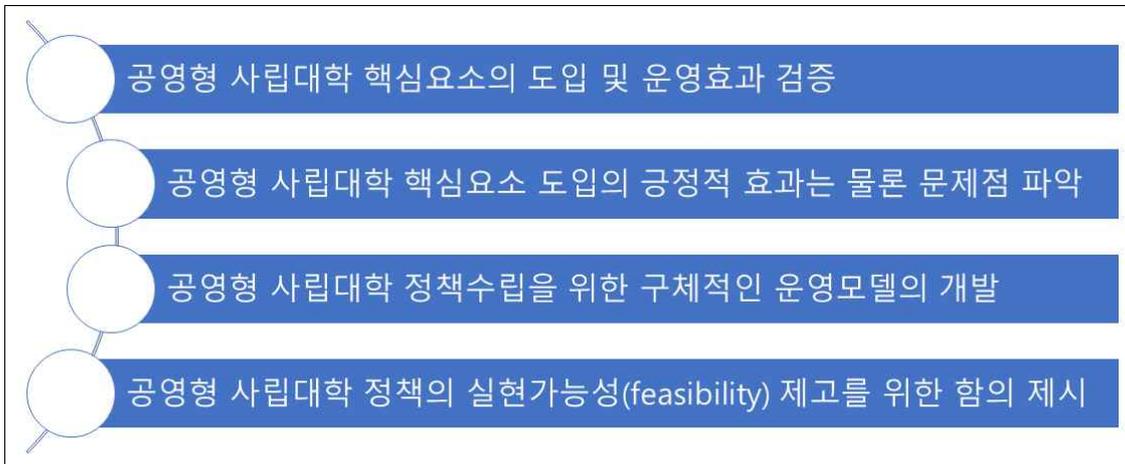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가. 연구의 목적

1)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의 도입 및 운영효과 검증

- 이 연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온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것임
- 이 연구는 조선대학교에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는 것은 물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그림 1-1>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연구의 목적

2)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물론 문제점 파악

-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다양한 핵심요소들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과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파일럿 연구(pilot study)임

3)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모델의 개발

- 이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그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세부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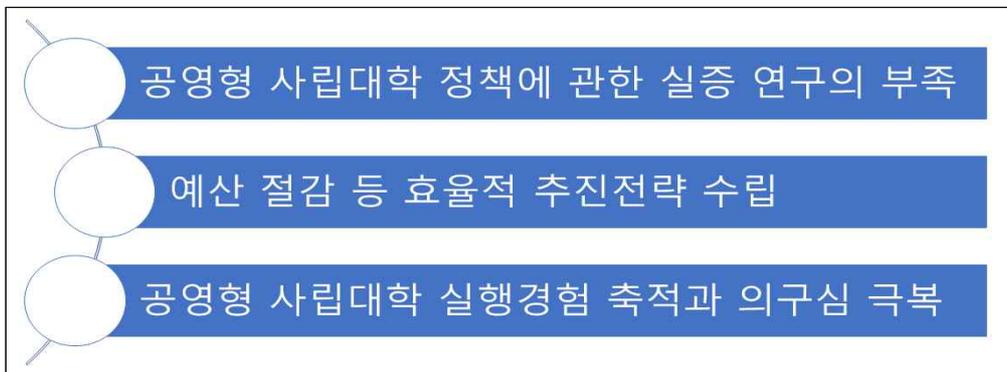
4)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 제고를 위한 합의 제시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다양한 핵심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의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의 필요성

1)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관한 실증 연구의 부진

- 그동안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은 대학의 공공성 강화, 대학 서열화 방지를 통한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지방분권화 시대에 조용하는 지방사립대 육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관학 연계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해왔음
- 이에 비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과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1-2>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연구의 필요성

2) 효율적 정책추진전략 수립

- 공영형 사립대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대학유형일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기 이전에 ‘예비시험(pre-test)’의 필요성이 있음
- 예비시험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용성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연구는 실증연구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함

3)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실행경험 축적을 통한 의구심 극복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1)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국가재정부담, 2) 사립대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3) ‘일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편중 지원, 4) 부실사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지병근 2019a)
- 이러한 우려는 1) 그동안 간과되어 온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2) 사립대의 공공성 강화, 3) 효율적인 교육재정배분을 통한 사립대학육성, 4) 비리사학 근절을 위한 치유책으로서 공영형 사립대가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기우에 불과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요소를 도입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음

다. 조선대학교 사례 분석의 장점

1) 공영형사립대 취지와 일치하는 민립대학의 특성

- 조선대학교는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민립대학’의 특성을 갖고 있음
-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이면서도 국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소수의 이사진에 의해 사유화되어있지 않음

2) 공익적 인사들에 의한 법인운영의 풍부한 경험

- 조선대학교는 1988년 1.8항쟁 이후 장기간 교육부가 파견한 ‘사실상’ 공익적인 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였으며, 2010년 정이사체제로 복귀하였지만 2018년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복귀하였음
- 이러한 경험은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 요소인 공적인사의 학교법인 이사회 참여의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음

3)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구성원들의 높은 이해도와 추진의지

- 조선대학교는 임시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 정이사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짐
- 정이사체제의 구성과정에서도 공영형 사립대 요소를 반영한 이사선임 요구가 구성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아래의 <표 1-1>은 그동안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공영

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온 경과를 정리한 것으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표 1-1>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2018년)

- ▶ 대자협에서 대학본부와 구성원재단위가 협의하여 공영형 사립대추진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함(2018.01.09. 2017학년도 제42차 대자협운영위원회)
-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보고(2018.3.29.)
- ▶ 광주광역시시장후보 면담 및 공약화 요청(2018.4.16.~18.): 민주당 윤민호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주당 이용섭 후보, 양향자 후보 등에게 공약화 요청
- ▶ 이사장 간담회(2018.4.18.), 조선대 혁신위원회 보고 및 협조 요청(2018.05.02.)
- ▶ 교수평의회 대의원회의에서 공영형사립대 적극추진 결의(2018.05.08., 찬성 28명, 기권 1명, 반대 0명, 위임장 포함)
- ▶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 승인(2018.05.28., 총인원439명, 참여인원 310, 찬성 274, 반대 14, 무효 22).
- ▶ 공영형사립대 관련 토론회 개최(2018.05.09., 민주화운동연구원 주최)를 통해 박주선, 김경진, 유성엽 등 현역국회의원들과 이용섭, 나경채, 윤민호 등 주요 광주광역시장 후보들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음

○ 이처럼 조선대학교는 학교법인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특성 가운데 일부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공적인사들이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 요소 구성 및 실행 계획

○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 요소

-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일반적으로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대학 재정을 지원하고,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참여시켜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임(임재홍 2012; 반상진 2015; 임재홍 2017)
-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정부영역에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에 대학운영시스템을 개편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의 핵심요소에는 공익인사의 법인이사회 참여, 재정투명성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등이 포함되며, 대학의 특성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표 1-2>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 요소 및 실행항목

핵심요소	기실행/ 실행예정 항목
법인이사회 구성	-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며 공익이사로 이사회 구성 - 이사회 임원 증원 및 연임제한 권고
재정투명성	- 대학평의회 내실화 -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재정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기여	- 대학의 공적 역할 - 지방정부, 지역산업체, 지역시민사회와의 연계
* 대학 특성	- 대학 정체성 - 대학 구성원의 실행 의지

- 이 연구는 ① 법인조직 차원에서 공익인사의 참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② 재정 투명성 차원에서 재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③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대학의 공적 역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실행 항목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1) 법인조직 차원에서의 실행방안

(1) 학교법인 이사회의 법적 지위

- 사립학교 이사회는 학교법인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장 및 이사를 선임함
- 사립대학은 대학과 학교법인이 분리되어 있지만 대학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형태이므로 학교법인이 법인격을 부여받음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립대학 명의로 권리능력이 수행되지만, 실제로는 학교법인이 법인격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사립대학의 모든 운영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됨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적용받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국립대학의 설립근거는 「국립학교 설치령」이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이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되어 사립대학의 요소를 가미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사립학교법 이사회의 지배구조 변화를 꾀함 공영형 사립대학 이사회는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것임

(2) 조선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공익이사들이 참여하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실행)

- 조선대학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함(2019.11.25.)에 따라 최소한 이사회 구성면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지배구조 변경이 가능하였음
-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정이사 체제는 개방이사 3인과 종전이사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선임하는 6인의 이사로 구성될 것이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육부가 추천한 공익이사일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조선대학교의 종전이사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구성원들과의 갈등으로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못하여 임시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대자협은 지역시민단체들과 함께 교육경력자, 법조인 및 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익형 이사들을 추천하고자 시도한 바 있음 (김성재 2017)
- 최근 임기가 종료된 임시이사체제에서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여하였음
- 교육부가 새로운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사회를 공영형사립대에 준하는 공익이사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에 준하는 과반수의 공익인사로 이사회 구성 추진(권고/실행)

- 공영형 사립대학의 도입은 정부가 영역에서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과반을 공익 이사로 선임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
-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조선대학교의 설립이념에 맞고 교육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 혹은 이들이 추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이사회의 개방적 운영(권고)

- 지방자치단체와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선별하여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 1~2인이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사회 이사정수의 확대 추진(권고)

- 사립학교 법인이사회의 규정에서는 “7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정수의 4분의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에서 선임” 을 명시, 또한 2인 이상 감사 선임도 명시(사립학교법 제14조)
-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회 임원은 9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도하게 대학권력이 소수의 이사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담합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임원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공익이사 구성과 함께 이사회 이사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권고하고자 함
- 미국과 일본의 지역친화적인 사립대학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음

○ 이사 중임제한 추진(권고)

- 현행 사립학교법과 대부분의 대학정관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는 중임이 가능하며,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일부 사학에서는 세습되기도 함
- 이는 족벌경영의 기제로 악용되어 왔으며, 대학의 공공성을 약화시켰음
- 다른 사립대학과 달리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이기에 정이사(임기 3년)에 선임되는 이들에게 이러한 영구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성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감이 매우 크고 그동안 심각한 학내갈등을 유발시켜왔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새로 선임될 정이사회에 중임제한(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이사 중임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이사회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함

2) 재정 차원에서의 실행방안

- 사립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함 하지만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의무 기능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음 이러한 공공성 차원과 함께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됨 재정 투명성은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함

(1) 재정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 조선대학교의 재정관련 정관 규정: 인천대와의 비교

- 대학 재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사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유일한 선례인 인천대학교법과 조선대학교의 현재 정관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인천대학교는 재무경영위원회를 설치, 대학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지만, 조선대학교는 별도의 재정위원회 없이 이사회와 감사가 예결산

회계를 담당하고 있음

○ 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례와 현황

- 재정위원회 설치관련 법령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이 있으며, 이 중 제2장 제8조 재정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있음

(2) 조선대학교의 재정위원회 구성계획

○ 재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위원 정수, 위원 구성, 위원회 기능과 역할, 위원회 운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위원회 설치목적

- 재정위원회 신설은 법인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안서 제출 시기인 2020.2.18.)

- 위원정수는 대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걸맞는 가치를 반영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함 국립대학회계법은 11명 이상 15명 이하(인천대 정관은 15명 이상 20명 이하)

- 구성인원 : 16명 내외

- 당연직 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되, 외부인사를 중용함

- 일반직 위원은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생대표, 지역위원 및 전문가 위원(회계사, 법률가, 대학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험, 전문지식을 갖춘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서 선임 단, 학교의 장은 일반직 위원이 될 수 없음

-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임

- 재정위원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두고,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수시회의는 필요시 재적 위원 1/3 이상이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개최

<표 1-3> 재정위원회 구성안(2020.2.18.)

구 분	구성인원
당연직 위원	- 3명 내외 - 재정·회계규정에 정함
일반직 위원	- 13명 내외 - 교수 대표(5명), 직원대표(2명), 학생대표(2명), 총동창회(2명) 지역위원 및 전문가 위원(회계사, 법률가, 대학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험, 전문지식을 갖춘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2명)

○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재정위원회는 대학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기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1-4>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안, 2020.2.18.)

구 분	주요 기능	역할
재정위원회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재정부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의결

3)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의 실행방안

(1)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강화

-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산업체, 지역시민단체와의 협약(MOU)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
- 대학+지방자치단체 협력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 대학+지역산업체 협력
 - 대학은 대학자원 활용 및 연구개발(R&D)거점으로 지역산업체와 공동협력으로 지역 산업 기술개발,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촉진
 - 지역수요와 연계한 대학의 교육혁신,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 혁신에 기여
 - 지역사회와 산업수요에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산업간 상생
- 대학+지역 시민단체 협력
 - 광주환경운동연합,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약(MOU) 추진
 - 지역 시민단체들에게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의 인적, 공간적 자원 제공
 - 시민단체 주관행사에 대한 대학생 참여 활성화(기획 및 단순 참여)

(2) 대학의 공적 역할

- 대학은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하고 공적인 역할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

- 본 대학의 장미축제는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가 되었고,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 개최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 주관 및 지원
- 더불어 대학의 공공시설 개방, 시민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로 공공적 역할 수행

4) 공영형 사립대 연구모형과 실현 가능성

○ 본 연구는 법인조직, 재정, 지역사회 기여 등 세가지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평가하기로 하며,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음

<표 1-5> 공영형 사립대학 연구모형

구분	현행	→	연구시기 실행목표
법인조직	이사회	사립학교법 의거	이사구성 방식 정이사 선임과정에서 공영형 사립대에 준하는 이사구성을 실행하고 이사수 확대와 중임제한 권고
	이사회 참여	개방이사 선출 경험(2기 이사회)	참여방식 지자체, 시민단체의 정기적 참관을 허용 권고
	임원 경영책무	사립학교법 준수	규정 해임의무 규정을 강화하도록 정관개정 권고
재정	재정위원회 구성	대학평의원회 심의	구성/기능 재정위원회 신설
지역사회 기여	지자체 및 지역사회 인사의 대학 거버넌스 참여	지자체 인사의 참여	참여방식 지자체 인사 추천 권고
	공적운영과 공적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기	정관에 명기	기능/역할 지역사회기여 정관에 추가조항 신설 권고, MOU 체결
* 대학 특성	대학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갖춤	부합 '시민을 위한 대학' 으로 설립정신 복원 및 실천 구체화
	구성원의 실행 의지와 수용성	매우 높음	동의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한 제도화 실천

- 공영형 사립대학에 부합하는 민립대학의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
 - 조선대학교는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민립대학의 특성을 갖고 있음. 조선대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한 민립대학임. 민립이라는 법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통상적으로 사립대학으로 분류되어 왔음.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민립대학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와 부합함
 - 또한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이면서도 국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소수의 이사진에 의해 사유화되어있지 않음. 조선대학교는 학교법인이 공영형 사립대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공영형 요소들 가운데 일부를 도입하여 경험하였음
 - 조선대학교는 조선대학교 대자협을 모델로 만들어진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학구성원 강한 추진 의지와 높은 수용성
 - 본 대학은 공영형 사립대학제도에 관해 근래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등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관해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음. 대학구성원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지향하는 대학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와 추진 의지가 높은 상황임. 제도 이해도가 높으면 추진 의지와 제도 수용성도 높아짐

3. 연구 방법

가.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운영 계획 및 가설

1) 법인조직 운영계획 및 가설

(1) 공익이사 및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 및 운영

- 장기적으로 교육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학내자치단체, 지역 사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공익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 및 이에 대한 합의 도출방안 검토(권고)
- 단기적으로,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참관하고 발언하는 제도 도입 및 운영(이사회 의사결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며, 정이사회 구성 이후 이를 권고하기로 함)(권고)
-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익이사의 이사회 참여(실행)

(2)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 제한(권고)

- 장기적으로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제한
- 단기적으로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제한에 관한 설문조사(학내 구성원 및 시민 대상)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

(3) 법인조직 차원의 연구 가설

-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제도 및 개방감사 제도는 이사회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2) 재정위원회 신설 · 운영계획 및 가설

(1)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법인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하여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외부인사 1/3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일반적 위원으로 구성
- 재정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의결
- 단기적으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등 2회 이상 시범 운영

(2) 재정 차원의 연구 가설

-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 운영의 책무성을 높일 것이다.”**

3) 지역사회기여 차원의 운영계획 및 가설

(1)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강화

-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MOU)으로 상호 협력 증진
-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 협약(MOU)으로 상호 협력 증진
- 대학과 지역 시민단체 간 협약(MOU)으로 상호 협력 증진
- 지역 인사의 대학 거버넌스 참여

(2) 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 기존 지역축체로서의 장미축제 활성화 및 스포츠 등 행사 유치
- 대학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개방
- 시민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3) 지역사회기여 차원의 연구 가설

-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과 지역 사회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나.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운영 성과평가 방법

- 본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들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함
- 첫째, 사전/사후 패널(panel) 조사를 실시함. 교수, 직원, 학생 등의 학내구성원이 참여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동일한 집단에 대해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 도입을 전후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변화요인을 분석함
- 둘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시민들이 사립대(법인, 재정, 지역사회기여도 등) 및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함
- 셋째,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법인조직 차원에서 이사, 이사회에 참여한 공적인사, 개방감사, 이사회 직원 등, 재정 차원에서는 재정위원회 위원, 유관업무 담당직원, 이사회 참관인, 시민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운영 평가분석을 실시함
- 넷째, 초점집단조사(Focus Group Investigation, FGI)를 실시함. 공영형사립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교수들과 구분되는 학생들과 직원들의 기대와 우려를 파악하기 위한 집단별 초점집단조사를 시행함

1) 법인조직 차원 성과평가 방법

(1) 사전/사후 패널조사

-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인지여부, 도입 필요성, 당면과제, 도입에 따른 결과 기대 등에 관한 사전조사
-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인지여부의 확산, 도입 필요성 강화여부, 당면과제 해결여부, 도입에 따르는 결과(효과성) 등에 관한 사후조사

-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 개방감사 1인 선출제도 등에 대한 평가의견 조사 분석

(2) FGI 조사

- 법인조직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요소 도입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인사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 개방감사 1인 선출제도 등의 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여부 평가 및 문제점과 대안 분석

(3) 법인조직 차원의 주요 설문 문항(예시)

1. 공영형 사립대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공영형 사립대학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공영형 사립대학이 대학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공영형 사립대학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포함되거나,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참관하여 발언할 수있도록 한다면,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이사회에 대학평의회 등이 선출하는 감사가 참여한다면,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조선대학교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이 조선대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정투명성 차원 성과평가 방법

(1) 사전/사후 패널조사

-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에 대한 기대와 평가
- 재정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선호의견 조사

(2) FGI 조사

- 재정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요소 도입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인사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결과 대학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여부 평가 및 문제점과 대안 분석

(3) 재정 차원의 주요 설문 문항(예시)

1. 재정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 재정위원회가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정위원회가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재정위원회가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재정위원회에 포함되는 대학 외부인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조선대학교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역사회기여 차원 성과평가 방법

(1) 사전/사후 패널조사

-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MOU)을 체결하는 공동의 노력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평가 조사
-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 협약(MOU)을 체결하는 공동의 노력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평가 조사
-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주요 인사가 대학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기대 및 평가 조사
- 지역축제로서의 장미축제의 활성화 및 스포츠 행사 유치, 대학 시설의 지역사회에 개방, 시민대학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및 평가 조사

(2) FGI 조사

- 지역사회기여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요소 도입 및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인사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산업체와의 협약 체결이 얼마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주요 인사가 대학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과 대안 분석

(3) 지역사회기여 차원의 주요 설문 문항(예시)

1.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조선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조선대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분야의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조선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조선대학교와 지방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지역의 주요 인사가 조선대학교의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지역축제인 장미축제를 보다 활성화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조선대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조선대학교의 시설을 지역사회에 공공시설로 개방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시민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시민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추진의 경험적 근거 제공 및 이론적 발전에 기여
 - 이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실행경험을 통한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
 - 공익이사의 법인이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인사들에 대한 법인이사회 참관 허용, 재정위원회의 신설,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일부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 요소들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한 종합적 평가 제공
 - 조선대학교의 경우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기에 단일 요소에 초점을 둔 다른 대학의 경우와 달리 복수의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의 실현가능한 운영모델 개발에 기여
 - 아울러 이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며 실현가능한 운영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선행연구 분석 및 검토

1.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

-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국내연구는 대체로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대학교육연구소(2019)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제시함 OECD가 규정하는 ‘정부의존형 사립학교’를 차용하여 지금까지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학교에 의존했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를 정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공영형 사립대학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대표적으로 임재홍(2012)과 반상진(2015)은 공영형 사립대학의 전제조건으로, 첫째 그 대학의 구성원과 학교법인이 공영형 지배구조에 합의해야 하고, 둘째,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전임교원 확보율, 교지·교사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셋째, 수도권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연합체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함
- 임재홍·강남훈(2015)은 공영형 사립대학을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대신, 이사회와 과반수를 정부가 임명하는 대학으로 정의함
- 임재홍(2017)은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요건으로 대학구성원과 학교법인 합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 일정 비율 확충, 지배구조 변경, 대학체제 개편 참여, 비리·부실대학의 제외 등을 제시함 그는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이사회 변경, 예·결산 심의권 및 인사와 재정·회계 등에 관련된 의결권을 대학평의회, 대학운영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임교원을 확보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일정 비율을 지원할 것을 제시함
- 교육부는 인건비 기준 50%지원, 교비예산 50%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지원자격 요건으로 대학지배구조 변경, 교육기관으로서 발전가능성, 학교지배 구조의 변경,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 등을 포함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의 시범대학을 선별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대학신문 2018. 1. 24)
- OECD 국가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공립대학이나 공영형 사립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사립대학이 많은 국가인 미국과 일본마저도 학령인구감소가 도래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공영화를 모색하고 있음(OECD, 2017: 254)
-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이사회(a

board of trustees)를 구성하며, 일본의 95개 공립대학은 2004년부터 법인화되어 사실상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를 가지고 있음(Akabayashi, 2015: 17; <https://www.american.edu/trustees/>)

-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7개 지방 사립대를 인수해 공립형으로 전환시켰음(김병규 2017)
- 영국은 대학인허가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를 구성하여 모든 대학의 운영비 40퍼센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존형 국가로 알려진 미국도 오레건(Oregon), 미시간(Michigan), 버지니아(Virginia)의 많은 사립대학(70퍼센트)을 공영화하였음(Selingo, 2013)
-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효과, 대학의 사회기여도, 학생참여, 대학과 정부 사이의 유기적 관계, 대학의 지역 거버넌스 참여, 대학의 공공성 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음
 - 텍사노와 벨호(Dagnino and Velho 1998)는 브라질의 캄피나스 대학(Campinas University)을 사례분석하여 대학, 산업체, 정부 간 관계를 대학의 사회참여문제를 생산보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들은 기업체와 지방정부 등 외부 기관이 대학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경제에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론화하였는데(Ibid.: 251), 이는 공영형 사립대학 모형 중 지역사회 기여속성과 관련이 큼
 - 스타트업(Startup 1998)은 학생들이 대학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 중 특히 예술과 사회학 분야에서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다른 학문영역에 비해 양과 질에서 떨어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대학과 학생 간 친밀한 상호교류 여부가 대학개혁과 연관성이 높다는 이들의 주장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추진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는 것임
 - 탐라트와 테페라(Tamrat and Teferra 2018)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대학의 관계가 학문의 자유와 자치 책무성을 병합하는 포괄적 성격을 강조하고 강력하고 경쟁력이 있는 고등교육은 반드시 건강한 정부-대학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프리첼러(Frietschler 2009)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는 대학보다 커뮤니티 칼리지가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두고 주 정부와 의견 충돌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서덜랜드(Sutherland 1993)는 인구 20만에서 60만 명 인구의 도시들을 연구하면서 지역에 연고를 둔 대학의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사업체로부터 지원을 얻지 못하면 등록금의 절반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특히 인문사회계열 등 일부 학과 학생들은 지역여건에 따른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콜텐과 드론커스(Corten and Dronkers 2006)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시스템이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공영형 사립학교는 문화 자산이 부족한 학생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일반 사립학교는 규모가 큰 또는 하류

계층의 가족을 둔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2. 공영형 사립대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 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분석은 공영형사립대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이사회 구성(거버넌스), 재정위원회 구성과 재정지원(대학재정), 지역사회발전(사회적 기여) 등 세 차원에서 분석 검토함

1) 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관련 선행연구는 이사회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외부인사 이사회 참여 후 대학변화 연구가 있음

- 국립대법인화 전환시 이사회에 외부인사 참여 확대에 긍정적 조사 결과가 있음 이필남 외(2010)는 이사회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5점 척도에서 국립대 구성원 평균은 3.15, 전문가 평균은 4.10으로 대체로 외부인사 참여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비록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여줌

- 이사회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연구도 있음 이견근(2018)은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의 정당성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하고, 광역·기초 지방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등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사학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을 제안함

- 이필남 외(2011)는 대학법인화 이후 대학운영에 학외인사의 참여를 통한 대학경영 활성화(일본 대학), 외부인사중심 이사회를 통한 대학지원의 강력한 네트워크(싱가포르대학) 형성 등 기대효과를 제시함 법인화정책의 거버넌스효과와 외부인사의 이사회 참여의 효과로 이사회는 대학지배보다는 대학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교수, 학생, 동문 등)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소통지원하는 등대학의사결정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싱가포르)

○ 이사회외 외부인사 참여 및 외부인사 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영형 사립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음. 그러나 이들은 공영형사립대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인사의 이사회 참여 확대의 필요성(지역인사참여)과 이에 따른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줌

2) 재정위원회 구성과 재정지원

○ 공영형 사립대의 재정위원회는 대학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적 요소임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정부조직의 예산편성 차원에서 정부재정의 통제(정순여 외, 2004), 재정위원회제도 필요성, 재정지원 등에 관한 연구가 있음(임재홍 외,

2015; 안현효, 2015; 임재홍, 2017)

-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정순여 외(2004)는 재정위원회의 예·결산 심의·의결 기능이 편성과정에 구성원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예산목표달성 전념도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지적함. 정부조직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참여위원회가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예산목표(예산획득)를 달성하려는 관리자의 전념도(몰입도)는 증가함
- 재정 배분의 공정성은 조직의 유효성을 촉진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음. 예를 들어, 신현호(2010)는 분배 공정성이 조직 유효성을 촉진하고, 절차 공정성은 직무, 상사와 회사보상 만족도, 조직몰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 지성구·박성환(2013) 또한 예산편성의 공정성은 예산 만족 및 성과와 상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 연덕원 외(2019)는 대학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대학평의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의 형식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제도 필요성을 제안함
- 나중식(2002)이 지적하였듯이 대학평의회는 경우 예산편성작업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영역일 뿐만 아니라, 편성기준이 다양하여 위원들이 예산부서의 편성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움
- 반면, 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평의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시성과 비전문성을 해소할 수 있음(연덕원·임은희 2019, 2-3)
- 임재홍 외(2015)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법인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며, 대학은 대학평의회나 대학운영위원회 기구, 재정기구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임재홍(2017)은 학교법인 이사회 변경, 예·결산 심의권 및 인사와 재정·회계 등에 관련된 의결권을 대학평의회, 대학운영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안현효(2018)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대학 운영비의 절반이상을 지원하는 대신에 공익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 인사와 재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요건을 제시함. 재정지원의 주체에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공영형사립대 재정 마련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연구도 있음 김훈호(2014)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대학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음. 재정지원 중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정부

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할수록 사립대학은 법인 전입금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등록금을 낮추거나 인상률을 줄이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지출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더라도 학생 경비나 연구비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인건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함

-김봉철(2012)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해 독일 헤센주의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 사례를 소개함. 헤센주 대학법규정과 헤센주와의 재정지원협약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와 함께 제3자 기부지침을 제정하여 재정기부를 시행함

○ 재정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정부조직의 예산편성 차원에서 위원회의 역할, 재정위원회 도입,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적 차원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대학 재정위원회 제도의 실질적 효과,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실증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움

3) 지역사회발전 효과

○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일부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의 지역경제기여, 대학, 산업, 정부 간 거버넌스 발전, 지역경제 효과분석, 지역발전기여, 대학지원프로그램 관한 연구가 있음(강승구·이민환, 2004 ; 고영구, 2012 ; 한상훈, 2001; Leydesdorff 2012 ; Luke 2013).

-강승구 외(2004)는 울산지역을 사례로 지방대학의 존재와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소득 창출의 관점에서 계량적 연구를 시도함. 대학이 지역에 창출하는 직간접소득효과와 유도소득효과를 기준으로 울산지역에 대한 총 소득창출효과를 2001년 기준 약 1,193억의 흐름으로 추계하였고, 이것을 영구적 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2조 3,8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함.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연구로 평가됨

-고영구(2012)는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안함. 교육기능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 공급, 고등교육 제공, 지역가치 형성, 연구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인구 개발, 유망산업 창출, 기술혁신 촉진, 봉사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 혁신과 통합 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함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미국대학 사례를 소개함.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대는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도시연구소를 통하여 기술적 지원, 교육 및 연구, 정보제공 등 지원프로그램 제공, 텍사스주립대는 도서관, 전시공간, 공연공간 등 대학관련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

-레이데스도르프(Leydesdorff 2012)는 대학, 산업체, 정부 간 삼각관계가 진화적 변화를 통해 경제적 교환(economic exchange), 지적인 구성(intellectual organization), 지

리적 한계(geographical constraints)가 지식기반경제에서 상호교류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음. 즉, 대학, 산업체, 정부의 하부구조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발전한다는 사회진화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루크(Luke 2013)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대학의 기여를 지역문제의 해결과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와 정책 결정에서 조정자,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개발 등으로 제시함
- 연덕원·임은희(2019, 6-7)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량에서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차이가 현저하고, 지방은 지역 토호세력과 결합하는 등 부실운영과 부정·비리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공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함
- 이건근·정종희(2020)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고등교육의 지방분권화 즉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대학 거버넌스 참여,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지역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특성화 노력, 인력유출 방지와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기대효과와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대학의 지역사회발전 효과에 대해 대학의 지역경제기여, 대학, 산업, 정부 등의 거버넌스 구성이 지역발전 등의 효과가 있으니 지역사회의 대학육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규범적 차원의 주장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표 2-1> 선행연구 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연구자
이사회	개방적 구성(지역사회인사이사회 참여)	광역·기초 지방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등이 공영형 사립대학의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사학이 공적으로 운영모델을 제안	이건근 (2018)
		이사회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대체로 외부인사 참여 확대에는 긍정적인 인식	이필화 외(2010)
		대학법인화정책 이후 개방이사회를 통해 대학경영참여 활성화(일본 대학), 외부인사중심 이사회가 대학지원의 강력한 네트워크(싱가포르대학)로 작용	이필화 외(2011)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구성, 재정 지원	재정위원회의 예·결산 심의·의결 기능이 편성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서 예산목표달성 전념도(몰입도)의 상승을 이끌수 있다는 차원에서 언급함으로써 위원회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지적함 정부조직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참여 위원회가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예산목표달성(예산획득)하려는 관리자의 전념도(몰입도)는 증가함	정순여·김순기·이창대(2004).

	<p>대학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대학평의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형식적 운영. 공영형 사립대학제를 도입한 경우 책무성과 투명성을 더 높일수 있음</p>	연덕원·임은희(2019)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법인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며, 대학은 대학평의위원회나 대학운영위원회 기구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p>	임재홍외(2015)
	<p>학교법인 이사회 변경, 예·결산 심의권 및 인사와 재정·회계 등에 관련된 의결권을 대학평의위원회, 대학운영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임교원을 확보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일정 비율을 지원할 것을 제시함</p>	임재홍(2017)
	<p>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대학 운영비의 절반이상을 지원하는 대신에 공익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에 인사와 재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요건으로 제시함 재정지원의 주체에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p>	안현효(2018)
	<p>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할수록 사립대학은 법인 전입금을 줄이는 경향.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등록금을 낮추거나 인상률을 줄이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정부가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더라도 학생 경비나 연구비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인건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침</p>	김훈호(2014)
	<p>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해 독일 헤센주의 재단법인 프랑크푸르트대학 사례를 소개함 헤센주 대학법규정과 헤센주와의 재정지원협약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와 함께 제3자 기부지침을 제정하여 재정기부를 시행함</p>	김봉철(2012)
지역 사회 발전	<p>울산지역을 사례로 대학이 지역에 창출하는 직간접소득효과와 유도소득효과를 기준으로 울산지역에 대한 총 소득창출효과를 2001년 기준 약 1,193억의 흐름으로 추계하였고, 이것을 영구적 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2조 3,8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p>	강승구외(2004)
	<p>지역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안함 교육기능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 공급, 고등교육 제공, 지역가치 형성, 연구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인구 개발, 유망산업 창출, 기술혁신 촉진, 봉사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 창달, 지역사회 혁신과 통합에 있다고 주장함</p>	고영구(2012)
	<p>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제기하면서 미국대학 사례를 소개함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대는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도시연구소를 통하여 기술적 지원, 교육 및 연수, 정보제공 등 지원프로그램 제공, 텍사스주립대는 도서관, 전시공간, 공연공간 등 대학관련시설을 지역사회 개방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p>	한상훈(2001)

	대학, 산업체, 정부의 하부구조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발전한다는 사회진화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지방대학이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	레이데스도르프(Leydesdorff 2012)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대학의 기여방법으로 지역문제의 해결과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와 정책 결정에서 활약하는 기능,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제시함	루크(Luke 2013)

3. 선행연구 분석결과

- 선행연구의 분석 검토 결과,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한 실증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규범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선행연구들 가운데 비록 공영형 사립대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적지만, 대학의 공적 역할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줌

〈표 2-2〉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구분		선행연구	주요 연구
이사회	이사회 외부인사참여	외부인사 참여 긍정적 인식평가	대학법인화 사례
	이사회 외부인사참여효과	대학의사결정구조 변화	대학법인화 사례(싱가포르, 일본)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제도도입 필요성	개념적 연구
	재정위원회 효과	제도 효과성 연구 없음	-
	재정지원	공영형 사립대 재정지원	개념적 연구
지역사회 발전	대학의 지역발전 기여	지역발전 효과	계량연구
		지역발전 영향력	규범연구
		대학 지역기여	규범연구

- 이는 공영형 사립대의 효과성 검증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는 것임

○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음

- 김훈호(2014)의 지적처럼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대학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고영구(2012)가 지적하였듯이 대학부설 도시연구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대학관련시설을 개방할 필요가 있음
- 레이데스도르프(Leydesdorff 2012)의 지적처럼 대학-지방정부-산업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간의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Ⅲ. 조선대학교의 경험: 공영형 사립대 요소

1. 조선대학교의 민주화 및 법인 정상화 과정

- 조선대는 1988년 민주화 이전 1인 독재체제 하에서 각종 재단비리(부정입학, 부정 교수채용, 교비 유출) 및 이에 저항한 교수 및 학생 탄압, 병원장 구타 및 학생 구타(1960년 교수 20여명 사임/해임, 학생 21명 제적; 1980년 강패 동원 학생구타, 교수 해직)
- 조선대는 1988년 학내민주화운동(1.8항쟁)을 통해 비리이사를 퇴진시키고 임시이사체제로 전환함
- 2010년 법인 정상화를 시도하여 제1기 정이사체제로 전환함
- 정이사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경영진측이 추천하는 이사 3인이 이사진에 포함되어 학내갈등이 지속됨
- 제2기 정이사체제로 이행하였으나 총장선거 및 개방이사 선임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학내갈등이 지속됨
- 이사회 내부의 갈등과 구성원과의 갈등(2016년 총장후보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총장선거 개입시도, 개방이사 충원 지연, 개방이사 1인의 법인직원 폭행 및 부총장에 대한 욕설 파문 발생, 임기종료시기에 압박하여 구경영진에게 과도한 개방이사후보추천권한 부여,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임금성 비용 지급으로 인한 교육부 감사 지적, 연구윤리위반 지원자의 교수임용 및 연구윤리위원 징계)으로 3기 정이사 구성 실패
- 2017년 임시이사 파견과 2020년 정이사체제로 전환

2. 대학 자치와 총장 선거

가. 대학자치의 경험: 대자협, 대학평의회

1) 대자협

- 대학자치협의회(대자협)는 1988년 조선대학교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자치기구로 탄생하였으며, 최근에는 학부모대표를 제외한 4개 구성원단위의 대표자들이 각각 2인씩 참여(사무국장 1인 포함 총 9인)하여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승인과 총장선거를 주관하는 것을 비롯한 학내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옴

<표 3-1>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기능

<p>제4조(사업 및 자문사항)본 협의회는 전문의 정신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대학교 구성원의 친교·화합을 위한 활동 2. 법인 및 조선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활동 3. 주요 위원회 대표자 파견등에 관한 사항 4.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5. 부총장 복수추천에 관한 사항 6. 법인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인 및 대학운영에 의혹이 제기될 경우 내외부 감사실시요구 9.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대학운영과 관련된 자료 열람 10. 이사장 또는 총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1. 기타 본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출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정관(2005.3.7. 개정)

- 대자협은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
- 2017년 제2기정이사회가 구경영진축이 주도하여 제3기이사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저지하였음
- 2017년말부터 대학본부와 협력하여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있음
- 2018년 ‘자율개선대학’ 진입에 실패한 이후 발생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으며, 당시 총장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혁신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집행부를 선임하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혁신안을 마련하였음

2) 대학평의원회

- 대자협을 모델로 설치된 대학평의회는 2007년 이후 “교수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5명,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3명,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2명,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됨
- 대평의 기능이 대자협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총장선거제도 등)은 대자협에 위임하고 필요할 경우 대평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고 있음

<표 3-2>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개정2019.03.25)

제2조(기능)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4.1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4.16>
3. 대학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4.16>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8.4.16>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8.4.16>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8.4.16>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4.16>

② 제6호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추천(안)을 심의한다.<개정 2008.4.16>

출처: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2019.03.25.)

나. 민주적 총장선거

- 조선대학교는 1988년 대학민주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총장직선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왔음(1988년에는 이돈명 후보에 대한 승인투표가 실시되었고, 2011년 총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선거에서 간선제가 실시된 것은 제외)
- 총장선임권은 이사회에 있으나 선거제도는 대자협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하여 시행

<표 3-3> 조선대 총장선거 구성원 단위별 선출권 비율 및 선출방식
(제8대~제17대: 1988~2019)

총장선거 선임자명	교원 (교수평의회)	직원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지역 인사 ***	선출 방식
8대(1988년) 이돈명	485명 (100.00%)	교수 직선제
9대(1992년) 정병휴	533명 (100.00%)	교수 직선제
10대(1996년) 김기삼	564명 (100.00%)**	교수 직선제
11대(1999년) 양형일	544명 (86.2%)	51표 (8.1%)	36표 (5.7%)	.	.	직선제 (단)
12대(2003년) 김주훈	611명 (87.5%)	51표 (7.3%)	36표 (5.2%)	.	.	직선제
13대(2007년) 전호중	661명 (88.4%)	51표 (6.8%)	36표 (4.8%)	.	.	직선제
14대(2011년) 전호중	70표/704명 (58.3%/84.3%)	30표/85표 (25.0%/10.2%)	10표/36표 (8.3%/4.3%)	10표/10표 (8.3%/1.2%)	.	예비선거 -간선제*
15대(2012년) 서재홍	698명 (79.7%)	109표 (12.4%)	50표 (5.7%)	19표 (2.2%)	.	직선제 (단)

16대(2016년) 강동완	660명 (76%)	264표 (13%)	70표 (7%)	74표 (3%)	44표 (1%)	직선제 (단)
17대(2019년) 민영돈	622명 (75%)	262표 (13%)	96표 (8%)	48표 (4%)	.	직선제

(단): 단선제, 나머지는 결선제, * 예비선거는 간선제(3인 선출), 본선거는 직선제

** 대자협 학생, 학부모, 동창회, 교직원 대표 12인 포함할 경우 97.9%; *** 기타 학내구성원 포함; ()안의 수는 선출권비율; /예비 및 본선거 선출권자 수 혹은 비율

출처: 지병근(2019c), p. 143, p. 150의 표 1과 표 2를 재구성

- 1999년 이후에는 직원은 물론 학생들도 총장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총장선거에서는 비록 1%에 불과하지만 지역인사들에게도 총장선거 참여를 허용하였음
- 2016년 직선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이사회에 구성원들이 서명운동은 물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로 저항함
- 직선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이 지속되었음

3. 투명한 대학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 재정 투명성

1) 등록금 심의위원회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이를 운영해왔음
- 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기능은 처음에는 등록금 심의에만 한정되었으나 2014년부터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게 됨
- 등심위는 총7~9명(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되며, 교직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포함 가능), 학생, 관련 전문가(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외) 등이 참여함

<표 3-4> 등록금심의위원회 세칙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2. 4.>
1. 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적정 등록금을 심의한다.
2. 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출처: 등록금심의위원회 세칙(2020.04.21.)

- 등심위는 2011년 신설이후부터 정원9인으로 운영되어 있음
- 등심위 운영기간(2011.01.~2020.05.)에 총72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출석률은 평균

78.0%이며 불참자는 평균 2인임(부록 4-2-1 참조)

2) 대학평의원회

- 대평은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함

3) 재정위원회

- 2020년 재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함

나. 지역사회와의 협력

- 조선대는 민립대학으로서 호남 민중들이 성금을 모아 설립한 대학임
- 호남을 대표하는 사학으로서 호남의 인재양성을 설립정신과 건학이념(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에 포함하고 있음
- 중장기 발전계획(GREAT 2030+)의 목표에는 “Glocal 특화 경쟁분야 육성”이나 “재정 안정화 구조 확보”와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이 포함됨
-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선진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공선택제, 대학 자율전공화, 우수인재육성방안추진, 연구분야에서는 “사회맞춤형 융복합 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연구, 4대 특성화 융복합 연구분야(차세대 첨단부품소재, 기후변화/신재생에너지, IT/미디어/문화콘텐츠, 메디컬/생명공학)의 국내 Top 육성, 선진형 연구 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연구/산학협력 교원 Track 제도 도입, 연구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조선대학교가 참여하는 LINC+사업단 또한 이에 맞추어 “지역과 함께하는 창의적 리더양성 민립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지역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탑클래스 산학협력”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고도화” “융복합 인력양성 및 지역사회 기여”, “창의융합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가치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지역상생혁신 탑클래스 산학협력단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조선대학교 링크+, 2020)
- 2020년 대학의 슬로건으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을 설정하고 “학생 중심의 경영전략과 지역사회와 함께 건 10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담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을 표방함
- 조선대학교의 연구수주 건은 2019년의 경우 전체 912건, 6백여 억원이며, 산학공동연구과제는 195건, 77억여원에 해당함

<표 3-5-1> 전체 연구과제 및 산학공동연구과제 연구수주(건, 연구비)

구분	전체 연구과제		산학공동연구과제	
	연구수주(건)	연구비(천원)	연구수주(건)	연구비(천원)
2016년	1,163	45,852,580	123	5,079,660
2017년	1,056	48,863,850	122	6,197,190
2018년	1,191	51,329,710	196	6,310,390
2019년	912	60,602,678	195	7,668,574

출처: 조선대학교 링크+(2020, 4)

- 2019년 기준 국내 특허 등록은 108건, 기술이전은 78건,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은 15여 억원, 총매출액은 50여 억원
- 링크+ 사업단은 대내외 협업기반 고도화를 위해 산업 및 기업 DB 고도화, 산업 네트워크 구축, 실무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3-5-2> 특허 및 기술이전(건, 등록률, 수입료)

연도	국내특허			해외특허			기술이전	
	출원(건)	등록(건)	등록률(%)	출원(건)	등록(건)	등록률(%)	계약실적(건)	수입료(천원)
2016년	209	87	41.6	32	11	34.4	74	605,059
2017년	171	129	75.4	31	10	32.3	58	821,560
2018년	167	129	77.2	20	9	45.0	80	979,162
2019년	150	108	72.0	15	9	60.0	78	585,313

출처: 조선대학교 링크+(2020, 4)

<표 3-5-3>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및 자회사 현황

연도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천원)	자회사			
		개수	총 고용인력	자본금 총액(천원)	총매출액(천원)
2016년	1,489,200	7	25	1,308,000	1,424,299
2017년	1,489,200	10	31	1,787,500	3,386,775
2018년	1,489,200	12	37	2,212,500	5,571,000
2019년	1,489,200	10	37	2,269,500	4,620,000

출처: 조선대학교 링크+(2020, 4)

<표 3-5-4> 조선대학교 산학협력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일부 발췌)

전략과제	세부실행과제	실행과제 세부내용
지역특화산업 연계 연구역량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연계강화 및 사회 맞춤형 연구모델 개발 지역산업연계 산학협력 기획역량 강화 캠퍼스 산학협력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프로그램 발굴 새싹형 연구실 지원제도 고도화 산업체 공동연구 확대 대학부설연구소의 지역연구 확대 박사급 기획전문직원 채용 연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및 관리 연구분야별 연구자 매칭 프로그램 운영 기획과제 작성 지원 제도 활성화 첨단산학캠퍼스 활성화 완도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캠퍼스화 산학협력관 조성
융복합연구(협동연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공동연구 유도 및 지원 확대 연구박람회(연구축제)개최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연구과제 지원 제도 활성화 대학부설연구소의 융복합연구 활성화 연 1-2회 연구박람회 개최
R&D Open Platform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open platform 체계 재정비 R&D open platform확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세스별 운영체계 재구축 국내외 개방형 R&D 플랫폼과의 교류활성화 및 공동연구 진행 성과평가를 통한 체계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
산업 및 기업 DB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및 기업 DB 구축 기업중심 산학협력 정보제공 체계 구축 지역기업 one-step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업 현황자료 수집현황자료 기반 산업별 분류성장 잠재 기업 우선순위 선정 가족회사 관리 및 활성화 학내 기업지원 관련 통합 DB 구축 및 제공 All-set기업지원센터 체제 구축/운영 기술사업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산업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거버넌스체계구축 산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실무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실무 차원 운영활동 확대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선대 주관 세미나, 포럼 등 운영 조선대 교육과정 참여 직장인 조사 및 POOL 구축 재학 직장인 관리 정보 활용 문제 협의 現 교육과정 참여 직장인 활용 네트워크 산업분야 파악
교내 창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필요역량 확보 지원 창업규모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강좌 활성화 및 참여확대 산업시설 기반 창업 현장실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창업 교육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교내창업 규모 확대 지원맞춤형 창업지원 체계 구축

출처: 조선대학교 링크+(2020, 19)

4. 민주적 대학혁신

가.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

- 조선대는 2017년 초부터 공영형사립대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음
- 대자협이 합의(2017.03.10.)하여 국민공익형 이사로 제3기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함
- 국민공익형 이사는 공공부문추천 인사 4인, 대학구성원 대표 이사 2인, 개방이사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표 3-6-1> 국민공익형 이사제의 공통요건과 세부 구성내용

<p>1. 공통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p> <p>(1) 정이사 4대원칙(설립정신 구현, 구 경영진의 철저한 배제, 1·8 항쟁정신 계승, 미래지향적 가치충족)을 존중하고 관철할 수 있는 인사</p> <p>(2) 대학의 본질(교육, 연구,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인사</p> <p>(3) 윤리적인 소양을 갖추고 원칙과 정의에 따라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이사</p> <p>(4) 학생을 포함한 대학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p> <p>2. 국민공익형 이사회(현 이사정수:9명) 구성 세부 내용</p> <p>(1) 공공부문추천 등 이사(4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광주시장, 광주시교육감, 전남도지사나 이들이 추천하는 공직자) - 전국적으로 신망받는 사람 - 대학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p>(2) 대학구성원을 대표하는 이사(2인)</p> <p>(3) 개방이사(3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구성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민주적인 사람 - 대학 교육 및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 - 지역과 전국의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출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2017. 제3기 이사회 구성 관련 자료. 3. 23.

- 임시이사 파견 이후에는 공영형사립대 추진을 위한 구성원 합의를 도출함
-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영형사립대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토론회를 개최함(2018.05.09., 민주화운동연구원 주최)

<표 3-6-2>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2018년)

▶ 대자협에서 대학본부와 구성원제단위가 협의하여 공영형 사립대추진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함(2018.01.09. 2017학년도 제42차 대자협운영위원회)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보고(2018.3.29.)
▶ 광주광역시장후보 면담 및 공약화 요청(2018.4.16.~18.): 민주당 윤민호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주당 이용섭 후보, 양향자 후보 등에게 공약화 요청
▶ 이사장 간담회(2018.4.18.), 조선대 혁신위원회 보고 및 협조 요청(2018.05.02.)
▶ 교수평의회 대의원회의에서 공영형사립대 적극추진 결의(2018.05.08., 찬성 28명, 기권 1명, 반대 0명, 위임장 포함)
▶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 승인(2018.05.28., 총인원439명, 참여인원 310, 찬성 274, 반대 14, 무효 22).
▶ 조선대 혁신위원회 보고 및 협조 요청(2018.05.02.)
▶ 공영형사립대 관련 토론회 개최(2018.05.09., 민주화운동연구원 주최)를 통해 박주선, 김경진, 유성엽 등 현역국회의원들과 이용섭, 나경채, 윤민호 등 주요 광주광역시장 후보들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음

나. 혁신위원회 출범과 대학혁신

- 2018년 11월 학교법인이 구성원 단위대표들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구성함
- 혁신위원회의 과제는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한 조선대의 교육혁신, 행정 혁신, 재정 및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추진됨
- 과거의 구조개혁과 달리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조선대 구성원 단위들이 모두 참여하여 혁신위를 구성함

<표 3-7> 조선대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2018)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명	추천단위
1	위원장	법인 이사	정인수	이사회
2	위원	법인 사무처장	이재규	이사장
3	위원	외국어대학장	조희무	학장협의회
4	위원	교수평의회 사무처장	강성승	교수평의회
5	위원	디자인공학과 교수	이진렬	교수평의회
6	위원(겸. 간사)	기획조정실장	이철갑	집행부 당연직
7	위원	교무처장	홍성금	집행부 당연직
8	위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철	직원노동조합
9	위원	전) 총무관리처장	김순의	직원노동조합
10	위원	총학생회 부회장	최희원	총학생회
11	위원	2019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정현	총학생회
12	위원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용래	총동창회

13	위원	민주동우회장	박현주	총동창회
14	위원	홍현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홍현수	외부전문가(이사장)
15	위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	외부전문가(이사장)

출처: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활동방향(2018.12.10.)

- 혁신위는 혁신방안과 관련한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운영되어 다양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활동을 종료함
- 혁신위는 조선대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었으며, 대학자치의 전통을 새롭게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1> 혁신위원회 출범식(2019.12.04.)

출처: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 당시 혁신위원회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였다고 평가받았음

<표 3-8> 조선대 혁신위원회 관련 일정

• 2018.12.10.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위원 간담회
• 2018.12.12.	혁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주현관)
• 2018.12.24.	학문단위 구조혁신(안) 처장단 설명회
• 2018.12.27.	학생성공과 대학혁신을 위한 초청강연
• 2019.01.03.	학사구조 개편(안) 학장-학과장 설명회 (이주현관)
• 2019.01.04.	학사구조 개편(안) 교수평의회 대의원회 설명회

• 2019.01.04.	제1차 학생대상 학사구조 개편(안) 설명회
• 2019.01.07.	제2차 학생대상 학사구조 개편(안) 설명회
• 2019.01.07.	공과대학 교수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안) 설명회
• 2019.01.08.	전체 교직원 대상 학사구조 개편(안) 설명회 (서석홀)
• 2019.01.10.	교무위원-혁신위원회 합동 워크숍 (담양리조트)
• 2019.01.30.	대학혁신을 위한 2차 공청회
• 2019.02.01.	대학혁신을 위한 3차 공청회
• 2019.02.09.	4개 단과대학 및 입학사정관팀 자문교사 설문조사
• 2019.02.15.	미술대학과 인문과학대학의 교수간담회
• 2019.02.28.	공공보건안전대학 설립과 관련한 자연대 교수간담회
• 2019.03.07.	보건과학대와 자연대 교수들과의 ‘모집단위개편관련 의견수렴’

출처: 제2차 대학혁신 워크숍 자료집(20190130) 일부 수정

- 혁신위원회의 역할로 “산학협력 및 민립대학으로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 수립” 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법인개혁안 마련” 이 포함됨(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4-5항,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백서 2019, 18)
- 이는 “(혁신위의 주요과제에 포함된 것 또한) 조선대가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제2기 정이사체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결하지 못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법인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히려 지역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백서 2019, 18)
- 학교법인 이사회 또한 혁신위 출범에 임박하여 “시범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 설립 당시에 십시일반으로 대학을 일으켜 세웠던 지역민들의 숭고한 설립 정신을 계승하고, 대학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힘(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임원 일동, 2018.11.30.)

5. 민주적 개방이사 선출 및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가. 정이사 후보 추천

- 2017년 말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정이사체제로 이행할 것을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정이사 선임권이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함
- 대학평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2인의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음

나. 개방이사 추천

- 조선대는 2010년 정이사체제로 전환한 이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3인의 개방이사를 충원해왔음
- 조선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4인, 조선간호대학교 및 조선이공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1인,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인, 법인에서 5인 등을 추천받아 11인으로 구성됨

<표 3-9> 개방이사의 정수에 관한 정관규정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1.1.]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28.> [본조 신설 2007.1.1.]

제24조의4(추천위원회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개정 2007.12.28.>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8., 2012.2.27.>

1. 조선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조선간호대학교 및 조선이공대학교 대학평의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1인
3.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1인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07.12.28.>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2.28.> [본조 신설 2007.1.1.]

출처: 조선대학교 법인정관(2020.04.23.)

- 법인 추천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지만 산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경우 법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에 법인의 의지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작동하기 쉬움
- 2017년 제2기 정이사회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구경영진측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에 반발한 구성원들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선대학교 제2기이사 즉각퇴진 및 국민공익형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항하였음

- 이는 구성원들이 개방이사 추천과정에서 법인이사회의 영향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하는 선례를 창출함
- 2020년 개방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전화면접을 통해 민주적으로 후보자 6인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함

<표 3-10> 정이사후보 추천 인원(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추천요청)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전·현직이사협의체	6	조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2
조선이공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1	조선간호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1
조선대 부속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	조선대 여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6	관할청(교육부장관)	4
소계	14	소계	8
합계			22

출처: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학내자유게시판 게시글(2020.03.03.)

6. 소결: 성과와 과제

가. 성과: 민주적 대학 운영

1) 공영형 사립대의 민주적 요소: 견제와 균형

- 조선대는 1988년 이후 대자협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제 청산 및 공정한 교수공채 시스템 구축 등 민주적 대학운영
- 이돈명 인권변호사 등 공익적 인사의 총장 영입(1988)
- 국내 최초의 대학생활협동조합 출범(1990)
- 대자협은 학칙과 교육과정 그리고 예결산에 관한 자문기구인 대평이 포괄하지 못하는 학내 쟁점에 대하여 대학본부와 이사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음
- 민주화 이후 민주적 총장선출을 지켜옴
-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총장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대자협이 총장선출제도를 합의(합의 불가 시 2/3 이상 동의)를 통해 마련하고 복수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총장이 추천한 2인의 부총장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
- 대평은 대학을 학내 구성원과 함께 총동창회가 참여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재정운영은 등심위와 대평을 통해서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음
- 공정한 교수공채 시스템 구축·운영

- 최근에는 대학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혁신위를 통해 합의를 통한 대학구조조정을 시행함
- 호남의 인재양성을 설립정신과 건학이념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선진 교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은 “지역상생혁신 탐클래스 산학협력단 실현”, LINC+사업단은 “지역과 함께하는 창의적 리더양성 민립대학”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최근 민영돈 총장은 대학슬로건으로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를 설정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함
-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방이사를 포함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공익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완료함

나. 한계

- 민주적 정치과정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대학사회는 소수의 학내 구성원 대표들 간 담합으로 대학거버넌스가 구성될 위험성 존재
- 대자협(사무국장 1인 포함 총9인 정원)과 대평(12명 정원)에 총동창회가 각각 2인 참여하고 있으며 동문이 아닌 외부인(일반 시민)의 참여가 부재함
- 등심위는 학생을 제외한 학내 구성원 단위대표가 추천한 인사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인사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 재정공개가 전문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10년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구경영진축의 참여로 학내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2017년 제3기 정이사를 선출조차 하지 못한 채 임시이사체제로 전환하는 등 이사회가 불안정하게 운영되었으며, 구경영진의 참여로 인해 구성원의 신뢰를 얻지 못함

다. 과제

- 대학운영 과정에서 총동창회 이외에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 확대
- 재정정보의 접근성 강화: 대학재정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시민에게 제공
- 대학정보 공개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인 KORUS에 준하는 회계

시스템 운영)

- 구성원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
- 정부재정지원에 상응하는 대학의 노력과 대학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예방(김훈호 2014)
- 지역사회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이사회 운영 제도화: 대학-지방정부-산업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간의 협의체제 구축(Leydesdorff 2012)
-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시스템 구축(수요조사, 중장기 사업기획 및 추진, 성과평가): 가칭) 도시연구소 개설(고영구 2012)

IV.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 실행

1. 재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가. 재정위원회 설치 및 제도분석

1) 재정위원회 제도 목적

- 사립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함. 하지만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의무 기능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음. 이러한 공공성 차원과 함께 재정 의존에 따라 재정운영 투명성이 강조되는데, 재정 투명성은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확보
- 정부(교육부)는 2015년 3월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 6월 동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 이러한 국립대학회계법 도입으로 국립대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으로서의 국립대 성격은 유지하되, 회계 및 재정에 관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음.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해 대학이 책임주체가 되지만 교원인사, 행정조직, 자산 등에 관해서는 정부조직의 성격. 대학 재정위원회 설치로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운영의 책무성을 높임
- 대학 재정위원회 설치하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음. 즉, 대학 재정위원회 설치하는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운영의 책무성을 높임
-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재정 등에 권한이 법인 이사회에 있음.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로서 재정위원회는 재정 투명성 위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대학과 법인 이사회의 투명한 대학 재정정책을 지향하는 것임
- 즉, 재정위원회설치는 대학재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 확보함. 재정위원회설치는 대학 재정시스템의 제도설계이며, 이러한 제도설계는 대학재정결정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대학재정과정의 명확성을 높임

2) 재정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가) 조선대학교 재정관련 정관 규정 : 인천대학교와 비교

- 대학 재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사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된 유일한 선례인 인천대학교법과 조선대학교의 현재 정관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인천대학교는 재무경영위원회를 설치, 대학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지만, 조선대학교는 별도의 재정위원회 없이 이사회와 감사가 예결산 회계를 담당하고 있음

<표 4-1> 인천대와 조선대의 재무관련 정관 규정

구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사립학교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p>제17조(재무경영위원회)</p> <p>① 심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p>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 별도의 재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이사회와 감사가 예·결산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p> <p>제31조(이사회 기능)</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p>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89조(하부조직)</p> <p>② 기획조정실에 전략기획팀, 예산팀, 평가팀을 둔다.</p>
회계	<p>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p> <p>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p>제9조(회계의 구분)</p> <p>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p> <p>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한다.</p> <p>③ 제1항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p>
예산과 결산	<p>제25조(예산·결산 등)</p> <p>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p>	<p>제12조의2(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p> <p>① 이 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p>

<p>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연도중에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p>
--	--

출처: 인천대법과 조선대학교 정관

나) 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입법례와 현황

- 재정위원회 설치관련 법령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법률 제13217호, 2015. 3. 13제정」이 있으며, 이 중 제2장 제8조 재정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있음
- 재정위원회 구성은 11명이상 15명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일반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함. 재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임

<표 4-2> 국립대학회계법의 재정위원회 설치 규정

<p>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p> <p>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p> <p>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p>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립대학회계법

- 이와 함께 전국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교에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2015. 7월 기준),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를 제외한 35개 대학이 재정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2.5%,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일반직 위원이 57.5%를 차지함
- 일반직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기타 대학발전기여자 또는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 : 2 : 2 : 2로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임. ‘일반직 위원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 하도록 규정한 국립회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대학구성원 위원을 법정 최소인원만큼만 포함한 것임

<표 4-3> 전국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구성현황

1. 2015년 7월 기준, 전국 38개 국·공립대 중 35교 구성 완료

- 당연직 위원 : 일반직 위원 = 3 : 4
- 일반직 위원, 교원 : 직원 : 학생 : 기타 = 2 : 2 : 2 : 2

○ 전국 38개 국·공립 대학교에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 을 보면(2015년 7월 기준), 공주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등 3교를 제외한 35개 대학이 재정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2.5%,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일반직 위원이 57.5%를 차지함(국립회계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함)

○ 일반직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기타 대학발전기여자 또는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2 : 2 : 2 : 2로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임. ‘일반직 위원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 하도록

규정한 국립회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대학구성원 위원을 법정 최소인원만큼만 포함한 것임

2. 대구교대, 학생 위원도 학생처 및 교육대학원에서 추천
 청주교대, 학생회 의견 들어 학생처장 및 교육대학원장이 추천

○ 일반직 위원 중 교원, 직원, 학생은 대체로 교수회(또는 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등), 직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 직원협의회 등), 총학생회 등 해당 구성원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대구교대 등 11교는 일반직 위원 선정 과정에 학교본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구성원 단위에서 추천하지만,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대, 경북대, 금오공대, 전남대, 제주대, 한밭대 등은 교원 일반직 위원 중 1인을 총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금오공대와 한밭대는 교수회 동의 전제). 공주교대는 교원 일반직 위원을 모두 교육지원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실제로는 교수협의회와 학과장이 각 1인 추천)하고 있으며, 대구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교무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함 한국해양대 또한 교원 일반직 위원 3명 중 1명은 교수회와 협의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북대, 군산대, 금오공대, 안동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등은 교수회(교수평의회) 또는 평의회 부의장(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음

3. ‘기타’ 외부위원 모두 대학구성원이 추천하는 대학 한국교원대 1교뿐
 부산대, 전남대는 2명 중 1명 대학구성원 단위에서 추천 가능

○ 기타 일반직 위원(대학발전기여자 또는 전문가 등)의 추천 단위는 크게 분류하면, 총동창회(동문회)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학이 19교(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장이나 대학운영위원회, 관련 부서(총장 및 관련부서) 등 사실상 대학 본부 측에서 추천 또는 위촉하는 대학이 11교(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천단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구성원 이외 기타 위원은 동문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한국해양대는 외부위원 2명을 모두 본교 출신으로 제한 규정해놓고 있으며, 제주대는 외부위원 2인 중 재정전문가 1인을 본교 출신으로 제한 규정함

○ 목포해양대는 ‘대학발전기여자’는 총동창회에서 추천하고,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목포상공회의소, 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해당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자료 요구 및 제출 규정 둔 대학 경북대, 경인교대 2교뿐
 경북대, 금오공대는 녹취록 근거 회의록 작성·공개 명시

○ 법령에 위원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총장의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달리 재정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예·결산 공개 이외에 자료요구 및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대학의 ‘재정·회계 규정’에 재정위원회의 자료요구 및 제출 관련 규정을 명시한 대학은 경북대와 경인교대 2교뿐임 경북대는 “재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총장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때 총장은 “필요한 자료를 5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인교대는 경북대와 같이 위원의 자료 요구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총장은 재정위원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재정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 명시함

○ 한편 법령에 재정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재정회계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경북대, 금오공대, 안동대, 전남대는 대학 규정에도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경북대와 금오공대는 ‘녹취록에 근거’ 하여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출처: 대학연구소(<https://khei-khei.tistory.com/tag>), 국립대학 재정위원회.

3) (가칭)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설치(안)

가) 재정위원회 설치 필요성

○ 공영형 사립대 요소

-재정위원회설치는 공영형 사립대 필수 구성요소

-대학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지향

○ 대학재정 심의

-재정위원회 기구는 심의 기능을 확보하여 재정운영 투명성과 책무성

○ 대학 재정과정의 민주성

-대학재정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대학재정결정의 민주적 과정을 거쳐 명확성 높임

나) 재정위원회 기능과 역할

○ 심의 기능

-대학재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역할수행

○ 심의 사항

-대학운영의 재정, 예산 및 결산, 대학의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수익사업 등등

구 분	심의 사항
(가칭) 재정위원회	-대학운영계획 중 재정과 관련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별도 규정으로 정한 대학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이 재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

다) 재정위원회 구성(안)

○ 관련법령과 비례사례분석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 분석
- 국립회계법 준하는 기구설치이므로 재정관련 국가 법령체계 분석 검토
- (가칭)재정위원회 설치관련 비교사례로 인천대, 전남대 관련 규정 등 검토

○ 재정위원회 구성원칙과 위원구성(안)

-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 민주성 가치, 대학 공공성 가치
- 위원구성은 위원장 포함 21인으로 구성

구분	내 용	비고
구성원칙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 가치 -대학의 민주성 가치(민주적 절차와 대표성) -대학의 공공성 가치(민립대학특성 반영)	
위원정수	-위원장 포함 21명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	
위원구성	-당연직 7명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취업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등	-예산회계규정 -규정상 기획위원회 위원
	-대학평의회 7명 -교원3, 직원2, 재학생1, 동문1	-정관 제35조의 3에 규정 -구성원 대표기관, 규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
	-외부인사 추천 7명 -교원3, 직원2, 재학생1, 동문1(추천위원회)	-민립대학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인사 참여 -국립대학 경우처럼 총장이 위촉하는 방식과 다른 평의회의 추천으로 각 단체의 추천위원회 구성 요구

<표 4-4> 재정위원회 관련 규정안 비교

구분	국립대학회계법	인천대학교 규정	전남대학교 규정	조선대학교 규정(안)
명칭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관한법률(2015.3.13. 제정)	인천대학교 재무경영위원회 규정(2013.2.18제정)	전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5. 7. 10 제정)	(가칭)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규정(안)
목적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제24조 제4항에 따라 재무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을 정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 및 회계 운영 사항을 규정	<대학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〇〇 제〇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을 정함
심의 사항 (국립대학은 심의의결 사항)	1. 고등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1.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정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별도 규정으로 정한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	1. 고등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1. 대학운영계획 중 재정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별도 규정으로 정한 대학의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총장이 재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구성	위원 정수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 정수	위원장 포함 20명	위원장 포함 15명	위원장 포함 21명
	위원장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
	위원 구분	-당연직위원 -일반직위원 -일반직위원 과반수	위원 구분	-	-당연직 위원 7명 -일반직 위원 8명	- 당연직 위원 7명 - 일반직 위원 14명
	구성내용	1. 당연직위원 -재정·회계규정에 위임 2. 일반직위원 -대학 교원·직원	1. 총장 지명하는 부총장 1명 2.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예산처장, 연구처장, 대외전략처장, 사무처장, 입학본부장 3. 평의회 추천 교직원 3명	1. 당연직위원 :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조정처장, 사무국장, 학무본부장, 평의회 부의장 (*전북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산학	1. 당연직 7명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취업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관리처장, 대외협력처장	

	<p>및 재학생(각2명)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p>	<p>(직원1명 포함) 4. 동창회 추천 외부인사 1명 5. 총장임명 교직원 2명 6. 총장위촉 외부인사 5명 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2015.9.8. 추가)</p>	<p>연구본부장, 입학본부장, 국제협력본부장) 2. 일반직위원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대학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p>	<p>2. 대학평의원회 7명 -교원3, 직원2, 재학생1, 동문1 3. 외부인사 추천 7명 -교원3, 직원2, 재학생1, 동문1(추천위원회)</p>
추천절차	-재정·회계규정에 위임	<p>1. 총장 지명(부총장) 2. 대학본부(7명) 3. 평의원회 추천(3명) 3. 동창회 추천(1명) 4. 총장임명 교직원(2명) 5. 총장위촉 외부인사(5명) 6. 인천광역시장 추천(1명)</p>	<p>1. 교원위원(2명) -총장 추천 1명, 교수회 추천(1명) 2. 직원위원 : 직원단체 추천(2명) 3. 학생위원 : 총학생회 추천(2명) 4. 외부위원(2명) ① 총동창회 추천(1명) ② 학부모(1명) *잔여 수학기간이 1년 이상인 재학생의 학부모 중에서 이 대학교 대학(원) 및 총학생회가 각 1명을 추천하여 이 중 총장이 위촉</p>	-예산·회계규정에 위임
외부위원		<p>외부위원 7/20=35.0% (※국립대학법인*서울대(10/30</p>	<p>외부위원 2/15=13.3%</p>	<p>외부인원 7/21=30%</p>

			명)		
임기	재정·회계규정에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 임기는 2년, 중임 ② 위원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시 전임자의 잔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직 위원 임기는 1회 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위원 : 2년 2. 직원위원 : 2년 3. 학생위원 : 1년 4. 외부위원 : 2년 *전북대 : 각각 1년, 1회 연임 *충남대 : 전남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 임기는 2년, 중임 ② 위원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③ 학생은 1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 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와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 위원장이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대학의 장(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 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와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 정함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 정함
심의 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그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	※총장은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2항)>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그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둔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
회의록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회의록 작성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이 대학교의 인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경비 지원		① 위원회 참석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지원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일반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	① 위원회 참석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지원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운영 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대학 회계	(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 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	-	-	

4) (가칭)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규정(안)

- 국립대회계법, 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가칭)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규정」 안을 다음으로 도출
- 「(가칭)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규정」은 목적, 심의의결사항, 위원회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소위원회구성, 경비 지원, 운영세칙 등으로 구성

<표 4-5>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구성 규정(안)

구분	내용	비고
제○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 제○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심의사항)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운영계획 중 재정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별도 규정으로 정한 대학의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장기차입 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장이 재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7명 2. 대학평의회회 7명 3. 외부인사 추천 7명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③ 위원 임명과 추천 절차는 예산·회계규정에 위임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p>	
제○조 (임기)	<p>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③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제○조 (위원장직무)	<p>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제○조 (회의)	<p>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와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제○조 (소위원회)	<p>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제○조 (심의결과의처리)	<p>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그 중 이사회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p>	
제○조 (회의록 작성)	<p>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제○조 (경비지원)	<p>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제○조 (운영세칙)	<p>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p>	

5) (가칭)재정위원회 규정(안)제정과 대학정관

가) 조선대학교 정관개정

- 「(가칭)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규정」이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선대학교 정관개정이 필요
- 대학법인 정관은 조선대학교의 최고규범임 재정위원회 규정제정과 이에 따른 재정위원회 설치는 대학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학의 정책결정행위

나) 조선대학교 정관개정 내용

- 조선대학교 정관에 「(가칭)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규정」 신설
- 조선대학교 정관 제3절 대학평의회 다음, 제4절에 재정위원회 설치관련 규정 신설
- 재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포괄적 내용으로 규정

EX. 제〇〇조(가칭)...재정위원회)

- ① 조선대학교의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운영계획 중 재정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별도 규정으로 정한 대학의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장기차입 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장이 재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〇〇조(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 ① 재정위원회는 교직원, 학생과 외부인사 등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총장은 재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 및 평의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재정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 대학 재정기구 비교분석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의거 설치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규정됨
-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은 이에 근거하여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선대 등록금심의위원회 현황

① 「등록금심의위원회세칙」

- 조선대는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및 제31조 제3항, 제2조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함.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세칙」(2011.2.1.제정, 2018.11.13개정.)
- 조선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9명(총장위촉) 구성하고, 교직원/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
- 조선대 등록금심의위원회 두 기능을 수행 규정함. 1.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적정 등록금을 심의 2. 매 학년도 본 대학교 예산 및 결산사항 등 심의 의결

② 조선대 정관 규정(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관련)

- 「조선대학교정관」 회계규정(제9조)에서, 대학에 속하는 회계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됨

[조선대학교 정관]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편성·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가칭) 재정위원회의 심사로 일원화함 이러한 경우 등록금심사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한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제정(혹은 기능조정). 대학평의원회의는 재정위원회 구성에 총장과 권한을 반분하여 참여함으로써 이전의 자문 기능보다 권한이 강화됨

③ 조선대 예산회계규정(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관련)

- 「조선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음

[조선대학교 예산회계 규정] 제8조(예산의 조정 및 편성)
 ② 총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학평의원회의의 자문을 거친 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금심의 관련 타 대학 규정

-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는 정관은 물론 학칙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음
- 연세대학교는 2008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은 물론이고 예결산 자문위원회 규정을 정관에서 모두 삭제

<표 4-6> 타대학 등록금 심의 관련 정관 규정

정관	내용	비고
고려대학교	제1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정관은 물론 학칙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없음

성균관대학교	<p>제9조 (회계의 구분)</p> <p>①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한다. ④제1항의 학교회계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p>	등록금 심의 위원회 규정 없음
연세대학교	<p>제9조(회계의 구분)</p> <p>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의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총장이 집행한다.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삭제 2008.11.20.> 제13조~ 제17조 삭제 <2008.11.20.> 제18조~ 제21조 삭제 <1986.12.9.></p>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은 물론이고 예결산 자문위원회 규정 모두 삭제

① 연세대학교

가 정관

<p>제9조(회계의 구분)</p> <p>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10.23.>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의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총장이 집행한다. <개정 2012.10.23., 2014.2.7.></p>
--

나 연세대학교 회계규정: 대학 예산·결산규정(등심위 심의)

<p>제6조 (예산의 편성절차) ①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예산요구서를 종합조정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확인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4, 2002.7.30> ②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조정에 있어서 각 기관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배정, 조정, 심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원칙은 별도의 시행세칙 및 내규에 따른다.<개정 2016.8.18., 신설 2004.6.30></p>

다 연세대학교 등심위 세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p>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8.> 2. 예산 및 결산의 심사의결 <신설 2019.11.18.>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9.11.18.>

② 고려대학교

㉑ 정관

제1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㉒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

제 2 조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자문 기능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원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 5명
2. 직원 : 2명
3. 학생 : 2명
4. 교우 :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명

㉓ 성균관대학교

㉑ 정관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한다.

④ 제1항의 학교회계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㉒성균관대학교 회계규정: 등심위 규정 없음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 및 지출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예산의 운영) ① 예산은 편성부서, 집행부서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편성부서는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③ 집행부서는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㉓ 성균관대학교 등심위 세칙:

-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법적 구속력 약하고, 구성 역시 총장위촉 의존)

제3조(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① 위원장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직원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2. 학생 위원은 학생처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3. 관련전문가 위원은 대학의 학사, 기획, 재정 등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감사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4.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정한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그 심의결과를 등록기간 개시 15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의 산정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처 예산기획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기록·보존한다.

② 위원회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의3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서강대학교

㉠ 정관

<p>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p> <p>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p> <p>③ 제 1 항의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회계는 서강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개정 1981.10.20., 2006.1.16.></p>
<p>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p>
<p>제 13 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설치) (삭제)</p> <p>제 14 조 (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② (삭제)</p> <p>제 15 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p> <p>제 16 조 (회의) (삭제)</p> <p>제 17 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삭제) ② (삭제)</p> <p>제 18 조 내지 제 21 조 (삭제)<신설 1981.10.20.>,<개정1986.9.22., 1991.4.15.>,<삭제 2007.5.14></p>

㉡서강대학교 회계규정: 예산회계 업무 규정

제 6 조 (세입·세출의 정의) 당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 7 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제 8 조 (예산의 편성지침)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정한다.

㉔서강대학교 등심위 세칙은 없으며, 대신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⑤ 중앙대학교

제2절 회계

제9조(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749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재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3절 삭제 <2006.09.04.>

제13조(삭제) <2006.09.04.>
제14조(삭제) <2006.09.04.>

㉔정관

㉔중앙대학교 회계규정

제7조(예산안의 편성절차) 대학의 예산안 편성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총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편성지침을 정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총장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다.
4. 총장은 매 학년도 등록금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학평의회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법인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㉔ 중앙대학교 등심위 세칙: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출처:<https://khei-khei.tistory.com>

나) 대학평의회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발전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재정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있음
-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의 대표기관이지만, 재무회계규정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함

조선대학교 정관 제35조의 7(심의사항)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자문)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자문)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가칭) 재정위원회

-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에 의거 대학의 재정회계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이를 사립대학에 적용할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외부인사를 대학재정운용에 참여

시킴으로써 투명성·공정성·민주성·책무성 등을 강화할 수 있음

(가칭) 재정위원회 기능(심의사항)

- 1.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구분]

-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비등록금은 심의사항

-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라) 대학 재정기구의 공공성 비교

-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가칭)재정위원회 등의 기구는 설치 근거와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그럼에도 각 기구의 특성을 공영화 요소인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책무성 등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표 4-7> 재정위원회의 공영화 요소 비교(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대비)

공영화 요소	세부 영역	(평가)지표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 평의원회	(가칭) 재정위원회
1. 투명성	1.1. 공개 범위	1.1.1. 예산결산 심의 항목 확대	△	×	○
	1.2. 공개 수준	1.2.1. 예산결산 심의 결과 및 심의과정 공개(회의록 공개)	×	×	○
	1.3. 공개 대상	1.3.1. 재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시민위원 참여)	△	×	○
2. 공정성	2.1. 위원구성	2.1.1.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기능 강화	△	×	○
	2.2. 재정 배분	2.2.1.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 배분(전문가)	×	×	△
3. 민주성	3.1. 위원회 구성	3.1.1. 구성원 대표의 참여	△	△	○
	3.2. 위원회 운영	3.1.2.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소수의견 반영)	×	△	△
4. 책무성	4.1. 지역사회 책임	4.1.1.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책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	×	×	○
	4.2. 교육 책임	4.2.1. 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학생위원 참여)	×	×	○

주) *○(예), ×(아니오), △(중간)

- 공영화 요소로서 1.투명성 하위영역으로 i)공개범위, ii)공개수준, iii)공개대상, 2. 공정성은 i)위원구성, ii)재정배분, 3. 민주성은 i)위원회 구성, ii)위원회 운영, 4. 책무성은 i) 지역사회 책임, ii)교육 책임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평가지표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가칭)재정위원회 등을 비교 분석하면 각 위원회의 장단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독립적인 등록금 관련 정책 심의, 학생의 요구 수렴 가능성이 장점으로, 심의 영역 및 위원구성의 제약으로 인해 공정성과 책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제기됨.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반응성이 장점으로, 재정관련 의결기능이 없는 자문기구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기대하기 힘든 점은 단점임. (가칭)재정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공정성·민주성·책무성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대학재정과 관련한 심의 절차가 복잡성(시간, 비용), 위원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교착상태가 발생 우려는 단점으로 제기됨

<표 4-8> 대학재정 기구의 장단점 비교

구분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가칭)재정위원회
장점	· 독립적인 등록금 관련 정책 심의, 학생의 요구 수렴 가능*	· 대학구성원의 요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반응성	· 시민의 참여를 통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공정성·민주성·책무성
단점	· 심의 영역 및 위원구성의 제약으로 인해 공정성과 책무성을 기대하기 힘들	· 재정관련 의결기능이 없는 자문기구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기대하기 힘들 · 시민 참여 제한으로 인한 공정성 실현에 제약이 있음	· 대학재정과 관련한 심의 절차가 복잡함(시간, 비용) · 위원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교착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조선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음

마) 정관변경 및 제 규정 개정(안)

- 공영형 사립대 구성 요소로써 대학 (가칭)재정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재정기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정관>, <예산회계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세칙규정> 등의 규정 개정이 필요함

<표 4-9> 정관변경 및 제 규정 제·개정안

구분	현재	개정(안)
대학정관	정관제9조3항1 1. 대학교·전문대학 - <u>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u>	재정위원회 심사 절차 삽입
대학평의원회 (정관 35조의 7)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u>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조정</u>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 세칙 제2조	1. 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적정 등록금을 심의한다. 2. 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적정 등록금을 심의한다. 2. <u>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조정</u>
예산회계규정	제8조 2항 ② 총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u>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u>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위원회 심사 절차 삽입
(가칭) 재정위원회		-<대학정관>.. 개정 -<(가칭)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규정> 제정

<표 4-10>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회, (가칭)재정위원회 비교

구분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회	(가칭)재정위원회(안)
설치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및 제31조 제3항, 제2조	「조선대학교정관」 제35조의2~8	「조선대학교정관」, 근거 조항 신설
법적 성격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등록금 책정해 심의권과 의결권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학발전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외에 재정운영 등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있음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에 의거 대학의 재정회계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단, 사립대학에 적용은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자율성을 추가해야 함(심의권으로 제한)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의결로 해석가능)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가능 .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의 대표기관이지만, 재무회계규정에 대해서 현재는 자문기능	-재정위원회 신설을 통해 외부인사를 대학재정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음 (공용형 사립대 공공성 요소) - [국립대학회계법]상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총장의 자율결정사항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을 감안한 공정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권한이 한정됨 - 구체적인 심의의결사항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 이월금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이자수입 -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 그 밖의 수입 </div>

<p>기능</p>	<p>-매 학년도 대학교의 적정 등록금을 심의 -매 학년도 대학교 예산 및 결산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자문)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자문)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등록금심의위원회와 구분] -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 대학원의 논문심사료</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p>역할</p>	<p>-심의/의결</p>	<p>-심의</p>	<p>-심의</p>
<p>구성</p>	<p>-위원장 포함 7~9명/총장위촉 -위원장(기획조정실장) -교직원/학생/전문가 등</p>	<p>-학교장 위촉한 12명 구성 -교원 5명(교수평의회 추천) -직원 3명(노동조합 추천) -학생 2명(총학생회 추천) -동문 2명(총동창회 추천)</p>	<p>-당연직 위원5/일반직 위원10 1. 당연직 5명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2. 교원 3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동문 1명 3. 지역사회 대표 인사 2명 -(광주광역시 추천 1명, 지역사회 대표 인사 1명) * 대평은 총12명(교수평의회 추천 교원 5명, 직원노동조합 추천 직원 3명, 총학생회 추천 학생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p>

정관 및 대학 규정	「조선대학교정관」, 제9조3항 *대학교·전문대학 -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조선대학교정관」, 제35조의2~8 (2007. 1.1.제정)	<(가칭)대학재정위원회규정>신설 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세칙」(2011.2.1.제정, 2018.11.13개정.)	「대학평의위원회운영세칙」(2007.5.7.제정)	

나. (가칭)재정위원회 신설 의사결정과정

1) (가칭)재정위원회 신설 간담회

가) 간담회 개최 목적

-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의 필수적 기구로 (가칭)재정위원회 설치는 제도설계과정임 제도설계과정으로서 재정위원회 신설은 대학의사결정행위자의 합리적 토론과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됨
- 본 간담회는 다음 목적에서 진행됨 (가칭)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재정위원회 신설을 위해 대학 재정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청취 및 토론을 진행함
- (가칭) 대학 재정위원회 신설 간담회
 - 일시 : 2020. 3. 9(월), 16:00~17:30, 본관 소회의실
 - 참여자 : 기획조정실(○부실장, ○팀장)과 학교법인사무처(○사무처장, ○○팀장, ○○담당) 등 및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 (가칭) 대학 재정위원회 신설 간담회 내용
 -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단이 재정위원회 신설안 설명(원칙과 내용)
 - 재정위원회 신설 관련 참여자 의견 개진과 응답

<표 4-11> (가칭)재정위원회 신설관련 관계자 간담회 토론내용

구분	초점사항	주요 내용
'재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공영형사립대학 개념이해	· 공영형사립대학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공영형사립대학 실증연구가 개인 연구인지 대학기관 연구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기구신설 방향성	· 정관에 설치된 재정심의기능 수행 기구와 역할조정 명확해야 한다.
'기능수행'에 대해	대학평의위원회와 기능 중복성 (대학정관 제35조의7)	· 대학평의위원회(대평)의 예산관련 규정이 있는데 기능이 중복된다. · 대평기능과 재정위원회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대평심의사항>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문>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내용'에 대해	심의범위	· 재정위원회 심의사항은 상세한 규정보다는 포괄적인 명기가 바람직하다. · 심의사항을 상세하게 명기하면 대학본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재정위원회 심의는 대학만 한정한다. 병원/치과병원은 회계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외가 필요하다.
‘역할의 범위’에 대해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대학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다. 재정위원회는 심의 기능에 한정해야 한다. 재정위원회 역할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갖게 되면 이사회 권한과 중복된다.
‘신설규정’ 방식에 대해	설치근거로 정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원회 설치관련 정관개정은 포괄 규정으로 ·대학에는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재정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재정위원회 실제운영’에 대해	실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원회가 실행된다면 절차적으로 한 단계 더 거친다. 등심위> 대평 > 재정위원회. 관련 절차와 준비시간이 소요된다. · 2019년도 결산시 적용 가능하다.

나) (가칭)재정위원회 신설 간담회 결과

- 본 재정위원회 신설관련 간담회 결과 i)(가칭)재정위원회 신설, ii)기능과 역할, iii)정관개정 등의 사항이 다루어지고 방향성이 정해짐

(1) (가칭) 재정위원회 신설

- (가칭) 재정위원회 신설에 공감
- 공용형 사립대 개념이해 필요성

(2) 기능과 역할

- 재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현재 기구와 관계 재정립과 조정
- 재정위원회 기능에 대해 심의기능 vs 의결기능
- 재정위원회 심의 범위의 한정

(3) 정관개정

- (가칭) 재정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으로서 정관개정 필요성
- 정관개정은 포괄 규정

<표 4-12> (가칭)재정위원회 신설관련 관계자 간담회 토론결과

구분	초점사항	간담회 논의 내용
----	------	-----------

‘재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신설여부	· 공영형사립대학 요소로서 재정위원회 신설 필요성 공감
‘기능수행’에 대해	기능 중복성	· 대학평의원회기능과 재정위원회의 기능조정 필요
‘심의내용’에 대해	심의범위	· 재정위원회 심의사항은 포괄적 내용 명기
	대상	· 재정위원회 심의는 <대학>만 한정하여 적용
‘역할의 범위’에 대해	심의 역할	· 재정위원회는 심의 기능에 한정
‘기구신설규정’ 방식에 대해	정관개정	· 설치관련 정관 <포괄 규정>

2) (가칭)재정위원회 신설 대학본부 의견청취

가) 의견청취 목적

-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의 필수적 기구로 (가칭)재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연구단과 대학본부 간 합리적 토론과 조정과정 차원에서 의견 청취가 진행됨
- 대학본부 의견청취 : 재정위원회 규정안 신설
 -일시 : 2020. 3. 26(목), 10:00~11:00, 대학 본관
 -참여자 :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기획예산팀장 및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 대학본부 의견청취 내용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대학재정기구 비교분석>, 내용설명
 -공영형사립대 추진 일정 설명(여론조사, 심층인터뷰, FGI)

나) 의견청취 결과

- 대학본부의 의견청취 결과 i)재정위원회 기능, ii)재정위원회 구성, iii)운영에 관하여 의견이 제안됨
- (가칭)재정위원회 기능
 -재정위원회 기능 가운데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도 숙고가 필요(법인사무처와 논의 권고)
- (가칭)재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규모를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함(당연직 2인-부총장,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9인- 교원3인, 직원 2인, 재학생 1인, 동문 1인, 광주광역시장추천 1인, 회계사 혹은 세무사 협회 추천 1인 등 총11인 구성방안)

- 재정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비중을 2인으로 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인사 추천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 구성원 단위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기능중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가칭)재정위원회 운영
 - (가칭) 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4월 중에 위원회 구성과 내규 마련하는 방안 논의
 - 5월 초에 위원회 운영: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자문을 받는 방안 논의

<표 4-13> (가칭)재정위원회 관련 대학본부 의견 청취결과

구분	내용
(가칭)재정위원회기능	-재정위원회 기능 가운데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효율성에 대한 숙고 필요)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법인사무처와 논의 권고)
(가칭)재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규모를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방안 - 당연직 2인(부총장, 기획조정실장) - 일반직 9인(교원3인, 직원 2인, 재학생 1인, 동문 1인, 광주광역시 시장추천 1인, 회계사 혹은 세무사 협회 추천 1인 등 총11인) - 재정위원회 취지를 고려 학생비중 2인으로 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인사 추천이 필요 - 구성원 단위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기능중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
(가칭)재정위원회기능 운영	- 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4월 중에 위원회 구성과 내규 마련하는 방안 논의 - 5월 초에 위원회 운영: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자문을 받는 방안 논의

3) (가칭)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공청회

가) 공청회 목적

-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의 필수적 기구로 (가칭)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과 대학본부, 관련단체간 토론 및 조정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

-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방안 마련을 공청회
 - 일시 : 2020. 4. 10(금), 15:00~18:00, 대학 본관 소회의실
 - 참여자 : 대학본부, 기획조정실 부실장, 직원노조위원장, 총학생회장, 총동창회 사무처, 법인사무처장,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 공청회 내용
 -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공공성 제고방안

나) 공청회 토론 및 결과

- 공청회에서 재정위원회 기능, 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토론과 의견이 제안됨
- (가칭)재정위원회 기능
 -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기능중복에 대한 효율적 조정 필요성
- (가칭)재정위원회 구성
 - 재정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외부위원 확대 필요성
- (가칭)재정위원회 운영
 - (가칭) 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과 규정 마련 등 절차적 과정 논의
 - 2020년 5월 중 위원회 실제운영방안 논의

4) (가칭)재정위원회 규정 및 재정위원회 구성 결정

가) 대학정관 변경 및 재정위원회 규정

- 조선대 재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를 위해 대학법인정관 개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됨
- 2020년 3월 26일 제4차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개정
 - 교육부의 정책연구(‘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에 조선대학교 연구단이 선정되어 실증연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증연구 제안서 조건인 재정위원회를 법인 정관에 반영하기 위함
- 정관 개정 주요 내용
 -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의 1 : 조선대학교 교비회계 예산 확정절차에 재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 제12조의2(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5항의1 : 조선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절차에 재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 제95조의5(재정위원회)(신설) : 재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표 4-14>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9조(회계의 구분) ① <기재 생략> ② <기재 생략> ③제1항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편성·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 - <u>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u>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중·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p> <p>제12조의2(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 <기재 생략> ② <기재 생략> ③ <기재 생략> ④ <기재 생략> ⑤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 - <u>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u>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중·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p> <p>제95조의5 <신설></p>	<p>제9조(회계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편성·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 - <u>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재정위원회의</u>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조선대학교 회계에 한한다. 2. 중·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p> <p>제12조의2(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학교·전문대학 - <u>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재정위원회의</u>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조선대학교 회계에 한한다. 2. 중·고등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p>	<p>대학회계 예산확정 절차에 재정위원회 추가</p> <p>대학회계 결산절차에 재정위원회 추가</p> <p>재정위원회 운영 별도규정 신설</p>

<표 4-14>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u>제95조의5(재정위원회) ①대학교의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u> <u>②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 (가칭)재정위원회 규정안이 실증연구단 안 마련과 함께 절차적 과정을 거쳐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규정안이 확정됨

○ 2020년 5월 7일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을 개정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기로 규정함에 따라(정관 제95조의5) 2020년 5월 7일 개최된 제4차 교무위원회에서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

-심의사항 - 1.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위원회 구성 - 1.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총무관리처장 등 5명(당연직), 2.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교원 3명, 3.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직원 2명, 4.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생 2명, 5.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2명(최소 1명은 회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동문), 6. 조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 1명, 7.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 등 17명으로 구성

○ 재정위원회 위원정수는 대학본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위원 2명이 추가 최종 17명으로 결정됨 외부인사 참여확대 차원에서 논의가 반영됨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95조의5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p>제2조(심의사항)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총무관리처장 등 5명(당연직) 2.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교원 3명 3.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직원 2명 4.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생 2명 5.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2명(최소 1명은 회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동문) 6. 조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 1명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재정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p>
<p>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p>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와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p>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p>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8조(심의결과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그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p> <p>제9조(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0조(경비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되,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 사업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p>

나) 재정위원회 구성

- 재정위원회는 대학정관 규정, 재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조선대학교재정위원회」를 구성함
- 재정위원회는 총 17명으로, 당연직 5명, 교수평의회회 추천 3명, 직원노동조합 추천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 총학생회 추천 2명, 광역단체장 추천 1명, 총장추천 2명으로 구성됨
-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총무관리처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
-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교원 3명 - 경영학부, 화학과, 무역학과 각1명
-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직원 2명 - 직원노조, 기초교육대학 각 1명
-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생 2명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2명(최소 1명은 회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동문) - 총동창회 사무총장, 총동창회 부회장(회계사)
- 조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 1명 - 광주광역시 청소년과 1인
-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 등 17명으로 구성 - 세무사 1인, 법무사 1인

<표 4-15>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명단

2020.5.8

순번	구분	교내외	직위	성명	임기	비고
1	위원장	교내	부총장	이○용	2020.05.07. ~ 보직 재임기간	당연직
2	위원	교내	기획조정실장	이○창	2020.05.07. ~ 보직 재임기간	당연직
3	위원	교내	교무처장	황○용	2020.05.07. ~ 보직 재임기간	당연직
4	위원	교내	연구처장	이○국	2020.05.07. ~ 보직 재임기간	당연직
5	위원	교내	총무관리처장	박○순	2020.05.07. ~ 보직 재임기간	당연직
6	위원	교내	경상대학 경영학부	김○순	2020.05.07. ~ 2022.05.06	교수평의원 회 추천
7	위원	교내	자연과학공공보 건안전대학 화학과	이○대	2020.05.07. ~ 2022.05.06	교수평의원 회 추천
8	위원	교내	경상대학 무역학과	이○홍	2020.05.07. ~ 2022.05.06	교수평의원 회 추천
9	위원	교내	직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박○표	2020.05.07. ~ 2022.05.06	직원노동조 합 추천
10	위원	교내	기초교육대학 팀장	박○신	2020.05.07. ~ 2022.05.06	직원노동조 합 추천
11	위원	교외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래	2020.05.07. ~ 2022.05.06	총동창회 추천
12	위원	교외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이○현	2020.05.07. ~ 2022.05.06	총동창회 추천(공인회 계사)
13	위원	교내	총학생회장	김○연	2020.05.07. ~ 2021.05.06.	총학생회 추천(임기 1년)
14	위원	교내	총학생회부회장	박○영	2020.05.07. ~ 2021.05.06.	총학생회 추천(임기 1년)
15	위원	교외	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과장	손○수	2020.05.07. ~ 2022.05.06	광역자치단 체장 추천
16	위원	교외	세무법인 동반	김○후	2020.05.07. ~ 2022.05.06	총장추천(세 무사)
17	위원	교외	법무법인 맥	서○암	2020.05.07. ~ 2022.05.06	총장추천(변 호사)
18	간사	교내	재정예산팀장	이○자	2020.05.07. ~ 보직 재임기간	당연직

○ 재정위원 구성의 특징

-전체 위원 17명 중 외부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전체 위원의 약 30%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이는 대학 재정에 대한 심의를 외부에도 개방하여 검증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정위원회 운영 및 평가

1) 재정위원회 개최 운영

가) 제1차 재정위원회 개최 운영

○ 「대학정관」 및 「재정위원회규정」에 의거, 「조선대학교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관련 안건을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실제 운영함

○ 제1차 재정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대학 본관에서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0년 5월 8일(금), 15:00

-장소 : 대학 본관 소회의실

○ 안건

-가.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사후 보고

-나.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그림 4-1> 제1차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2020.05.08.)

나) 제2차 재정위원회 개최 운영

○ 재정위원회는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2020년 5월 18일 제2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14:00

-장소 : 대학 본관 소회의실

○ 안전

-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익사업 확대방안(주요수익사업 현황, 주요 수익사업 개선 방안, 신규 수익사업 모델)



<그림 4-2> 제2차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2020.05.18.)

2) 재정위원회 운영 평가

가) 기능

- 조선대는 1, 2차 재정위원회 개최하여 재정관련 안전을 심의함으로써 심의기능을 수행하였음
- 재정위원회 기능은 대학 재정운영 투명성 차원에서 역할을 수행함

나) 심의내용

-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익사업 확대방안 등
- 안전 심의와 함께 재정위원회 제도적 절차 논의 등

다) 평가

- 대학재정 관련 안전을 제도적 절차로 「조선대학교재정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수

행함으로써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었음을 평가할 수 있음

- 대학재정의 절차적 과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기능상 중복은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라. 소결

- **(취지)** 사립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함. 하지만 사립학교는 국민의 교육의무 기능을 분담하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음. 이러한 공공성 차원과 함께 정부재정의존에 따라 재정운영 투명성이 강조되는데, 재정 투명성은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임. 즉, 대학재정위원회 기구설치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음.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로서 재정위원회는 재정 투명성 위한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대학과 법인이사회의 투명한 대학 재정정책을 지향하는 것임. 대학재정위원회설치는 대학 재정시스템의 제도설계이며, 이러한 제도설계는 대학재정결정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대학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임
- **(경과)** 본 연구단은 대학재정위원회 설치를 위해 재정관련 국가 법령체계 분석과 재정위원회 설치관련 비교사례로 인천대, 전남대 관련 규정 등 검토를 하였음. 연구단은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 대학 자율성과 효율성, 민주성 가치, 대학 공공성 가치에 두고 재정위원회 설치안, 기능, 내용을 분석 작성하였음. 이와 함께 대학재정기구의 공공성 분석을 위해 조선대학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안 등의 기구를 비교하여 각 위원회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재정위원회 안을 도출하였음. 본 연구단은 대학재정위원회는 i)대학재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수행, ii)심의사항은 1.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으로 결정하였음
- **(경과)** 공영형 사립대학 요소의 필수기구 대학재정위원회 설치에 연구단, 대학본부, 이해관계자 등과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음. 1단계는 2020. 3. 9(월)일

에 대학재정위원회 신설 간담회가 개최하였음. 이 간담회에서는 연구단이 제안하는 재정위원회 신설을 위해 대학 재정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청취와 토의가 진행되었고, 재정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방향성을 결정하였음. 2단계는 2020. 3. 26(목)일 본 연구단의 재정위원회 설치안과 관련하여 대학본부 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진행되었는데, 대학재정기구 분석과 재정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의견이 제안됨. 3단계는 2020. 4. 10(금)에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방안' 마련을 공청회를 개최,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토론이 진행되었음. 이러한 의견수렴과 토의와 함께 본 연구단은 재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를 위해 대학법인정관 개정, 대학재정위원회규정안이 마련하였음. 대학재정위원회는 '대학법인정관', '대학재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조선대학교재정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였음. 대학재정위원회는 총 17명으로, 당연직 5명, 교수평의회 추천 3명, 직원노동조합 추천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 총학생회 추천 2명, 광역단체장 추천 1명, 총장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었음

- **(운영)** 대학정관 및 대학재정위원회규정에 의거 <조선대학교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관련 안건을 심의 위해 총 2회 대학재정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음. 제1차 재정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개최 운영되었는데,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사후 보고, 2020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제2차 재정위원회는 2020년 5월 18일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익사업 확대방안(주요수익사업 현황, 주요 수익사업 개선방안, 신규 수익사업 모델)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 **(평가)** 조선대학교는 대학재정위원회규정에 의거 1, 2차 재정위원회 개최하여 재정관련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심의기능을 수행하였음. 즉,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익사업 확대방안 등 대학재정 관련 안건을 「조선대학교재정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었음. 한편으론 대학재정결정의 절차적 과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회가 기능 중복이 발생하였음. 대학재정기구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3) 대학재정위원회 설치시 재정기구 조정안 1: 대학본부의 재정위원회

가) 재정위원회 설치 목적

- 재정위원회는 공용형사립대 필수적 요소로서 대학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책무성 확보에 있음

○ 재정위원회는 제도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대학재정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현재 대학재정기구와 기능중복의 조정이 필요

나) 조정안: 중복기능 조정

○ 공영형사립대 요소로서 대학재정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임 때문에 조선대학교재정위원회를 <대학 공식제도기구>로 설치하려면, 기능조정과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대학재정 관련 제도기구는 <대학재정위원회> 기능으로 일원화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한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능조정을 함. 대학평의원회는 예결산에 관한 자문기능을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대학평의원회는 예결산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대학재정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재정기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정관>, <예산회계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세칙규정> 등의 규정 개정이 필요

<표 4-16> 대학재정기구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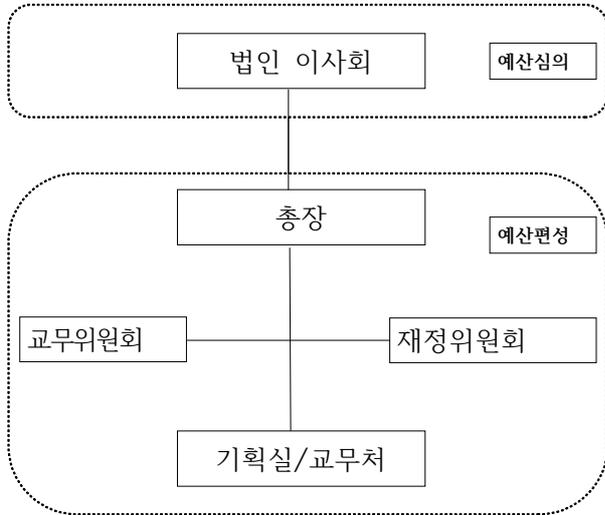
구 분	현재 기능	조정안	규정 개정
등록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제11조)	1. 매 학년도 본 대학교의 적정 등록금을 심의 2. 매 학년도 본 대학교 예산 및 결산사항 등 심의 의결	1. 등록금만 심의 2. 대학교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은 <대학재정위원회> 이관	- 「등록심의위원회규정」 개정
대학평의원회(대학정관 제35조의 7)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자문)	5. <대학재정위원회> 이관	- 「대학정관」 개정(정관 35조의 7)
대학재정위원회(설치)	대학재정위원회 <심의>	<재정위원회 기능> 1.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대학재정위원회규정」 신설 「대학재정위원회규정」에 “대학이사회는 대학재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명기

		심의를 요청한 사항 대학재정에 관한 사항	
대학 예산 편성 시	「예산회계규정」		「예산회계규정」 개정 제8조 2항 ② 총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u>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u>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 「대학정관」 개정 - <u>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u>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정관제9조)
	대학평의회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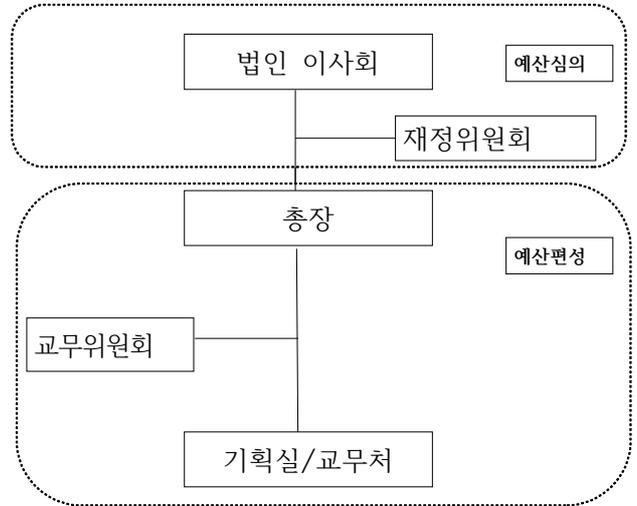
4) 대학재정위원회 설치시 재정기구 조정안 2: 법인의 재정위원회

가) 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정책제안

- 재정위원회는 대학재정에 관한 사안들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됨
- 재정위원회 제도는 이미 조선대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단계의 재정 심의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대학의 자율성과 이사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의 범위가 조정되어야 하고, 재정위원회가 기존 재정 심의제도와 일부 권한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조정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위원회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두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음



<그림 4-3> 대학본부-재정위원회



<그림 4-4> 법인이사회-재정위원회

나) 대학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재정위원회에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

- 재정위원회를 대학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본부의 대학재정(예산)의 편성안을 최종 결정
- 대학본부 설치 시, 현재 대학재정기구의 기능 중첩(등심위/대평)을 조정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역할 수행할 수 있음. 하지만 재정위원회는 이사회와의 협의 없이 대학본부 예산편성안을 심의하기에 이사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움(형식적인 승인 혹은 거부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재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반복될 수 있음

다) 대학법인에 설치하는 경우(재정위원회에 일부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

- 재정위원회를 법인이사회에 설치하는 경우, 이사가 재정위원회의 대학재정(예산)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직접 참여.
- 재정위원회를 법인이사회에 설치하는 경우,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 의결사항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 하지만 대학본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법인이사회 내부에서 대학과 이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 4-17> 대학본부 설치 vs 법인이사회 설치 비교

구분	대학본부-재정위원회	대학법인-재정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결 전단계에서 예산편성안 결정 기능 • 재정위원회 권한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가 예산안 심의과정에 참여 • 재정위원회 권한이 큼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학기구조정으로 재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행 가능 • 대학의 자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을 포함한 법인 산하기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안 수립 가능 • 재정위원회 의결사항의 이사회 통과 가능성 제고 •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만의 재정사항을 고려한 재정기획 • 재정위원회 의결사항의 무력화 가능성 • 이사회의 책임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 저하 • 재정위원회 내부에서 대학-이사회 간 갈등 가능성 •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사의 업무 부담 증가

2. 공적 인사의 이사회 참관제도 도입 및 운영

가.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현황 및 참관제도 도입

1) 이사회 현황(법인사무처장과의 인터뷰)

- 전국의 각급 학교의 사립법인은 1개교를 운영하는 규모의 법인이 다수인 반면, 조선대학교 법인은 7개 학교와 3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등 규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임
-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안건의 종류와 수가 소규모 사립 법인보다 많음
-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이사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 후 보관중인 도장으로 날인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 경우 허위 회의록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2000년대 중반 교육부에서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사회 참석임원에 대한 회의록 자필서명을 받도록 지침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후 2007년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를 개정하여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참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출석임원 중 3명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을 하도록 법제화하였음

2) 참관제도 도입

-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요소 중의 하나로 이사회 회의에 외부인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외부인 참관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함
- 2020년 4월 23일 제5차 이사회에서부터 이사회 회의시 외부인 참관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 이는 한국에서 사립대학 이사회 회의를 외부에 개방하는 최초의 사례임

3) 참관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이사회 회의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사회 회의에 외부인이 참관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대외비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더해,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시범운영의 단계에서는 우선 법인이 관할하는 7개의 학교와 3개의 병원 중에서 조선대학교에 해당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참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음

나. 이사회 참관제도 운영

1) 제5차 이사회 참관

○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14:00

○ 안건

- (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 (2) 조선대학교 직제 규정(안)
- (3) 조선대학교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결산(안)
- (4)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 (5)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교원 신규채용 계획(안)
- (6) 조선대학교병원 2019회계연도 자금 결산(안)
- (7) 조선대학교병원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8) 조선대학교병원 병리과 공간조정 이전에 따른 일부 증축공사 시행의 건(안)
- (9) 조선대학교치과병원 2019회계연도 자금 결산(안)
- (10)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19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 (11)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19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 (12)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19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 (13) 조선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2019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 (14) 조선간호대학교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결산(안)
- (15) 조선간호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16) 조선이공대학교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결산(안)
- (17) 2019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자금 결산(안)
- (18)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임원 처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9) 개방감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 (20)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 외부 참관인

- 조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기관의 핵심 인물을 외부 시민 대표 참관인으로 초청하였음
- 두 명의 외부 참관인은 각각 5.18 기념재단 정책실장과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임



<그림 4-5> 제5차 조선대학교 이사회(2020.04.23.)

2) 제6차 이사회 참관

○ 일시

-2020년 5월 21일(목) 14:00

○ 안건

- (1) 조선대학교 2020학년도 제1회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2)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전망대 카페 신축 계획(안)
- (3) 조선이공대학교 보직임명 동의의 건
- (4)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개정(안)
- (5) 수익용 기본재산 부동산 임대차 계약 변경(안) 및 보고
- (6) 법인사무처 고정자산(집기비품) 폐기(안)
- (7)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계획(안)
- (8)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 외부 참관인

- 조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에 관련된 영역에서 역할하는 두 명의 전문가를 시민 대표 참관인으로 초청하였음
- 두 명의 외부 참관인은 각각 광주소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시교육청 노동조합 간부임



<그림 4-6> 제6차 조선대학교 이사회(2020.05.21.)

3. 2020년 민주적 개방이사 선출과 공익이사 포함 정이사 체제 구성

가. 정이사 후보 지원 및 추천

- 조선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정이사후보를 추천함
- 대학평의회에서 정이사 선임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공모와 추천을 병행하고, 자격요건, 공모 방법(홈페이지)을 확정함(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3차회의 회의록, 2020.03.09.)
- 총3인의 정이사 후보가 조선대 대평에 지원함
 - 노동이사 후보로 전임 조선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이 정이사후보로 지원함
 - 구성원들의 직선제로 선출된 현직 총장이 정이사후보로 지원함
 - 조선대학교 전직 교수 1인이 정이사후보로 지원함
- 대학평의회에서 면접심사(공통질문 2개항)를 진행하고 심의 및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2인의 정이사 후보를 추천함(조선대학교 대학평의회 2030년 제4차 회의록, 2020.03.12.).
-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2인 가운데 1인은 현직총장으로 교수평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총장재임기간으로 정이사 임기를 제한하여 추천하였음(2020.03.11.).
- 조선대학교 노조위원장이 현직총장을 추천하였음
- 직선제로 선출된 현직총장을 정이사후보로 추천한 것(교수평의회 의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가 학내구성원들의 입장을 이사회에서 대변해주는 통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회차	일시	주요 결정
1	2020.03.09.	공모와 추천 병행 결정, 공모 방식 결정.
2	2020.03.12.	면접심사, 심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 2인 추천 결정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학내 구성원들과 근본적인 불신관계에 놓여있는 ‘구경영진’ 측 인사들을 배제해줄 것을 적극 요청함
- 정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나. 개방이사 추천

- 조선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4인, 조선간호대학교 및 조선이공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1인,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인, 법인에서 5인 등을 추천받아 11인으로 구성됨: 고영엽, 양고승, 김준연, 김용래, 김남중, 김연희, 김성재, 지병근, 박태성, 장선웅, 이석필

<표 4-18> 개방이사 후보 선출 경과

회차	일시	주요 결정
1	2020.03.09. 정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김성재 교수) 선출
2	2020.03.09. 오후 6시	- 개방이사 후보자 지원서류 접수 및 면접심사 일정, 심사방식(대면 면접 또는 전화인터뷰), 심사 공통질문 등을 결정함 - 광주광역시에 조선대학교 개방이사 초빙공고문을 개방이사 추천위원장 명의로 발송하기로 함 - 개방이사초빙공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하기로 함
3	2020.03.15.	(1) 개방이사 후보자 서류 심사 - 공용형사립대 추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개방이사 후보 지원자 총 22명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하여 11인의 2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11인의 후보를 선정함
4	2020.03.16.	(1) 개방이사 후보자 면접(전화 인터뷰) 심사 (2) 개방이사 추천대상자 선정 - 2차 심사에 응한 후보자 10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개방이사 후보자 6인을 최종 확정하고, 명단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함

- 1주일 간의 공모기간을 갖고 서류 심사와 전화면접을 통해 엄정한 개방이사 후보가 선정되었음
- 지원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사가 된다면 재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하여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음
-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고려하여 개방이사후보를 선출하였음
- 개방이사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 공영형 사립대의 위상에 맞는 후보추천을 위해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후보추천 요청공문을 보냄(부록 4-3 참조)
- 지역시민단체 활동가 2인이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됨(총6인의 개방이사후보 가운데 1/3에 해당).

다. 정이사 후보추천과정 평가

○ 정이사 후보 공모 기간의 제약

-불과 3일만에 후보추천이 이루어져 불과 3인이 지원하여 공모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함

○ 정이사 후보 지원자 제한

-대평 위원들이 친밀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천이 이루어짐: 현직총장, 전직 조선대 교수, 전임 노조위원장

○ 정이사 후보 선정과정의 개방성 제약

-정이사 후보 공모가 학내 홈페이지에만 게시되어 구성원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였음

-이는 결과에 대한 공지도 마찬가지로였음(교수평의회외의 경우 대의원회의(2020.04.01.)를 통해 공지됨)

-이는 추천기간의 제약만이 아니라 정이사 후보의 적실성에 대한 불필요한 학내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이사 후보의 자격에 관한 쟁점들

-현직 총장의 이사회 참여로 인해 대학본부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 약화 경향에 대한 우려

-총장선거 낙선 경험 3회인 자의 정이사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이사 후보를 선출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현직 의장 소속 단과대인 전직 의대교수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시비 우려

○ 개방이사 후보 추천과정의 개방성 제한

-개방이사 후보 공모가 학내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에 게시되었지만 학내 구성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이는 결과에 대한 공지도 마찬가지로였음

-이는 추천기간의 제약만이 아니라 개방이사 후보의 적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학내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방이사 선출과정에서 현직 교수의 과다 대표성에 대한 우려

- 근거가 부족함
- 개방이사 후보 22인 가운데 11인을 선출하고 6인을 최종 추천함
- 11인 가운데 교수 4인(전직 조선대 교수 1인 포함), 총동창회장 1인, 시민단체(5인) 및 일반인 6인으로 교수 직업군에 속하는 후보지원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함
- 최종 개방이사 후보자로 선출된 6인 가운데 교수 3인, 시민단체 3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사분위는 교수 2인과 1인의 시민단체 대표를 선정함
- 개방이사 선출과정에서 특정한 선출을 위한 청탁행위와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일탈행위가 일부 나타남
- 개방이사 선출과정에서 법인 추천위원의 구성비가 높은 것에 대한 우려
- 총 11인의 개방이사후보추천위원 가운데 5인이 법인추천 인사들임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장으로 법인추천 현직 조선대 교수가 선출됨
- 대학평의회 의장인 교수평의회 의장은 2차 회의부터 개방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함
- 정이사 중 타 대학 및 경쟁대학의 교수가 과반수 이상 선임되었다는 우려
- 대자협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2020.06.15.)
- 그러나 정이사로 선임된 이들 가운데 조선대 교수 출신 1인, 타교 현직교수는 4인(이화여대 1인, 전남대 1인, 목포대 1인, 호남대 1인)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구경영진 추천 1인, 이광호 2기 개방이사 추천 1인, 시민단체 1인, 헌법재판관 출신 1인

라. 정책 과제

-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공익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들로 정이사가 구성되었음
- 9인의 정이사 가운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이며, 교육 전문가들이 절대다수를 구성함
- 법률전문가인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정이사로 참여하게 된 것은 대학의 공정한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였고, 시민단체 출신 1인이 정이사로 참여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

- 학내 구성원들이 사분위가 추천한 정이사들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반발하지 않음
- 이는 무엇보다 학내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구경영진 출신 이사들이 추천한 이사가 1인에 한정되었기 때문임
- 개방이사를 포함한 정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분위가 이해하고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인근의 경쟁대상으로 인식되는 대학 교수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학내자료를 유출할 가능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총장 선임

여기서는 비록 연구기간 내에 실시되지 않았으나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총장선임에 관한 사항을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9년 제17대 총장선거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1988년~2019년 총장 선임 경과

1) 총장 선임 약사: 직선제 도입과 선출권 확대

- 조선대학교는 1988년 제8대 총장선거 이후 제17대 총장선거까지 30여년 간 9회의 총장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됨.
- 총장직선제로 선출된 2인의 총장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며, 제14대 총장선거를 제외하면 이사회가 선거결과 1위 득표 후보자를 선임하였음
- 총장선출 방안은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노동조합, 총동창회가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마련하고 이를 이사회가 승인하여 실행되어 옴
- 이사회가 대평 혹은 대자협에 총장선출방안 마련 의뢰, 대평 혹은 대자협에서 총장선출방안 확정 및 이사회 통지,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해 총장선출방안이 확정됨.
- 총장선출방안은 선거에 임박하여 대자협에서 결정되었으며, 참여 단위들의 투표권 비율 조정이 핵심 사안임

<17대 총장선출규정(2019) 일부 조항>

제7조(총추위의 구성)

①총추위는 13명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각 3인의 위원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다.

- ②총추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각 1명을 선출하며,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선임한다.
- ③총추위 위원은 선관위 위원, 입후보자, 추천인, 참관인,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선관위의 구성) ①선관위는 13명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 추천 6명, 직원노동조합 추천 3명, 총학생회 추천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 ②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각 1명을 선출하며,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선임한다.
- ③선관위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선관위 위원은 입후보자, 추천인, 참관인,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선거권자)

- ①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휴직중인 교직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제단위 선거권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정년계열 교원 75%
 2. 정규직 직원 13%
 3. 총학생회 회원 8%
 4. 총동창회 회원 4%
- ③제2항의 2,3,4호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결정 방법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와 총동창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 ⑤선거일 당일 해외에 체류 중인 교직원의 투표에 대한 방법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총장후보자 선거)

- ①1차 투표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 1인을 총장후보자로 한다.
- ②1차 투표결과, 동수 득표로 인하여 1위인 자가 3명 이상이거나 2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 전에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③1차 투표 또는 2차 투표 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 투표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 1인을 총장후보자로 한다.
- ④1차 투표, 2차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는 반드시 선거 당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 1988년 제8대 총장선임은 이돈명 인권변호사를 초빙하고 교수들의 승인투표를 통해 이루어짐.
- 1999년 제11대 총장선거부터 직원과 총학생회가 투표권을 행사하며 선거에 참여하였음(표 3-3 참조)
- 학생들은 1999년 처음으로 5.7%의 투표권을 부여받음
- 2011년 제14대 총장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총동창회가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며, 2016년에는 1%에 불과하지만 교외의 지역인사가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최근까지 총장선거에서 교수는 80% 내외의 선출권을 행사해옴
- 피선거권은 교내 인사의 경우 정교수에게 있으며, 차기 총장선거부터 3회 미만의 출마만 허용됨.
- 최근까지 후보자들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음

2) 선거 과정

- 총장선출방안 확정 이후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총장초빙공고, 후보자 등록, 후보자 자격심사, 선관위 구성,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등이 진행됨
- 총추위는 과거에는 일부 이사가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제17대 총장선거 시기에는 대자협 4개 단위가 추천한 각 3인의 위원과 사무국장 1인 등 13인으로 구성됨
-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추천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교수 평의회가 추천한 위원의 비중이 6인으로 대자협 구성 단위 간 차이가 있음.
- 선거운동 기간에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음
- 후보자들이 선출권자들을 방문하여 대면접촉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됨.

<17대 총장선출규정(2019) 일부 조항>

제18조(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 ①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
- ②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의 방법, 횟수, 시간 등의 상세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는 선관위가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후에 실시하되, 순서는 매회 발표직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및 투표 장소에서는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정책토론회에서의 질의 및 응답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시행세칙(2019) 일부 조항>

제9조(선거관리)

①선관위는 선거공고 후 지체 없이 투표장소를 정하고, 투표장 내외에서는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벽보, 현수막, 유인물 배포는 물론 집단행동을 금지토록 관리위원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②모든 선거절차는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하며 지시에 불응하는 참가자에게는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공명선거 정신에 따라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한다.

- 지금까지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였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부정선거 논란은 거의 완전히 사라짐
- 총장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주로 적용해왔으나, 결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이합집산 문제로 인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선제가 활용되기도 하였음.

나. 성과

-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방식의 총장선거가 진행되어 왔음
- 총장선거를 통해 구성원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선출된 총장은 정당성을 바탕으로 대학행정의 책임성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됨
-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노동조합, 총동창회가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선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사회가 존중하여 시행하는 민주적 전통을 확립함
- 학내 구성원들은 대표자인 ‘강한 총장(strong chancellor)’을 통해 이사회와 독립된 단적 대학경영과 과도한 학사개입을 방지할 수 있음
-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이사회를 견제함으로써 투명한 재정운영 및 건전한 대학경영을 촉진할 수 있음
- 조선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역량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진입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이 조기사임하도록 강제한 ‘소환’의 경험도 있음.

다. 문제점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약

- 총장선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지적하자면 아래와 같음
- 선거권 비율이 교수와 직원에게 편중되어 있음
- 비정년계열 혹은 비정규직 교수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들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마찬가지임
- 학생들은 총학생회 간부들, 총동창회의 경우에는 임원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 피선거권은 교내 인사의 경우 정교수에게 한정되며,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부교수 이하의 교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등록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지만, 형식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데 그침
- 교외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교외 인사의 총장 선출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은 자질과 능력, 정책 중심의 ‘총장’ 선출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임
- 총장직선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총장선임권이 있는 이사회가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추천된 2인의 후보 가운데 1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학내 갈등 요인임

2) 취약한 정책선거

- 제한된 정책선거(자질과 능력검증 부족, 사적 인맥 중심 선거캠프 구성 및 운영), 과열선거 등이 문제임
- 규제 중심의 선거규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후보자들이 사적 인맥 중심으로 비공개 선거캠프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함

3) 선거 이후 파벌 갈등 및 민주적 과부하(democratic overload)

-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고 선거 이후 학내 갈등의 축을 형성함.
- 재출마를 반복한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은 매우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됨.
-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에 의해 지속적으로 ‘소환’ 됨

- 선거 후 당선자는 논공행상의 압력을 받게 되며, 일부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움
- 투표권이 있는 일부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대학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재정지출을 지속하는 등 ‘민주주의의 과부하(democratic overload)’ 경향이 나타남.
- 대학발전에 필요한 학사구조 개편을 소신 있게 추진하기 어려움
-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강한 총장(strong chancellor)’ 과 이사회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라. 개선 방안

- 총장직선제가 대학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총장간선제 혹은 이사회 지명제를 대안으로 삼기는 어려움
- 총장직선제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총장직선제의 문제점은 ‘민주적 직선제’가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선거과정의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총장직선제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보다 구체적으로 피선거권, 선거권 확대-실질적인 시민 참여 허용, 비정년계열/비정규직 선거권 부여,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 제도 개선, 선거제도 조기 확정, 외부 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 개선 방안으로는 발전기금기탁 의무화 폐지, 후보자 자격검증 기간 확대 및 강화, 후보자 3회 이상 출마 제한, 부교수의 피선거권 부여, 비정년계열 교수 선거권 부여, 비정규직 교원 및 직원 선거권 부여 고려, 시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후보자간 정책 토론회 횟수 확대 및 온라인 토론회 활성화 등 정책선거 촉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총장과 이사회 간의 역할(권한과 책임 구분)을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지역사회 기여

가. 공영형 사립대와 지역사회 발전

-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음
- 조선대 사범대는 지역의 교사 양성

- 조선대 체육대는 지역 체육계의 중심
- 조선대 의대는 지역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
- 조선대 법사회대는 다수의 지역 법조계 및 정관계 인사 배출
- 조선대 공대는 지역 산업기술 개발의 중추
- 공용형사립대의 핵심요소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친 영향은 대학 교육이 사회에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 조선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이후 조선대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으로 대학발전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2020년 조선대의 교육정책은 공용형 사립대 핵심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역 산학연계 관련 성과

- 조선대는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미래사회 맞춤형 연구와 산학협력’, ‘재정 선순환 구조 확보’를 3대 핵심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음(조선대학교 2020.4.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 지역사회 발전 관련 성과
 - 인성함양 교과연계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7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 전공 맞춤형 지역사회(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교과 프로그램(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의 현장직무체험 등), 현장실무형 비교과 프로그램(산업체 전문가 멘토링), CU-BTS 프로그램(지역 내 중학생 대상 재능기부)을 운영
 -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보호활동을 확대하고 체험을 통해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을 목표로 봉사공동체 비교과정을 운영하였음
 - 지역사회 기반 특성화 교육 선도모델 구축(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학부 신설)
 - 그 외에도 산학협력 친화적인 학사제도 및 산학연계 실습과정 운영(계절학기 확대), 산업현장과 연계한 공동과제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함
- 동원육영재단이 지원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동원라이프아카데미를 유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인교육에 바탕을 둔 산학협력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전용 라운지 개소, 2020.06.03.)
- 본 연구의 수행기간에 해당하는 2020년 3월 이후 7월 현재까지 조선대학교는 77개 기관과 MOU(2개 기관은 단순제휴)를 체결하였음
-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kbc 광주방송 등 언론사(광주문화방송, 광주일보 등),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등 타대학(기관), 화정태양광발전소, 한

국생산성 본부 등을 포함

-협약내용으로는 단순 상호교류협력 이외에 광주광역시와의 인공지능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상호협력, 전남도청과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공동 협력 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과의 선취업 후학습 진흥 협약 등이 있음

<표 4-19> 조선대학교 MOU 체결(2020.3.1.~2020.7.21 현재)

연번	기관	체결시기	체결 내용
1	광주광역시청	2020.03.06	인공지능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상호협력
2	kbc광주방송	2020.03.17	업무협약서
3	광남일보	2020.03.17	전문 인력양성 및 교류 증진
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2020.03.17	상호교류 협력
5	광주매일신문	2020.03.17	상호교류 협약
6	광주문화방송(주)	2020.03.17	업무협약서
7	광주일보	2020.03.17	업무협약서
8	남도일보	2020.03.17	전문인력양성
9	광주신용보증재단	2020.03.25	선취업후학습진흥협약
10	(사)한국화장품산업진흥회	2020.04.08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1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04.10	코로나19 그린백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12	전라남도청	2020.04.17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공동 협력 협약
13	해밀학교	2020.05.13	다문화 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협력협약서
14	씨앤지바이오	2020.05.14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15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광주전남도회	2020.05.19	선취업 후학습 진흥 업무 협약
16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연합회	2020.05.29	상호교류 협정
17	한국예술종합교육원	2020.05.29	상호교류 협정서
18	상지대학교	2020.06.01	상호교류 협정서
19	(사)한국외식업중앙회광주시지회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0	(주)JKSTEEL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1	(주)가민정보시스템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2	(주)길갈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3	(주)동해바이오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4	(주)복지TV호남방송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5	(주)세종이엔지건축사무소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6	(주)신와코리아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7	(주)쓰달이앤씨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8	(주)씨엔코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29	(주)아라개발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0	(주)아이티여행사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1	(주)인벤테라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2	(주)하나창업경영컨설팅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3	(주)호람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4	가온누리교육원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5	강남요양병원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6	다누리인재교육컨설팅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7	드림라이프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8	드림컨설팅	2020.06.09	선취업· 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39	레드탑(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0	메밀꽃필무렵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1	문화이음사랑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2	발랄한아이티(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3	백은전기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4	보네르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5	삼부물산(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6	스카이작업복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7	신동양(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8	썬네일샵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49	양동복개상가상인회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0	에듀에이컴퍼니(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1	에스알콘서트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2	엘립치과기공소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3	와이앤아이(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4	원푸드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5	정인평생교육개발원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6	제로포인트세븐(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7	주식회사 바이오엠펙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8	중앙PVC토목산업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59	중앙소방안전학원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0	지아이지화장품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1	청인이엔지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2	청정두채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3	케이폴인벤테라(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4	태영세무법인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5	하나비전실버홈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6	하이텍산업개발(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7	행남광물정제(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8	행복찾기센터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69	행복찾기연구소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70	협신디자인기획(주)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71	화정태양광발전소	2020.06.09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
72	한국체육대학교	2020.06.12	상호 협력체제 구축
73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2020.06.18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74	강진군청	2020.06.24	자원봉사 협력을 위한 협약
75	한국생산성본부	2020.07.21	교육발전과 상호협력 촉진 및 우수인력 양성

출처: 조선대학교 IC 21

- 그 외에도 조선대 링크+ 사업단은 동일시기에 21개 기업과 MOU를 신규 체결하였음(23개 가족기업은 제외)(링크+ 사업단 제공 파일-2020 업무협약)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는 2020년 상반기 1) 고교교육기여대학 13년 연속 선정 및 호남·제주권 사립대학 1위, 1) 체육/예술 교육기부 전라·제주권 거점대학 3년 연속 선정,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별강좌' 전국 최다 선정, 4) 9년 연속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5)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최우수 등급(A등급)을 얻었음(조선대

학교 홍보팀 2020.6.12.)

<표 4-20> 2020학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연번	2020학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1	2020 네이처 인덱스 순위 호남·제주권 사립대학 1위(연구경쟁력 기준)
2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최우수 등급(A등급) 획득 (44억)
3	2020년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사업 선정
4	고교교육기여대학 13년 연속 선정, 호남·제주권 사립대학 1위 (12억)
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별강좌' 전국 최다 선정
6	9년 연속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선정
7	간호학 교재, 몽골 국정교과서 채택(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개발)
8	과기부 '큐브위성경연대회' 지역대학 유일 선정
9	체육/예술 교육기부 전라·제주권 거점대학 3년 연속 선정

출처: 조선대학교 홍보팀(2020)

○ 기타

-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 외에도 일반 지역민에게도 모바일 이용증 발급을 통해 도서 예약 및 대출(졸업생과 외부 이용자에게 3책 10일), 전자자료 이용, 무선랜 이용, 무인복사, 일반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 단순 방문자에게도 자료 검색(확인 요망), 자료열람, 무선랜 이용, 무인복사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일반열람실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시험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재학생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소결

가. 재정위원회 제도 평가 및 정책적 함의

- 재정위원회 제도는 대학의 재정 전반에 관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심의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성을 향상시키며,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됨
- 재정위원회 제도는 이미 조선대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단계의 재정 심의제도를 보

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재정위원회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자격과 비율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이고 재정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해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이사회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의 범위가 조정되어야 함
- 재정위원회가 기존 재정 심의제도와 일부 권한이 중첩된 경우에는 권한의 조정이 필요하고, 외부인사가 재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학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이사회 참관 제도 평가 및 정책적 함의

-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참관하도록 개방하는 제도는 이사회 운영에 대한 건강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이사회 참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가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사회가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됨
- 다만, 이사회 회의의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사회 구성에서 학교를 대변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포함될 필요가 높게 제기된 것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구성방식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함

다. 공익이사를 포함한 정이사체제 구성

- 정이사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이사들이 다수 이사로 선임됨
- 구경영진 종전이사가 추천한 이사가 1인에 불과하여 이사회에 대한 불신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인사의 이사 참여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사회 기여

- 조선대는 창학 이후 법조계, 정관계, 의료계, 교육계, 체육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왔음
-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예산으로는 전공 맞춤형 지역사회(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교과 프로그램 9백만원, 현장실무형 비교과 프로그램(산업체 전문가 멘토링) 4백만원, CU-BTS 프로그램(지역 내 중학생 대상 재능기부) 2천2백만원이 배정됨(조선대학교 2020, 44)
- 향후에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링크+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업구상 및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민에게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학내 시설 개방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V. 인식조사 결과

1. 공영형 사립대 인식조사 개요: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및 내용

1) 목적과 대상

○ 목적과 활용: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학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지역사회 시민들의 인식 조사

-패널을 구성하여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법을 통해 사전, 사후 설문조사 시행

-사전 설문조사 이후 공영형 사립대의 주요 정책 시행(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에 시민참여 등) 추진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여 공영형 사립대의 효과성을 평가함

○ 패널

-패널 대상은 전체 학내 구성원들 중 교원,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연구진은 교원, 직원, 학생 계 단위를 대표하는 조직(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의 협조를 통해 패널 구성(시민들의 경우는 패널 제외)

-교원들은 교수평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전임교원들을 대상으로 패널 대상자 선정(단과대학 학과별 전임교원 비율을 반영하여 선정, 전체 교원 중 총 400명을 대상으로 패널참여 요청을 하였으며 그 중 185명이 참여). 패널 대상자 수는 200명 이었으나 설문응답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185명으로 구성

-직원들은 직원노동조합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100명을 선정(설문응답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85명으로 구성)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패널 참여를 공지하였으며, 패널 참여에 신청한 학생 240명을 선정(총학생회에 참여 요청을 하였음 패널은 선착순, 단 학년별로 제한 인원을 60명으로 한정함), 설문응답 결과를 통해 총 240명으로 패널 구성

-시민들은 외부 전문 온라인 리서치업체(마000 엠000)에 의뢰하여 설문을 시행(온라인 리서치 업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리스트 활용, 업체 보유 리스트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기 구축되어 있음)

-전문 온라인 리서치업체 마000 엠000의 온라인 설문 총 리스트는 1,305,299명이며 이중 전라권(전남, 전북)은 8.1%임

2) 일정 및 조사 내용

○ 설문조사 설계 일정

-설문조사지 제작 및 수정 논의

- (1) 연구단 회의 03.12 : 설문조사 실시계획안 및 설문문항 초안 공유
- (2) 연구단 회의 03.16 : 패널조사 계획 진행 경과 및 설문 문항 수정 논의
- (3) 연구단 회의 03.23 : 설문문항 논의
- (4) 연구단 회의 04.06 : 응답자용 조사 설문문항 논의 및 질문 세부 사항 논의
- (5) 연구단 회의 04.27 : 설문문항 전반 논의

-패널 구성(04.14 구성 완료)

-사전조사 일정

(1) 교원/직원 대상

- 1차 메일 발송 : 04.17
- 2차 메일 (재)발송 : 04.22 *1차 메일 미응답자
- 3차 메일 (재)발송 : 05.02 *2차 메일 미응답자
- 4차 메일 (재)발송 & 교원추가대상자(200명) 신규 발송: 05.11 *3차 메일 미응답자 + 신규
- 5차 메일 (재)발송 : 05.13 *4차 메일 미응답자(기존 대상자+신규 대상자 중 미응답자)
- 교내 설문 마감 : 05.14

(2) UMS 전송 작업

- 05.13 : 교원 및 직원 대상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
- 05.14 : 교원 및 직원 대상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재)전송

(3) 학생 대상

- 설문 진행 기간 : 04.17 ~ 04.24
- 04.17 교내 홈페이지 공지
- 04.20 총학생회 통해 개별 단과대학 학생회 채널 통해 추가 홍보 요청
- 04.24 설문 마감

-사후조사 일정(06.02.(화) 패널조사 시작, 06.15.(월) 패널조사 마감)

(1) 교원/직원 대상

- 1차 메일 발송 : 06.02
- 2차 메일 (재)발송 : 06.12 *1차 메일 미응답자 한정

(2) UMS 전송 작업

- 06.02 : 교원/직원/학생 대상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1차)
- 06.09 : 교원/직원/학생 대상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2차)
- 06.12 : 교원/직원/학생 대상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3차) *2차 문자 미응답자 한정
- 06.15 : 교원/직원/학생 대상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4차) *2차 문자 미응답자 한정

(3) 학생 대상

- 설문 진행 기간 : 06.02. ~ 06.15.
- 06.02 :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1차)
- 06.09 :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2차)
- 06.12 :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3차) *2차 문자 미응답자 한정
- 06.15 : 설문 참여 안내 문자 전송(4차) *2차 문자 미응답자 한정

○ 설문조사 주요내용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대한 현황

- 사립대학의 투명성
-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
-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필요
-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에 따르는 감독의 강화
-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이사 참여

-조선대학교 운영현황

-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지역(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협력
- 재정운영 현황(효율성, 투명한 공개, 민주적 수립과 집행, 지역사회 기여, 감시와 견제의 적절성, 감시와 감독 위원회 필요)
- 이사회 운영 관련 중요 요소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

- 공영형 사립대학 인지 여부
- 공영형 사립대 정보의 원천

- 공영형 사립대 정책 취지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한 이사회 운영(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
-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공익형 이사 참여비율, 외부인사의 참관, 이사 정수 확대, 중임/연임 2회 제한, 총장의 당연직 이사 참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기대효과(투명/민주적 대학 육성, 지역사회 발전 촉진)
- 재정위원회 구성(총장 추천 인사의 참여, 대학구성원들의 추천 인사 참여, 전문가의 참여,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인사의 참여, 외부인사 참여의 확대)
- 재정위원회 도입의 효과성(효율적 배분, 투명한 운영, 민주적 운영, 사회적 책무성 제고)
-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지역인재 육성 노력, 대학시설의 개방, 지역사회 위한 프로그램 확대,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사후 설문문항에서는 추가 문항 및 사전 설문문항 중 필요한 문항만 선별

○ 설문조사 분석

-설문에 대한 분석은 연구진이 수행

-시민들 분석은 전문 온라인 리서치업체 마000 엠000으로부터 응답 자료를 받아서 연구진이 수행

2. 응답자 특성

가. 전체 응답자

○ 총 응답인원 : 사전설문(1,044명), 사후설문(409명)

<표 5-1> 응답자 구성

패널대상	모집단 수	패널대상수	사전설문 응답자수	사후설문 응답자수	설문방법
교원	773명	200명	185명	150명	온라인 설문 (이메일, 문자로 참여 독려)
직원	270명	100명	85명	69명	
학생(재학생)	19,107명	240명	240명	190명	
시민(패널제외)	885명 (온라인 리서치 업체 자체보유 리스트)		온라인 설문 534명	-	
총 응답자 수			1,044명	409명	

-사전설문에 비해 사후설문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다소 줄어들었음. 패널의 특성상 사후설문에도 유사한 숫자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음

나. 교원

<교원 응답: 사전 $n=185$ / 사후 $n=150$ >

○ 소속 단과대학

-교원들의 단과대학 응답결과

- 단과대학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각 단과대학별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하였음
- 공과대학, 의과대학, 법사회대학의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약학대학의 경우는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위

-교원들의 직위별 응답결과

- 직위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정교수의 응답비중이 약 50% 정도임. 부교수, 조교수에 비해 높은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음

○ 성별

-교원들의 성별 응답결과

-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약 80%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의 경우는 약 20% 정도의 응답률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 (평균연령: 사전 51.5세 / 사후: 51.3세)

-교원들의 연령별 응답결과

-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응답자의 45%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40대는 약 30%를 보이고 있음. 60대 이상은 약 17%이며 30대는 약 7%로 나타남.
- 응답한 교원들의 평균연령은 약 51세 정도임

<표 5-2-1> 응답자-교원

단과대학	교원수*		사전조사($n=185$)		사후조사($n=150$)	
	전임	외국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글로벌인문대학	50	16	15	8.1	13	8.7
② 경상대학	39	1	14	7.6	14	9.3
③ 미술체육대학	51	1	9	4.9	5	3.3
④ 공과대학	109	0	28	15.1	24	16.0
⑤ IT융합대학	33	0	11	5.9	8	5.3
⑥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7	1	13	7.0	10	6.7

⑦ 법사회대학	38	2	20	10.8	15	10.0
⑧ 의과대학	63	3	27	14.6	20	13.3
⑨ 치과대학	15	0	12	6.5	10	6.7
⑩ 약학대학	12	0	0	0.0	0	0.0
⑪ 기초교육대학	26	50	11	5.9	9	6.0
⑫ 미래사회융합대학	6	3	4	2.2	5	3.3
⑬ 사범대학	44	0	13	7.0	10	6.7
⑭ 대학원 및 사업단	145	15	1	0.5	5	3.3
⑮ 기타	4	0	7	3.8	2	1.3
소계	692	92	185	100.0	150	100.0
직위	사전조사(<i>n</i> =185)		사후조사(<i>n</i> =15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조교수	41	22.2	33	22.0		
② 부교수	48	25.9	37	24.7		
③ 교수	96	51.9	80	53.3		
소계	185	100.0	150	100.0		
성별	사전조사(<i>n</i> =185)		사후조사(<i>n</i> =15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남성	146	78.9	114	79.7		
② 여성	39	21.1	29	20.3		
소계	185	100.0	143	100.0		
연령	사전조사(<i>n</i> =185)		사후조사(<i>n</i> =15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30대	14	7.6	10	7.0		
② 40대	53	28.8	45	31.5		
③ 50대	85	46.2	64	44.8		
④ 60대 이상	32	17.4	24	16.8		
소계	184	100.0	143	100.0		

주) 빈도수와 응답자수의 차이는 결측값, * 할당표집 기준 정원: 전임교원+외국인교원

다. 직원

<직원 응답: 사전 *n*=85 / 사후 *n*=69>

○ 소속 부서

-직원들의 소속부서 응답결과

- 소속부서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비교적 골고루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음. 단과 대학 행정팀에 근무하는 경우가 약 17% 정도이며, 부속기관이 약 15%임 교무처/교육혁신원과 기획조정실의 응답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 직위

-직원들의 직위별 응답결과

- 직위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팀장이 약 32%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팀원/직원은 약 68%로 나타나고 있어 팀원/직원의 응답비중이 팀장에 비해 높은 편임

○ 성별

-직원들의 성별 응답결과

-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약 60%, 여성이 약 40%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평균연령: 사전 44.2세 / 사후 43.9세)

-직원들의 연령별 응답결과

-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20대는 전체 응답자의 약 5%로 나타남.
- 응답한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4세임

<표 5-2-2> 응답자-직원

소속 부서	직원수	사전조사(n=85)		사후조사(n=6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각 개별 단과대학		15	17.6	11	15.9
② 기획조정실		9	10.6	7	10.1
③ 교무처/ 교육혁신원		12	14.1	12	17.4
④ 연구처/ 산학협력단		8	9.4	5	7.2
⑤ 취업학생처		6	7.1	6	8.7
⑥ 입학처		4	4.7	4	5.8
⑦ 총무관리처		6	7.1	4	5.8
⑧ 대외협력처		6	7.1	5	7.2
⑨ 대학원		1	1.2	1	1.4
⑩ 부속기관(중앙도서관, 정보전산원, 평생교육원, 언어 교육원, 예비군연대, 미술관, 박물관 등)		13	15.3	11	15.9
⑪ 특별사업기구(링크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센터 등)		4	4.7	2	2.9
⑫ 기타		1	1.2	1	1.4
소계		85	100.0	69	100.0
직위	사전조사(n=85)		사후조사(n=6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팀장	27	31.8	23	33.3	
② 직원	58	68.2	46	66.7	
소계	85	100.0	69	100.0	
성별	사전조사(n=85)		사후조사(n=6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남성	51	60.0	41	60.3	
② 여성	34	40.0	27	39.7	

연령	사전조사(n=85)		사후조사(n=6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20대	4	4.7	4	5.9
② 30대	27	31.8	23	33.8
③ 40대	27	31.8	18	26.5
④ 50대 이상	27	31.8	23	33.8
소계	85	100.0	68	100.0

주) 빈도수와 응답자수의 차이는 결측값

라. 학생

<학생 응답: 사전 n=240 / 사후 n=190>

○ 소속 단과대학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학 응답결과

- 소속 단과대학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공과대학, 의과대학, 글로벌 인문대학, 경상대학, 미술체육대학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 외 IT융합대학, 법사회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순임
- 치과대학, 약학대학, 기초교육대학 등의 응답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임

○ 학년

-학생들의 학년별 응답결과

- 학년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서 학년별로 동일한 비중의 응답을 유도하였으므로 약 25% 정도씩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다만 1학년의 경우 사후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성별

-학생들의 성별 응답결과

-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 (평균연령: 사전 21.5세 / 사후 22.1세)

-학생들의 연령별 응답결과

-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10대는 1학년이며 사후 분석에서는 1학년의 응답이 낮은 관계로 비율이 낮아졌음
-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약 22세임

〈표 5-2-3〉 응답자-학생

소속 단과대학	사전조사(n=240)		사후조사(n=19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글로벌인문대학	29	12.1	28	14.7
② 경상대학	26	10.8	27	14.2
③ 미술체육대학	26	10.8	14	7.4
④ 공과대학	38	15.8	29	15.3
⑤ IT융합대학	22	9.2	19	10.0
⑥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4	5.8	14	7.4
⑦ 법사회대학	21	8.8	18	9.5
⑧ 의과대학	35	14.6	15	7.9
⑨ 치과대학	1	0.4	2	1.1
⑩ 약학대학	7	2.9	4	2.1
⑪ 기초교육대학	1	0.4	1	.5
⑫ 미래사회융합대학	3	1.3	2	1.1
⑬ 사범대학	15	6.3	15	7.9
⑭ 대학원 및 사업단	2	0.8	2	1.1
⑮ 기타	0	0.0	0	0.0
소계	240	100.0	190	100.0
학년	사전조사(n=240)		사후조사(n=19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1학년	60	25.0	37	19.5
② 2학년	60	25.0	52	27.4
③ 3학년	60	25.0	48	25.3
④ 4학년	60	25.0	53	27.9
소계	240	100.0	190	100.0
성별	사전조사(n=240)		사후조사(n=19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남성	119	49.6	90	47.9
② 여성	121	50.4	98	52.1
소계	240	100.0	188	100.0
연령	사전조사(n=240)		사후조사(n=19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10대	79	33.1	27	14.5
② 20대 초반(20-23세)	112	46.9	124	66.7
③ 20대 중반(24-26세)	44	18.4	34	18.3
④ 20대 후반(27-29세)	4	1.7	1	0.5
소계	239	100.0	186	100.0

주) 빈도수와 응답자수의 차이는 결측값

마. 시민

<시민 응답: n=534>

○ 성별

-시민들의 성별 응답결과

- 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50.6%,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49.4%로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음

○ 연령대(평균연령: 41.4세)

-시민들의 연령별 응답결과

-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40대 25.3%, 50대 24.7%, 20대 21.3%, 30대 18.5%, 60대 이상 7.5%, 10대 2.6%의 비율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한 시민들의 평균 연령은 41.4세 임

○ 거주지역

-시민들의 거주지역별 응답결과

- 거주지역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북구 29.2%, 광산구 26.2%, 서구 20.6%, 남구 17.8%, 동구 6.2%의 비율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2-4> 응답자-시민

성별	빈도	비율(%)
① 남성	270	50.6
② 여성	264	49.4
소계	534	100.0
연령	빈도	비율(%)
① 10대	14	2.6
② 20대	114	21.3
③ 30대	99	18.5
④ 40대	135	25.3
⑤ 50대	132	24.7
⑥ 60대 이상	40	7.5
소계	1,196	100.0
거주지역	빈도	비율(%)
① 동구	33	6.2
② 서구	110	20.6
③ 남구	95	17.8
④ 북구	156	29.2

⑤ 광산구	140	26.2
소계	1,196	100.0

3. 분석 결과 I : 기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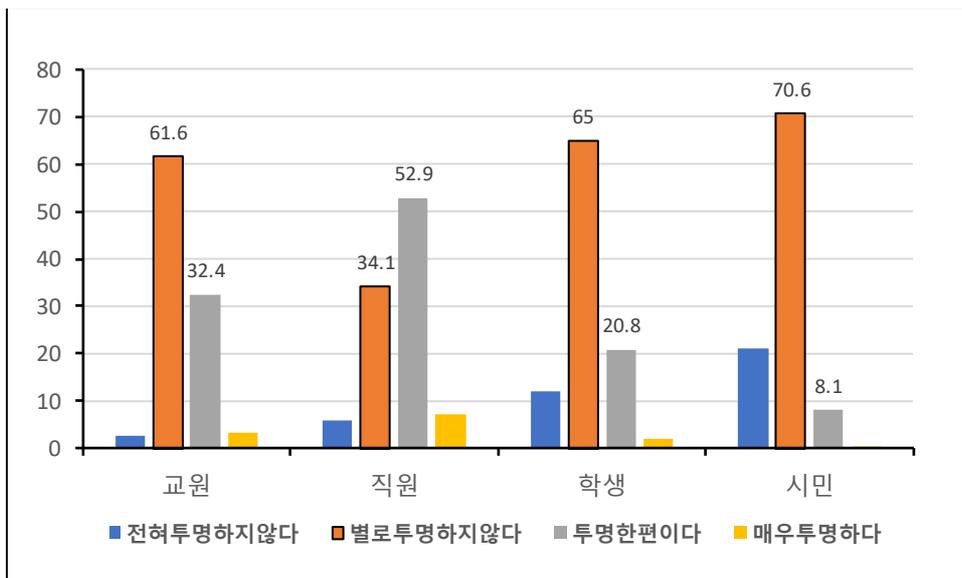
가.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_사전설문

1)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투명성

<표 5-3-1> 사립대학의 투명성

	교원(n=185)	직원(n=85)	학생(n=240)	시민(n=534)
① 전혀 투명하지 않다	5 (2.7%)	5 (5.9%)	29 (12.1%)	113 (21.2%)
② 별로 투명하지 않다	114 (61.6%)	29 (34.1%)	156 (65.0%)	377 (70.6%)
③ 투명한 편이다	60 (32.4%)	45 (52.9%)	50 (20.8%)	43 (8.1%)
④ 매우 투명하다	6 (3.2%)	6 (7.1%)	5 (2.1%)	1 (0.2%)
평균값(표준편차)	2.36 (0.59)	2.61 (0.71)	2.13 (0.63)	1.87 (0.53)

문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1> 사립대학의 투명성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투명한 운영에 있어서 교원(61.6%), 학생(65.0%), 시민(70.6%)의 경우는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시민의 경우는 70%가 투명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
- 직원의 경우는 투명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원, 학생, 시민들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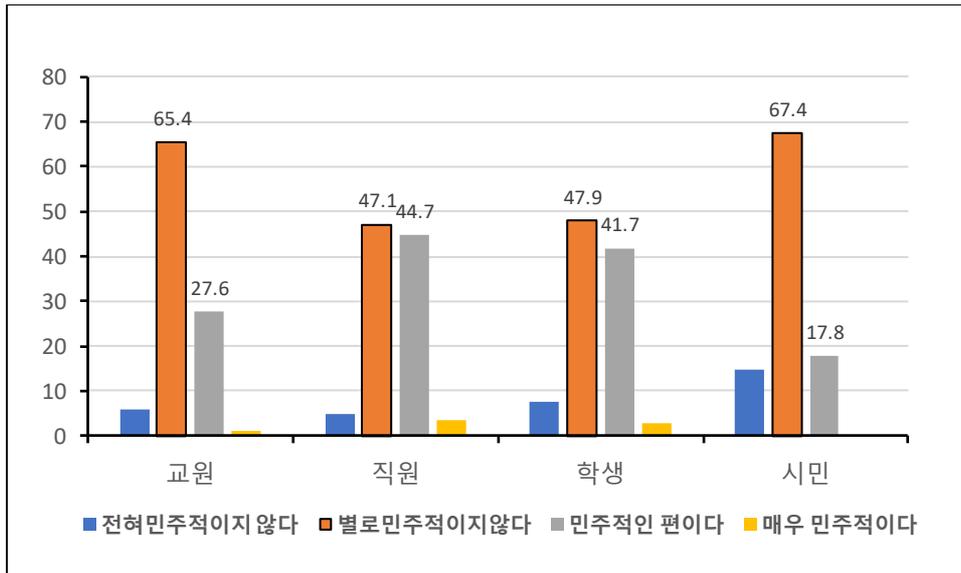
2)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민주성

<표 5-3-2>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

	교원(<i>n</i> =185)	직원(<i>n</i> =85)	학생(<i>n</i> =240)	시민(<i>n</i> =534)
①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11 (5.9%)	4 (4.7%)	18 (7.5%)	79 (14.8%)
②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121 (65.4%)	40 (47.1%)	115 (47.9%)	360 (67.4%)
③ 민주적인 편이다	51 (27.6%)	38 (44.7%)	100 (41.7%)	95 (17.8%)
④ 매우 민주적이다	2 (1.1%)	3 (3.5%)	7 (2.9%)	0 (0.0%)
평균값(표준편차)	2.24 (0.57)	2.47 (0.65)	2.40 (0.67)	2.03 (0.57)

문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교원(65.4%), 직원(47.1%), 학생(47.9%), 시민(67.4%)은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시민의 경우가 교원, 직원, 학생에 비해 높은 편임
- 직원들과 학생들의 경우는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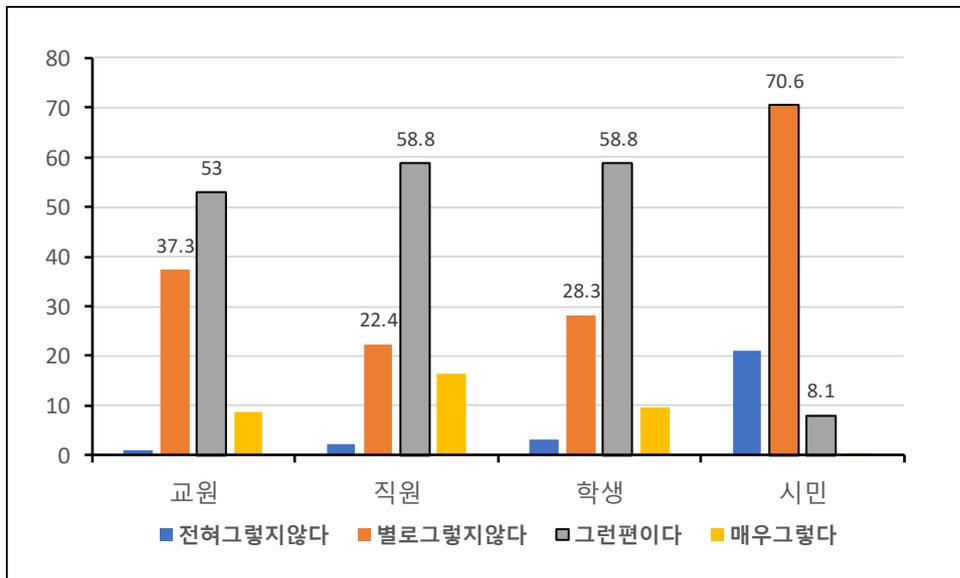
<그림 5-2> 사립대학의 민주적 운영

3)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표 5-3-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교원(n=185)	직원(n=85)	학생(n=240)	시민(n=534)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 (1.1%)	2 (2.4%)	8 (3.3%)	59 (21.2%)
② 별로 그렇지 않다	69 (37.3%)	19 (22.4%)	68 (28.3%)	302 (70.6%)
③ 그런 편이다	98 (53.0%)	50 (58.8%)	141 (58.8%)	166 (8.1%)
④ 매우 그렇다	16 (8.6%)	14 (16.5%)	23 (9.6%)	7 (0.2%)
평균값(표준편차)	2.69 (0.64)	2.89 (0.69)	2.75 (0.67)	2.23 (0.65)

문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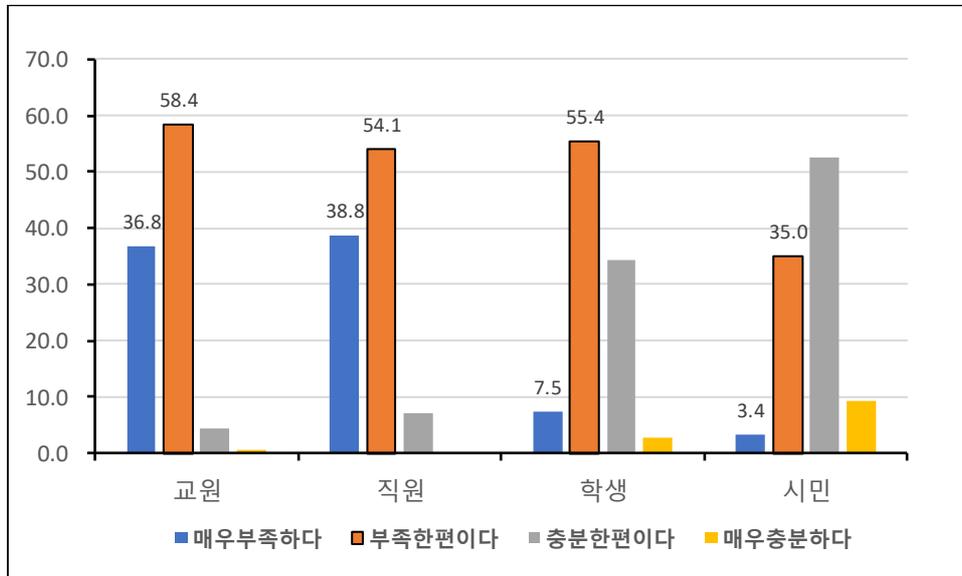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있어서 교원(53.0%), 직원(58.8%), 학생(58.8%)은 그런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시민(70.6%)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내부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과 외부 시민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음
- 시민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4)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충분성

<표 5-3-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교원(<i>n</i> =185)	직원(<i>n</i> =85)	학생(<i>n</i> =240)	시민(<i>n</i> =534)
① 매우 부족하다	68 (36.8%)	33 (38.8%)	18 (7.5%)	18 (3.4%)
② 부족한 편이다	108 (58.4%)	46 (54.1%)	133 (55.4%)	187 (35.0%)
③ 충분한 편이다	8 (4.3%)	6 (7.1%)	82 (34.2%)	280 (52.4%)
④ 매우 충분하다	1 (0.5%)	0 (0.0%)	7 (2.9%)	49 (9.2%)
평균값(표준편차)	1.69 (0.58)	1.68 (0.60)	2.33 (0.71)	2.67 (0.69)

문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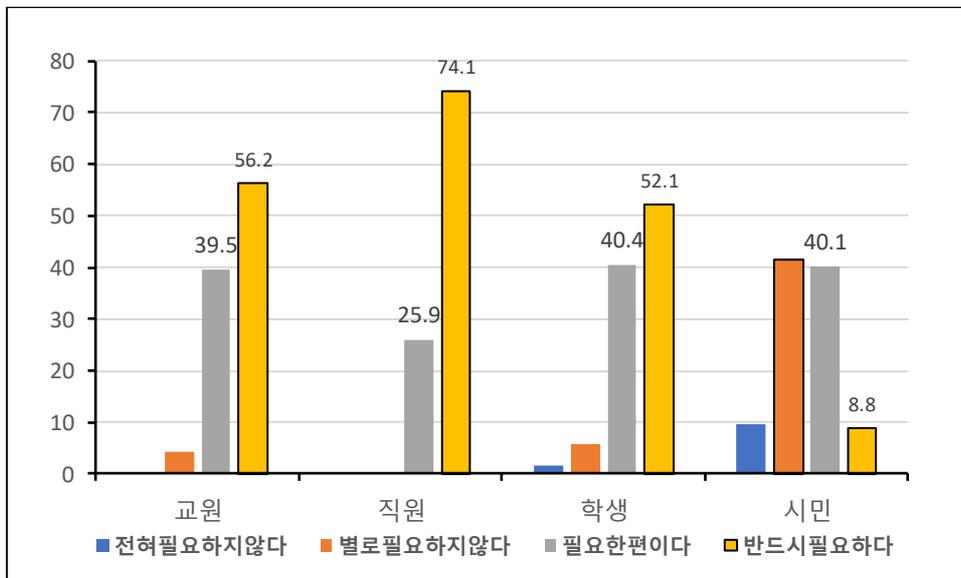
○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교원(58.4%), 직원(54.1%), 학생(55.4%)은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시민(52.4%)은 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내부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과 외부 시민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음

5)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

<표 5-3-5>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교원(n=185)	직원(n=85)	학생(n=240)	시민(n=534)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4 (1.7%)	51 (9.6%)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8 (4.3%)	0 (0.0%)	14 (5.8%)	222 (41.6%)
③ 필요한 편이다	73 (39.5%)	22 (25.9%)	97 (40.4%)	214 (40.1%)
④ 반드시 필요하다	104 (56.2%)	63 (74.1%)	125 (52.1%)	47 (8.8%)
평균값(표준편차)	3.52 (0.58)	3.74 (0.44)	3.43 (0.68)	2.48 (0.79)

문5.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5-5>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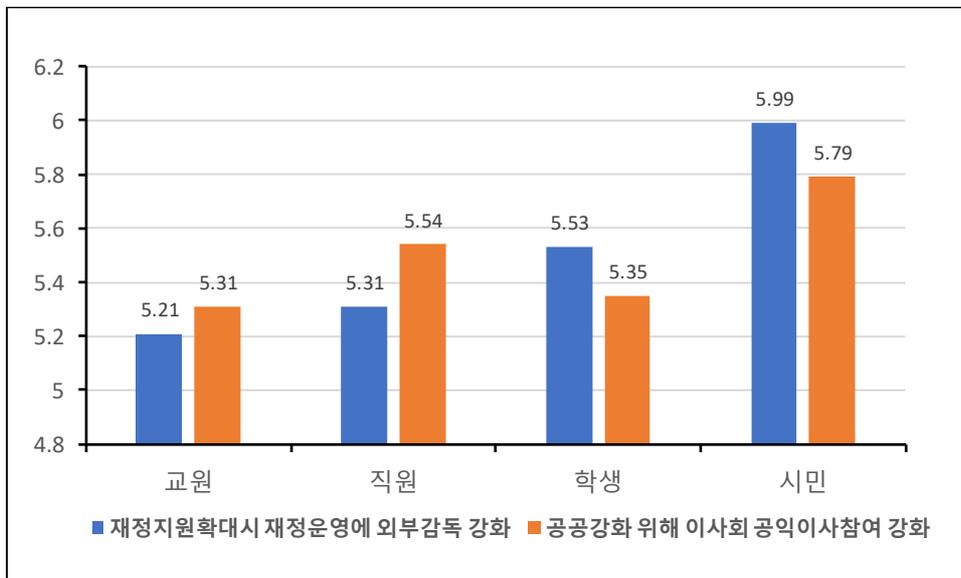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교원(56.2%), 직원(74.1%), 학생(52.1%)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시민(52.4%)은 필요한 편이다 라는 경우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교원, 직원, 학생들은 필요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시민들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0%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6)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사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참여

<표 5-3-6> 정부 재정지원 및 공익인사 참여

	교원(n=185)	직원(n=85)	학생(n=240)	시민(n=534)
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5.21 (1.62)	5.31 (1.46)	5.53 (1.20)	5.99 (1.26)
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	5.31 (1.52)	5.54 (1.40)	5.35 (1.26)	5.79 (1.27)

문6.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사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그림 5-6> 정부 재정지원 및 공익인사 참여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외부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시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5.99). 상대적으로 교원의 경우가 가장 낮은 편임(5.21)
-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인 이사회에 공익이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시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5.79). 상대적으로 교원의 경우가 가장 낮은 편임(5.31)
- 시민들은 정부/외부기관의 감독강화 및 공익이사 참여에 대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원은 필요성에 있어서 시민, 직원, 학생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나. 조선대학교의 운영현황_사전/사후 설문

1) 조선대학교의 운영전반: 민립대학 정체성, 지역사회발전 기여, 지자체·기업체·시민단체와의 협력

<표 5-4-1> 조선대학교 운영 전반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4.41 (1.49)	4.68 (1.42)	4.72 (1.55)	4.74 (1.37)	4.20 (1.28)	4.52 (1.38)	3.84 (1.33)
2)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5.05 (1.27)	5.06 (1.22)	5.28 (1.27)	4.91 (1.03)	4.85 (1.31)	4.85 (1.30)	4.09 (1.39)
3)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청, 지역 기반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4.42 (1.23)	4.58 (1.29)	4.78 (1.22)	4.71 (1.09)	4.56 (1.28)	4.79 (1.39)	4.03 (1.32)

문7. 조선대학교의 운영전반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 조선대학교의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사전설문에서는 직원(4.72), 교원(4.41), 학생(4.20), 시민(3.8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시민의 경우가 가장 낮은 편임. 사후설문에서도 직원, 교원, 학생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사전설문에서는 직원(5.28), 교원(5.05), 학생(4.85), 시민(4.09)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있어서도 시민들은 교원, 직원, 학생에 비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후설문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공공기관, 지역산업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사전설문에 있어서 직원(4.78), 학생(4.56), 교원(4.42), 시민(4.0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있어서 시민들이 협력에 대한 인식이 교원, 직원, 학생들에 비해 낮은 편임. 사후설문도 사전설문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2)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

<표 5-4-2> 조선대학교 재정 운영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09 (1.33)	4.35 (1.30)	4.74 (1.47)	5.03 (1.16)	3.60 (1.31)	4.00 (1.32)	3.51 (1.30)
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있다	4.41 (1.48)	4.72 (1.50)	5.73 (1.25)	5.68 (1.12)	3.32 (1.27)	3.84 (1.42)	3.16 (1.31)
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4.18 (1.43)	4.48 (1.38)	5.12 (1.42)	5.28 (1.11)	3.64 (1.21)	3.97 (1.43)	3.41 (1.27)
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3.77 (1.24)	4.01 (1.30)	4.35 (1.42)	4.38 (1.04)	3.96 (1.18)	4.21 (1.45)	3.53 (1.29)
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04 (1.44)	4.41 (1.48)	5.27 (1.42)	5.26 (1.24)	3.51 (1.31)	3.86 (1.43)	3.26 (1.30)
6) 대학의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5.07 (1.44)	5.01 (1.39)	4.32 (1.53)	4.74 (1.31)	5.55 (1.29)	5.55 (1.23)	5.21 (1.50)

문8.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이라는 경우 사전설문에서는 직원(4.74), 교원(4.09), 학생(3.60), 시민(3.51)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원이 가장 높은 편이며 학생과 시민들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는 재정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응답하는 값이 사전설문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의 경우 사전설문에서는 직원(5.7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교원(4.41), 학생(3.32), 시민(3.16)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원들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학생과 시민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사후설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여전히 학생들은 낮은 편임
- 재정운영의 민주적 수립의 경우 사전설문에서는 직원(5.12), 교원(4.18), 학생(3.64), 시민(3.41)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원들은 재정운영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학생,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 학생들이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하고는 있으나 보통수준 정도로의 향상만을 나타내고 있음
-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사전설문에 있어서 직원(4.35), 학생(3.96), 교원(3.77), 시민(3.53)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원을 포함한 교원, 학생 그리고 시민들 모두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사후 설문에서는 사전 설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사전설문에서는 직원(5.27)이 가장 높

은 편임 교원(4.04), 학생(3.51), 시민(3.26)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생과 시민들은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학생들의 값이 항상 되었으나 보통수준 정도임

- 대학 재정 감시/감독 위원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사전설문에 있어서 학생(5.55)이 가장 높은 편임. 시민(5.21), 교원(5.07), 직원(4.32)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생과 시민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직원들의 경우는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직원들의 경우 사전 설문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교원, 학생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3)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

<표 5-4-3>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

	교원(n=185)			직원(n=85)			학생(n=240)			시민(n=534)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70 (37.8%)	36 (19.5%)	37 (20.0%)	37 (43.5%)	16 (18.8%)	14 (16.5%)	77 (32.1%)	53 (22.1%)	50 (20.8%)	61 (11.4%)	83 (15.5%)	100 (18.7%)
운영의 투명성	27 (14.6%)	43 (23.2%)	32 (17.3%)	11 (12.9%)	13 (15.3%)	15 (17.6%)	68 (28.3%)	63 (26.3%)	49 (20.4%)	304 (56.9%)	97 (18.2%)	58 (10.9%)
민주적인 운영	21 (11.4%)	42 (22.7%)	35 (18.9%)	7 (8.2%)	18 (21.2%)	13 (15.3%)	22 (9.2%)	42 (17.5%)	45 (18.8%)	58 (10.9%)	135 (25.3%)	84 (15.7%)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0 (0.0%)	9 (4.9%)	29 (15.7%)	1 (1.2%)	5 (5.9%)	13 (15.3%)	3 (1.3%)	20 (8.3%)	20 (8.3%)	16 (3.0%)	77 (14.4%)	105 (19.7%)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27 (14.6%)	28 (15.1%)	31 (16.8%)	13 (15.3%)	23 (27.1%)	16 (18.8%)	64 (26.7%)	53 (22.1%)	57 (23.8%)	69 (12.9%)	104 (19.5%)	124 (23.2%)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	37 (20.0%)	26 (14.1%)	20 (10.8%)	14 (16.5%)	10 (11.8%)	12 (14.1%)	5 (2.1%)	9 (3.8%)	18 (7.5%)	25 (4.7%)	38 (7.1%)	63 (11.8%)

기타	3 (1.6%)	1 (0.5%)	1 (0.5%)	2 (2.4%)	0 (0.0%)	2 (2.4%)	1 (0.4%)	0 (0.0%)	1 (0.4%)	1 (0.2%)	0 (0.0%)	0 (0.0%)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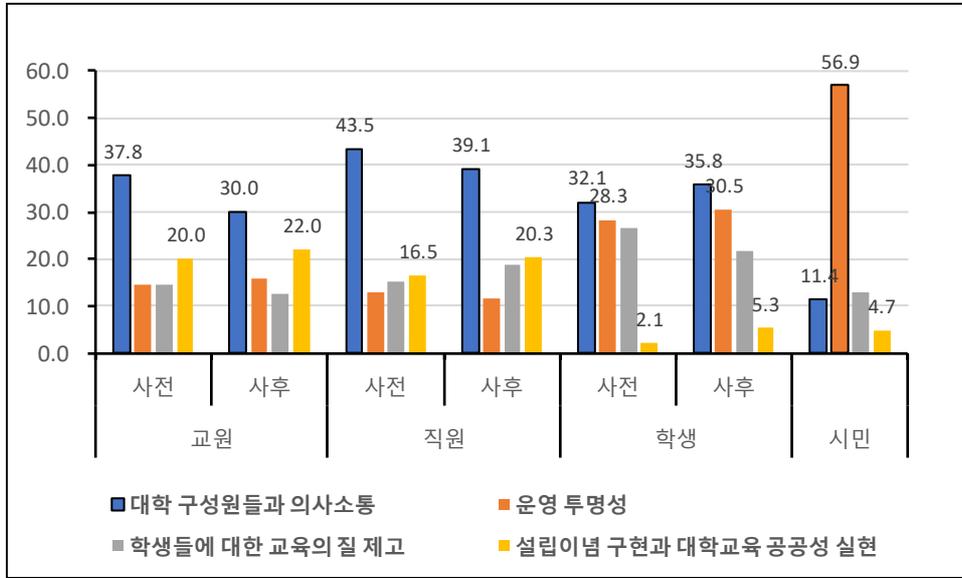
문9.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 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1순위의 경우 교원들은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37.8%),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20.0%)이 높은 편임
- 직원들은 교원들과 동일하게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43.5%),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16.5%)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32.1%)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28.3%)도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반면에 시민들은 운영의 투명성(56.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12.9%)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5-4-3-1>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_1순위만

	교원 1순위		직원 1순위		학생 1순위		시민 1순위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70 (37.8%)	45 (30.0%)	37 (43.5%)	27 (39.1%)	77 (32.1%)	68 (35.8%)	61 (11.4%)
운영의 투명성	27 (14.6%)	24 (16.0%)	11 (12.9%)	8 (11.6%)	68 (28.3%)	58 (30.5%)	304 (56.9%)
민주적인 운영	21 (11.4%)	22 (14.7%)	7 (8.2%)	6 (8.7%)	22 (9.2%)	13 (6.8%)	58 (10.9%)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0 (0.0%)	4 (2.7%)	1 (1.2%)	1 (1.4%)	3 (1.3%)	0 (0.0%)	16 (3.0%)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27 (14.6%)	19 (12.7%)	13 (15.3%)	13 (18.8%)	64 (26.7%)	41 (21.6%)	69 (12.9%)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	37 (20.0%)	33 (22.0%)	14 (16.5%)	14 (20.3%)	5 (2.1%)	10 (5.3%)	25 (4.7%)
기타	3 (1.6%)	3 (2.0%)	2 (2.4%)	0 (0.0%)	1 (0.4%)	0 (0.0%)	1 (0.2%)

문9.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만)



〈그림 5-7〉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_1순위만

○ 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1순위에 있어서 교원, 직원, 학생들 모두 사전설문과 사후설문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 사전, 사후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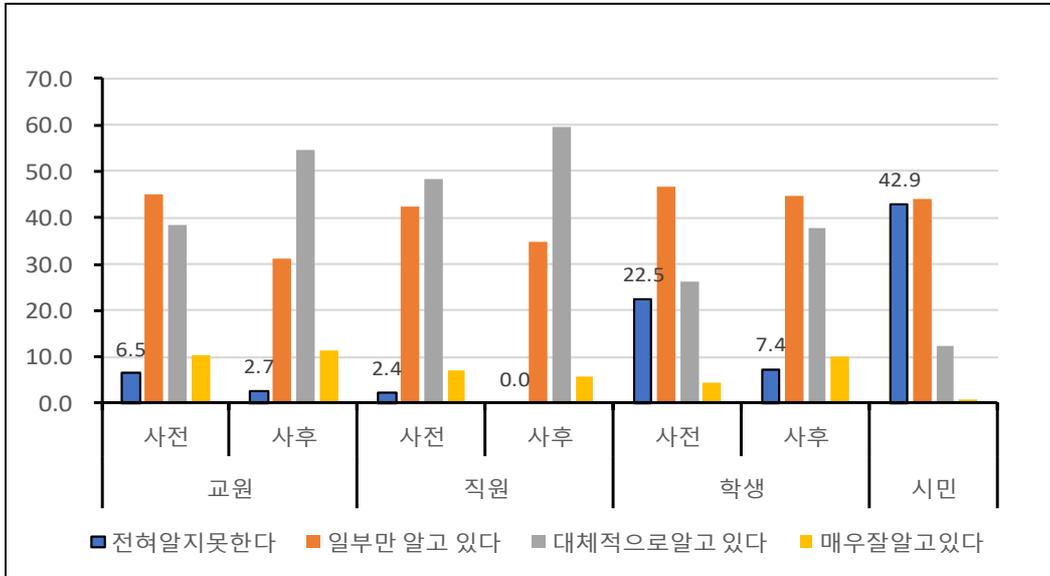
다. 공영형 사립대_사전/사후 설문

1) 전반적 인식 수준

〈표 5-5-1〉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① 전혀 알지 못한다	12 (6.5%)	4 (2.7%)	2 (2.4%)	0 (0.0%)	54 (22.5%)	14 (7.4%)	229 (42.9%)
② 일부만 알고 있다	83 (44.9%)	47 (31.3%)	36 (42.4%)	24 (34.8%)	112 (46.7%)	85 (44.7%)	236 (44.2%)
③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	71 (38.4%)	82 (54.7%)	41 (48.2%)	41 (59.4%)	63 (26.3%)	72 (37.9%)	65 (12.2%)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19 (10.3%)	17 (11.3%)	6 (7.1%)	4 (5.8%)	11 (4.6%)	19 (10.0%)	4 (0.7%)
평균값(표준편차)	2.52 (0.77)	2.75 (0.69)	2.60 (0.66)	2.71 (0.57)	2.13 (0.81)	2.51 (0.77)	2.13 (0.81)

문10.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림 5-8>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

- 공영형 사립대학을 알고 있는가의 경우 사전설문에서 교원들은 일부만 알고 있다(44.9%),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38.4%)로 나타남. 매우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0.3%임.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알고 있는 편임을 알 수 있음
-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48.2%), 일부만 알고 있다(42.4%)로 나타남. 학생들은 일부만 알고 있다(46.7%),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26.3%)로 나타남.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한다도 22.5%로 나타나고 있음
- 시민들은 일부만 알고 있다(44.2%)이며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경우가 42.9%로 나타나고 있음. 시민들의 경우 약 43% 정도는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
- 사후설문에서 보면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평균값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정보 소스_사후설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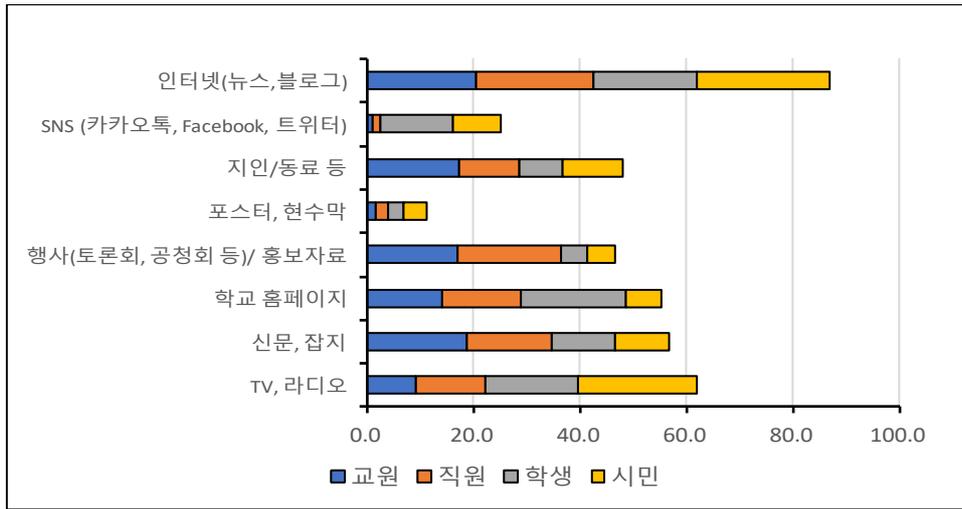
<표 5-5-2> 공영형 사립대학 사전 정보 획득 경로

	교원(n=415)	직원(n=213)	학생(n=546)	시민(n=973)
① TV, 라디오	38 (9.2%)	28 (13.1%)	95 (17.4%)	217 (22.3%)
② 신문, 잡지	78 (18.8%)	34 (16.0%)	65 (11.9%)	97 (10.0%)
③ 학교 홈페이지	59 (14.2%)	31 (14.6%)	108 (19.8%)	65 (6.7%)
④ 행사(토론회, 공청회 등)/ 홍보자료	71 (17.1%)	41 (19.2%)	28 (5.1%)	50 (5.1%)
⑤ 포스터, 현수막	7 (1.7%)	5 (2.3%)	16 (2.9%)	41 (4.2%)

⑥ 지인/동료 등	72 (17.3%)	24 (11.3%)	45 (8.2%)	109 (11.2%)
⑦ SNS (카카오톡, Facebook, 트위터 등)	4 (1.0%)	3 (1.4%)	75 (13.7%)	88 (9.0%)
⑧ 인터넷(뉴스, 블로그 등)	85 (20.5%)	47 (22.1%)	106 (19.4%)	241 (24.8%)
⑨ 기타	1 (0.2%)	0 (0.0%)	8 (1.5%)	65 (6.7%)

주) 복수응답으로 인한 전체 응답자 수 증가

문1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표기)



<그림 5-9> 공영형 사립대학 사전 정보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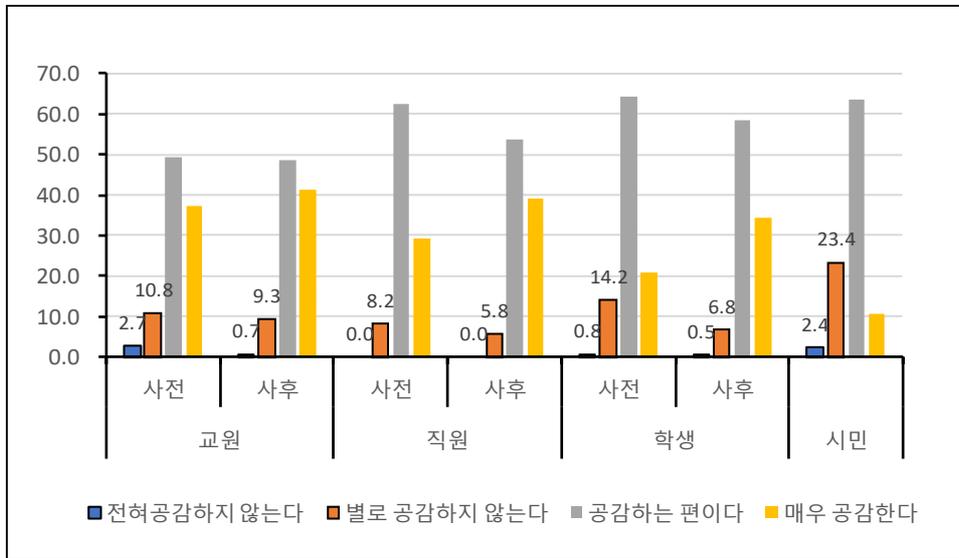
-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정보 원천의 경우 교원들은 인터넷(20.5%), 신문/잡지(18.8%), 지인/동료 (17.3%), 행사(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직원들은 인터넷(22.1%), 행사(19.2%), 신문/잡지(16.0%), 학교 홈페이지(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19.8%), 인터넷(19.4%), TV/라디오(17.4%), SNS(13.7%), 신문/잡지(11.9%) 등의 순임
- 시민들은 인터넷(24.8%), TV/라디오(22.3%), 지인/동료(11.2%), 신문/잡지(10.0%) 등의 순임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정보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음

3)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공감

<표 5-5-3> 문재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정책 취지 공감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 (2.7%)	1 (0.7%)	0 (0.0%)	0 (0.0%)	2 (0.8%)	1 (0.5%)	13 (2.4%)
②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0 (10.8%)	14 (9.3%)	7 (8.2%)	4 (5.8%)	34 (14.2%)	13 (6.8%)	125 (23.4%)
③ 공감하는 편이다	91 (49.2%)	73 (48.7%)	53 (62.4%)	37 (53.6%)	154 (64.2%)	111 (58.4%)	339 (63.5%)
④ 매우 공감한다	69 (37.3%)	62 (41.3%)	25 (29.4%)	27 (39.1%)	50 (20.8%)	65 (34.2%)	57 (10.7%)
평균값(표준편차)	3.21 (0.74)	3.31 (0.67)	3.21 (0.58)	3.28 (0.57)	3.05 (0.62)	3.26 (0.60)	2.82 (0.64)

문12.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5-10> 문재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정책취지 공감

-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취지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교원들은 공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49.2%),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한 이는 37.3%로 나타나 이들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6.5%가 공감하고 있음
- 직원들은 공감하는 편이다 62.4%, 매우 공감한다 29.4%로 전체 91.8%가 공감하고 있음. 학생들은 공감하는 편이다 64.2%, 매우 공감한다 20.8%로 85%가 공감하고 있음
- 시민들은 공감하는 편이다 63.5%,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3.4% 순임. 전체 공감하는 이들은 74.2%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원, 직원, 학생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취지에 있어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후설문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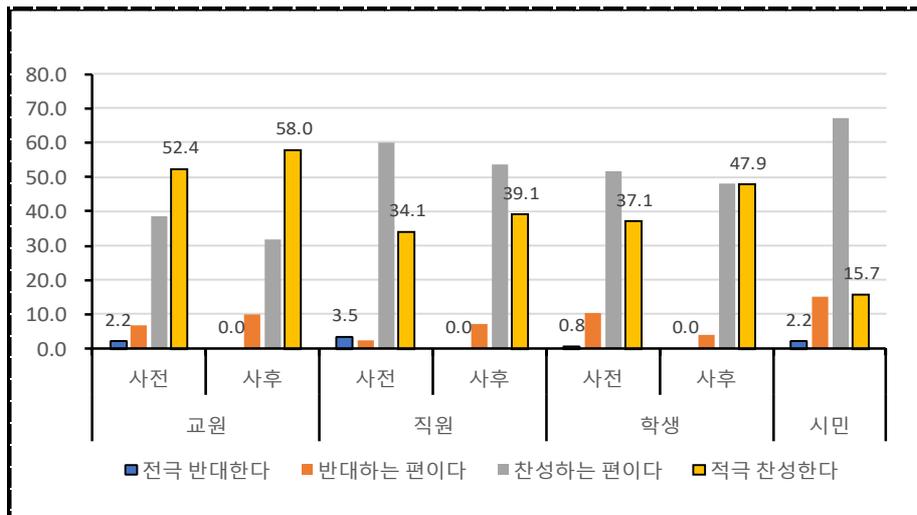
공감에 대한 평균값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4)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표 5-5-4>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한 선호도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① 적극 반대한다	4 (2.2%)	0 (0.0%)	3 (3.5%)	0 (0.0%)	2 (0.8%)	0 (0.0%)	12 (2.2%)
② 반대하는 편이다	13 (7.0%)	15 (10.0%)	2 (2.4%)	5 (7.2%)	25 (10.4%)	8 (4.2%)	80 (15.0%)
③ 찬성하는 편이다	71 (38.4%)	48 (32.0%)	51 (60.0%)	37 (53.6%)	124 (51.7%)	91 (47.9%)	358 (67.0%)
④ 적극 찬성한다	97 (52.4%)	87 (58.0%)	29 (34.1%)	27 (39.1%)	89 (37.1%)	91 (47.9%)	84 (15.7%)
평균값(표준편차)	3.41 (0.72)	3.48 (0.67)	3.25 (0.67)	3.32 (0.67)	3.25 (0.67)	3.44 (0.58)	2.96 (0.62)

문13.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5-11>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한 선호도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에 있어서 사전설문 조사 결과 교원들은 적극 찬성한다 52.4%, 찬성하는 편이다 38.4%로 90% 정도의 찬성을 하고 있음
- 직원들은 찬성하는 편이다 60.0%, 적극 찬성한다 34.1%로 나타나고 있어 94%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음. 학생들은 찬성하는 편이다 51.7%, 적극 찬성한다 37.1%이며 88.5%가 찬성하고 있음 시민들은 찬성하는 편이다 67.0%, 적극 찬성한다 15.7%로 82.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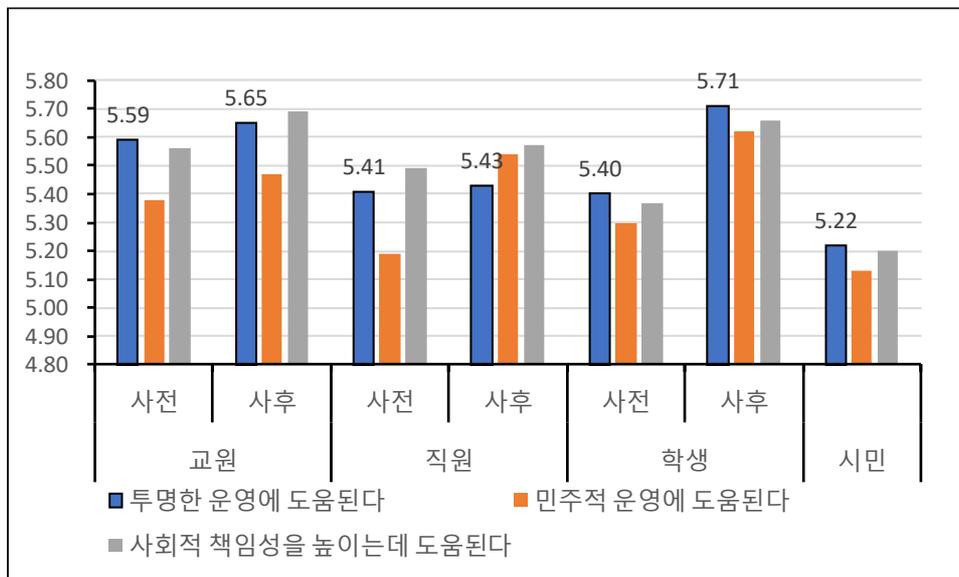
○ 사후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찬성에 대한 평균값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5)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

<표 5-5-5>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이사회에 대한 대학운영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5.59 (1.40)	5.65 (1.04)	5.41 (1.22)	5.43 (1.12)	5.40 (1.20)	5.71 (1.15)	5.22 (1.21)
2)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5.38 (1.45)	5.47 (1.16)	5.19 (1.24)	5.54 (1.11)	5.30 (1.20)	5.62 (1.17)	5.13 (1.16)
3)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5.56 (1.41)	5.69 (1.11)	5.49 (1.17)	5.57 (1.06)	5.37 (1.22)	5.66 (1.24)	5.20 (1.27)

문14.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공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참여 보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대학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그림 5-12> 공영형 사립대 전환과 이사회에 대한 대학운영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이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 사전설문 결과 교원(5.59), 직원(5.41), 학생(5.40), 시민(5.22)의 순으로 나타났음. 대체적으로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다소 값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 사전설문 결과 교원(5.38), 학생(5.30), 직원(5.19), 시민(5.13)의 순으로 나타났음.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는 직원들의 상승폭이 교원, 학생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 사전 설문 결과 교원(5.56), 직원(5.49), 학생(5.37), 시민(5.20)의 순으로 나타났음. 사회적 책무성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도 투명성, 민주성과 같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들의 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상승폭이 교원, 직원에 비해 큼.

6)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

<표 5-5-6> 사립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인식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4.83 (1.57)	4.97 (1.40)	4.87 (1.47)	4.74 (1.35)	4.88 (1.43)	5.13 (1.32)	4.87 (1.36)
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5.30 (1.53)	5.41 (1.35)	4.98 (1.50)	5.16 (1.22)	5.20 (1.30)	5.41 (1.24)	5.44 (1.21)
3) 이사회회의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4.68 (1.57)	4.97 (1.32)	4.51 (1.36)	4.65 (1.43)	4.81 (1.27)	5.19 (1.18)	4.87 (1.25)
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5.86 (1.45)	6.01 (1.13)	5.64 (1.47)	5.58 (1.51)	5.16 (1.34)	5.43 (1.25)	5.29 (1.25)
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5.99 (1.37)	6.08 (1.20)	5.56 (1.83)	5.32 (1.54)	4.62 (1.34)	5.04 (1.23)	4.42 (1.40)
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4.32 (1.84)	4.21 (1.99)	4.40 (1.60)	4.04 (1.64)	4.94 (1.41)	5.32 (1.35)	5.25 (1.29)

문15.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추천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사전설문 결과 학생(4.88), 직원(4.87), 시민(4.87), 교원(4.83)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다만 사후설문에 있어서 학생들의 경우 사전에 비해 사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사회에 외부인사 참관 허용에 있어서 사전 설문결과 시민(5.44), 교원(5.30), 학생(5.20), 직원(4.9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직원의 경우가 시민, 교원, 학생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사후설문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의 값이 사전 보다 더 향상되어 나타나고 있음
- 이사회회의 이사 정수 확대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시민(4.87), 학생(4.81), 교원(4.68), 직원(4.5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큰 차이는 없으나 직원들의 경우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사후설

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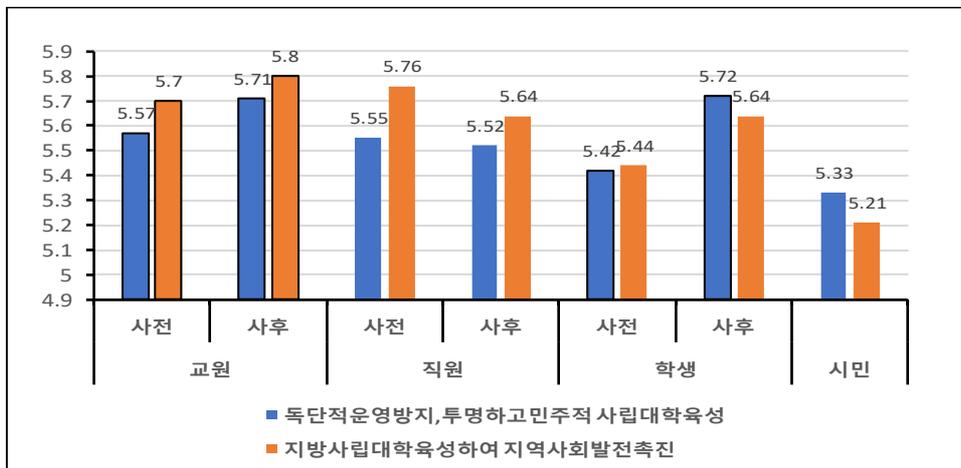
- 이사의 중임(연임) 2회 제한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교원(5.86), 직원(5.64), 시민(5.29), 학생(5.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원은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경우가 직원, 학생, 시민에 비해 높게 나타남. 사후설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다만 교원, 학생들의 경우가 사전설문에 비해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 총장의 당연직 이사 참여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교원(5.99), 직원(5.56), 학생(4.62), 시민(4.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원과 직원은 총장의 당연직 이사 참여에 있어서 참여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학생, 시민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원들이 그러함. 사후 설문에서는 학생들의 값이 사전설문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 대표 시민사회단체 인사의 이사 참여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시민(5.25), 학생(4.94), 직원(4.40), 교원(4.3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민들의 경우가 가장 높은 편임 반면에 교원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이며 특히 직원들의 경우 값이 낮아지고 있어 지역사회, 시민단체 인사의 이사참여에 대해서 보통수준을 보이고 있음

7)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기대효과

<표 5-5-7>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시 기대 효과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5.57 (1.48)	5.71 (1.21)	5.55 (1.19)	5.52 (1.02)	5.42 (1.30)	5.72 (1.16)	5.33 (1.26)
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5.70 (1.45)	5.80 (1.15)	5.76 (1.15)	5.64 (1.16)	5.44 (1.21)	5.64 (1.18)	5.21 (1.25)

문16.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그림 5-13>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시 기대 효과

-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에 있어서 사학의 독단적 운영방식 및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 육성의 경우 사전설문 결과 교원(5.57), 직원(5.55), 학생(5.42), 시민(5.33)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학생들과 교원들은 사전 설문에 비해서 값이 상승하였음
- 지방사립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촉진의 경우는 사전설문 결과 직원(5.76), 교원(5.70), 학생(5.44), 시민(5.2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8) 재정위원회 구성 방법

<표 5-5-8> 재정위원회 구성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4.43 (1.44)	4.51 (1.44)	4.52 (1.34)	4.43 (1.32)	4.11 (1.49)	4.46 (1.46)	3.78 (1.55)
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4.71 (1.51)	4.72 (1.50)	5.73 (1.16)	5.22 (1.24)	5.15 (1.28)	5.32 (1.30)	5.20 (1.21)
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5.12 (1.21)	5.28 (1.25)	5.18 (1.32)	5.07 (1.28)	5.20 (1.24)	5.54 (1.19)	5.20 (1.16)
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3.97 (1.78)	3.97 (1.77)	4.13 (1.52)	4.01 (1.59)	4.91 (1.43)	5.21 (1.33)	5.07 (1.32)
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4.25 (1.67)	4.33 (1.40)	4.02 (1.40)	4.23 (1.44)	4.74 (1.38)	5.09 (1.31)	5.12 (1.27)

문17.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 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경우 사전설문 결과 직원(4.52), 교원(4.43), 학생(4.11), 시민(3.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민들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경우 사전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교평, 직원노조, 학생회 추천 인사의 참여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직원(5.73), 시민(5.20), 학생(5.15), 교원(4.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원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반면에 교원들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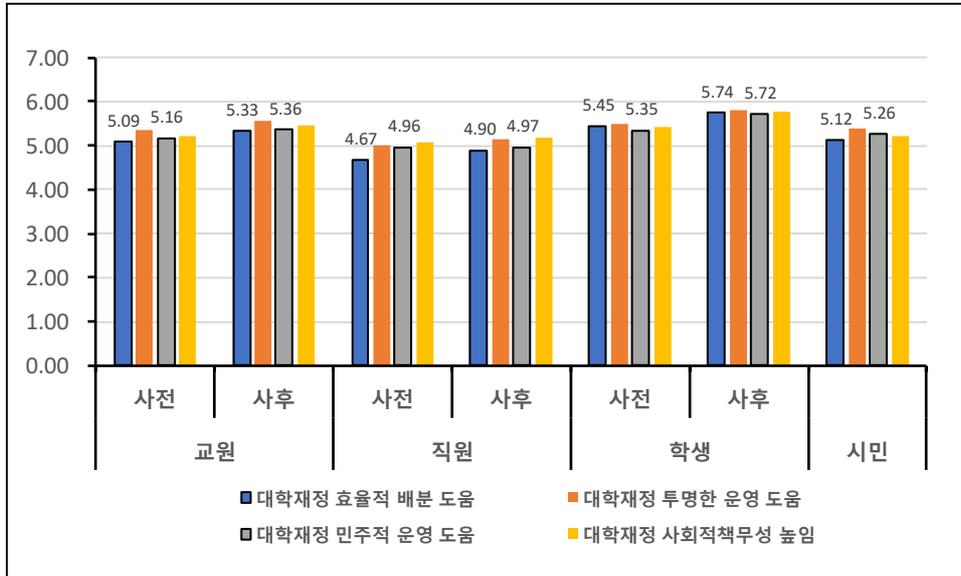
- 법률가/회계사 등 전문직 참여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학생(5.20), 시민(5.20), 직원(5.18), 교원(5.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시민들 모두 어느 정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같은 패턴이며 학생들의 경우 사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 대표 시민사회 단체 인사의 참여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시민(5.07), 학생(4.91), 직원(4.13), 교원(3.9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생과 시민은 지역사회 대표인사의 참여 필요가 상대적으로 교원, 직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교원들의 경우가 가장 낮으며 직원들도 낮은 편으로 학생과 시민과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사후설문 결과 교원, 직원들의 경우는 사전 설문에 비해서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외부인사의 많은 참여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시민(5.12), 학생(4.74), 교원(4.25), 직원(4.0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민과 학생들은 외부인사 참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원, 직원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편임. 사후설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9) 재정위원회 도입 효과(사립대 재정운영)

<표 5-5-9> 재정위원회 도입과 사립대 재정 운영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대학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이 된다	5.09 (1.30)	5.33 (1.13)	4.67 (1.21)	4.90 (1.25)	5.45 (1.18)	5.74 (1.10)	5.12 (1.12)
2)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	5.37 (1.29)	5.55 (1.06)	5.02 (1.21)	5.16 (1.23)	5.48 (1.15)	5.80 (1.05)	5.38 (1.14)
3) 대학 재정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	5.16 (1.33)	5.36 (1.18)	4.96 (1.14)	4.97 (1.28)	5.35 (1.17)	5.72 (1.09)	5.26 (1.15)
4) 대학 재정 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5.23 (1.30)	5.46 (1.17)	5.07 (1.22)	5.17 (1.27)	5.41 (1.17)	5.77 (1.10)	5.20 (1.14)

문18. 재정위원회 도입이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그림 5-14〉 재정위원회 도입과 사립대 재정 운영

- 재정위원회 도입이 사립대학 재정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효율적 배분에 도움된다는 경우 사전설문 결과 학생(5.45), 시민(5.12), 교원(5.09), 직원(4.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직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 시민, 교원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사후설문에서도 동일함. 다만 직원들의 경우 사전에 비해서 향상된 값을 보이고 있음
-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학생(5.48), 시민(5.38), 교원(5.37), 직원(5.0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도움이 된다고는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사전설문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학생(5.35), 시민(5.26), 교원(5.16), 직원(4.9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적 배분, 투명한 운영과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경우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 교원, 학생들의 경우 사전 설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원들의 경우는 차이가 없음
-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학생(5.41), 교원(5.23), 시민(5.20), 직원(5.0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사전설문에 비해서 더 높아진 값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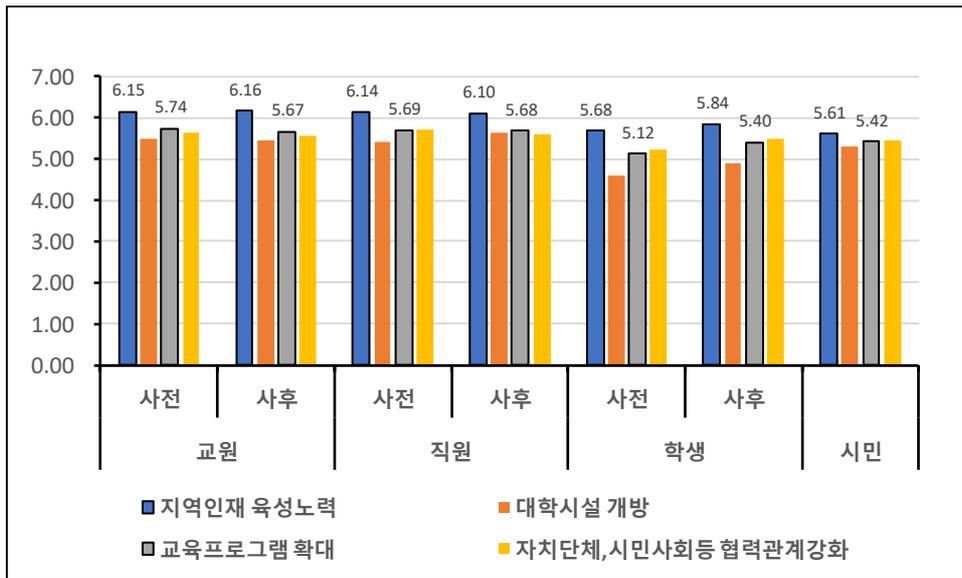
10)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표 5-5-10> 공영형 사립대의 사회적 책임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4)
	사전 (n=185)	사후 (n=150)	사전 (n=85)	사후 (n=69)	사전 (n=240)	사후 (n=190)	
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15 (1.10)	6.16 (1.00)	6.14 (0.94)	6.10 (1.00)	5.68 (1.12)	5.84 (1.08)	5.61 (1.18)
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5.48 (1.35)	5.45 (1.33)	5.40 (1.27)	5.62 (1.09)	4.58 (1.48)	4.90 (1.54)	5.31 (1.27)
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5.74 (1.20)	5.67 (1.20)	5.69 (1.26)	5.68 (1.08)	5.12 (1.29)	5.40 (1.29)	5.42 (1.19)
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 해야 한다.	5.65 (1.29)	5.57 (1.29)	5.71 (1.27)	5.59 (1.10)	5.24 (1.28)	5.49 (1.30)	5.45 (1.23)

문19.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그림 5-15> 공영형 사립대의 사회적 책임

-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경우 사전설문 결과 교원(6.15), 직원(6.14), 학생(5.68), 시민(5.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후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다만 학생들의 값이 사전설문에 비해서 높아진 반면 교원, 직원의 경우는 사전, 사후 결과가 유사함
- 학교 도서관/체육관 등 시설의 지역 주민에 대한 개방과 관련하여 사전설문 결과 교원(5.48), 직

원(5.40), 시민(5.31), 학생(4.58)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원, 직원, 시민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시설물을 개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패턴은 사후설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학생들은 사전설문에 비해서 사후설문의 값이 더 높아지고는 있으나 교원, 직원들에 비해서는 값 자체가 낮은 편임

-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교원(5.74), 직원(5.69), 시민(5.42), 학생(5.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체적으로 확대에 공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경우는 교원, 직원, 시민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사후설문에서는 학생들의 값이 사전설문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자체,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에 있어서 사전설문 결과 직원(5.71), 교원(5.65), 시민(5.45), 학생(5.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지자체/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라.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자유의견(개방형 설문)

1) R 프로그램을 활용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자유의견(교원, 직원, 학생, 시민)은 내용이 방대하여 본문에서는 제외하였고 주요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부록 6-1~부록 6-4 참조).
- 다만 자유의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는데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도식화함
-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빈번하게 나오는 주요 단어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의견으로만 한정하여 분석함)

○ 전체(교원, 직원, 학생, 시민) 결과

- 응답자 전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투명성과 투명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였을 때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학생들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사회, 등록금 그리고 제 단위단체의 참여, 학교의 발전 지향, 재정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16> 전체(교원, 직원, 학생, 시민)-워드클라우드

-교원 결과

- 교원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라는 측면과 ‘참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따른 재정위원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보고 있음
- 그 외 안정, 투명성, 학생고려, 학교의 발전, 교육 및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17> 교원-워드클라우드

-직원 결과

- 직원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고려, 공영형 사립대 운영에 대한 문제 및 재정운영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측면도 비

교적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 상황에 대한 고려, 현실성의 문제, 우리라고 하는 인식, 민립, 효율성, 등록금, 현실성에 대한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18> 직원-워드클라우드

-학생 결과

- 학생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학생, 등록금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또한 빈도가 높게 나타나 이들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 외 학교발전, 투명성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및 지역민에 대한 빈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19> 학생-워드클라우드

-시민 결과

- 시민들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투명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 교육, 학생, 지역사회/지역, 등록금에 대한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20> 시민-워드클라우드

2) 내용분석: 빈도분석과 범주화 분석

- 개방형 설문분석은 i) 진술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추출된 키워드는 코딩작업을 거쳐 빈도를 분석함. ii) 추출 키워드는 유사한 영역으로 묶어 범주화 시켜 전체적 맥락에서 의견표출을 분석함.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로 표출된 의견의 특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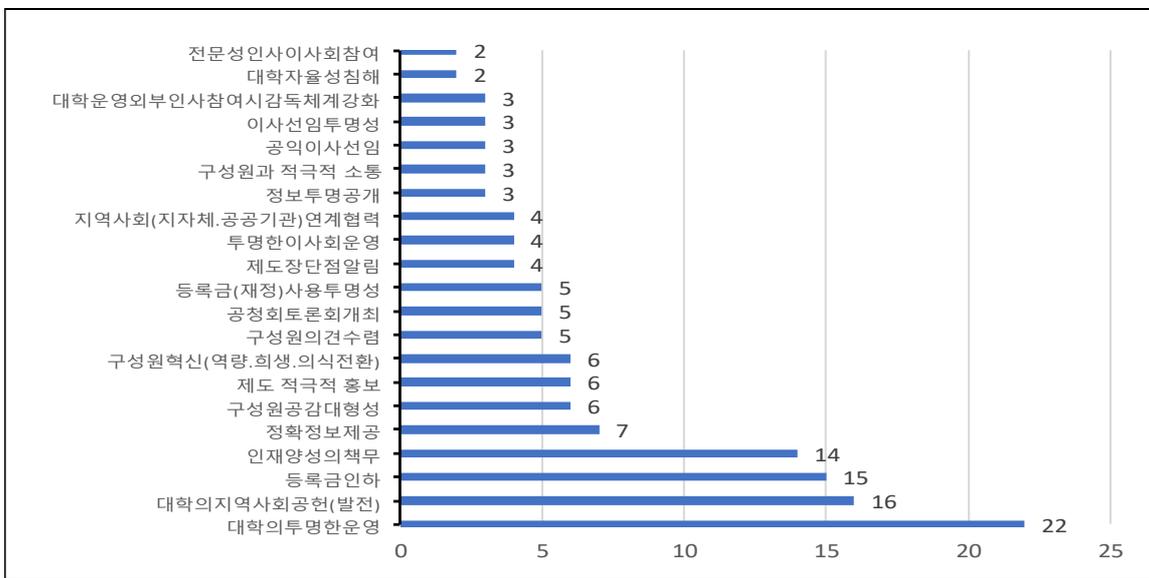
가) 개방형 진술 키워드 분석

- 전체적으로 보면(n=141), 대학의 투명한 운영 > 대학의 지역사회공헌(발전) > 등록금 인하 > (공영형사립대)정확한 정보제공 > 구성원 공감대 형성·적극적 홍보·구성원혁신(역량강화,자기희생,의식전환) 등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됨
- 집단별로 보면, 교원은 (공영형사립대)제도의 장단점 알림 및 정확한 정보제공, 구성원 공감대 형성, 공청회토론회 개최, 구성원과 적극적 소통, 대학운영에 외부인사 참여시 감독체계강화, 구성원혁신(역량강화, 자기희생, 의식전환) 등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됨
- 직원은 구성원 의견수렴, 제도 적극적 홍보, 구성원혁신(역량강화, 자기희생, 의식전환), 인재양성 책무, 지역사회공헌 등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됨
- 학생은 등록금인하, 대학의 투명한 운영 등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됨
- 시민은 대학의 투명한 운영, 인재양성책무, 지역사회공헌(발전) 등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됨

<표 5-5-1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개방형 설문 내용 분석 (단위:빈도)

구분(범주화)	키워드	교원	직원	학생	시민	계
정보 충분성과 투명성	제도장단점알림	4				4
	정확한 정보제공	4	1	2		7
	교내게시판알림	1				1
	정보투명공개	3				3
	소계	12	1	2		15
추진절차의 민주성	교내구성원위크숍	1				1
	구성원의견수렴	1	3	1		5
	구성원공감대형성	4	1	1		6
	온라인녹화공개	1				1
	공청회토론회개최	4	1			5
	제도 적극적 홍보	3	2	1		6
	구성원과 적극적 소통	3				3
	대학자율성침해	1	1			2
소계	18	8	3		29	
투명하고 민주적 대학운영	투명한이사회운영	2			2	4
	전문성인사이사회참여	2				2
	공익이사선임	2			1	3
	이사선임투명성	1			2	3
	대학운영외부인사참여시 감독체계강화	3				3
	대학의 투명한 운영			3	1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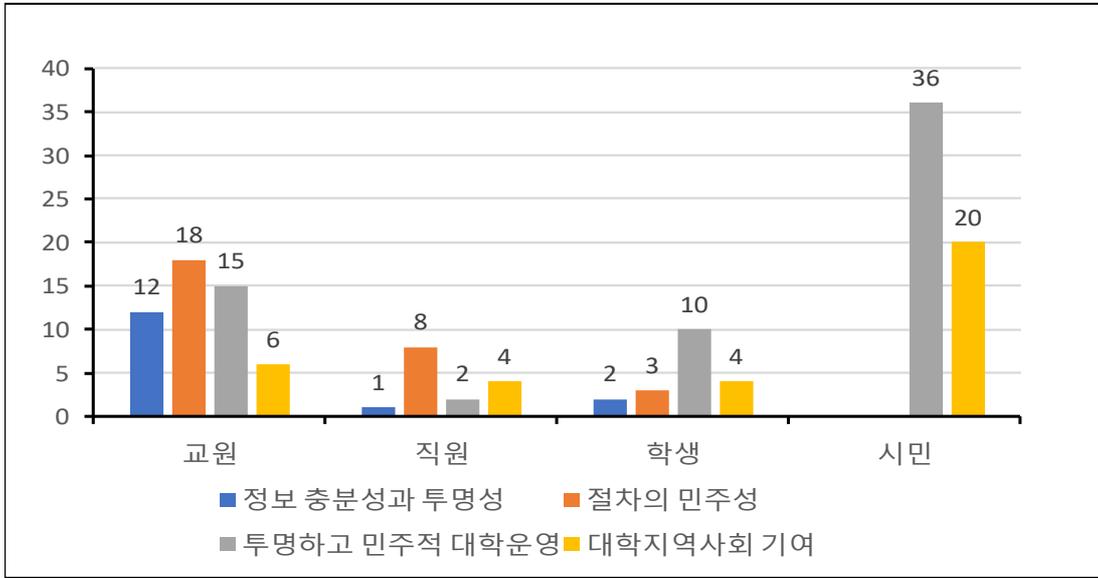
	등록금인하	2		4	9	15
	등록금(재정)사용투명성			2	3	5
	소계	15	2	10	36	63
대학 지역사회 기여	구성원혁신(역량.희생.의식전환)	3	2	1		6
	인재양성의책무	2	2		10	14
	지역사회(지자체.공공기관)연계협력	2		2		4
	대학의지역사회공헌(발전)	2	2	2	10	16
	소계	6	4	4	20	34
전체		51	15	19	56	141



<그림 5-2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빈도분석

나) 범주화 분석

- 추출 키워드를 유사한 영역으로 묶어 i)정보 충분성과 투명성, ii)추진절차의 민주성, iii)투명하고 민주적 대학운영, iv)대학지역사회 기여 등 네 개로 범주화함
- 전체적으로 볼때 ‘투명하고 민주적 대학운영’ 및 ‘대학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견이 다수임
- 각 집단별로 보면, 교원은 ‘(공영형사립대)충분한 정보제공과 투명성’, ‘추진절차의 민주성’, 직원은 ‘추진절차의 민주성’, 학생과 시민은 ‘투명하고 민주적 대학운영’ 을 강조하고 있음



<그림 5-22>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범주화 분석

- 종합해볼 때 개방형 설문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 구성원과 시민 간 의견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교원과 직원은 공영형사립대 추진절차의 민주성, 시민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교원과 직원은 대학의 내부인의 입장에서 시민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대학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마. 광주/전남지역 대표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중요성_사후설문

1) 광주/전남 대표 사립대학

<표 5-5-12> 광주/전남 대표 사립대학

	교원(n=150)		직원(n=69)		학생(n=19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① 조선대학교	150	100.0	68	98.6	189	99.5
② 광주대학교	0	0.0	0	0.0	1	0.5
③ 호남대학교	0	0.0	1	1.4	0	0.0
④ 동신대학교	0	0.0	0	0.0	0	0.0
합계	150	100.0	69	100.0	190	100.0

문1-1.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은 어느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원, 직원, 학생 모두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은 조선대학교라고 응답하고 있음. 구성원들에게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으로 조선대학교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외 대학인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동신대학교는 대표적인 사립대학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음

2) 광주/전남 대표 대학(1순위, 2순위)

<표 5-5-13> 광주/전남 대표 대학(1순위/ 2순위)

	교원(<i>n</i> =150)		직원(<i>n</i> =69)		학생(<i>n</i> =190)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① 조선대학교	47 (31.3%)	103 (68.7%)	14 (20.3%)	51 (73.9%)	29 (15.3%)	154 (81.1%)
② 전남대학교	103 (68.7%)	44 (29.3%)	55 (79.7%)	13 (18.8%)	160 (84.2%)	28 (14.7%)
③ 광주대학교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④ 호남대학교	0 (0.0%)	1 (0.7%)	0 (0.0%)	1 (1.4%)	0 (0.0%)	1 (0.5%)
⑤ 동신대학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⑥ 목포대학교	0 (0.0%)	2 (1.3%)	0 (0.0%)	3 (4.3%)	0 (0.0%)	3 (1.6%)
⑦ 순천대학교	0 (0.0%)	0 (0.0%)	0 (0.0%)	1 (1.4%)	1 (0.5%)	3 (1.6%)

문1-2.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교원, 직원, 학생 모두 광주/전남 대표 대학으로 전남대학교라고 응답하고 있음. 직원과 학생은 80%이며 교원은 약 70% 임. 조선대학교의 경우 2순위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 1순위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경우 광주/전남의 대표대학은 우리대학이 아닌 전남대학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교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결과로 볼 수 있음

3) 지난 10년 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표 5-5-14> 지난 10년 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교원(<i>n</i> =150)	직원(<i>n</i> =69)	학생(<i>n</i> =190)
① 조선대학교	4.10 (0.87)	4.10 (0.67)	4.02 (0.82)
② 전남대학교	4.14 (0.83)	4.00 (0.77)	4.14 (0.77)
③ 광주대학교	2.88 (0.77)	2.86 (0.75)	2.77 (0.75)

④ 호남대학교	2.95 (0.83)	3.07 (0.69)	2.78 (0.84)
⑤ 동신대학교	2.77 (0.81)	2.83 (0.75)	2.67 (0.89)

문2.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다음의 대학들이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 지난 10년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있어서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기여 했다고 보고 있음. 다만 교원과 학생은 전남대학교가 조선대학교보다 다소 높은 편임. 그 외 대학들은 보통수준 또는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4) 향후 10년 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표 5-5-15>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교원(n=150)	직원(n=69)	학생(n=190)
① 조선대학교	4.37 (0.81)	4.49 (0.66)	4.26 (0.81)
② 전남대학교	4.33 (0.75)	4.26 (0.70)	4.35 (0.77)
③ 광주대학교	3.03 (0.78)	3.06 (0.84)	3.02 (0.87)
④ 호남대학교	3.12 (0.82)	3.28 (0.87)	2.96 (0.92)
⑤ 동신대학교	2.93 (0.83)	3.04 (0.86)	2.88 (0.96)

문3. 앞으로 10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다음의 대학들이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평균값(표준편차))

-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에 있어서 교원, 직원, 학생들은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그 외 대학들은 보통수준 또는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다만 직원들의 경우 조선대학교의 기여가 전남대학교에 비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학생 들은 전남대학교가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교원들은 두 대학 모두 비슷한 수준임

5)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중요성

<표 5-5-16>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중요성

	교원(<i>n</i> =150)	직원(<i>n</i> =69)	학생(<i>n</i> =190)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1.3%)	0 (0.0%)	0 (0.0%)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13 (8.7%)	5 (7.2%)	7 (3.7%)
③ 조금 중요하다	30 (20.0%)	22 (31.9%)	70 (36.8%)
④ 매우 중요하다	105 (70.0%)	42 (60.9%)	113 (59.5%)
평균값(표준편차)	3.59 (0.71)	3.54 (0.63)	3.56 (0.57)

문4. 지역발전을 위해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발전을 위해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있어서 교원, 직원, 학생들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4. 분석 결과 II : 공영형 사립대 효과에 대한 인과성 분석_사전설문

가. 분석 방법

○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 검증

-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 검증을 위해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시민들을 전체 분석단위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함(*n*=1,044)
-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각 설문문항을 묶어 변수(construct)로 구성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검증함
- 설문대상자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대상자(교원, 직원, 학생, 시민),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함
- 변수 구성에 있어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변수의 구성

- 공영형 사립대 전환 효과를 결과변수로 설정함
- 독립변수로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현황(사립대학 운영전반, 사립대학 감독강화, 사립대학 재정 지원), 조선대학교 운영현황(조선대학교 운영전반, 조선대학교 재정운영),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 재정위원회(재정위원회 내 부구성원 참여, 외부구성원 참여, 재정위원회 효과성), 사회적 책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함

나. 분석 결과

○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립대학 운영전반, 사립대학 감독강화 그리고 사립대학 재정지원임
- 신뢰도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들이 .65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6-1> 사립대학 현황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1)

설문문항	성분		
	요인1 사립대학 운영전반	요인2 사립대학 감독강화	요인3 사립대학 재정지원
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98	-.177	.131
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54	-.127	.019
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51	-.010	.171
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21	.183	.888
5)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54	.028	.800
6-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139	.895	-.167
6-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	-.103	.918	-.003
신뢰계수(Cronbach 알파)	.750	.825	.665

-조선대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선대학교 운영전반,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으로 구분되고 있음
- 신뢰도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들이 .86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

<표 5-6-2> 사립대학 현황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2)

설문문항	성분	
	요인1 조선대학교 재정운영	요인2 조선대학교 운영전반
7-1)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365	.773

7-2)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10	.862
7-3)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청, 지역기반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298	.867
8-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82	.311
8-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882	.280
8-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861	.361
8-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620	.558
8-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836	.354
신뢰계수(Cronbach 알파)	.928	.882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

-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으로 구분되었음
- 신뢰도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들이 .7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

<표 5-6-3>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문항	성분	
	요인1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 성	요인2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
(공익대표 이사 참여 보장) 14-1)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029	.625
(공익대표 이사 참여 보장) 14-2)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033	.596
(공익대표 이사 참여 보장) 14-3)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006	.601
15-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642	.399
15-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807	.140
15-3) 이사회 의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701	.232
15-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514	.404
15-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847	.047
15-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798	-.014
신뢰계수(Cronbach 알파)	.794	.939

-재정위원회

-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정위원회 효과성, 재정위원회

- 의 내부구성원 참여, 외부구성원 참여로 구분되었음
- 신뢰도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들이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표 5-6-4> 재정위원회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문항	성분		
	요인1 재정위원회 효과성	요인2 외부구성원 참여	요인3 내부구성원 참여
17-1)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103	.077	.953
17-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263	.247	.676
17-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355	.589	.177
17-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228	.833	.005
17-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385	.719	-.147
18-1) 대학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된다	.846	.031	.108
18-2)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884	.306	.05
18-3) 대학 재정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863	.337	.095
18-4) 대학 재정 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849	.322	.089
신뢰계수(Cronbach 알파)	.942	.741	.629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과 사회적 책임

-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익형 사립대 효과성,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되었음
- 신뢰도 분석결과는 모든 변수들이 .8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

<표 5-6-5>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과 사회적 책임 요인 신뢰도 분석 결과

설문문항	성분	
	요인1 사회적 책임	요인2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
16-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234	.916
16-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239	.904
19-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59	.510

19-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885	.140
19-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869	.332
19-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785	.421
신뢰계수(Cronbach 알파)	.881	.911

○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결과

- 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에 있어서 사립대학 전반적 운영 2.25, 사립대학 재정지원 2.66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립대학 감독강화는 5.64임
- 조선대학교 운영현황에 있어서 운영전반 4.30, 재정운영 3.69로 재정운영이 비교적 낮은 값을 보임
-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공익대표 이사 참여효과성은 5.30,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은 5.02임
- 재정위원회에 있어서 내부구성원 참여는 4.59, 외부구성원 참여는 4.91임 재정위원회 효과성은 5.25로 나타났음
- 사회적 책임은 5.46,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은 5.40으로 나타났음

<표 5-6-6> 변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비고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	사립대학 운영전반	2.25	.54	4점 척도
	사립대학 재정지원	2.66	.41	
	사립대학 감독강화	5.64	1.25	
조선대학교 운영 현황	조선대학교 운영전반	4.30	1.24	7점 척도
	조선대학교 재정운영	3.69	1.24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	5.30	1.19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	5.02	.99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내부구성원 참여	4.59	1.10	
	재정위원회 외부구성원 참여	4.91	1.13	
	재정위원회 효과성	5.25	1.09	
사회적 책임		5.46	1.08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		5.40	1.24	

-변수들의 상관관계 결과

- 공영형 사립대학 효과성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립대학 재정지원($r=.152, p<0.01$), 사립대학 감독강화($r=.483, p<0.1$)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조선대학교 운영현황에 있어서 운영전반($r=.223, p<0.1$), 재정운영($r=.121, p<0.1$)과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r=.818, p<0.1$),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r=.678, p<0.1$)과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재정위원회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 내부구성원 참여($r=.418, p<0.1$), 재정위원회 외부구성원 참여($r=.532, p<0.1$), 재정위원회 효과성($r=.720, p<0.1$)과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사회적 책임($r=.623, p<0.1$)과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표 5-6-7> 변수들 간 상관관계 결과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우리 나라 사립 대학 현황	1. 사립대 운영전반	1.000										
	2. 사립대 재정지원	.278**	1.000									
	3. 사립대 감독강화	-.258* *	.079*	1.000								
조선 대학교 운영 현황	4. 조선 대학교 운영전반	.519**	.162**	-0.059	1.000							
	5. 조선 대학교 재정운영	.577**	.126**	-.183* *	.709**	1.000						
사립 대학 이사회 구성	6.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	0.013	.139**	.494**	.206**	.096**	1.000					
	7. 사립대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 투명성	-0.044	.061*	.458**	.129**	0.056	.695**	1.000				
재정 위원회	8. 내부 구성원 참여	.148**	.078*	.169**	.229**	.249**	.393**	.461**	1.000			
	9. 외부 구성원 참여	-.083* *	.104**	.445**	0.041	-0.047	.516**	.666**	.419**	1.000		
	10. 재정 위원회 효과성	-0.040	.150**	.461**	.154**	-0.001	.735**	.665**	.444**	.667**	1.000	
11. 사회적 책임		-0.010	0.051	.392**	.137**	.090**	.577**	.597**	.376**	.553**	.637**	1.000
12.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		0.030	.152**	.483**	.223**	.121**	.818**	.678**	.418**	.532**	.720**	.623**

주) *: p<.05, **: p<.01

-회귀분석 결과: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

-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제시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73.4%로 나타났음
- 공영형 사립대학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사립대학 감독강화(beta=.081, p<.001), 조선대학교 운영전반(beta=.043, p<.05),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beta=.494, p<.001),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beta=.094, p<.01), 재정위원회 효과성(beta=.156, p<.001), 그리고 사회적 책임(beta=.117, p<.001), 임
- 이를 토대로 보면 공영형 사립대학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도 제고 되어야 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하며 재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만 공영형 사립대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6-8>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영형 사립대 효과성
상수			
통제변수	구성원	교원	.047*
		직원	.062**
		학생	.035
	성별		.014
	연령		.013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	사립대학 운영전반		-.009
	사립대학 재정지원		.028
	사립대학 감독강화		.081***
조선대학교 운영 현황	조선대학교 운영전반		.043*
	조선대학교 재정운영		.009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	공익대표 이사 참여 효과성		.494***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투명성		.094**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내부구성원 참여		.027
	재정위원회 외부구성원 참여		.011
	재정위원회 효과성		.156***
사회적 책임			.117***
R ²			.734
F value			176.89***

주1) 통제변수 중 연령은 실제 값이며 성별은 남성 1, 여성 0임 구성원 기준 값은 시민으로 하였음,

주2) *: p<.05, **: p<.01, ***: p<.001

5. 추가 분석 결과: 광주전남과 전국 시민들의 인식 조사

가. 광주전남조사, 전국지역조사 추가 실시(인구비례 할당표집, 엠브레인 의뢰)

- 광주지역 이외에 전남지역을 포괄한 광주전남조사(2020.07.16.~07.23., 20세 이상 1,455명)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 광주전남 조사 총 응답자 1,455명 중 성별에 있어서 남성 556명(38.2%), 여성 899명(61.8%)임. 연령별로 보면 20대 592명(40.7%), 30대 452명(31.1%), 40대 276명(19.0%) 50대 105명(7.2%), 60대 이상 30명(2.1%)임.
-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 868명(59.7%), 전남 587명(40.3%)임.

<표 5-7-1> 광주·전남 응답자 구성

구분		응답자수(%)
전체		1,455
성별	남성	556 (38.2%)
	여성	899 (61.8%)
연령대별	20대	592 (40.7%)
	30대	452 (31.1%)
	40대	276 (19.0%)
	50대	105 (7.2%)
	60대 이상	30 (2.1%)
지역별	광주광역시	868 (59.7%)
	전라남도	587 (40.3%)

- 전국지역조사(2020.07.20.~07.24., 20세 이상 1,000명)를 추가적으로 실시함
- 전국지역조사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도 포함되어 전국단위로 조사 실시
- 총 응답자 1,000명 중 성별에 있어서 남성 511명(51.1%), 여성 489명(48.9%)임. 연령별로 보면 20대 183명(18.3%), 30대 187명(18.7%), 40대 222명(22.2%) 50대 234명(23.4%), 60대 이상 174명(17.4%)임.
-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4명(19.4%), 부산 67명(6.7%), 대구 47명(4.7%) 인천 59명(5.9%), 광주 27명(2.7%), 대전 28명(2.8%), 울산 23명(2.3%), 경기도 259명(25.9%), 강원도 29명(2.9%), 충청북도 30명(3.0%), 충청남도 40명(4.0%), 전라북도 34명(3.4%), 전라남도 34명(3.4%), 경상북도 47명(4.7%), 경상남도 64명(6.4%), 제주도 12명(1.2%), 세종 6명(0.6%)임.

〈표 5-7-2〉 전국 조사 응답자 구성

구분		응답자수(%)
전체		1,000
성별	남성	511 (51.1%)
	여성	489 (48.9%)
연령대별	20대	183 (18.3%)
	30대	187 (18.7%)
	40대	222 (22.2%)
	50대	234 (23.4%)
	60대 이상	174 (17.4%)
	지역별	서울
	부산	67 (6.7%)
	대구	47 (4.7%)
	인천	59 (5.9%)
	광주	27 (2.7%)
	대전	28 (2.8%)
	울산	23 (2.3%)
	경기도	259 (25.9%)
	강원도	29 (2.9%)
	충청북도	30 (3.0%)
	충청남도	40 (4.0%)
	전라북도	34 (3.4%)
	전라남도	34 (3.4%)
	경상북도	47 (4.7%)
	경상남도	64 (6.4%)
	제주도	12 (1.2%)
	세종	6 (0.6%)

나.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광주전남

○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투명성

<표 5-8-1> 사립대학의 투명성: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N=1,455)		
문항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N=556)	1.76
		여성(N=899)	1.80
	연령대별	20대(N=592)	1.89
		30대(N=452)	1.69
		40대(N=276)	1.73
		50대(N=105)	1.79
		60대 이상(N=30)	1.60
	지역별	광주광역시(N=868)	1.78
		전라남도(N=587)	1.79

· 우리나라 사립대학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1.78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민주성

<표 5-8-2 > 사립대학의 민주성: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N=1,455)		
문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N=556)	1.94
		여성(N=899)	2.02
	연령대별	20대(N=592)	2.10
		30대(N=452)	1.92
		40대(N=276)	1.90
		50대(N=105)	1.91
		60대 이상(N=30)	1.80
	지역별	광주광역시(N=868)	2.01
		전라남도(N=587)	1.96

· 우리나라 사립대학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1.99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표 5-8-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N=1,455)		
문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N=556)	2.24
		여성(N=899)	2.24
	연령대별	20대(N=592)	2.33
		30대(N=452)	2.16
		40대(N=276)	2.16
		50대(N=105)	2.28
		60대 이상(N=30)	2.23
	지역별	광주광역시(N=868)	2.23
		전라남도(N=587)	2.24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24로 나타남. 성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연령대별에 있어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충분성

<표 5-8-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N=1,455)		
문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N=556)	2.68
		여성(N=899)	2.59
	연령대별	20대(N=592)	2.51
		30대(N=452)	2.67
		40대(N=276)	2.79
		50대(N=105)	2.59
		60대 이상(N=30)	2.90
	지역별	광주광역시(N=868)	2.62
		전라남도(N=587)	2.63

-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충분한 재정지원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63으로 나타남. 성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연령대별에 40대와 60대 이상이 타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편임.

-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

<표 5-8-5>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광주전남

문5.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N=1,455)		2.56
	성별	남성(N=556)	2.48
		여성(N=899)	2.62
연령대별	20대(N=592)	2.83	
	30대(N=452)	2.40	
	40대(N=276)	2.33	
	50대(N=105)	2.49	
	60대 이상(N=30)	2.27	
지역별	광주광역시(N=868)	2.55	
	전라남도(N=587)	2.58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추가적 재정지원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56으로 나타남. 성별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음,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연령대별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높음.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강화와 이사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참여

<표 5-8-6>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공익인사 참여: 광주전남

문6_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455)		6.06
	성별	남성(N=556)	6.06
		여성(N=899)	6.07
연령대별	20대(N=592)	5.89	
	30대(N=452)	6.10	
	40대(N=276)	6.28	
	50대(N=105)	6.26	
	60대 이상(N=30)	6.43	
지역별	광주광역시(N=868)	6.03	
	전라남도(N=587)	6.11	

문6_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455)		5.84
	성별	남성(N=556)	5.84
		여성(N=899)	5.84
연령대별	20대(N=592)	5.61	
	30대(N=452)	5.85	
	40대(N=276)	6.12	
	50대(N=105)	6.19	
	60대 이상(N=30)	6.40	
지역별	광주광역시(N=868)	5.83	
	전라남도(N=587)	5.85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강화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6.06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감독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인식함.
- 이사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참여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5.84으로 나타남. 성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연령대별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낮은 편임.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

-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

<표 5-8-7>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 광주전남

문7.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455)		1.54
	성별	남성(<i>n</i> =556)	1.62
		여성(<i>n</i> =899)	1.49
연령대별	20대(<i>n</i> =592)	1.55	
	30대(<i>n</i> =452)	1.50	
	40대(<i>n</i> =276)	1.51	
	50대(<i>n</i> =105)	1.68	
	60대 이상(<i>n</i> =30)	1.8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1.57	
	전라남도(<i>n</i> =587)	1.50	

·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1.54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공감

<표 5-8-8>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공감: 광주전남

문8.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455)		2.68
	성별	남성(<i>n</i> =556)	2.69
		여성(<i>n</i> =899)	2.68
연령대별	20대(<i>n</i> =592)	2.63	
	30대(<i>n</i> =452)	2.66	
	40대(<i>n</i> =276)	2.78	
	50대(<i>n</i> =105)	2.74	
	60대 이상(<i>n</i> =30)	2.9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2.70	
	전라남도(<i>n</i> =587)	2.66	

· 공영형 사립대 정책취지 공감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68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

<표 5-8-9>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 광주전남

1)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10
	성별	남성(<i>n</i> =556)	5.11
		여성(<i>n</i> =899)	5.09

	연령대별	20대(<i>n</i> =592)	4.94
		30대(<i>n</i> =452)	5.05
		40대(<i>n</i> =276)	5.29
		50대(<i>n</i> =105)	5.56
		60대 이상(<i>n</i> =30)	5.4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15
		전라남도(<i>n</i> =587)	5.01
2)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99
	성별	남성(<i>n</i> =556)	5.04
		여성(<i>n</i> =899)	4.96
	연령대별	20대(<i>n</i> =592)	4.80
		30대(<i>n</i> =452)	4.96
		40대(<i>n</i> =276)	5.21
		50대(<i>n</i> =105)	5.48
		60대 이상(<i>n</i> =30)	5.50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03
전라남도(<i>n</i> =587)		4.94	
3)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07
	성별	남성(<i>n</i> =556)	5.05
		여성(<i>n</i> =899)	5.07
	연령대별	20대(<i>n</i> =592)	4.92
		30대(<i>n</i> =452)	5.03
		40대(<i>n</i> =276)	5.27
		50대(<i>n</i> =105)	5.44
		60대 이상(<i>n</i> =30)	5.3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10
전라남도(<i>n</i> =587)		5.01	

- 공영형 사립대 전환 효과성(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투명성 5.10, 민주성 4.99, 사회적 책무성 5.07로 나타남. 높은 연령대가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성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사립대학 이사회

-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

<표 5-8-10>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 광주전남

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83
	성별	남성(<i>n</i> =556)	4.87
		여성(<i>n</i> =899)	4.81
	연령대별	20대(<i>n</i> =592)	4.79
		30대(<i>n</i> =452)	4.74
		40대(<i>n</i> =276)	4.89
		50대(<i>n</i> =105)	5.16
60대 이상(<i>n</i> =30)		5.2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4.84
		전라남도(<i>n</i> =587)	4.82
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51
	성별	남성(<i>n</i> =556)	5.55
		여성(<i>n</i> =899)	5.48
	연령대별	20대(<i>n</i> =592)	5.36
		30대(<i>n</i> =452)	5.54
		40대(<i>n</i> =276)	5.62
		50대(<i>n</i> =105)	5.82
	60대 이상(<i>n</i> =30)		5.7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전라남도(<i>n</i> =587)	5.49	
3) 이사회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97
	성별	남성(<i>n</i> =556)	4.96
		여성(<i>n</i> =899)	4.98
	연령대별	20대(<i>n</i> =592)	4.84
		30대(<i>n</i> =452)	5.00
		40대(<i>n</i> =276)	5.11
		50대(<i>n</i> =105)	5.13
	60대 이상(<i>n</i> =30)		5.3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전라남도(<i>n</i> =587)	4.93	
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33
	성별	남성(<i>n</i> =556)	5.29
		여성(<i>n</i> =899)	5.35
	연령대별	20대(<i>n</i> =592)	5.14
		30대(<i>n</i> =452)	5.37
		40대(<i>n</i> =276)	5.47
		50대(<i>n</i> =105)	5.73
	60대 이상(<i>n</i> =30)		5.70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전라남도(<i>n</i> =587)	5.32	
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43
	성별	남성(<i>n</i> =556)	4.46
		여성(<i>n</i> =899)	4.41
	연령대별	20대(<i>n</i> =592)	4.42
		30대(<i>n</i> =452)	4.36
		40대(<i>n</i> =276)	4.50
		50대(<i>n</i> =105)	4.68
	60대 이상(<i>n</i> =30)		4.1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전라남도(<i>n</i> =587)	4.35	
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19
	성별	남성(<i>n</i> =556)	5.19
		여성(<i>n</i> =899)	5.19
연령대별	20대(<i>n</i> =592)	5.03	

		30대(<i>n</i> =452)	5.18
		40대(<i>n</i> =276)	5.34
		50대(<i>n</i> =105)	5.70
		60대 이상(<i>n</i> =30)	5.6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23
		전라남도(<i>n</i> =587)	5.14

-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4.83,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5.51, 이사회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4.97,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5.33,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4.43,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5.19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외부인사 참관 허용, 지역사회 대표의 참여가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편임.

○ 공영형 사립대 전환 효과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기대효과

<표 5-8-11>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기대효과: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성별	남성(<i>n</i> =556)	5.26
		여성(<i>n</i> =899)	5.26
	연령대별	20대(<i>n</i> =592)	5.11
		30대(<i>n</i> =452)	5.24
		40대(<i>n</i> =276)	5.39
		50대(<i>n</i> =105)	5.64
		60대 이상(<i>n</i> =30)	6.00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30
		전라남도(<i>n</i> =587)	5.21
		구 분	
전체(<i>n</i> =1,455)		5.16	
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성별	남성(<i>n</i> =556)	5.17
		여성(<i>n</i> =899)	5.15
	연령대별	20대(<i>n</i> =592)	4.95
		30대(<i>n</i> =452)	5.15
		40대(<i>n</i> =276)	5.36
		50대(<i>n</i> =105)	5.65
		60대 이상(<i>n</i> =30)	5.8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16
		전라남도(<i>n</i> =587)	5.16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기대효과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5.26,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5.16으로 나타남.

-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표 5-8-12>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체(<i>n</i> =1,455)	
성별		남성(<i>n</i> =556)	5.76
		여성(<i>n</i> =899)	5.72
연령대별		20대(<i>n</i> =592)	5.60
		30대(<i>n</i> =452)	5.70
		40대(<i>n</i> =276)	5.91
		50대(<i>n</i> =105)	6.04
		60대 이상(<i>n</i> =30)	6.30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74
		전라남도(<i>n</i> =587)	5.74
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50
	성별	남성(<i>n</i> =556)	5.50
		여성(<i>n</i> =899)	5.50
	연령대별	20대(<i>n</i> =592)	5.27
		30대(<i>n</i> =452)	5.54
		40대(<i>n</i> =276)	5.74
		50대(<i>n</i> =105)	5.83
		60대 이상(<i>n</i> =30)	6.0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53
전라남도(<i>n</i> =587)		5.46	
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57
	성별	남성(<i>n</i> =556)	5.54
		여성(<i>n</i> =899)	5.58
	연령대별	20대(<i>n</i> =592)	5.36
		30대(<i>n</i> =452)	5.62
		40대(<i>n</i> =276)	5.75
		50대(<i>n</i> =105)	5.90
		60대 이상(<i>n</i> =30)	6.0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59
전라남도(<i>n</i> =587)		5.54	
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 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55
	성별	남성(<i>n</i> =556)	5.56
		여성(<i>n</i> =899)	5.55
	연령대별	20대(<i>n</i> =592)	5.41
		30대(<i>n</i> =452)	5.57
		40대(<i>n</i> =276)	5.66
		50대(<i>n</i> =105)	5.91
		60대 이상(<i>n</i> =30)	5.9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57
전라남도(<i>n</i> =587)		5.54	

·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74,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5.50,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5.57,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5.55로 나타났음.

○ 조선대학교 운영현황

- 지역 발전을 위한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중요도

<표 5-8-13> 지역발전을 위한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중요도: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455)		3.06
문_13. 지역발전을 위해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i>n</i> =556)	3.06
		여성(<i>n</i> =899)	3.06
	연령대별	20대(<i>n</i> =592)	3.00
		30대(<i>n</i> =452)	3.09
		40대(<i>n</i> =276)	3.05
		50대(<i>n</i> =105)	3.23
		60대 이상(<i>n</i> =30)	3.4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09
		전라남도(<i>n</i> =587)	3.02

· 지역발전을 위한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중요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3.06으로 나타남. 성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연령대별에 있어서 50대와 60대가 높게 나타남.

- 조선대학교에 대한 인지도

<표 5-8-14> 조선대학교 인지도: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455)		2.78
문_14. 조선대학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별	남성(<i>n</i> =556)	2.86
		여성(<i>n</i> =899)	2.73
	연령대별	20대(<i>n</i> =592)	2.79
		30대(<i>n</i> =452)	2.73
		40대(<i>n</i> =276)	2.80
		50대(<i>n</i> =105)	2.81
		60대 이상(<i>n</i> =30)	3.0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2.89
		전라남도(<i>n</i> =587)	2.62

· 조선대학교 인지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78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없음. 지역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에 비해 전남이 낮음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선호도

<표 5-8-15>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선호도: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455)		
문_15.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i>n</i> =556)	3.04
		여성(<i>n</i> =899)	2.99
연령대별	연령대별	20대(<i>n</i> =592)	2.95
		30대(<i>n</i> =452)	3.00
		40대(<i>n</i> =276)	3.08
		50대(<i>n</i> =105)	3.10
		60대 이상(<i>n</i> =30)	3.23
지역별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05
		전라남도(<i>n</i> =587)	2.95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선호도의 전체 평균은 3.01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 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조선대학교의 운영 전반

<표 5-8-16> 조선대학교 운영 전반: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1)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성별	남성(<i>n</i> =556)	3.94
		여성(<i>n</i> =899)	4.03
연령대별	연령대별	20대(<i>n</i> =592)	4.01
		30대(<i>n</i> =452)	3.96
		40대(<i>n</i> =276)	4.03
		50대(<i>n</i> =105)	3.97
		60대 이상(<i>n</i> =30)	4.10
지역별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92
		전라남도(<i>n</i> =587)	4.12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18
2)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성별	남성(<i>n</i> =556)	4.17
		여성(<i>n</i> =899)	4.19
연령대별	연령대별	20대(<i>n</i> =592)	4.21
		30대(<i>n</i> =452)	4.12
		40대(<i>n</i> =276)	4.18
		50대(<i>n</i> =105)	4.22
		60대 이상(<i>n</i> =30)	4.43
지역별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4.12
		전라남도(<i>n</i> =587)	4.28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09
3)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청, 지역기반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성별	남성(<i>n</i> =556)	4.07
		여성(<i>n</i> =899)	4.10
연령대별	연령대별	20대(<i>n</i> =592)	4.10
		30대(<i>n</i> =452)	4.04
		40대(<i>n</i> =276)	4.12
		50대(<i>n</i> =105)	4.04

		60대 이상(<i>n</i> =30)	4.40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4.05
		전라남도(<i>n</i> =587)	4.14

· 조선대학교 운영전반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4.00,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18, 광주광역시청, 지역기반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4.09로 나타났음

-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

<표 5-8-17> 조선대학교 재정운영: 광주전남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별	남성(<i>n</i> =556)	3.63
		여성(<i>n</i> =899)	3.66
	연령대별	20대(<i>n</i> =592)	3.62
		30대(<i>n</i> =452)	3.63
		40대(<i>n</i> =276)	3.72
		50대(<i>n</i> =105)	3.68
		60대 이상(<i>n</i> =30)	3.4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50
		전라남도(<i>n</i> =587)	3.86
	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구 분	
전체(<i>n</i> =1,455)		3.33	
성별		남성(<i>n</i> =556)	3.32
		여성(<i>n</i> =899)	3.33
연령대별		20대(<i>n</i> =592)	3.31
		30대(<i>n</i> =452)	3.32
		40대(<i>n</i> =276)	3.37
		50대(<i>n</i> =105)	3.43
		60대 이상(<i>n</i> =30)	2.9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17
	전라남도(<i>n</i> =587)	3.55	
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3.49
	성별	남성(<i>n</i> =556)	3.47
		여성(<i>n</i> =899)	3.51
	연령대별	20대(<i>n</i> =592)	3.54
		30대(<i>n</i> =452)	3.43
		40대(<i>n</i> =276)	3.52
		50대(<i>n</i> =105)	3.56
		60대 이상(<i>n</i> =30)	3.2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36
전라남도(<i>n</i> =587)		3.70	
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3.60
	성별	남성(<i>n</i> =556)	3.57
여성(<i>n</i> =899)		3.61	

	연령대별	20대(<i>n</i> =592)	3.64
		30대(<i>n</i> =452)	3.54
		40대(<i>n</i> =276)	3.56
		50대(<i>n</i> =105)	3.69
		60대 이상(<i>n</i> =30)	3.70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49
		전라남도(<i>n</i> =587)	3.76
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3.44
	성별	남성(<i>n</i> =556)	3.38
		여성(<i>n</i> =899)	3.48
	연령대별	20대(<i>n</i> =592)	3.48
		30대(<i>n</i> =452)	3.40
		40대(<i>n</i> =276)	3.39
		50대(<i>n</i> =105)	3.54
		60대 이상(<i>n</i> =30)	3.2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31
		전라남도(<i>n</i> =587)	3.63
6) 대학의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83
	성별	남성(<i>n</i> =556)	4.91
		여성(<i>n</i> =899)	4.78
	연령대별	20대(<i>n</i> =592)	4.85
		30대(<i>n</i> =452)	4.73
		40대(<i>n</i> =276)	4.83
		50대(<i>n</i> =105)	5.04
		60대 이상(<i>n</i> =30)	5.3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4.88
		전라남도(<i>n</i> =587)	4.76

-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64,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3.3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3.49,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3.60,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44, 대학의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4.83으로 나타남

○ 재정위원회 구성

-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

<표 5-8-18>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 광주전남

1)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3.70
	성별	남성(<i>n</i> =556)	3.58
		여성(<i>n</i> =899)	3.78
	연령대별	20대(<i>n</i> =592)	3.94
30대(<i>n</i> =452)		3.59	

		40대(<i>n</i> =276)	3.46
		50대(<i>n</i> =105)	3.55
		60대 이상(<i>n</i> =30)	3.4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3.67
		전라남도(<i>n</i> =587)	3.76
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08
	성별	남성(<i>n</i> =556)	5.10
		여성(<i>n</i> =899)	5.07
	연령대별	20대(<i>n</i> =592)	5.00
		30대(<i>n</i> =452)	5.06
		40대(<i>n</i> =276)	5.14
		50대(<i>n</i> =105)	5.31
		60대 이상(<i>n</i> =30)	5.63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12
		전라남도(<i>n</i> =587)	5.01
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10
	성별	남성(<i>n</i> =556)	5.11
		여성(<i>n</i> =899)	5.09
	연령대별	20대(<i>n</i> =592)	5.04
		30대(<i>n</i> =452)	5.09
		40대(<i>n</i> =276)	5.16
		50대(<i>n</i> =105)	5.14
		60대 이상(<i>n</i> =30)	5.70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12
		전라남도(<i>n</i> =587)	5.06
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4.97
	성별	남성(<i>n</i> =556)	4.99
		여성(<i>n</i> =899)	4.96
	연령대별	20대(<i>n</i> =592)	4.86
		30대(<i>n</i> =452)	4.95
		40대(<i>n</i> =276)	5.09
		50대(<i>n</i> =105)	5.23
		60대 이상(<i>n</i> =30)	5.4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00
		전라남도(<i>n</i> =587)	4.94
5)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해 외부 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455)		5.05
	성별	남성(<i>n</i> =556)	5.10
		여성(<i>n</i> =899)	5.03
	연령대별	20대(<i>n</i> =592)	4.86
		30대(<i>n</i> =452)	5.06
		40대(<i>n</i> =276)	5.21
		50대(<i>n</i> =105)	5.43
		60대 이상(<i>n</i> =30)	6.07
	지역별	광주광역시(<i>n</i> =868)	5.10
		전라남도(<i>n</i> =587)	4.99

-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3.70,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5.08,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5.10,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4.97,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5.05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제단위, 전문가의 참여, 지역사회 대표 시민단체 인사의 참여 및 외부인사의 참여가 높게 나타남.

○ 광주전남 추가분석에 대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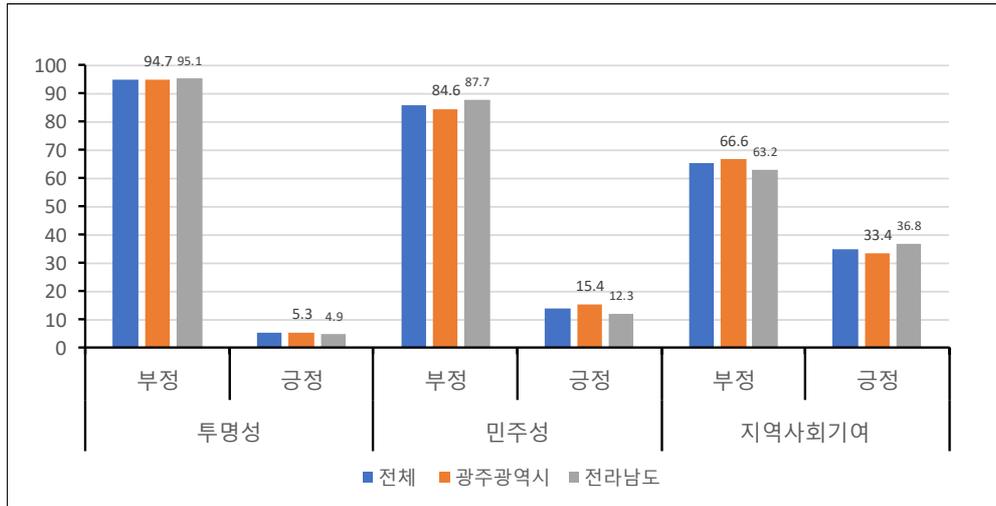
- 광주전남 시도민의 사립대(투명성,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
-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더 많았지만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들 또한 응답자의 과반을 넘음
-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과반을 넘음(60% 내외)
- 조선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동의함

<표 5-8-19> 광주전남 시민인식 조사 주요문항 긍정/부정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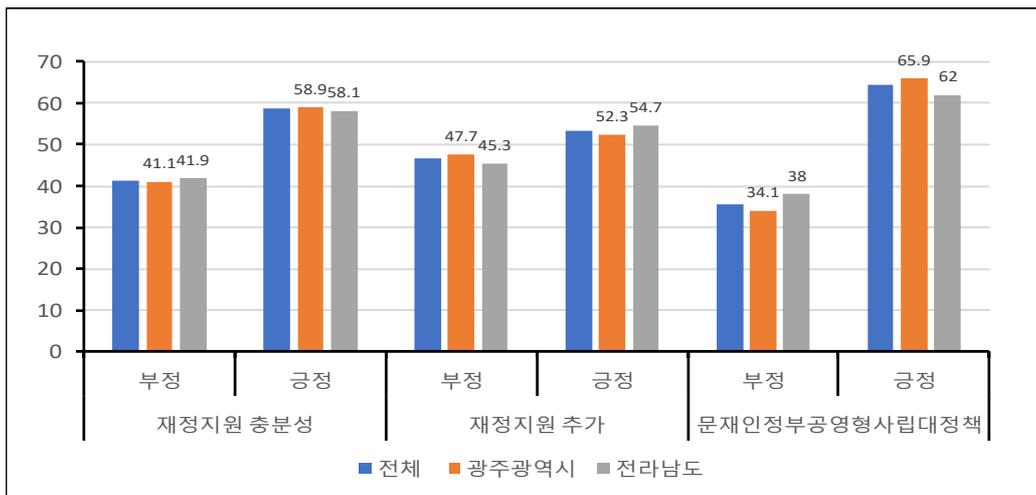
		부정	긍정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94.8	5.2
	광주광역시	94.7	5.3
	전라남도	95.1	4.9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85.8	14.2
	광주광역시	84.6	15.4
	전라남도	87.7	12.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65.2	34.8
	광주광역시	66.6	33.4
	전라남도	63.2	36.8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41.4	58.6
	광주광역시	41.1	58.9
	전라남도	41.9	58.1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46.7	53.3
	광주광역시	47.7	52.3
	전라남도	45.3	54.7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35.7	64.3
	광주광역시	34.1	65.9
	전라남도	38.0	62.0
다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교육환경 개선	전체	5.6	94.4
	광주광역시	6.5	93.5
	전라남도	4.3	95.7

지역발전을 위해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15.8	84.2
	광주광역시	14.3	85.7
	전라남도	18.1	81.9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13.5	86.5
	광주광역시	11.6	88.4
	전라남도	16.4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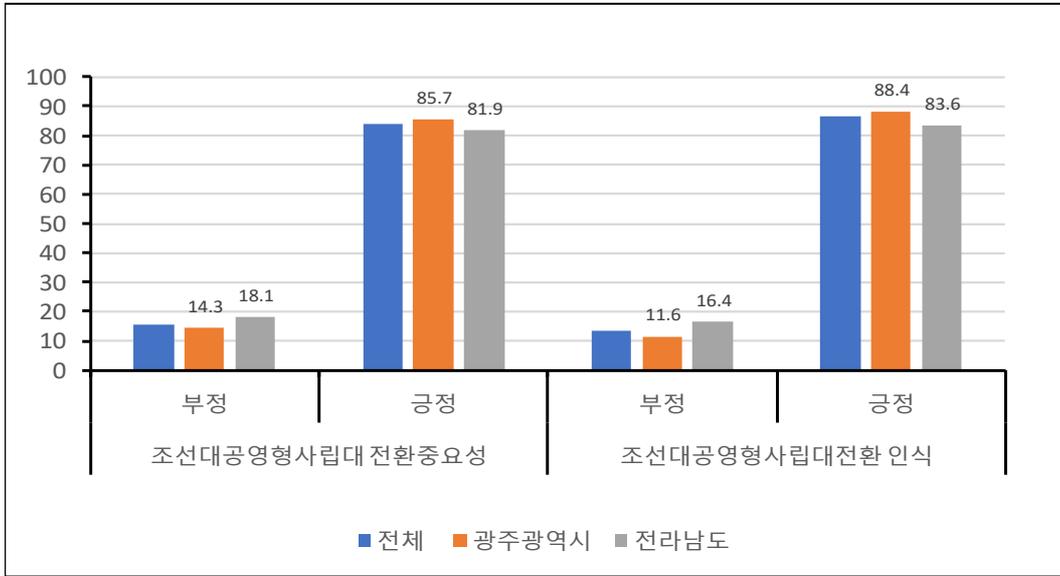
자료출처: 광주전남 공영형 사립대 인식조사(2020)



<그림 5-23> 광주전남 시도민 사립대 인식



<그림 5-24> 광주전남 시도민 사립대 재정지원 및 문제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정책취지 공감



<그림 5-25> 광주전남 시도민 조선평형 사립대 전환 인식

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국

○ 우리나라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투명성

<표 5-9-1> 사립대학의 투명성: 전국

구분	구분	평균값 (4점 척도)	
	문항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N=1,000)	1.77
성별		남성(N=511)	1.74
		여성(N=489)	1.80
연령대별		20대(N=183)	1.87
		30대(N=187)	1.74
		40대(N=222)	1.73
		50대(N=234)	1.74
		60대 이상(N=174)	1.77
지역별		서울(N=194)	1.73
		부산(N=67)	1.72
		대구(N=47)	1.77
		인천(N=59)	1.59
		광주(N=27)	1.93
		대전(N=28)	1.71
		울산(N=23)	1.91
		경기도(N=259)	1.75
		강원도(N=29)	2.03
		충청북도(N=30)	2.03
		충청남도(N=40)	1.88
		전라북도(N=34)	1.79
	전라남도(N=34)	1.68	
경상북도(N=47)	1.74		
경상남도(N=64)	1.78		

	제주도(<i>n</i> =12)	1.83
	세종(<i>n</i> =6)	2.00

- 우리나라 사립대학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1.77로 나타남. 성별, 연령 대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민주성

<표 5-9-2> 사립대학의 민주성: 전국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000)		
문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 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i>n</i> =511)	1.89
		여성(<i>n</i> =489)	1.99
	연령대별	20대(<i>n</i> =183)	2.05
		30대(<i>n</i> =187)	1.94
		40대(<i>n</i> =222)	1.86
		50대(<i>n</i> =234)	1.93
		60대 이상(<i>n</i> =174)	1.94
		지역별	서울(<i>n</i> =194)
	부산(<i>n</i> =67)		1.85
	대구(<i>n</i> =47)		1.85
	인천(<i>n</i> =59)		1.80
	광주(<i>n</i> =27)		2.04
	대전(<i>n</i> =28)		1.86
	울산(<i>n</i> =23)		2.22
	경기도(<i>n</i> =259)		1.95
	강원도(<i>n</i> =29)		1.97
	충청북도(<i>n</i> =30)		2.37
	충청남도(<i>n</i> =40)		2.00
	전라북도(<i>n</i> =34)		2.00
	전라남도(<i>n</i> =34)		1.85
경상북도(<i>n</i> =47)	1.91		
경상남도(<i>n</i> =64)	1.89		
제주도(<i>n</i> =12)	1.92		
세종(<i>n</i> =6)	2.17		

- 우리나라 사립대학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1.94로 나타남. 성별, 연령 대별,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표 5-9-3>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전국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000)		
문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i>n</i> =511)	2.11
		여성(<i>n</i> =489)	2.27

	연령대별	20대(<i>n</i> =183)	2.40
		30대(<i>n</i> =187)	2.09
		40대(<i>n</i> =222)	2.09
		50대(<i>n</i> =234)	2.17
		60대 이상(<i>n</i> =174)	2.21
	지역별	서울(<i>n</i> =194)	2.19
		부산(<i>n</i> =67)	2.09
		대구(<i>n</i> =47)	2.23
		인천(<i>n</i> =59)	2.10
		광주(<i>n</i> =27)	2.33
		대전(<i>n</i> =28)	2.18
		울산(<i>n</i> =23)	2.30
		경기도(<i>n</i> =259)	2.16
		강원도(<i>n</i> =29)	2.31
		충청북도(<i>n</i> =30)	2.53
		충청남도(<i>n</i> =40)	2.18
		전라북도(<i>n</i> =34)	2.21
		전라남도(<i>n</i> =34)	2.18
		경상북도(<i>n</i> =47)	2.19
		경상남도(<i>n</i> =64)	2.16
제주도(<i>n</i> =12)	1.92		
세종(<i>n</i> =6)	2.17		

-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19로 나타남. 성별의 차이는 없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높은 편임. 지역별로 보면 충청북도가 가장 높음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충분성

<표 5-9-4>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전국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000)		
문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남성(<i>n</i> =511)	2.70
		여성(<i>n</i> =489)	2.64
	연령대별	20대(<i>n</i> =183)	2.48
		30대(<i>n</i> =187)	2.71
		40대(<i>n</i> =222)	2.74
		50대(<i>n</i> =234)	2.71
		60대 이상(<i>n</i> =174)	2.70
	지역별	서울(<i>n</i> =194)	2.69
		부산(<i>n</i> =67)	2.64
		대구(<i>n</i> =47)	2.60
		인천(<i>n</i> =59)	2.63
		광주(<i>n</i> =27)	2.52
		대전(<i>n</i> =28)	2.68
		울산(<i>n</i> =23)	2.61
		경기도(<i>n</i> =259)	2.73
		강원도(<i>n</i> =29)	2.69
		충청북도(<i>n</i> =30)	2.63

	충청남도(<i>n</i> =40)	2.60
	전라북도(<i>n</i> =34)	2.71
	전라남도(<i>n</i> =34)	2.65
	경상북도(<i>n</i> =47)	2.47
	경상남도(<i>n</i> =64)	2.69
	제주도(<i>n</i> =12)	3.17
	세종(<i>n</i> =6)	3.00

-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충분한 재정지원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67로 나타남.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낮음. 지역별로 보면 응답자 수를 고려해 봤을 때 차이의 유의미성은 없는 편임.

-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

<표 5-9-5>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전국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000)		2.42
	성별	남성(<i>n</i> =511)	2.37
		여성(<i>n</i> =489)	2.47
	연령대별	20대(<i>n</i> =183)	2.76
		30대(<i>n</i> =187)	2.42
		40대(<i>n</i> =222)	2.34
		50대(<i>n</i> =234)	2.33
		60대 이상(<i>n</i> =174)	2.28
		서울(<i>n</i> =194)	2.34
		부산(<i>n</i> =67)	2.54
문5.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대구(<i>n</i> =47)	2.40
		인천(<i>n</i> =59)	2.34
		광주(<i>n</i> =27)	2.48
		대전(<i>n</i> =28)	2.36
		울산(<i>n</i> =23)	2.48
		경기도(<i>n</i> =259)	2.44
		강원도(<i>n</i> =29)	2.66
		충청북도(<i>n</i> =30)	2.43
		충청남도(<i>n</i> =40)	2.50
		전라북도(<i>n</i> =34)	2.38
		전라남도(<i>n</i> =34)	2.35
		경상북도(<i>n</i> =47)	2.51
		경상남도(<i>n</i> =64)	2.42
		제주도(<i>n</i> =12)	2.17
		세종(<i>n</i> =6)	2.50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추가적 재정지원 인식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42로 나타남. 성별차이는 거의 없음, 연령대별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음.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강화와 이사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참여

<표 5-9-6>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문6_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별	남성(n=511)	6.05
		여성(n=489)	6.10
	연령대별	20대(n=183)	5.77
		30대(n=187)	5.99
		40대(n=222)	6.21
		50대(n=234)	6.21
		60대 이상(n=174)	6.12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5.76
		대구(n=47)	6.28
		인천(n=59)	6.36
		광주(n=27)	5.48
		대전(n=28)	6.57
		울산(n=23)	5.70
		경기도(n=259)	6.11
		강원도(n=29)	6.07
		충청북도(n=30)	6.40
		충청남도(n=40)	5.48
		전라북도(n=34)	6.50
		전라남도(n=34)	5.94
		경상북도(n=47)	5.87
		경상남도(n=64)	5.77
		제주도(n=12)	6.92
		세종(n=6)	6.33

·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강화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6.07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감독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인식함.

<표 5-9-7> 이사회에 공익인사 참여: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문6_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	성별	남성(n=511)	5.86
		여성(n=489)	5.66
	연령대별	20대(n=183)	5.40
		30대(n=187)	5.64
		40대(n=222)	6.01
		50대(n=234)	5.83
		60대 이상(n=174)	5.86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5.52
		대구(n=47)	6.11
		인천(n=59)	5.88

	광주(<i>n</i> =27)	5.56
	대전(<i>n</i> =28)	6.39
	울산(<i>n</i> =23)	5.26
	경기도(<i>n</i> =259)	5.78
	강원도(<i>n</i> =29)	5.69
	충청북도(<i>n</i> =30)	6.13
	충청남도(<i>n</i> =40)	5.25
	전라북도(<i>n</i> =34)	6.26
	전라남도(<i>n</i> =34)	5.85
	경상북도(<i>n</i> =47)	5.38
	경상남도(<i>n</i> =64)	5.64
	제주도(<i>n</i> =12)	6.58
	세종(<i>n</i> =6)	5.67

- 이사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참여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5.76으로 나타남. 성별,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음. 연령대별에 있어서 연령대가 40대 이상 높아질수록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지역별로 울산, 충청남도가 낮은 편임. 대구, 대전, 전라북도, 제주도가 높은 편임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

-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

<표 5-9-8>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 전국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1.56
		여성(<i>n</i> =489)	1.49
	연령대별	20대(<i>n</i> =183)	1.50
		30대(<i>n</i> =187)	1.56
		40대(<i>n</i> =222)	1.49
		50대(<i>n</i> =234)	1.49
		60대 이상(<i>n</i> =174)	1.59
문7.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역별	서울(<i>n</i> =194)	1.59
		부산(<i>n</i> =67)	1.48
		대구(<i>n</i> =47)	1.72
		인천(<i>n</i> =59)	1.54
		광주(<i>n</i> =27)	1.74
		대전(<i>n</i> =28)	1.43
		울산(<i>n</i> =23)	1.61
		경기도(<i>n</i> =259)	1.46
		강원도(<i>n</i> =29)	1.59
		충청북도(<i>n</i> =30)	1.57
		충청남도(<i>n</i> =40)	1.38
		전라북도(<i>n</i> =34)	1.41
		전라남도(<i>n</i> =34)	1.76
		경상북도(<i>n</i> =47)	1.51
		경상남도(<i>n</i> =64)	1.39
		제주도(<i>n</i> =12)	1.33

		세종(n=6)	1.33
--	--	---------	------

- 공영형 사립대 인지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1.52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공감

<표 5-9-9>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취지 공감: 전국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n=1,000)	
	성별	남성(n=511)	2.54
		여성(n=489)	2.53
	연령대별	20대(n=183)	2.43
		30대(n=187)	2.51
		40대(n=222)	2.61
		50대(n=234)	2.60
		60대 이상(n=174)	2.49
문8.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서울(n=194)	2.58
		부산(n=67)	2.51
		대구(n=47)	2.60
		인천(n=59)	2.37
		광주(n=27)	2.59
		대전(n=28)	2.32
		울산(n=23)	2.30
		경기도(n=259)	2.57
		강원도(n=29)	2.55
		충청북도(n=30)	2.63
		충청남도(n=40)	2.35
		전라북도(n=34)	2.74
		전라남도(n=34)	2.88
		경상북도(n=47)	2.30
		경상남도(n=64)	2.42
		제주도(n=12)	2.92
		세종(n=6)	2.33

- 공영형 사립대 정책취지 공감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53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

<표 5-9-10>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투명성): 전국

1)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성별	남성(n=511)	4.92
		여성(n=489)	4.87

	연령대별	20대(<i>n</i> =183)	4.61
		30대(<i>n</i> =187)	4.76
		40대(<i>n</i> =222)	5.09
		50대(<i>n</i> =234)	4.98
		60대 이상(<i>n</i> =174)	4.97
	지역별	서울(<i>n</i> =194)	4.78
		부산(<i>n</i> =67)	5.00
		대구(<i>n</i> =47)	5.00
		인천(<i>n</i> =59)	4.76
		광주(<i>n</i> =27)	5.33
		대전(<i>n</i> =28)	5.07
		울산(<i>n</i> =23)	5.00
		경기도(<i>n</i> =259)	4.95
		강원도(<i>n</i> =29)	5.03
		충청북도(<i>n</i> =30)	5.10
		충청남도(<i>n</i> =40)	4.45
		전라북도(<i>n</i> =34)	5.32
		전라남도(<i>n</i> =34)	5.29
		경상북도(<i>n</i> =47)	4.55
		경상남도(<i>n</i> =64)	4.42
		제주도(<i>n</i> =12)	5.75
		세종(<i>n</i> =6)	4.83

<표 5-9-11>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민주성):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2)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성별	남성(<i>n</i> =511)	4.70
		여성(<i>n</i> =489)	4.67
	연령대별	20대(<i>n</i> =183)	4.39
		30대(<i>n</i> =187)	4.52
		40대(<i>n</i> =222)	4.93
		50대(<i>n</i> =234)	4.80
		60대 이상(<i>n</i> =174)	4.72
	지역별	서울(<i>n</i> =194)	4.57
		부산(<i>n</i> =67)	4.87
		대구(<i>n</i> =47)	4.66
		인천(<i>n</i> =59)	4.39
		광주(<i>n</i> =27)	5.26
		대전(<i>n</i> =28)	4.82
		울산(<i>n</i> =23)	4.43
		경기도(<i>n</i> =259)	4.77
		강원도(<i>n</i> =29)	4.83
		충청북도(<i>n</i> =30)	4.90
		충청남도(<i>n</i> =40)	4.40
		전라북도(<i>n</i> =34)	5.15
		전라남도(<i>n</i> =34)	5.24
		경상북도(<i>n</i> =47)	4.23
		경상남도(<i>n</i> =64)	4.31
		제주도(<i>n</i> =12)	5.25
세종(<i>n</i> =6)	4.67		

<표 5-9-12>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효과(사회적 책무성):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3)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성별	남성(N=511)	4.78
		여성(N=489)	4.86
	연령대별	20대(N=183)	4.60
		30대(N=187)	4.55
		40대(N=222)	5.01
		50대(N=234)	4.96
		60대 이상(N=174)	4.91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4.87
	대구(N=47)		4.91
	인천(N=59)		4.49
	광주(N=27)		5.30
	대전(N=28)		5.11
	울산(N=23)		4.57
	경기도(N=259)		4.96
	강원도(N=29)		4.79
	충청북도(N=30)		4.93
	충청남도(N=40)		4.58
	전라북도(N=34)		5.26
	전라남도(N=34)		5.32
	경상북도(N=47)		4.53
	경상남도(N=64)		4.39
	제주도(N=12)		5.50
	세종(N=6)		4.83

· 공영형 사립대 전환 효과성(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투명성 4.89, 민주성 4.69, 사회적 책무성 4.82로 나타남.

○ 사립대학 이사회

-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

<표 5-9-13>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공익형 이사 참여):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성별	남성(N=511)	4.73
		여성(N=489)	4.50
	연령대별	20대(N=183)	4.44
		30대(N=187)	4.40
		40대(N=222)	4.68
		50대(N=234)	4.77
		60대 이상(N=174)	4.76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4.64
	대구(n=47)	4.66
	인천(n=59)	4.31
	광주(n=27)	4.89
	대전(n=28)	4.68
	울산(n=23)	4.57
	경기도(n=259)	4.68
	강원도(n=29)	4.45
	충청북도(n=30)	5.00
	충청남도(n=40)	4.43
	전라북도(n=34)	4.76
	전라남도(n=34)	5.00
	경상북도(n=47)	4.53
	경상남도(n=64)	4.47
	제주도(n=12)	5.58
	세종(n=6)	4.50

<표 5-9-14>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이사회 외부참관 허용):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성별	남성(n=511)	5.50
		여성(n=489)	5.45
	연령대별	20대(n=183)	5.18
		30대(n=187)	5.33
		40대(n=222)	5.57
		50대(n=234)	5.62
		60대 이상(n=174)	5.61
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지역별	서울(n=194)	5.38
		부산(n=67)	5.34
		대구(n=47)	5.70
		인천(n=59)	5.61
		광주(n=27)	5.48
		대전(n=28)	5.96
		울산(n=23)	5.52
		경기도(n=259)	5.62
		강원도(n=29)	5.52
		충청북도(n=30)	5.47
		충청남도(n=40)	4.98
		전라북도(n=34)	5.65
		전라남도(n=34)	5.71
		경상북도(n=47)	5.34
		경상남도(n=64)	4.88
		제주도(n=12)	5.75
		세종(n=6)	5.67

<표 5-9-15>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이사회 이사 정수 확대): 전국

3) 이사회의 이사 정수가 확대되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	-----	-------------

어야 한다	전체(<i>n</i> =1,000)		4.92
	성별	남성(<i>n</i> =511)	4.94
		여성(<i>n</i> =489)	4.90
	연령대별	20대(<i>n</i> =183)	4.61
		30대(<i>n</i> =187)	4.76
		40대(<i>n</i> =222)	4.98
		50대(<i>n</i> =234)	5.16
		60대 이상(<i>n</i> =174)	5.00
		지역별	서울(<i>n</i> =194)
	부산(<i>n</i> =67)		4.73
	대구(<i>n</i> =47)		4.85
	인천(<i>n</i> =59)		4.97
	광주(<i>n</i> =27)		5.00
	대전(<i>n</i> =28)		5.43
	울산(<i>n</i> =23)		4.83
	경기도(<i>n</i> =259)		4.96
	강원도(<i>n</i> =29)		4.90
	충청북도(<i>n</i> =30)		5.10
	충청남도(<i>n</i> =40)		4.63
	전라북도(<i>n</i> =34)		5.38
	전라남도(<i>n</i> =34)		5.03
	경상북도(<i>n</i> =47)		4.91
	경상남도(<i>n</i> =64)		4.61
	제주도(<i>n</i> =12)		4.92
	세종(<i>n</i> =6)		4.83

<표 5-9-16>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이사의 중임/연임 2회 제한):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5.22
		여성(<i>n</i> =489)	5.31
	연령대별	20대(<i>n</i> =183)	4.88
		30대(<i>n</i> =187)	5.24
		40대(<i>n</i> =222)	5.31
		50대(<i>n</i> =234)	5.56
		60대 이상(<i>n</i> =174)	5.23
		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지역별
부산(<i>n</i> =67)	4.93		
대구(<i>n</i> =47)	5.47		
인천(<i>n</i> =59)	5.44		
광주(<i>n</i> =27)	5.33		
대전(<i>n</i> =28)	5.32		
울산(<i>n</i> =23)	5.26		
경기도(<i>n</i> =259)	5.28		
강원도(<i>n</i> =29)	5.24		
충청북도(<i>n</i> =30)	5.67		
충청남도(<i>n</i> =40)	4.80		
전라북도(<i>n</i> =34)	5.53		
전라남도(<i>n</i> =34)	5.35		
경상북도(<i>n</i> =47)	5.38		

	경상남도(<i>n</i> =64)	4.88
	제주도(<i>n</i> =12)	5.08
	세종(<i>n</i> =6)	5.33

<표 5-9-17>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총장의 당연직 이사 참여):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성별	남성(<i>n</i> =511)	4.42
		여성(<i>n</i> =489)	4.39
	연령대별	20대(<i>n</i> =183)	4.21
		30대(<i>n</i> =187)	4.44
		40대(<i>n</i> =222)	4.42
		50대(<i>n</i> =234)	4.43
		60대 이상(<i>n</i> =174)	4.51
		지역별	서울(<i>n</i> =194)
		부산(<i>n</i> =67)	4.22
		대구(<i>n</i> =47)	4.40
		인천(<i>n</i> =59)	4.36
		광주(<i>n</i> =27)	4.70
		대전(<i>n</i> =28)	4.61
		울산(<i>n</i> =23)	4.74
		경기도(<i>n</i> =259)	4.34
		강원도(<i>n</i> =29)	4.34
		충청북도(<i>n</i> =30)	4.50
		충청남도(<i>n</i> =40)	4.25
		전라북도(<i>n</i> =34)	4.50
		전라남도(<i>n</i> =34)	4.53
		경상북도(<i>n</i> =47)	4.74
		경상남도(<i>n</i> =64)	4.28
		제주도(<i>n</i> =12)	4.33
		세종(<i>n</i> =6)	3.67

<표 5-9-18>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지역사회 대표인사의 참여):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성별	남성(<i>n</i> =511)	4.97
		여성(<i>n</i> =489)	5.04
	연령대별	20대(<i>n</i> =183)	4.63
		30대(<i>n</i> =187)	4.82
		40대(<i>n</i> =222)	5.15
		50대(<i>n</i> =234)	5.21
		60대 이상(<i>n</i> =174)	5.13
	지역별	서울(<i>n</i> =194)	4.88
		부산(<i>n</i> =67)	4.76
		대구(<i>n</i> =47)	5.26
		인천(<i>n</i> =59)	5.15
		광주(<i>n</i> =27)	5.41

	대전(<i>n</i> =28)	5.04
	울산(<i>n</i> =23)	4.65
	경기도(<i>n</i> =259)	4.92
	강원도(<i>n</i> =29)	4.93
	충청북도(<i>n</i> =30)	5.07
	충청남도(<i>n</i> =40)	4.73
	전라북도(<i>n</i> =34)	5.44
	전라남도(<i>n</i> =34)	5.65
	경상북도(<i>n</i> =47)	5.26
	경상남도(<i>n</i> =64)	4.92
	제주도(<i>n</i> =12)	5.33
	세종(<i>n</i> =6)	5.50

-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4.6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5.47, 이사회의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4.92,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5.26,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4.41,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5.00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외부인사 참관 허용, 중임/연임 2회 제한이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편임.

○ 공영형 사립대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기대효과

<표 5-9-19> 독단적 운영방식 및 투명/민주적 사립대학 육성: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5.05	
		여성(<i>n</i> =489)	5.09	
	연령대별	20대(<i>n</i> =183)	4.72	
		30대(<i>n</i> =187)	4.83	
		40대(<i>n</i> =222)	5.31	
		50대(<i>n</i> =234)	5.24	
		60대 이상(<i>n</i> =174)	5.18	
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지역별	서울(<i>n</i> =194)	4.99	
		부산(<i>n</i> =67)	4.96	
		대구(<i>n</i> =47)	5.11	
		인천(<i>n</i> =59)	4.85	
		광주(<i>n</i> =27)	5.19	
		대전(<i>n</i> =28)	5.25	
		울산(<i>n</i> =23)	5.09	
		경기도(<i>n</i> =259)	5.18	
		강원도(<i>n</i> =29)	4.90	
		충청북도(<i>n</i> =30)	5.37	
		충청남도(<i>n</i> =40)	4.60	
		전라북도(<i>n</i> =34)	5.32	

	전라남도(<i>n</i> =34)	5.65
	경상북도(<i>n</i> =47)	4.79
	경상남도(<i>n</i> =64)	4.86
	제주도(<i>n</i> =12)	5.92
	세종(<i>n</i> =6)	5.33

<표 5-9-20> 지방사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촉진: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4.88
		여성(<i>n</i> =489)	4.97
	연령대별	20대(<i>n</i> =183)	4.69
		30대(<i>n</i> =187)	4.65
		40대(<i>n</i> =222)	5.03
		50대(<i>n</i> =234)	5.06
		60대 이상(<i>n</i> =174)	5.13
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지역별	서울(<i>n</i> =194)	4.77
		부산(<i>n</i> =67)	4.78
		대구(<i>n</i> =47)	5.09
		인천(<i>n</i> =59)	4.95
		광주(<i>n</i> =27)	5.37
		대전(<i>n</i> =28)	5.14
		울산(<i>n</i> =23)	4.96
		경기도(<i>n</i> =259)	4.92
		강원도(<i>n</i> =29)	4.83
		충청북도(<i>n</i> =30)	5.27
		충청남도(<i>n</i> =40)	4.80
		전라북도(<i>n</i> =34)	5.38
		전라남도(<i>n</i> =34)	5.41
		경상북도(<i>n</i> =47)	4.68
		경상남도(<i>n</i> =64)	4.67
		제주도(<i>n</i> =12)	5.33
		세종(<i>n</i> =6)	5.17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기대효과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5.07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4.92으로 나타난.

-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표 5-9-21>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지역인재 육성 노력): 전국

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5.63

	연령대별	여성(<i>n</i> =489)	5.61
		20대(<i>n</i> =183)	5.34
		30대(<i>n</i> =187)	5.42
		40대(<i>n</i> =222)	5.66
		50대(<i>n</i> =234)	5.75
		60대 이상(<i>n</i> =174)	5.91
	지역별	서울(<i>n</i> =194)	5.44
		부산(<i>n</i> =67)	5.57
		대구(<i>n</i> =47)	6.00
		인천(<i>n</i> =59)	5.80
		광주(<i>n</i> =27)	5.70
		대전(<i>n</i> =28)	5.96
		울산(<i>n</i> =23)	5.65
		경기도(<i>n</i> =259)	5.53
		강원도(<i>n</i> =29)	5.55
		충청북도(<i>n</i> =30)	5.97
		충청남도(<i>n</i> =40)	5.23
		전라북도(<i>n</i> =34)	5.97
		전라남도(<i>n</i> =34)	5.88
		경상북도(<i>n</i> =47)	5.68
경상남도(<i>n</i> =64)	5.61		
제주도(<i>n</i> =12)	6.00		
세종(<i>n</i> =6)	5.83		

<표 5-9-22>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대학시설 개방):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5.49
		여성(<i>n</i> =489)	5.39
	연령대별	20대(<i>n</i> =183)	4.90
		30대(<i>n</i> =187)	5.36
		40대(<i>n</i> =222)	5.54
		50대(<i>n</i> =234)	5.63
		60대 이상(<i>n</i> =174)	5.73
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지역별	서울(<i>n</i> =194)	5.29
		부산(<i>n</i> =67)	5.34
		대구(<i>n</i> =47)	5.77
		인천(<i>n</i> =59)	5.61
		광주(<i>n</i> =27)	5.81
		대전(<i>n</i> =28)	5.75
		울산(<i>n</i> =23)	5.57
		경기도(<i>n</i> =259)	5.37
		강원도(<i>n</i> =29)	5.41
		충청북도(<i>n</i> =30)	5.47
		충청남도(<i>n</i> =40)	5.43
		전라북도(<i>n</i> =34)	5.62
		전라남도(<i>n</i> =34)	5.88
		경상북도(<i>n</i> =47)	5.21
경상남도(<i>n</i> =64)	5.25		
제주도(<i>n</i> =12)	6.33		

		세종(n=6)	5.67
--	--	---------	------

<표 5-9-23>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성별	남성(n=511)	5.51
		여성(n=489)	5.52
	연령대별	20대(n=183)	5.03
		30대(n=187)	5.47
		40대(n=222)	5.65
		50대(n=234)	5.70
		60대 이상(n=174)	5.66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5.49
		대구(n=47)	5.70
		인천(n=59)	5.75
		광주(n=27)	5.59
		대전(n=28)	5.82
		울산(n=23)	5.35
		경기도(n=259)	5.49
		강원도(n=29)	5.38
		충청북도(n=30)	5.57
		충청남도(n=40)	5.33
		전라북도(n=34)	5.65
		전라남도(n=34)	5.65
		경상북도(n=47)	5.32
		경상남도(n=64)	5.44
		제주도(n=12)	6.17
		세종(n=6)	5.83

<표 5-9-24>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지자체/시민사회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 해야 한다.	성별	남성(n=511)	5.49
		여성(n=489)	5.49
	연령대별	20대(n=183)	5.11
		30대(n=187)	5.37
		40대(n=222)	5.58
		50대(n=234)	5.67
		60대 이상(n=174)	5.66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5.21
		대구(n=47)	5.77
		인천(n=59)	5.73
		광주(n=27)	5.70
		대전(n=28)	5.68

	울산(<i>n</i> =23)	5.48
	경기도(<i>n</i> =259)	5.39
	강원도(<i>n</i> =29)	5.52
	충청북도(<i>n</i> =30)	5.70
	충청남도(<i>n</i> =40)	5.43
	전라북도(<i>n</i> =34)	5.85
	전라남도(<i>n</i> =34)	5.74
	경상북도(<i>n</i> =47)	5.53
	경상남도(<i>n</i> =64)	5.42
	제주도(<i>n</i> =12)	6.17
	세종(<i>n</i> =6)	5.83

-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6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5.4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5.52,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 해야 한다 5.49로 나타났음.

○ 사립대학 운영

- 사립대학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

<표 5-9-25> 사립대학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중요성: 전국

	구 분		평균값 (4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2.87
		여성(<i>n</i> =489)	2.95
	연령대별	20대(<i>n</i> =183)	2.74
		30대(<i>n</i> =187)	2.93
		40대(<i>n</i> =222)	2.95
		50대(<i>n</i> =234)	2.97
		60대 이상(<i>n</i> =174)	2.94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일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	서울(<i>n</i> =194)	2.92
		부산(<i>n</i> =67)	2.79
		대구(<i>n</i> =47)	2.81
		인천(<i>n</i> =59)	2.95
		광주(<i>n</i> =27)	3.11
		대전(<i>n</i> =28)	2.86
		울산(<i>n</i> =23)	2.83
		경기도(<i>n</i> =259)	2.92
		강원도(<i>n</i> =29)	2.90
		충청북도(<i>n</i> =30)	2.97
		충청남도(<i>n</i> =40)	2.75
		전라북도(<i>n</i> =34)	3.00
		전라남도(<i>n</i> =34)	3.21
		경상북도(<i>n</i> =47)	2.85
		경상남도(<i>n</i> =64)	2.84

	제주도(<i>n</i> =12)	3.08
	세종(<i>n</i> =6)	3.33

-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일부 사립대학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중요도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91로 나타남.

-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표 5-9-26> 사립대학의 재정운영(효율적 운영):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3.07
		여성(<i>n</i> =489)	3.38
	연령대별	20대(<i>n</i> =183)	3.43
		30대(<i>n</i> =187)	3.22
		40대(<i>n</i> =222)	3.09
		50대(<i>n</i> =234)	3.18
		60대 이상(<i>n</i> =174)	3.22
		지역별	서울(<i>n</i> =194)
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i>n</i> =67)	3.61
		대구(<i>n</i> =47)	2.83
		인천(<i>n</i> =59)	2.73
		광주(<i>n</i> =27)	3.96
		대전(<i>n</i> =28)	2.82
		울산(<i>n</i> =23)	3.83
		경기도(<i>n</i> =259)	3.18
		강원도(<i>n</i> =29)	2.97
		충청북도(<i>n</i> =30)	3.53
		충청남도(<i>n</i> =40)	3.63
		전라북도(<i>n</i> =34)	3.53
		전라남도(<i>n</i> =34)	3.29
		경상북도(<i>n</i> =47)	3.43
		경상남도(<i>n</i> =64)	2.98
		제주도(<i>n</i> =12)	2.42
		세종(<i>n</i> =6)	3.33

<표 5-9-27> 사립대학의 재정운영(투명한 공개):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2.62
		여성(<i>n</i> =489)	2.75
	연령대별	20대(<i>n</i> =183)	2.80
		30대(<i>n</i> =187)	2.64
		40대(<i>n</i> =222)	2.55
		50대(<i>n</i> =234)	2.70
		60대 이상(<i>n</i> =174)	2.75
		지역별	서울(<i>n</i> =194)

	부산(n=67)	2.73
	대구(n=47)	2.43
	인천(n=59)	2.32
	광주(n=27)	3.59
	대전(n=28)	2.54
	울산(n=23)	3.35
	경기도(n=259)	2.60
	강원도(n=29)	2.66
	충청북도(n=30)	3.00
	충청남도(n=40)	3.03
	전라북도(n=34)	2.82
	전라남도(n=34)	2.79
	경상북도(n=47)	2.85
	경상남도(n=64)	2.61
	제주도(n=12)	2.08
	세종(n=6)	3.17

<표 5-9-28> 사립대학의 재정운영(민주적 수립/집행):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성별	남성(n=511)	2.80
		여성(n=489)	3.07
	연령대별	20대(n=183)	3.13
		30대(n=187)	2.90
		40대(n=222)	2.80
		50대(n=234)	2.94
		60대 이상(n=174)	2.91
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지역별	서울(n=194)	2.83
		부산(n=67)	3.04
		대구(n=47)	2.72
		인천(n=59)	2.49
		광주(n=27)	3.74
		대전(n=28)	2.64
		울산(n=23)	3.70
		경기도(n=259)	2.88
		강원도(n=29)	2.90
		충청북도(n=30)	3.37
		충청남도(n=40)	3.30
		전라북도(n=34)	3.12
		전라남도(n=34)	3.03
		경상북도(n=47)	3.21
		경상남도(n=64)	2.70
		제주도(n=12)	2.17
		세종(n=6)	3.33

<표 5-9-29>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지역사회 기여방안 포함):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3.00
	성별	남성(n=511)	2.89
		여성(n=489)	3.12
	연령대별	20대(n=183)	3.22
		30대(n=187)	2.92
		40대(n=222)	2.89
		50대(n=234)	3.08
		60대 이상(n=174)	2.91
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서울(n=194)	2.93
		부산(n=67)	2.94
		대구(n=47)	2.68
		인천(n=59)	2.49
		광주(n=27)	3.81
		대전(n=28)	2.82
		울산(n=23)	3.57
		경기도(n=259)	2.89
		강원도(n=29)	3.07
		충청북도(n=30)	3.57
		충청남도(n=40)	3.13
		전라북도(n=34)	3.44
		전라남도(n=34)	3.50
		경상북도(n=47)	3.15
		경상남도(n=64)	3.19
		제주도(n=12)	1.83
		세종(n=6)	3.33

<표 5-9-30>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적절한 감시와 견제):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2.81
	성별	남성(n=511)	2.68
		여성(n=489)	2.93
	연령대별	20대(n=183)	3.04
		30대(n=187)	2.78
		40대(n=222)	2.64
		50대(n=234)	2.82
		60대 이상(n=174)	2.77
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서울(n=194)	2.74
		부산(n=67)	2.94
		대구(n=47)	2.57
		인천(n=59)	2.39
		광주(n=27)	3.74
		대전(n=28)	2.71
		울산(n=23)	3.30
		경기도(n=259)	2.71
		강원도(n=29)	2.48
		충청북도(n=30)	3.13
		충청남도(n=40)	3.13
		전라북도(n=34)	3.06
		전라남도(n=34)	3.09

	경상북도(<i>n</i> =47)	3.09
	경상남도(<i>n</i> =64)	2.69
	제주도(<i>n</i> =12)	1.75
	세종(<i>n</i> =6)	3.33

<표 5-9-31> 사립대학의 재정운영(별도 감시/감독 장치 필요):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5.24
		여성(<i>n</i> =489)	5.12
	연령대별	20대(<i>n</i> =183)	4.93
		30대(<i>n</i> =187)	5.06
		40대(<i>n</i> =222)	5.13
		50대(<i>n</i> =234)	5.26
		60대 이상(<i>n</i> =174)	5.57
6) 대학의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감시장치가 필요하다	지역별	서울(<i>n</i> =194)	5.19
		부산(<i>n</i> =67)	4.52
		대구(<i>n</i> =47)	4.98
		인천(<i>n</i> =59)	5.19
		광주(<i>n</i> =27)	4.93
		대전(<i>n</i> =28)	5.61
		울산(<i>n</i> =23)	5.43
		경기도(<i>n</i> =259)	5.36
		강원도(<i>n</i> =29)	5.10
		충청북도(<i>n</i> =30)	5.33
		충청남도(<i>n</i> =40)	5.00
		전라북도(<i>n</i> =34)	5.50
		전라남도(<i>n</i> =34)	5.18
		경상북도(<i>n</i> =47)	5.17
		경상남도(<i>n</i> =64)	4.88
		제주도(<i>n</i> =12)	6.33
		세종(<i>n</i> =6)	5.17

-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2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2.68,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2.93,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3.00,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81, 대학의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5.19로 나타남

-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

<표 5-9-32>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총장 추천 인사 참여): 전국

1)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3.20

	연령대별	여성(<i>n</i> =489)	3.17
		20대(<i>n</i> =183)	3.46
		30대(<i>n</i> =187)	3.07
		40대(<i>n</i> =222)	3.11
		50대(<i>n</i> =234)	3.13
		60대 이상(<i>n</i> =174)	3.19
	지역별	서울(<i>n</i> =194)	3.15
		부산(<i>n</i> =67)	3.18
		대구(<i>n</i> =47)	2.94
		인천(<i>n</i> =59)	2.97
		광주(<i>n</i> =27)	3.48
		대전(<i>n</i> =28)	3.46
		울산(<i>n</i> =23)	3.70
		경기도(<i>n</i> =259)	3.10
		강원도(<i>n</i> =29)	2.90
		충청북도(<i>n</i> =30)	3.43
		충청남도(<i>n</i> =40)	3.43
		전라북도(<i>n</i> =34)	3.76
		전라남도(<i>n</i> =34)	3.32
		경상북도(<i>n</i> =47)	3.09
경상남도(<i>n</i> =64)	3.30		
제주도(<i>n</i> =12)	2.58		
세종(<i>n</i> =6)	3.00		

<표 5-9-33>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구성원들의 의견반영):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5.11
		여성(<i>n</i> =489)	5.16
	연령대별	20대(<i>n</i> =183)	5.00
		30대(<i>n</i> =187)	4.86
		40대(<i>n</i> =222)	5.27
		50대(<i>n</i> =234)	5.21
		60대 이상(<i>n</i> =174)	5.31
		서울(<i>n</i> =194)	5.24
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 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 가 참여해야 한다	지역별	부산(<i>n</i> =67)	4.82
		대구(<i>n</i> =47)	5.36
		인천(<i>n</i> =59)	4.92
		광주(<i>n</i> =27)	4.78
		대전(<i>n</i> =28)	5.39
		울산(<i>n</i> =23)	5.00
		경기도(<i>n</i> =259)	5.19
		강원도(<i>n</i> =29)	4.86
		충청북도(<i>n</i> =30)	5.27
		충청남도(<i>n</i> =40)	4.53
		전라북도(<i>n</i> =34)	5.59
		전라남도(<i>n</i> =34)	5.59
		경상북도(<i>n</i> =47)	5.15
		경상남도(<i>n</i> =64)	4.84
제주도(<i>n</i> =12)	6.00		

		세종(n=6)	5.33
--	--	---------	------

<표 5-9-34>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전문가의 참여):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성별	남성(n=511)	5.08
		여성(n=489)	5.10
연령대별		20대(n=183)	4.96
		30대(n=187)	4.88
		40대(n=222)	5.18
		50대(n=234)	5.21
		60대 이상(n=174)	5.17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4.96	
	대구(n=47)	5.23	
	인천(n=59)	5.02	
	광주(n=27)	4.96	
	대전(n=28)	5.57	
	울산(n=23)	5.00	
	경기도(n=259)	5.16	
	강원도(n=29)	5.00	
	충청북도(n=30)	5.27	
	충청남도(n=40)	4.55	
	전라북도(n=34)	5.24	
	전라남도(n=34)	5.09	
	경상북도(n=47)	5.19	
	경상남도(n=64)	4.67	
	제주도(n=12)	5.25	
	세종(n=6)	5.33	

<표 5-9-35>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지역사회 시민단체 참여):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n=1,000)	
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성별	남성(n=511)	4.78
		여성(n=489)	4.76
연령대별		20대(n=183)	4.51
		30대(n=187)	4.50
		40대(n=222)	5.01
		50대(n=234)	4.82
		60대 이상(n=174)	4.97
		지역별	서울(n=194)
	부산(n=67)	4.52	
	대구(n=47)	4.77	
	인천(n=59)	4.71	
	광주(n=27)	4.74	
	대전(n=28)	5.11	

	울산(<i>n</i> =23)	4.74
	경기도(<i>n</i> =259)	4.77
	강원도(<i>n</i> =29)	4.79
	충청북도(<i>n</i> =30)	4.83
	충청남도(<i>n</i> =40)	4.40
	전라북도(<i>n</i> =34)	5.21
	전라남도(<i>n</i> =34)	5.32
	경상북도(<i>n</i> =47)	4.85
	경상남도(<i>n</i> =64)	4.31
	제주도(<i>n</i> =12)	5.17
	세종(<i>n</i> =6)	5.17

<표 5-9-36> 사립대학 재정위원회 구성(외부인사 참여): 전국

	구 분		평균값 (7점 척도)
		전체(<i>n</i> =1,000)	
	성별	남성(<i>n</i> =511)	5.14
		여성(<i>n</i> =489)	5.02
	연령대별	20대(<i>n</i> =183)	4.74
		30대(<i>n</i> =187)	4.88
		40대(<i>n</i> =222)	5.23
		50대(<i>n</i> =234)	5.20
		60대 이상(<i>n</i> =174)	5.30
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지역별	서울(<i>n</i> =194)	5.20
		부산(<i>n</i> =67)	4.93
		대구(<i>n</i> =47)	5.09
		인천(<i>n</i> =59)	5.19
		광주(<i>n</i> =27)	5.07
		대전(<i>n</i> =28)	5.71
		울산(<i>n</i> =23)	4.91
		경기도(<i>n</i> =259)	5.08
		강원도(<i>n</i> =29)	5.03
		충청북도(<i>n</i> =30)	5.13
		충청남도(<i>n</i> =40)	4.68
		전라북도(<i>n</i> =34)	5.24
		전라남도(<i>n</i> =34)	5.59
		경상북도(<i>n</i> =47)	5.11
		경상남도(<i>n</i> =64)	4.42
		제주도(<i>n</i> =12)	4.83
		세종(<i>n</i> =6)	5.33

-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평균의 경우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3.19,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5.14,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5.09,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4.77,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5.08로

나타남.

○ 전국 추가분석에 대한 요약

- 전국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남지역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시민들의 사립대(투명성,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더 많았으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조사와 달리 과반을 넘지 않음
- 다만 광주광역시 경우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과반을 넘음
-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과반을 넘음
- 지역의 일부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다수(77%)가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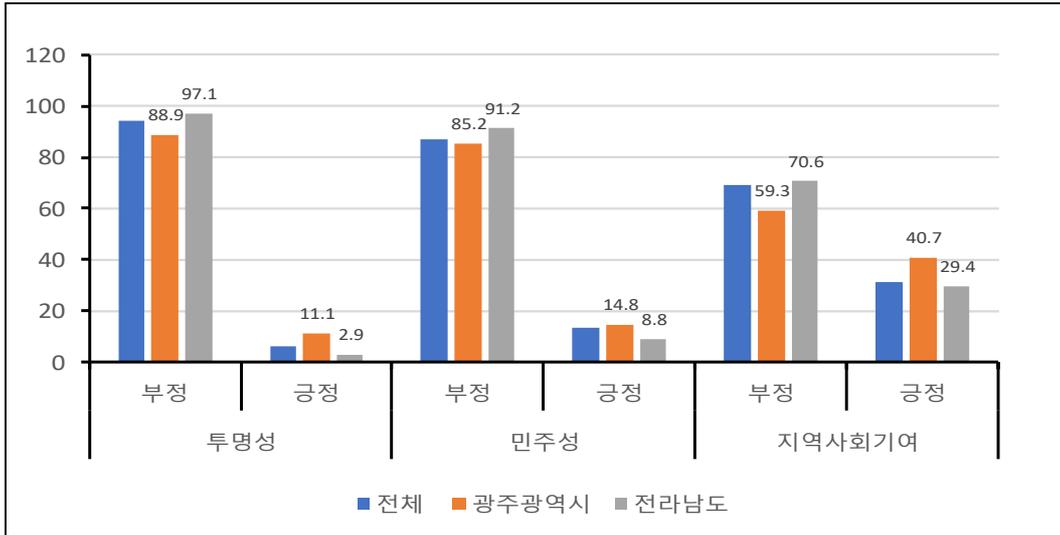
<표 5-9-37> 전국 시민인식 조사 주요문항 긍정/부정 경향

문항	구분	부정	긍정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94.0	6.0
	광주광역시	88.9	11.1
	전라남도	97.1	2.9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86.7	13.3
	광주광역시	85.2	14.8
	전라남도	91.2	8.8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68.9	31.1
	광주광역시	59.3	40.7
	전라남도	70.6	29.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39.7	60.3
	광주광역시	55.6	44.4
	전라남도	41.2	58.8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54.2	45.8
	광주광역시	44.4	55.6
	전라남도	58.8	41.2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44.3	55.7
	광주광역시	33.3	66.7
	전라남도	17.6	82.4
다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 개선	전국	5.4	94.6
	광주광역시	11.1	88.9
	전라남도	2.9	97.1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일부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23.0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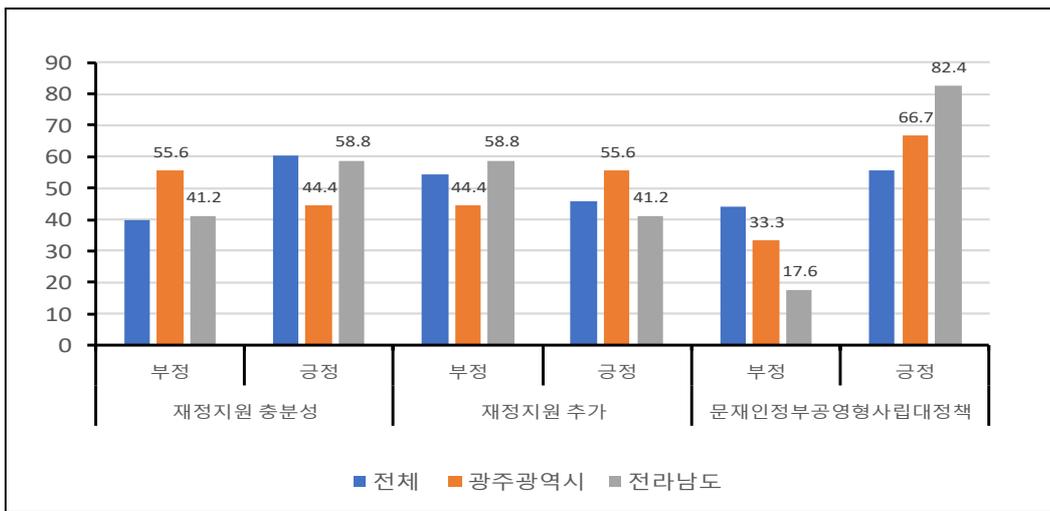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18.5	81.5
전라남도	14.7	85.3

* 전국결과는 17개 시도(광주, 전남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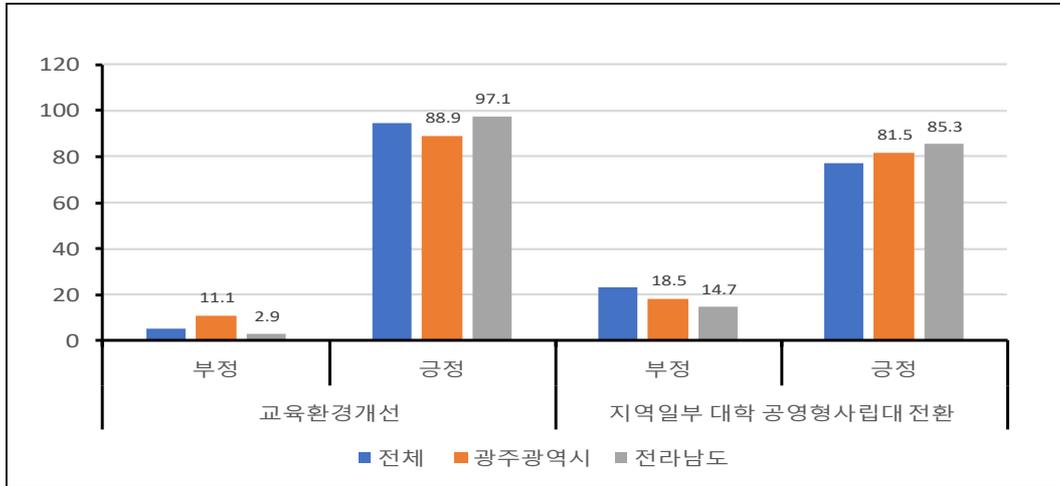
자료출처: 전국 공영형사립대 인식조사(2020)



<그림 5-26> 전국시민 사립대 인식



<그림 5-27> 전국시민 사립대 재정지원 및 문재인 정부 공영형 사립대 정책취지 공감



〈그림 5-28〉 전국시민 교육환경개선 및 공영형 사립대 전환 인식

6. 소결: 공영형 사립대 인식

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 조사의 목적과 방법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학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지역사회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패널을 구성하여(시민 제외) 온라인 설문을 통해 사전, 사후 설문조사 시행(04.14 구성 완료)
- 설문조사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진행(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대한 현황, 조선대학교 운영현황,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

-사립대학 현황은 투명성,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부 재정지원, 감독 강화 등임

-조선대학교 운영현황은 민립대학 정체성, 지역사회 발전 기여, 지역사회 협력, 재정운영 현황, 이사회 운영 등임

-공영형 사립대학 인식은 인지여부, 정보원천, 정책취지,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이사회 운영, 이사회 구성, 공영형 사립대 전환 기대효과, 재정위원회 구성 및 도입의 효과성, 사회적 책임 등임

나.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 사립대학 운영 현황

- 교원, 직원, 학생, 시민들은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반면, 시민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학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을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시민들은 충분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학내 구성원들은 정부의 추가적 재원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함

- 교원, 직원, 학생, 시민들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사회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2) 조선대학교 운영 현황

- 조선대학교의 민립대학 정체성은 보통수준으로 인식함 다만 시민들은 가장 낮은 편임. 지역사회 기여 측면은 교원, 직원은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생, 시민들은 낮게 인식함 사후설문에서도 교원, 직원, 학생들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과의 협력 측면에서는 보통수준이나 시민들의 경우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운영의 경우 직원들은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 투명한 공개, 민주적 집행, 재정운영 감시와 견제 등에서 교원, 학생, 시민들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반면, 시민들이 가장 낮은 값을 보임. 사후설문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다소 사전설문에 비해서는 향상된 값을 보이고 있음
- 대학재정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와 관련하여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교원, 학생, 시민들에 비해서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직원들의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들은 ‘대학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1순위로 보고 있으나 시민들은 운영의 투명성을 1순위로 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도 대학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1순위로 보고 있음

3) 공영형 사립대 인식

- 학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들은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대체적 또는 일부라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으나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편임. 공영형 사립대학 정보는 주로 신문,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 TV/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음. 다만 사후설문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취지에 교원, 직원, 학생들을 80% 이상 공감하는 편임. 시민들은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25% 수준임. 사후설문에서 공감의 정도가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사전설문에 비해서 높아졌음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에 있어서 교원, 직원, 학생들은 약 90%가 찬성하고 있음 시민들은 17%가 반대의견을 제시함
- 교원, 직원, 학생, 시민들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공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참여 보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대학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 교원, 직원, 학생들의 값이 더 높아졌음
-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은 총장의 당연직 이사에 적극 찬성하는 편이며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시민들은 외부이사의 참관 허용 및 지역사회 인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봄. 다만 지역사회 인사 참여에 있어서 교원, 직원들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음. 사후설문에서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사전설문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임

- 교원, 직원, 학생, 시민들은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통해 사학의 독단적 운영방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 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후설문에서 교원, 직원, 학생들의 경우 사전설문에 비해서는 더 높아짐
- 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장 추천 인사의 가능한 많은 참여에 대한 지지는 시민들이 가장 낮은 값을 보임. 사후설문에서 교원과 학생들의 경우 사전설문에 비해서는 더 높아졌음
- 재정위원회에 교평, 직원노동조합, 학생회 추천 인사의 참여와 전문가 참여는 대체로 교원, 직원, 학생, 시민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교원, 직원들은 외부인사 참여에 있어서는 학생, 시민들에 비해서는 동의하는 수준이 낮은 편임
- 재정위원회 도입이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교원, 학생, 시민들은 효율적 배분,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직원들도 보통이상 수준으로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음
- 교원, 직원, 학생, 시민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육성, 시설개방,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4) 자유의견

- 내용이 방대하여 본문에서는 제외하였지만 설문조사에 매우 많은 자유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부록 6-1~부록 6-4 참조)
-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자유의견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투명한 운영, 구성원들의 역할 및 지배구조 이슈 등에 있어서 선별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학교의 혼란, 시스템의 부재, 세금지원의 부당함 등에 있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VI.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심층인터뷰 정리: 재정위원회, 이사회> (2020. 06. 01.)

<FGI 정리: 학생, 직원 등 학내구성원> (2020. 07. 15.)

1. 재정위원회 위원 심층인터뷰

가. 인터뷰 대상, 시기, 방법

○ 인터뷰 대상 및 방법

-재정위원회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위원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인터뷰와 서면인터뷰를 병행하였음

-특히, 외부위원들은 대면인터뷰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였음

○ 인터뷰 대상자

-17명의 위원 중에서 9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들 중 3명의 위원은 대면인터뷰로 진행하고 6명의 위원은 서면인터뷰로 진행함

<표 10-1> 재정위원 인터뷰 일정

교내외	직위	성명	인터뷰 방식	선정방식
교내	총무관리처장	박O순	서면 인터뷰	당연직
교내	경상대학 경영학부	김O순	서면 인터뷰	교수평의회 추천
교내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화학과	이O대	서면 인터뷰	교수평의회 추천
교내	직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박O표	서면 인터뷰	직원노동조합 추천
교외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O래	대면 인터뷰	총동창회 추천
교외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이O현	대면 인터뷰	총동창회 추천(공인회계사)
교내	총학생회장	김O연	서면 인터뷰	총학생회 추천(임기 1년)
교외	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과장	손O수	서면 인터뷰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교외	세무법인 동반	김O후	대면 인터뷰	총장추천(세무사)



<그림 6-1> 재정위원 인터뷰(2020.05.18.)

나. 인터뷰의 목적과 내용

○ 인터뷰의 목적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재정위원들이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실제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인터뷰의 주요 내용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한 질문
-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의견
-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에 대한 기존의 인식
- 재정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 기존의 재정 심의 기관들과의 중첩성에 관한 의견
-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의 비율에 대한 의견
- 재정위원회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다.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결과 요약

- 재정위원 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공영형 사립대학 및 재정위원회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가운데, 일부 보완사항이나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음
-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재정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찬성의 의견이 다수였으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가지는 일부 의견도 있었음
-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선대학교는 다른 사학법인보다 법인의 영향력이 적고,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예산을 공개하였으며, 대학평의회와 전신인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협의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해 오는 등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다수의 재정위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미 투명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음
- 재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30%의 외부인사 비율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외부인사를 전체 위원의 1/2이나 2/3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 선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견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재정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2) 인터뷰 질문 및 응답내용

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인식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4: 사립대학 이사의 50%를 공영이사로 선임하여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하여 재정지원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 실행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국립대 법인(예: 서울대, 인천대)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됨 즉, 국립대 법인은 국가 출자 법인이지만 등록금은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법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공

영형 체계로 운영되는 형태임. 아마도 공영형사립대는 출자는 사학재단이지만 운영은 국립대 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재정위원5: “공영형 사립대학”은 지방 사립대학들의 구조 개혁과 대학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인구 절감의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의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 재정위원6: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임
 - 재정위원7: 정책 추진 배경 및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정도는 알고 있음.
 - 재정위원8: 약간 얕(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부정비리 차단, 공공성 높이고, 정부가 운영경비 일부지원)
 - 재정위원9: 현 사립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사진 중 일부를 정부에서 파견하여 이사회의 전횡을 막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학 재정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면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재정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외부에서 재정위원으로 위촉받아 참여하는 위원들도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1: 동창회에서는 줄곧 원했음. 1.8항쟁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음. **민립대학의 설립정신에도 맞고,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등 좋음**
- 재정위원2: 대학도 변화해야 하고, 그럴 때 공영형 사립대의 전환은 바람직함
- 재정위원3: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함
- 재정위원4: 현재 지방대(조선대)의 재정구조상 학교법인에서 전입금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는 명백히 발생할 것임. 따라서 현재 체제에서는 정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공영형 사립대의 편입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 편입을 위해 대학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재정위원5: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현재, 지방거점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대학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재정위원6: 조선대학교는 지역민의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설립된 민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이지만 공공성을 갖춘 대학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단됨
- 재정위원7: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에 가장 적합한 대학이 조선대학교라고 생각하며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은 대학 재정 및 정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재정위원8: 공영형 사립대 전환 찬성(개인의견)
- 재정위원9: 우리 대학 1년 예산이 약 2,500억원 규모로, 대부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초기 계획이 2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었고, 이 액수는 우리 대학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액수임. 물론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구성원 누구라도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상태나 의지를 고려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됨. 공영형 사립대학을 고집하기보다 인천대학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2)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찬성의 의견이 다수였으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가지는 일부 의견도 있었음. 조선대학교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으로 성금을 모아 설립한 대학이므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대학이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적 여건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음. 그러나 일부 재정위원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재정이 매우 많이 필요한 정책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인천대학교의 사례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음

다)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1: 조대의 투명성은 상당한 위치에 있다. 주인이 없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므로 여타 대학보다 확실히 담보되고 있음
- 재정위원2: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3: 투명성, 민주성 등 높다고 생각함. 다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봄
- 재정위원4: 명백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다른 사학법인들보다 조선대학교는 법인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하지만 대학본부와 구성원들 간에 대학재정과 관련된 정보공유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상당한 정보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음. 이는 대학의 효과적인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부재하고, 단기적 의사결정만 해오던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과거 총장, 보직교수,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것임. 현재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단기예산편성과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대학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할 것임. 더불어 대학의 재정운영계획을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 협조를 구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교내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 투명성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정위원5: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지만 대학의 역사나 규모에 비해 아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6: 조선대학교는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예산을 공개하였고, 대학평의회의 전신인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협의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해 와 재정은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재정위원7: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8: 현 총장님 이후 재정운영 투명하다고 여김
- 재정위원9: 우리 대학의 예산(안)과 결산(안) 자문에 1년 넘게 참여한 결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

(2)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선대학교는 다른 사학법인보다 법인의 영향력이 적고,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예산을 공개하였으며, 대학평의회의 전신인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협의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해 왔기 때문에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많다는 일부 의견이 존재함

라)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민주성에 대한 질문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1: 조선대는 ‘민주’ 와 잘 어울림. 동창회가 총장선거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조대가 유일할 것임. 민주적 특성임
- 재정위원2: 특정 세력이 재정운영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음. 이게 사실이라면 이를 개선해야 함 재정위원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재정위원4: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움. 재정운영은 경제적 영역이지 정치적 영역이 아님. 통찰력 있는 대학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자원을 조달 배분하는 의사결정이 재정운영임. 이러한 재정운영에 민주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구분해야 할 것임 (1) 재정계획의 수립 - (2)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감시절차 - (3) 재정집행의 실행능력.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을 평가해야 함
- 재정위원5: 대학평의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나 전문성이나 투명성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6: 조선대학교는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예산을 공개하였고,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여 예산편성 소위원회, 사업성 예산심의 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편성되고 있어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 됨
- 재정위원7: 재정운영의 절차는 민주적이라고 생각되나 특정 단계에서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함.
- 재정위원8: 상/중/하 중, “중” 으로 추정
- 재정위원9: ‘민주적인 것이 좋다.’ 라는 전제로 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 ‘눈먼 돈’ 이 많고 불필요한 지출이 많은 것을 ‘민주적’ 이라고 하면 민주적일 수 있겠음. 그러나 대학 재정을 좀먹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음.

(2) 재정운영의 민주성에 관해서는 학교의 **재정운영이 민주적이라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했음**. 우선,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위원들은 조선대학교가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예산을 공개하였고,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여 예산편성 소위원회, 사업성 예산심의 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편성되고 있어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던 반면, 이러한 절차들이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진행되어 한계를 가지며, 재정운영에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음

마)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질문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1: 링크사업 등 호남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학교라고 생각함. 관련된 국고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 의대, 치대, 약대 등이 더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2: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있다고 봄
- 재정위원4: 조선대학교가 호남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선대 구성원은 대학을 유지 발전시킬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부분적인 희생은 불가피할 것임. 하지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사립대학의 몫은 아님. 원론적으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대학과 국가가 재정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음. 조선대학교는 사실상 재정기여 재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고 학내 구성원이 효율적 대학 경영을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투입하여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에 우리 대학이 공헌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 재정위원5: 민립대학으로서의 특수한 설립역사와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위치 및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높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6: 조선대학교는 등록금 환원율이 150이상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투자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 됨.

- 재정위원7: 사회적 책무성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되나 대학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 졌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됨.
 - 재정위원8: 재정운영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 재정위원9: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대학은 법인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정말 미미한 정도임. 거의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사회적 책무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임.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없이 ‘등록금심의 위원회’,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나 ‘대학평의원회’ 와 같은 기구에 더하여 ‘재정위원회’ 가 존재한다고 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과 ‘재정 운영의 사회적 책무성’ 을 만족할 수준으로 높이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2)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재정위원들이 학교가 호남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책무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이를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교육은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야 함을 지적함

바) 공영형 사립대학의 정책으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1: 총장님 이하 고심한 것이 느껴짐. 외부인사를 비율을 높이고 한 것이 객관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진정성이 보여서 좋음. 전문가들을 모셔서 좋음 매우 만족스러움
- 재정위원2: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 자료가 미리 여유있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위원회 등 보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
- 재정위원3: 7-9번 - **구성 취지나 구성원 비율은 좋아 보임.** 다만, 내용이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타 학교의 경험 상 거의 형식적이고, 일부의 교수님들만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전년 대비 변동사항 말고는 적절한 편성인지를 알 수는 없음. 따라서 사안별, 쟁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임
- 재정위원4: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 재정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자문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각 단위의 추천에 따른 단순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전문성 요건을 갖춘 위원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예를 들면, 관련 전공 교수, 관련 실무직원 및 기획실 보직역임자, 타대학 재정관련 업무를 역임한 교수 및 직원, 관내 행정조직의 기획예산관련 공무원, 대기업 재정 및 기획업무 종사 경력자 등. 참고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은 회계와 세무 전문가이지 재정전문가(특히 기획)는 아님. 과거 공인회계사가 외

부위원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정도는 미약하다고 판단됨)

- 재정위원4: 재정위원회 설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존의 등심위-대평-이사회와 중복된 의사결정 기구**라는 것임. 따라서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양 의사결정기구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즉 재정위원회 설치 시 의사결정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사립대학의 의사결정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만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재정위원5: 재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재정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측면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정 자문 및 심의 기구들과의 구조변화와 충돌지점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함. 또한 국립대학에서 나타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재정 위원회 간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6: 조선대학교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단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된 재정위원회 설치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재정위원7: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심의 결과가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듬.
- 재정위원8: 좋은 제도다. 재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
- 재정위원9: 모든 제도는 운영하는 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운영 주체가 바닥부터 썩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이 없을 것임. 정말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깝기는 하지만 만일 우리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가 된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기구라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2) 공영형 사립대학의 정책으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다수의 재정위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일부의 위원들은 반대의 의견**을 보였음. 다수의 위원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여러 단계의 재정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심사기구와의 중첩의 문제와, 이미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구의 설치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추가로 현재의 재정위원회도 충분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음

사) 재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1: 현재 약 29%가 된다고 하니, 비율을 괜찮아 보임
- 재정위원4: **비율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더 중요함.**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선임하고 그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흡수하여 대학발전의 토대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 재정위원회의 외부인사비율은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의 재정기여도가 매우 높다면(예를 들면, 교직원 인건비의 50% 지원) 최대 50%까지 외부인사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그 비율은 낮아져야 할 것임

- 재정위원5: 우리 대학의 설립역사를 고려해보았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생대표의 참여가 증가해야** 하고 학생들이 가진 전문성의 한계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책무 향상을 위해 **외부인사의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6: 재정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현재의 외부인사 비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재정위원7: 교수평의회 추천인원을 2명으로 줄이고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인사를 2명으로 늘렸으면 함.
- 재정위원8: 외부인사 비율은 구성원의 2/3이상(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 재정위원9: 제가 알기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은 거의 1/2의 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학 5: 외부 4 또는 4 : 5).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음. 대학 구성원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머릿수보다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함.
- (2) 재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현재의 구성방식과 외부인사의 비율 약30%가 적당하다는 의견과, 외부인사의 비율을 1/2에서 2/3까지 책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의견이 있었고, 이들과는 달리, 외부인사의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음

아) 재정위원회가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재정위원1: 네.
- 재정위원3: 상대적으로 실속 있게 운영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돌고 재정위원회가 노력해야 함
- 재정위원4: 국가의 재원이 사립대학에 충분히 투입되고, 재정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존 사립대 의사결정 체계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재정위원회의 도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재정위원5: 재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기존의 재정기구들과의 구조상 충돌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함.

- 재정위원6: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재정위원7: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은 우리 대학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책무성은 외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어느정도 향상 될 것으로 생각됨.
 - 재정위원8: 책무성 향상에 매우 도움(단, 제도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전제)
 - 재정위원9: 우리 대학은 ‘주인 없는 대학’ 이라는 오명(또는 장점이거나 단점)을 가진 상황임을 직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학교가 운영된다면 ‘재정위원회’ 와 같은 ‘옥상옥’ 기구가 필요할 것인가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공영형 사립대’ 가 된다면 전술한 내용과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음. 현재 대학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구가 존재하더라도 잘 운영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된다면 아무리 구속하는 제도나 기구가 많더라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임.
- (2) 재정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모두 나타났음. 재정위원회를 도입하여 실속 있게 운영을 잘 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있었으며**, 반면에,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운영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2. 이사회 참관인 심층인터뷰

가. 인터뷰 대상, 시기, 방법

- 조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물을 외부 참관인으로 초청하여 이사회 회의 참관 및 인터뷰 실시
- 1차 참관(5차 이사회)에 초청한 두 명의 외부 참관인은 각각 5.18 기념재단 정책실장과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임
- 2차 참관(6차 이사회)에 초청한 두 명의 외부 참관인은 각각 광주소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시교육청 노동조합 간부임
-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참관하기 이전에 사전인터뷰를 실시하여 공영형사립대에 관한 인식 및 조선대학교 이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참관한 후 사후인터뷰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대한 평가 및 변화된 인식을 조사하였음

- 사전인터뷰와 사후인터뷰 모두 조사자 2명과 응답자 2명 등 4명이 동시에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음

〈표 10-2〉 이사회 참관 및 인터뷰 일정

	제5차 이사회	제6차 이사회
개최일	2020년 4월 23일	2020년 5월 21일
참관인 (1)	5.18 기념재단 정책실장	광주소재 고등학교 교장
참관인 (2)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시교육청 노동조합 간부



〈그림 6-2〉 제5차 이사회 참관 인터뷰(2020.04.23.)



<그림 6-3> 제6차 이사회 참관 인터뷰(2020.05.21.)

나. 인터뷰의 목적과 내용

○ 인터뷰의 목적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 참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외부 참관인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인터뷰의 주요 내용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한 질문
-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의견
- 조선대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 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기존의 인식
- 이사회 참관 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이사회 참관제도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방안에 대한 의견

-참관 이후 인식의 변화

다. 인터뷰 결과

1) 인터뷰 결과 요약

-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이사회를 외부에 공개하고, 외부의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제도를 시행한 후, 참관인 4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참관인들이 이사회 참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참관 이전과 이후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참관인들이 찬성의견을 보임. 다만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조선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 혼란으로 인한 일부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조선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참관인들이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음
- 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에 응한 참관인들의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거나 참관하여 발언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참관인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음. 특히, 이 제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이사회 참관 이후에 진행된 사후인터뷰에서는 이사회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인식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사회가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고 파행적인 운영될 것이라는 인식이 변화되어, 현재의 대학 이사회는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 또한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학교의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당국을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2) 인터뷰 질문 및 응답내용

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인식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알고 있음. 정부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관인2:** 알고는 있었는데, 모델이 무엇인지 못 찾았음. 공영형 사립대가 무엇이든 재정문제가 큰 것으로 보임
- **참관인3:** 공영형 사립대는 등록금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음. 사학비리 대학을 보면 등록금 과하고, 이는 대학 서열화 구조 때문임. 분란이 많은 대학들은 과감하게 공영형으로 전환을 해야 함. 이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연계됨. 지역사회와 협력, 시민들과 함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제대학들은 공영형을 통해 빠른 치유를 하자. 이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고, 정책의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서 지방에서부터 공사의 모델을 만들어 성공화된 케이스 만들어야 한다. 약 85%가 사립대, 전문대 95%가 사립대임 지나치게 많아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등록금을 낮춰서 국민들의 교육받을 원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 **참관인5:**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에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대학개혁과 관련해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공약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 사립대 학생들이 이러한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이에 대항하는 지방대 학생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서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는 거의 읽어보았고 관련 언론보도를 꾸준히 찾아보고 있음. 그 밖에 세차례의 공개적인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료집을 받아서 읽어보았고 공영형 사립대 관련 기자회견에 두차례 참석했음.
-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를 참관한 참관인들 모두가 **대체적으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고 등록금에 과하게 의존하는 사립대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되고 있었음

나)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예산이 가능하다면,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찬성**하는 입장임. 등록금에 영향을 주면 좋겠고, 광주저남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음
- **참관인2:** 조대의 민족사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 특수성이 있음. 공영형 사립대의 재정적 문제, 효과, 지역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떻게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음. 많은 고민과 의견이 있어야 할 것임. 지역의 여러 주체와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만들어야 형식적 운영의 틀을 벗어낼 수 있음

- **참관인3:** 민립대학으로 출발, 이후로 학교 권력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대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하면, 운영의 문제로 시도민들의 관심 밖에 나고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지역의 교육자산의 손해임. 구성원의 의지를 잘 모아서 결정해야 하지만, 지역의 교육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간 운영상의 질곡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음. 공영형이 맞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대학자원이 감소되는 시기에, 학교 구성원이 분쟁에서 벗어나서 공멸의 위기의식을 갖고 시민의 품으로 **공영형 체제로 전환하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음.** 퇴행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함
- **참관인5:** 저는 주로 학생들의 **학벌의식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점에 주목하고 있음. 한국의 학벌서열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수도권 대형 사립대- 지방 국공립대- 지방 사립대 순임. 그런데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된다면 우선 기존의 서열 구조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조선대가 전남대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의식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함. 그리고 실제로 조선대의 학생활동이 전남대보다 훨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공영형 사립대 도입 이후 몇 년 내로 전남대와 조선대의 위상이 현재와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단순히 조선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학벌서열에 대한 청년들의 세계관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의 교육개혁이 늘 학벌서열에 막혀서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교육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 (2)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참관인들이 찬성의견이었음. 조선대학교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성금을 모아 설립한 민립대학으로 출발했고, 여전히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조선대학교가 공영형으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임.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대학자원이 감소되는 시기에, 학교 구성원이 분쟁에서 벗어나서 공멸의 위기의식을 갖고 시민의 품으로 공영형 체제로 전환하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다만,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음

다) 조선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1946년 민립대학으로 건립되어, 지역의 애정이 담겨있는 학교임에는 분명함. 그러나 박철웅 일가의 전횡으로 부정적 이미지도 있음. 총장과 이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
- **참관인2:** 타지역 출신으로, 광주는 전대, 조대 유명함. 조선대는 이름에 걸맞는 활동(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현재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을 하고 있고, **조선대학교의 정신이 지역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봄.**

- **참관인3:** 조선대 졸업하고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분들이 지역에 많음. 광주전남 전체에 조대 출신자만 보아도 가장 비율이 많고, 현재도 조대출신이 각계각층에 많음. 학교라는 것이 설립 이념과 교육이념에 따라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조선대학교가 기여한 바는 지대하다고 생각함. 초중고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타지로 나가 사는 것이 인생이 손해라고 할 수 있음. 경제적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고, 태어난 곳에 공동체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은 지역 젊은이들의 사회적 이동에 매우 중요한 통로이며,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인재로 역할하도록 해야 함. 지방대학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조선대 출신의 삶의 정서상으로도 조선대 안정화가 되어야 함
- **참관인5:**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전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애초부터 학생들이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학벌의식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 교원이나 학교가 아무리 뭔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싶어도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함. 대학 전체가 지역사회 기여에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선대는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꾸준히 가능성을 모색해온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는 생각함.
- (2) 조선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누었음.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광주 전남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재단의 전횡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일부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함

라) 조선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힘이 모아져야 하고, 약자에게 관심을 많이 갖면 좋겠음 대학문턱을 낮춰서 서민들이 찾는 대학으로 가면 좋겠음. 평생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음
- **참관인2:** **특성화된 학교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음. 가령, 홍콩의 경우, 학교마다 특성화된 내용들이 있음 홍콩U는 사회대, 법대가 유명함. 조대도 민주화와 연결된 부분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광주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함께 고민하여, 조대는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사회과학적 학문 등
- **참관인3:** 운영의 안정을 찾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해서 진로의 큰 축이 되어야 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참관인5:** 전남대가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학벌서열 속 존재에 안정 혹은 안주하고 있는 것에 반해 조선대는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분쟁이 이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왔다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

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기여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조선대의 각종 지식을 개방하고 구성원들의 연구나 활동 또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사회를 설득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함. 광주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주도하고 이것이 각종 위원회 등의 참여로 이어진다면 조선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봄.

- (2) 조선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참관인들이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음. 특히, 조선대의 각종 지식을 개방하고 구성원들의 연구나 활동 또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이어지길 희망했으며, 광주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주도하고 이것이 각종 위원회 등의 참여로 이어짐으로써 조선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요청했음

마) 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잘 모르나, 뉴스와 언론을 통한 **이사회운영은 투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사회적 책무성은 조선대의 광주전남에서 갖는 위상에 비해서 볼 때, 보다 높아야 한다고 봄.
- 참관인2: 조대의 이사회는 접한 경우가 드뭄. 다만,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는 조대출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돈명 총장의 이야기를 많이 함 재미있었다는 것임. 조대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사회적 책무를 함께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참관인3: 정이사체제가 아니고, 이사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 **운영이 매끄럽지 않고 파행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음.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함. 민립대학이고, 연구와 행정이 투명하고 늘 사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었음. 특정 이념이나 구제단에 과하게 발목잡히거나 하는 것은 마땅히 사회적 재판을 받아야 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학문의 전당의 성격에 맞추어 용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사회가 사적재산이 맞지만, 이미 절대적 개념의 사립학교를 뛰어넘었음. 그 만큼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을 책무로 느껴야 함. 구성원들의 삶의 요람이기도 하지만, 후세에도 대학이 자랑스럽게 물려받아야 하는 성격도 있음. 설립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교육기관이므로 공공성을 가지는 것임. 이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조대 이사회의 사회적 책무성은 낮은 것 같음.

○ **참관인5:** 앞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대학의 재정이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법률에 미비한 점이 크다고 생각함. 모든 대학에서 최소한의 공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구성원들이나 시민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함. 광주지역 사회에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자주 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대는 국공립대보단 불투명하나 **여타 사립대학들에 비하면 투명한 정도**라고 생각함. 조선대 또한 지역의 대학으로 전남대를 비롯한 여타의 대학들처럼 사회적 책임이 있음. 특히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조선대는 다른 대학들 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들의 사회적 책임이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조선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거라 생각함

(2) 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에 응한 참관인들의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선대학교의 이사회 운영은 정이사체제가 아닌 임시이사체제의 지속과 이사회 구성의 지연 및 총장임기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운영이 매끄럽지 않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성원들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주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또한 조선대가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사회의 사회적 책무성은 높다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바)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거나 참관하여 발언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공적 인사의 참여를 찬성함. 그의 역할이 중요함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특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이해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필요하다고 봄

○ **참관인2:** 공적 인사의 이사회참여는 장단이 분명함. **장점은 외부인사의 감시역할로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명예직으로만 역할하면 없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어떻게 선정될지 고민있어야 함

○ **참관인3:**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사회적 위치는 높음. 대학 운영에서 전문성이나 자율성, 도덕성, 신뢰성을 가져야 함. 이사회에 외부인이 참관하는 것은 자율성 및 자존심에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스스로 자처한 측면이 있고, 이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훼손의 책임은 온전히 현 이사들에게 있음. 따라서 참관이 개선할 것이라는 것 보다는 치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참관자도 자기가 역할에 맞는지 고민이 될 것임. 파행이 계속되면 이런 제도가 쓴 약이 되겠으나, 앞으로 정상화 된 이후에는 굳이 이렇게 않는 것이 좋다. **모범적으로 스스로 잘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2)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거나 참관하여 발언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참관인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음. 공적 인

사가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하거나 이사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이사회에 대한 사회적 감시 효과를 높임으로써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적 인사가 자신의 특수 이익을 앞세우거나 단순히 명예직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외부인사의 이사회 참여는 **학교 법인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거나 이사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외부인사의 참여로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봄. 그러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함. **유명인사보다는 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참관인2:** 도움이 됨. 다만, 어떻게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가 공개적으로 운영된다는 조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만 못 할 것임.
- **참관인5:** 조선대에서의 분쟁이 격화되었던 직접적인 사안에는 이사회와 관련한 경우가 많았음. 공영형 사립대 전환으로 이사선임 과정의 민주성이 강화된다면 더 이상 시대적 기준과 맞지 않는 이사가 선임되어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임. 또한 이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 또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운영이 보장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2)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거나 이사회에 참관하여 발언하도록 하는 경우,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참관인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보였음.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여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을 지적하기도 했음

아) 이사회에 참관한 이후에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이사회에 대한 평가 및 참관 이후 변화된 생각에 대한 질문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의미 있는 자리였음 **이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음.** 다만, 참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됨 노력하는 모습, 설득하려는 모습이 좋았음. 무난하게 진행되는 모습. 빠진 발언을 하는 이사가 없었음. 그런 이사회를 처음 봄. 보고 안건이 과하게 많았던 듯.

- **참관인2:** 이사회가 처음 질문을 못해 답답하기도 했음. 제안과 협력의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음. 이사진과 이사진을 설득하려는 구성원의 노력이 대단했음
 - **참관인3:** **이사회도 대학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고, 대학 본부도 방만한 경영하려는 것 아닌 것 같고, 대학의 재정구조가 허약함.** 학생 수 줄고, 등록금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은데, 다른 수익이 크게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이사회는 막으려하고, 대학본부는 긴축재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구조여서, 대학은 허약한 재정구조에 힘들어함. 이를 나름대로 안정화를 기하려면 자구적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겠으나, 좀 더 큰 틀에서 공영형의 정부지원금이 안정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주면 커다란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대학은 현 체제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정부지원금을 더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으로는 공영형 체제로 가서 교육부나 지자체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공영형에서 중요한 것은 자구적 노력임. 그러나 이를 구성원의 임금삭감으로 가면 혼란이 올 것이다. 오히려 재정의 위기를 기금조성을 위한 이벤트로 조달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분위기가 학생들에게도 확산되어 면학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영형이 되어야 할 듯함
 - **참관인4:** 설립취지가 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졌음. 운영의 과정에서 일부의 사립화 과정이 있었으나, 설립취지는 공립형이었음. 그렇게 가야 함. 학생들의 교육이 재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살림만을 고려하는 이사회로 느꼈음. 학생들이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을 탐구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임. 공영형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하는게 좋아 보임. 이사회 참여 관여해서는, 현재는 관선이사인데, 적어도 학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립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 학생, 교수, 노조, 직원 등이 참관보다는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좋겠음
- (2) 이사회에 대한 평가로는, 이사회가 예상보다 무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소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제한하려는 역할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설득해야만 하는 학교당국을 대표하는 이사가 부재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대학의 재정구조가 허약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지적하였음
 - (3) 다음으로, 이사회 참관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회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인식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우선 대학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특히 **이사회가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며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변화되어, 현재의 대학 이사회는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 (4) 또한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학교의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음. 이사회에 외부이사가 들어감으로써 이사회 투명성이 강화될 수는 있으나,

대학의 운영진이 이사회에 비중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사회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적어도 학교의 내부 구성원이 외부인과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자)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의견

(1)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 **참관인1:** 이사회의 주기가 길어 한계가 있음.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에게 권한을 좀더 주어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됨. 외부참여뿐만 아니라, 교수를 대표하는 이사가 누군지 궁금함 학생이나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형 이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연령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이사의 필요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외부인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아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 **참관인2:**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이 많이 들어가야 함.** - 선출로 하는 것은 어떨지? - 외부인사와 학내이사가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아 의사결정 하자. 이러한 방식이 학교별 특수성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참관인5:** **학생들이 학교운영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존의 총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와는 많은 학생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학생들은 기층단위인 학과학생회의 가족주의적인 질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 학생사회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공익을 연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총학생회와 같은 기존의 학생활동은 그것대로 존중하되, 광주지역사회의 문제와 관련한 기술연구나 토론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학생개인의 사회적 참여 동기를 확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이 보다 많이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학생들이 학교 운영이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3. FGI 결과

가. FGI 대상, 시기, 방법

○ FGI 대상 및 방법

- 학생들 가운데 동질성이 강한 총학생회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 직원들 가운데 노조임원들과 일부 평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의제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사회자는 이를 진행하는데 역할을 한정함

○ FGI 참가자

-학생과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총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였으며 특정인이 의견을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음

<표 10-3> FGI 참가자

연번	학생		연번	직원 직책
	대학/학과	직책		
1	정치외교학과	총학생회 간부	10	재정관련 팀장
2	체육학과	총학생회 간부	11	재정관련 팀장
3	기계공학과	총학생회 간부	12	교육관련 팀장
4	일본어과	단과대 학생회장	13	노동조합 간부
5	물리학과	단과대 학생회장	14	재무팀원
6	법학과	단과대 학생회장	15	성과관리팀원
7	산업공학과	단과대 학생회장	16	교원인사팀원
8	화학교육과	단과대 학생회장	17	대학원 팀원
9	스포츠산업학과	단과대 학생회장	총 17명	

○ FGI 일정

<표 10-4> FGI 일정

	학생	직원
개최일	2020년 7월 14일	2020년 7월 15일
참가자	총학생회 운영위원	조선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그림 6-4> 학생 및 직원대상 FGI(2020.07.14.~07.15.)

나. 토론 주제

-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취지
- 공영형 사립대의 의미
-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 학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 토론 내용

1) 직원

가) 공영형 사립대 정책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직원1: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관하여 다양한 뉴스를 접하지만 실체를 모르겠으며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외국의 사례나 어떤 것을 모델 삼고 있는지 모르겠음. 교내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움
- 직원2: 직원의 고용보장과 임금 대비 업무강도 측면에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듦.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등록금 환불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공영형 사립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
- 직원3: 정책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 의사결정권의 참여 등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 시행 후 사회 환원 등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음. 직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 급여 문제 등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직원4: 공영형 사립대로 가야한다는 당위성은 체감. 그러나 조직과 제도 운영 과

정에서 제도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함. 자율성은 대학의 특수성과, 공익성은 일반성과 연계되어 있는데 공익 추구를 위해 학교의 가치가 침해 받을 수 있다고 봄. 자율성, 공공성, 재정건전성의 관계와 공익성, 자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우리 학교의 투명성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율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하여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봄. 물론 정책 추진 시 국가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적 안도감은 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함. 또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죽어야 하는 일부 타 대학들을 살리는 것일 수 있음. 대학의 존폐는 정부의 평가가 아닌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함. 학령인구가 감소되니 살려야 할 대학은 살리고, 죽어야 할 대학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직원5: 공영형 사립대 취지 자체가 **사립대학의 법인 비리를 방지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의 분산을 위한 문제인 정부의 정책 이행 측면**이 존재한다고 봄. 현실을 돌이켜보면 교육부와 기재부 간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고 2020년 예산에서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삭감되고, 국립대 지원 예산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위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으로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률적 평가보다는 대학운영에 관한 다각적 사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사후 지원 성격으로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정부에서 해당 정책 시행 시 자율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또는 배려가 있을 것인지가 궁금함. 또한 현재 이사회 자료만 봐도 예산 관련 안건은 몇 개 없고 대부분 정책 및 제도 수립 안전임 외부 인사가 예산 관련 부분도 간섭을 할 것인지,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함. 외부인사가 적폐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봄
- 직원6: 정책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정책 도입 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음. 지역 사회 기여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 도입 시 이를 얼마나 더 해야하는가, 환류도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직원7: 정책 추진의 정확한 목적은 모르겠으나 기존의 사학비리 이슈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수도권 중심 대학 구조를 타파하고 지역대학을 살려보자는 취지 같은데,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학의 질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듦. 현재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 모두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대학이고, 서울권 사립 대학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산 역시 삭감되었다 다시 복구되기를 반복하는데 정권 변화 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스러움. 투입된 국고가 조대 특성화에 사용된다면 경쟁력

있는 대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음

- 직원8: 과거 노무현 정부 등을 생각해보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초기 모델이 개방이사제가 아닌가 생각됨. 사학비리 등으로 인해 인식이 좋지 않던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개방이사제가 도입되고, 이에 대한 확장판으로 공영형 사립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함. 좋은 제도이지만 정권 측면에서 조명된 측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대부분 관심이 없고, 특정 몇 개 대학만 위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학에 도입할 것이냐 물어본다면 반반이라고 할 수 있음. 외부의 학교 경영 개입이 생긴다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방향성만 있을 뿐, 공약이 얼마나 실행되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 또 정권이 끝나가는데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를 실행할 것이며, 실행하더라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진행된 것이 없어 불안함.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한 요소가 재정, 인사 부분에서 어떻게, 또 어느 수준에서 보장되어 나아갈 것인지 정책 세부 내용이 나오면 의견 수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총평)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있음.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나)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직원1: 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이를 지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국립대에 준하는 정책일 수는 있겠으나 불가능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음
- 직원2: 공영형 사립대 선정 후 국립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립대도 없애는 상황이고 **공영형 정책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 걱정이 됨**. 더불어 공영형으로 갈 경우 경영주체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직원3: 현재 지방거점국립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임
- 직원4: 이사 구성 등을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함.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한다는 것이 국립화시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국립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듦. 현 정부에서 결국 국립 대 사립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됨
- 직원5: 현재 대학들이 대학평가에 대부분 기대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임. 하지만 대학평가를 없애고 위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군소대학은 자연스레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항 또한 커질 것이라 예상됨.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해야만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됨. 더불어 우리 학교는 재정을 빼고 생각해본다면 이미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 총평: 국립대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며, 대학평가제도의 대안으로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가치가 있으며, 조선대의 공공성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 이행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에 대한 의견

- 직원1: 등록금 동결과 같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직원2: 정부의 지원 기준이 분명 있긴 하겠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 보임. 정해진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부에서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보임
- 직원3: 이에 앞서 이면을 살펴보면 애초에 형평성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봄. 대학평가 관련 대학별 회의 등에 참가했을 때의 경험을 돌아보면 국립대는 대부분 참석하지 않음. 낮은 등록금이나 교수진 편성 부분에 있어 이미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립대는 평가 등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인데 왜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일 선상에서 경쟁에 두는지 의문임. 공영형 사립대 정책 이행에 있어 근거는 대부분 신청한 대학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총평: 지원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라) 특혜 시비 가능성 및 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

- 직원1: 정책이 도입된다면 등록금 감면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는 바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위와 관련한 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듦
- 직원2: 조선대는 1946년 민립대학에서 출발한 지점부터 호남권 사립대학 평가에서 1등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 등 정책 수혜 우선권에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더불어 무등산과 이어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근처에 위치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의 연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등 다양한 측면을 강점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함
- 직원3: 교육부에서 평가 1~3주기 등으로 사립대를 바라볼 때 각자도생하라는 식이라고 보임.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장학금 수여나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책임을 돌리는 것 등을 보면 공영형 사립대 정책도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교육부 주도가 아닌 정책프로젝트처럼 자구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에 토론도 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찾고, 지역민에 대한 봉사 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면 여러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직원4: 우리가 뭔가를 먼저 제시해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이상적으로야 뭐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공공성 확립과 평생교육 목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일부 교지(校地)를 제공하는 등 노력들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직원5: **결국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함. 하지만 현재 전임교원이나 직원도 충원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공영형 사립대의 도입이 등록금 감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수의 학생 유입으로 이어져 결국 지역사회로의 기여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봄
- 직원6: 정책의 도입이 당장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큰 이익을 주지는 못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재정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대학 차원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학문을 다루는 학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모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직원7: 현재 존재하는 튼튼한 동문 구조에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도입으로 재정적 안정까지 더해진다면 학생 유입에 있어 더욱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총평: 공영형사립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순환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음

2) 학생

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취지, 특성에 대한 의견

- 학생1: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 재정 20~25%를 지원하고 운영 및 관리를 지자체가 함께한다는 정책으로 알고 있음
- 학생2: 덧붙여 지역거점대학 등 국립대에 비해 높은 등록금과 교육의 차이 또한 발생하는 사립대 문제의 조정을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총평: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

나) 위 정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 학생1: 반값등록금의 시행 혹은 등록금의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봄. 구체적인 감면 범위를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 수치 없이 등록금 감면 주장이 논의 되지 않을까
- 학생2: 반값등록금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국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학생3: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함께 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취업률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함
- 학생4: 국가에서 참여하게 되면 공기업 등과 관련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함
- 총평: 반값등록금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있음

다) 위 정책이 교수나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 학생1: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도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함
- 학생2: 정부에서 20~2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교운영 측면에서 도움은 받겠지만,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정책이라 예상이 어려움. 예상 가능한 부분은 등록금에 관한 정도
- 학생3: 민립대학의 측면에서 학교 경영에 대한 국가 간섭이 있다는 부분에서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좋게 보일 수는 없을 수 있음
- 총평: 공영형사립대의 장단점을 일부 이해하고 있음

라) 공영형 사립대의 공정성과 특혜 가능성, 국립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

- 학생1: 학교법인 이사회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편성하고 재정위원회 설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영형 사립대 지원·미지원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봄. 그만큼의 메리트와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공정성 침해라는 측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 학생2: 국립대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립대는 국립대만의 이익이 있고 사립대는 사립대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립대 학생이 이기적인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학생3: 대학을 줄세우기 시키는 과정에서 국립대가 얻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봄. 위 정책을 통해 사립대가 자신의 위치과 대등해질까 하는 특권의식에 기반한 두려움에서 반대 입장을 펼친다면 이는 국립대의 이기적인 행태라고 봄
- 학생4: 만약 조선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된다면 규모나 지역을 봤을 때 전남대학

교와 비교가 될 것인데 지원 시 수능 성적이 더 나은 사람들은 전남대학교에 지원할 것이라 예상되고, 학교 간 서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 학생5: 민립대학이라는 타이틀과 국립대가 맞으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에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있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봄
- 총평: 민립대의 특성과 국립대의 특성이 충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

마) 공영형 사립대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 학생1: 만일 인증제가 생긴다면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 것인지 궁금함. 국가에서 이를 만들 경우 조선대학교는 좋아하고 광주대학교는 싫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김
- 학생2: 인증제가 도입이 된다면 대학의 간판보다 학문을 위한 진학이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공영형 사립대를 인증하는 제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봄
- 총평: 인증제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봄

바)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있어 민립대학의 의미와 사회적 책무 및 사회 기여에 대한 의견

- 학생1: 조선대는 **현재도 지역 사회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음**.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공영형 사립대로 일정부분 지원을 받는다면 이에 따른 인재 배출 및 기여, 지역거점대학으로의 발돋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학생2: 유니버시아드,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등의 과정에서 하이다이빙장 지원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학생3: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서 지역별 거점병원(권역감염병병원)으로서 **조선대병원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 학생4: 각 단과대학별로 연구실이 있고 시설이 확충되어 있음. 정문 전광판을 통해 학계 수상 소식이나 연구 성과 등을 확인할 때 사회 기여를 확인할 수 있음
- 학생5: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립대학의 의미가 있고, 여러 분야에서 졸업한 인재들이 해당 분야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생각함
- 학생6: 조선대학교라는 브랜드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에서 큰 의미가 된다고 봄.
- 총평: 조선대가 현재에도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음

사)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에 대한 의견

- 학생1: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사립대학의 질을 높이고 국립대와 비등하게 만들어야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봄. 이를 고려한다면 대학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것일테고 정부에서 **지역대학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당 정책을 진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
- 학생2: 시간이 갈수록 학령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조선대가 지역사회에서 인식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조선대가 이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 마땅하다고 생각함
- 학생3: 안 좋은 대학교를 살리자는 것이 아닌 유능한 지방 사립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조선대학교가 보다 적합함
- 학생4: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있는 대학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조선대가 가능성이 있고 더 필요성 있다**고 생각함
- 총평: 조선대가 공영형사립대에 적합한 대학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아) 해당 정책 이행 대학 선정에 대한 의견

- 학생1: 학교운영비의 20~25% 지원이 해당 정책의 주요 안건임. 나머지 운영비의 80%는 학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데 결국 학교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며, 더불어 **학생충원율과 이사진 구성 등이 주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학생2: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추진하려는 학과를 더 많이 배정해야 지역사회나 국가와의 상생 측면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학생3: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방향 및 재단의 이념을 모두 준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봄. 더불어 **대학의 지역 안배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학생4: 덧붙여 공영형 사립대가 확대되면 지역, 권역별 경쟁이 중요해 질 것이라 봄
- 학생5: **대학의 규모도 중요**하지 않을지. 재학생 수 뿐만 아니라 중도포기 등 이탈율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정책 관련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대구대나 상지대 등과 이런 부분을 비교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지
- 학생6: 학교가 학과 통폐합 등의 혼란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봐도 조선대학교 만큼 많은 학과를 보유한 학교가 드뭄. 즉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총평: 지역안배와 학생충원율,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자) 기타

- 학생회 차원의 홍보는 미흡하며, 조선대의 공영형사립대 추진위원회가 이사장, 총장 중심으로 간다면 향후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필요하다면 공영형사립대를 요구하는 시위 등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등의 현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중앙운영위 논의를 거쳐 학생들 설득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함
- 민립대학인 만큼 공영형 사립대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 역시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의 단점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임. 이런 부분도 있음을 알린다면 좋을 것
-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입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장단점을 모두 오픈하여 논의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표 10-5> 심층인터뷰 및 FGI 결과 정리

질문 항목	세부 질문 내용	기대 및 찬성 의견	우려 및 반대 의견	제도개선 제안
(1) 공영형사립대 일반에 관한 사항	○ 정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들의 구조 개혁과 대학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 •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형태는 다소 불분명함 • 구성원 간 서로 다른 생각 •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음 • 정부의 재정투자가 가능한지 의문 	○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립대학의 설립정신에도 맞고,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등 좋음 • 장기적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조선대는 이미 공영형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음 • 등록금 인하효과 기대 •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인천대학교의 사례를 참고 •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함 	-
	○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관련 정책은 지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함 •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특혜 시비가 가능성 및 사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감면 혜택이 될 수 있음 • 조선대의 성격과 부합하여 기대됨 •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에 기여 	-	○ 인증제 고려
(2)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정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투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 구성원 간의 정보비대칭 존재 	-
	○ 재정운영의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이나 투명성의 한계가 있음 • 재정운영의 민주성이 무엇인지 구체화 필요 	-
	○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학교 •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함 •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다 공헌해야 함 	-

질문 항목	세부 질문 내용	기대 및 찬성 의견	우려 및 반대 의견	제도개선 제안
		역할은 매우 큼		
	○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에 도움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기존 등심위-대평-이사회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심사의 실질성을 확보해야 함
	○ 위원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1/3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학생대표의 참여를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 선임해야
(3) 이사회 구성방식 및 참관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립대에 비해 투명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운영은 투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사회적 책무성은 높여야 함 	-
	○ 외부인사 참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역할로 투명성 확보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 과도한 개입 우려 자율성 훼손하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의 근본적인 훼손이 없도록 운영
	○ 공익적 인사의 이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 강화에 도움 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명인사보다는 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인사의 참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인사의 선정이 중요함
	○ 참관 후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인식이 많이 변화됨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됨 이사회와 대학본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과다함 학교를 대표하는 인사의 참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의 이사회 참여방안 모색

질문 항목	세부 질문 내용	기대 및 찬성 의견	우려 및 반대 의견	제도개선 제안
(1) 공영형사립대 일반에 관한 사항	○ 정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들의 구조 개혁과 대학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 •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형태는 다소 불분명함 • 구성원 간 서로 다른 생각 •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음 • 정부의 재정투자가 가능한지 의문 	○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립대학의 설립정신에도 맞고,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등 좋음 • 장기적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조선대는 이미 공영형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음 • 등록금 인하효과 기대 •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인천대학교의 사례를 참고 •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함 	-
	○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관련 정책은 지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함 •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특혜 시비가 가능성 및 사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감면 혜택이 될 수 있음 • 조선대의 성격과 부합하여 기대됨 •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에 기여 	-	○ 인증제 고려
(2)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재정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투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 구성원 간의 정보비대칭 존재 	-
	○ 재정운영의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이나 투명성의 한계가 있음 • 재정운영의 민주성이 무엇인지 구체화 필요 	-
	○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학교 •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역할은 매우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함 •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다 공헌해야 함 	

질문 항목	세부 질문 내용	기대 및 찬성 의견	우려 및 반대 의견	제도개선 제안
	○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에 도움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기존 등심위-대평-이사회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심사의 실질성을 확보해야 함
	○ 위원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1/3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학생대표의 참여를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 선임해야
(3) 이사회 구성방식 및 참관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립대에 비해 투명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운영은 투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사회적 책무성은 높여야 함 	-
	○ 외부인사 참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역할로 투명성 확보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 과도한 개입 우려 자율성 훼손하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성의 근본적인 훼손이 없도록 운영
	○ 공익적 인사의 이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 강화에 도움 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명인사보다는 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이사의 참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성격에 부합하는 인사의 선정이 중요함
	○ 참관 후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인식이 많이 변화됨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됨 이사회와 대학본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과다함 학교를 대표하는 인사의 참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의 이사회 참여방안 모색

VII. 결론

- 지금까지 이 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었음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조선대학교의 경험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1.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요소 경험

가. 대학자치와 민주적 대학경영

- 조선대학교는 1988년 민주화 이후 다른 사립대학과 달리 민립대학으로서 공영형 사립대와 유사한 특성을 갖추고 있었음
- 조선대학교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장기간의 임시이사체제(1988-2010)를 경험하면서 ‘박철웅 일가’에 의해 족벌사학으로 전락했던 구체제를 청산하고 호남인이 대학의 주인이라는 설립정신을 구현해야한다는 의식이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됨으로써 더 이상 ‘구체제로의 회귀’를 갈망하거나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구성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학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자협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대학발전을 위한 경영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 1988년 이후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사운영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이 실현되어왔음
- 1990년 대학 최초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공정한 교수공채 시스템이 구축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대학본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
- 대학평의회회를 통해 학칙의 제개정을 심의하거나 대학의 예결산을 자문하고 있음
-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회가 대학 구성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

<표 11-1>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요소 기존경험 요약

시기	주요 경험	세부 성과/한계
설립(1946)	1922년,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 좌절, 1946년 조선대학설립동지회결성	인재양성 시작
구재단체제	1인 독재체제 하에서 각종 재단	-1960년 교수 20여명 사임/해임, 학

(1946~1988년 이전)	비리(부정입학, 부정 교수채용, 교비 유출) 및 이에 저항한 교수 및 학생 탄압, 병원장 구타 및 학생 구타	생 21명 제적 -1980년 강패 동원 학생구타, 교수 해직
민주화 이후 (1988-2010; 2018-20)	공익인사 임시이사회 참여	-구체제 청산 및 민주적 대학운영 -대학 최초 대학생활협동조합(생협) 출범 -공정한 교수공채 시스템 구축·운영 -대학 혁신(2018-19) 및 공영형사립대 추진(2020)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회 운영	재정투명성 확보
	대학자치기구 활성화 (대자협-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이돈명 인권변호사 등 공익적 인사의 총장 영입 -1992년 이후 직선제 주관(시민참여 허용 시도) -공영형사립대 전환 추진결의 (2017-18)
정이사 체제 (2010-2017)	구경영진 추천인사 이사회 참여 (정원 9인 가운데 3인)	-이사 1인,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 -이사 1인, 부총장에게 폭언, 무고·상해·폭행 혐의로 징역형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로 인한 구성원 장기천막농성(2016) -대학 부실관리로 인한 2018년 자율개선대학 탈락 -개방이사의 선임 지연 및 학교법인 운영에 중대한 장애 초래

나. 한계: 이사회의 불안정성과 대학자치기구의 기능 제약

- 2010년 정이사체제로 이행한 이후 비리로 쫓겨난 구경영진측이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당성이 취약한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분으로 3기 정이사를 정상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등 대학을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함(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이명박 정부 인사인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가 정이사체제에서 조선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임)
- 총장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학내 파벌들이 이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 이사진과 결탁하여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학내 갈등이 심화됨(총장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의 정당성 문제). 제2기 정이사체제에서는 이를 개방이사가 주도하면서 이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이 극대화되었으며, 외부인사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형성되고 이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성이 강화되며 일종의 ‘학내 구성원 중심주의’가 형성됨 이러한 경향성은 2018년 중반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임시이사체제에서도 지속됨

- 대학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등심위와 대학평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이나 자문기관이라는 제한된 권한, 그리고 운영상의 미숙으로 사실상 대학본부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수동적 기관에 머무르게 하였음

다. 과제 : 이사회 정상화 및 대학자치기구의 기능 강화

-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정당성을 갖춘 정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내부의 상호존중과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제기함
- 대학 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함
- 대학자치기구에 대한 존중과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기함
- 대학재정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영형 사립대 핵심 요소 실행결과

가. 재정위원회 신설

-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신설하고 2차례 회의를 실시함
- 국립대학법인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하여 국립대학회계법과 인천대와 전남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재정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였고,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등 사립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비교분석하고, 등심위와 대평 등 기존의 학내 재정관련 사안을 심의 혹은 자문하는 기관의 기능을 비교함
- 이를 토대로 조선대학교의 정관 개정안 및 재정위원회 신설안을 제안함
- 연구단이 주최한 공청회와 교무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등심위 및 대평과의 기능 중복과 재정위원회의 심의 사항들 가운데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음
- 규정안 마련 과정에서 네 가지가 쟁점(심의사항의 범위, 위원장 호선여부, 학내구성원 대비 외부위원의 수, 시행시한)이었으며, 특히 학내 구성단위별 위원 배분, 외부인사의 규모 등에 관한 이견이 제기되었음
- 조선대 대학본부는 위원회 위원 규모의 확대가 소집 요건 충족을 포함한 운영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음

- 성과로는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효율적인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임

나. 이사회 시민 참관인 제도 도입

- 공청회를 통해 이사회 참관인제도, 학내 구성원 단위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자문단 구성 및 의견 청취 등을 제안함
- 이사회에 시민들의 참관을 2회(각 2인 참여) 실시하였음
- 시민단체들 가운데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기관의 인사들을 초빙함
- 참관은 지역민들이 조선대의 현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이사회는 참관인들의 존재만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게 됨
- 다만, 학내 구성원의 참관 필요성, 이사회 비공개 사안 참관허용문제가 제기됨

다.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이사 후보추천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후보추천이 이루어졌으며, 공영형 사립대의 위상에 조응하는 후보추천을 위해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후보추천 요청공문을 보냄
- 개방이사후보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후보로 추천함(6인 가운데 2인)
- 대학평의원회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 2인을 추천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들과 근본적인 불신관계에 놓여있는 ‘구경영진’ 측 인사들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함
- 구경영진 측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이 최소화됨으로써 구성원과의 갈등 완화, 시민단체 대표의 정이사 선임으로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가능성 제고 등이 가능해짐
- 다만, 개방이사 및 정이사 후보 추천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지자체장 추천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은 물론 후보 추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라. 이사회 개혁

- 이사회 연임제한, 학내 구성원 단위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자문단 구성 및 의견 청취 등이 제안됨
- 이사회는 중임 제한에 소극적이었으며,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기에 논의

되기 어려웠음

<표 11-2>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 효과 연구 개요

항목	도입요소	세부 실행 내용	미이행 요소 및 장애요인	성과 및 한계(*)	제도개선 제안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공익적 인 사의 이사회 참 여 및 이사회 참관제 도입	○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 체 출신 공익적 인사들로 이사회 구성	- 이행 - 구경영진의 측의 이사 추천 및 이에 대한 구 성원 반발로 인한 학내 갈등 위험	• 이사회의 정당성 확보로 구 성원과의 갈등 근절 • 학내 안정화 * 구경영진 측 1인 추천	○ 불법비리행위로 퇴출된 구경영진의 정이사 추 천권 배제 혹은 최소화 ○ 이사회와 구성원 대표 간 협의 정례화
		○ 개방이사의 민주 적 선출 및 지역 시민단체 출신 인사 추천	- 이행	•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개방이 사 선출 • 시민단체 출신 인사 추천으 로 시민사회와 교감형성 * 충분한 공모기간 부재	○ 충분한 공모기간 확보 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광주광역시장 개 방이사 후보추천 요청	- 미이행: 미추천으로 개 방이사 후보에 지자체 추천인사가 포함되지 못함	• 최초의 지자체 추천인사의 개방이사 참여 요청 시도 선 례 마련 * 충분한 추천 요청기간 부족 * 지자체 추천 의지 불신	○ 지자체의 고등교육 책 임성 제고 ○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시의회 조례 제정
		○ 이사회 참관제도 시행	- 이행	• 참관인제 도입에 따른 정제 된 이사회 운영(공정성 증 대) •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가능 성 제고(개방적 이미지 제고, 혁신 의지 공표) * 참관인 선정 시 개방성 부족	○ 참관인 선정 기준 구체 화(학내인사 참관) ○ 방청인 제도 도입을 통 한 개방성 강화 고려 ○ 비공개사안 선정 기준 마련
	(2)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 제 한(권고)	○ 이사정수 확대와 중임 제한(권고) -법인의 사유화 방지 및 공익이 사 참여기회 확 대	- 권고 이행 - 정이사체제 이행기로 인해 논의가 지연됨 - 이사회 정원의 한계로 추가 개방감사의 수 늘 리기 어려움	•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고 려한 이사정수 조정의 필요 성 및 사유화 방지책으로 중 임제한에 대한 학내외의 지 지 확인 • 법인개혁 논의 토대 마련 * 이사회의 논의 기피성향	○ 사유화에 악용되는 이 사 연임/중임 제한 법 제화 ○ 이사 연임/중임 제한 사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미국의 상원처럼 1/3씩 순차적으로 이사 교체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항목	도입요소	세부 실행 내용	미이행 요소 및 장애요인	성과 및 한계(*)	제도개선 제안
민주적 대학운영	(1) 민주적 총장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이후 9회의 총장직선제 경험 ○ 교수, 직원, 학생, 총동창회 회원 선출권 부여 ○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선출규정 초안 제정, 이사회가 이를 존중 	-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행정의 민주적 책임성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 선출직 ‘강한 총장’을 통한 이사회 독단경영 견제 * 피선거권 및 선거권 제약, 제한된 정책선거, 교외 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 ‘민주주의의 과부하(democratic overload)’, 파벌형성과 논공행상, 개혁 회피, 이사회 간의 갈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제도의 민주화(피선거권, 선거권 확대-실질적인 시민 참여 허용, 비정년계열/비정규직 선거권 부여, 외부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등), ○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과정 제도화(개별접촉보다 정책토론회 활성화) ○ 파벌 형성 및 갈등 억제(3회 미만 후보출마 허용)
	(2) 공정하고 자율적인 교원 공채 및 연구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자율성 존중 교원인사 ○ 연구윤리 확립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자율성을 존중한 교원인사 관행확립으로 채용투명성 및 학내갈등 완화 • 연구윤리연구원 신설(2020.3.1.)에 따른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지역대학 모범 사례 창출(독립성, 학부/대학원/연구원으로 대상 확대, 위원의 전문성 강화) * 대학-학과 발전계획 충돌(재정악화로 학과 요구 교수충원의 어려움) * 연구윤리 기준에 대한 합의형성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의 교수임용 권한 남용 방지책 마련(공채심사 시 가부 결정권만 부여, 학과교수들에게 거부권 부여 및 기준 마련) ○ 구체적인 연구윤리 기준 마련

항목	도입요소	세부 실행 내용	미이행 요소 및 장애요인	성과 및 한계(*)	제도개선 제안
재정투명성	(1)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통해 신정설 운영(법인정관 개정, 위원회 규정 신설)	- 이행 - 17명으로 구성, 외부위원 5인 포함 - 법인 정관 개정, 위원회 규정 신설 - 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회 운영경험 축적 재정투명성 강화, 재정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논의 가능해짐(외부 회계사 참여) 장기적인 대학재정 기획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등심위/대평과 기능중복 * 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충돌 요인 존재 * 외부인사들에게 충분한 재정 정보 제공 기피 성향 존재 * 이사회의 권한 침해 가능성 * 재정위원회 결정의 사립학교 이사회 구속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심위/대평과 기능 중복 조정 ○ 적절한 수의 외부 인사 및 재정전문가 참여 제도화 및 외부인사 추천 권한 분산 ○ 이사가 참여하는 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 확보
지역사회 기여	(1)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강화	○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과 지방 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력 실행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산업계와 협력 활성화(2020.3.1 이후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등 관공서 혹은 민간기관 75개와 MOU 체결) *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구체화 노력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원 및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 ○ 대학의 발전계획 및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명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2) 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 산업, 고교교육, 체육/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통한 공적 기능 수행	-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13년 연속 선정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선정 * 지역의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실행계획 마련을 통한 공적 기능의 강화 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공공성 지향 명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 개방감사 1인 추가 선임은 그 필요성에 대한 학내 공감대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정이사체제가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

마.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 2020년 1학기에만 조선대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MOU 체결은 100여건에 달함
- 대학 법인의 설립목적을 변경하여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링크+ 등 지역산업계와의 협조 관계를 구축함

바. 기타

- 교원인사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총장이 과도한 개입을 피하고 학과의 의지를 존중함으로써 학내갈등 요인이 감소함
- 연구윤리연구원을 신설하여 대학의 연구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역대학에 모범사례를 제공함
- 다만, 여전히 연구윤리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함
-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급 제도나 교내 연구비 지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년계열 교수를 비정년계열 교수로 대체 충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려움

3. 공영형사립대에 대한 인식

가. 사립대학

- 시민들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음
-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공익이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냄

나. 공영형사립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사립대 정책(직원 91.8%, 교원 86.5%, 학생 85.0%, 시민74.2%)과 조선대의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직원 94.1%, 교원 90.8%, 학생 88.8%, 시민 82.7%)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와 지지(학내 구성원>시민)

- 다만,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하며 추가적인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다수임. 이는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이나 민주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영형사립대가 대학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음

다. 재정위원회 도입 등 법인 개혁

- 재정위원회의 도입이 대학재정의 효율적 배분,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큼
-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참관허용과 이사중임 제한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시민들은 지역사회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인사, 교원과 직원은 총장의 이사참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음

4. 정책 제안

가. 이사회 참관인 제도

- 이사회가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을 하는데 구속감을 느낌
- 이사회가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을 다룰 경우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회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참관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학부모, 학내구성원 단위 대표 등 학내외 인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세력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참관인 제도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나. 재정위원회

-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범위의 조정이 필요함
- 대학평의위원회의 권한을 재정위원회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과 재정위원회를 대학 혹은 법인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대학산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재정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고, 법인 산하에 둘 경우 이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러한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으나 독립성의 제약이 불가피함

-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외부인사의 참여만으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학 측에서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1인의 외부인사는 추천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위원추천단위 구체적 명시)
- 외부인사가 대학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전문경력인사의 위원 참여)
- 부적절한 위원의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임명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해촉 규정마련, 위원의 사임 혹은 위원정원의 2/3 동의 조건)
- 위원회가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이사 증원 및 이사회 중임 제한

- 사립대학은 이사들의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이사회 내부의 답합을 통해 임기를 영구화할 위험이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중임 혹은 연임의 횟수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정이사들의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을 1회만 허용하는 방안(총 6년 이내)이 권장할 만함
- 물론 사립학교의 이사임기에 관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정관재개정을 통해 연임제한을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이사의 기본 규범으로 여기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 공익이사의 경우 이를 기본 자격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미국의 상원처럼 1/3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선대의 경우 정이사가 9인 정원이고 개방이사가 3인이기에 공영형사립대의 공익이사 비율이 50%로 명시될 경우 사립대학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사는 1인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립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증원이 불가피함

라. 구경영진측 추천인사를 배제한 정이사체제로의 발전

-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과 근본적인 불신관계에 놓여있는 구경영진측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이사회가 대학경영의 정당성(legitimacy)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음

-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대체로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사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음
- 구경영진축 추천을 받은 인사가 스스로 이들과의 단절을 선언할 수 있도록 견인

마. 학내 구성원 단위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 이사회가 대학경영의 주체로서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통상적으로 이사들은 평소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일부 인사들과의 사적인 회합을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급급하며, 공식적인 학내 구성원 대표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이며, 이들과의 만남은 주로 이미 심각한 갈등상황에 이른 후에나 이루어짐
- 학내 구성원 대표들 역시 이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꺼리며 이사회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음
- 이사회가 일상적으로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바.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관 반영, 지역사회 자문단 구성 및 연구기관 지원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원 및 신설 시 인센티브 제공
- 대학의 발전계획 및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명시 권고
- 이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대학경영을 하려면 학내 구성원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통상적으로 이사진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나 경제계 인사들과 골프회동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편향된 의견만을 들을 가능성이 높음
- 조선대의 경우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를 포함하는 자문단 구성이 필요함

사. 총장선출제도의 민주주의 심화 및 정책 선거

- 선거제도의 민주화(피선거권, 선거권 확대-실질적인 시민 참여 허용, 비정년계열/비정규직 선거권 부여, 외부인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등)
-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과정 제도화(개별 접촉보다 정책토론회 활성화)
- 파벌 형성 및 갈등 억제(3회 미만 후보출마 허용)

- 총장과 이사회 간의 역(권한과 책임 구분)을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 공영형사립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제안: 과감한 공영형사립대 정책 추진
- 대학교 이외에 법인산하 전문대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있을 경우 재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함
-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전폭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성공여부는 사립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재정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에 대한 지지를 창출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영형사립대에 참여하려는 대학들이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이후의 과제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관련 언론 보도자료(종합)

주제	이슈	일자	언론사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검증 용역 선정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용역 수행	20.02.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26400054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413
	조선대학교,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20.02.19.	전남일보 https://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21914551273401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	20.02.19.	kbc광주방송 http://kbc.co.kr/kor/news?mode=view&nwCd=main_news_05&menuId=56_65_76&nwid=355792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선정	20.02.2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2598.html
재정위원회 (공청회 개 최)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위한 첫 공청회 개최	20.04.14.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159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detail/G3XMjU/600542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 검증 첫 공청회	20.04.14.	e-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78
참관인	“조선대, 시민에게 이사회 개방해야 민립대 정체성 찾아”	20.04.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7125.html
	“시도민이 만든 조선대, 민립대 정체성 찾아야”	20.04.1	광주일보

		7.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87049200693829006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20.04.24.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595
	조선대학교 이사회, 사립대 사상 최초 ‘시민 참관인’ 시도	20.04.24.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87706872694371006
	조선대 이사회 시민참관인제 도입	20.04.25.	광주mbc https://news.kjmbc.co.kr/node/312213
연구 수행 현황 평가	[2020 교육부 업무보고] AI·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20.03.02.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784
	‘공영형 사립대’ 다시 수면 위로…실현 가능성에 촉각	20.05.11.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048
	문재인 정부 3년...고등교육 공약 평가 엇박자	20.05.15.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364
	‘뚝 없는 출항’ 위태로운 공영형 사립대	20.05.25.	e-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16
협약식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힘 모으기로	20.06.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33200054?input=1195m
	조선대와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력 합의	20.06.0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41551&code=61121111&cp=nv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맞손’	20.06.01.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1088596301292007
	‘지원’ ‘감독’ 함께 늘려 사학 공공성 제고	20.06.0	단비뉴스

		6.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9
학술 세미나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주제 학술세미나	20.06.26.	e-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45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정책 효용성’ 학술세미나 개최	20.06.26.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2616405925052
	“대학교육 질 악화... 정부 지원 절실”	20.06.30.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3511857302834007
3기 정이사 체제 출범	조선대 3기 정이사 체제 출범	20.07.01.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1_0001079963&cID=10201&pID=10200
	조선대 3년 만에 정이사 체제 전환... 공영형 사립대 발판	20.07.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ea/honam/951776.html
	조선대 3기 정이사 체제 출범	20.07.01.	전남일보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70114181710997
이사장 선출	조선대 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 현재 재판관	20.07.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45100054?input=1195m
	조선대 3기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20.07.03.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detail/G3XMjU/607579
	조선대 제3기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20.07.03.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30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4개 대학 총장 협의회	상지대학교, 대구대학교, 조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포럼 개최	20.07.10.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

포럼			ws/articleView.html?idxno=54343
국회 토론회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07.16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4751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육성해야”	20.07.20.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95231295361568018
지역경제발전	지역과 함께 . . .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선도	20.08.09.	무등일보 http://honam.co.kr/detail/G3XMjU/610477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관련 언론 보도자료(목록)

1. “조선대학교,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교수신문. 02.19.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8223>
2.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뉴스핍. 02.19.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19000746>
3.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
뉴시스. 02.19.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9_0000924266&clID=10201&pID=10200
4.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에 나서는 조선대”
뉴시스. 02.19.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219_0000480687
5.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용역 수행”
연합뉴스. 02.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26400054?input=1195m>
6. 조선대, 민립대학 정체성 실현 발판 마련
아시아경제. 02.1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21915400606466>
7.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 사업 선정
한국대학신문. 02.1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413>
8.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 사업 선정
광남일보. 02.19.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82096057349440018>
9.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
무등일보. 02.19. <http://www.honam.co.kr/detail/G3XMjU/595071>
10. 조선대, 국내 최초 민립대학에서 제1호 공영형 사립대로 가나?
국민일보. 02.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56862&code=61121111&cp=nv>
11.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
전남일보. 02.19. <https://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21914551273401>
12. 조선대학교,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뉴스웨이. 02.19.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21917041072457>
13.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노컷뉴스. 02.19. <https://www.nocutnews.co.kr/news/5292387>
14.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 선정
전남매일. 02.19.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82105167295698005>
15.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
남도일보. 02.1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770>
16.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 선정
광주매일신문. 02.19.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82104782501007005>
17.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내외뉴스통신. 02.20.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091>
18. 조선대,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선정

- KBC광주방송. 02.20. http://ikbc.co.kr/kor/news?mode=view&nwCd=main_news_05&menuId=56_65_76&nwid=355792
19.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효과 검증 용역 기관 선정
한국일보. 02.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00901757582>
20. 조선대, 최초 민립대에서 제1호 공영형 사립대 전환 타진
국민일보. 02.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60459&code=61121111&cp=nv>
21.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사업 선정
CMB광주방송. 02.20. <http://www.cmbkj.co.kr/ab-991-14947>
22. 조선대, 국내 첫 민립대서 제1호 공영형 사립대로 가나
국민일보. 02.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4142&code=11131423&cp=nv>
23.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 사업 선정
글로벌경제. 02.21.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22100095476632d527ccea2_16
24. [2020 교육부 업무보고] AI·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한국대학신문. 03.02.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784>
25. 조선대, 정이사 체제 구성 나서...공영형 사립대 위한 첫 단추
한겨레. 03.15.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2598.html>
26.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등 주제 첫 공청회
위키트리. 04.14.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23516>
27.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 첫 공청회 열어 04.14 베리타스알파
베리타스알파. 04.14.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906>
28.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위한 첫 공청회 개최
한국대학신문. 04.1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159>
29.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관련 첫 공청회
e-대학저널. 04.14.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78>
30.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
교수신문. 04.14.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18>
31.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 검증 나섰다
글로벌경제. 04.14.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41413493277252d527ccea2_16
32.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
글로벌이코노믹. 04.14.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41411164444966bd57179a1_1/article.html?md=20200414142134_R
33.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등 주제 첫 공청회
데일리한국. 04.14.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004/dh20200414150757148510.htm>
34.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 검증 첫 공청회
무등일보. 04.14. <http://www.honam.co.kr/detail/G3XMjU/600542>

35.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논의 첫 공청회
AI타임스. 04.15.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30>
36. “조선대, 시민에게 이사회 개방해야 민립대 정체성 찾아”
한겨레. 04.15.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7125.html>
37. “시도민이 만든 조선대, 민립대 정체성 찾아야”
광주일보. 04.17.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87049200693829006>
38. 조선대학교 이사회, 사립대 사상 최초 ‘시민 참관인’ 시도
광주일보. 04.24.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87706872694371006>
39.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시민 참관인’ 최초 시도
오늘경제. 04.24.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94>
40. 조선대, 사립대학 최초 ‘시민 참관’ 이사회 개최
아시아경제. 04.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412255317012>
4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위키�트리. 04.24.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26748>
42. 조선대 이사회, 한국 사립대 최초 ‘시민 참관인’ 시도
일요서울. 04.24.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423>
43.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베리타스알파. 04.24.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168>
44. 조선대 이사회, 제5차 회의에 시민 참관 ‘눈길’
대학저널. 04.24.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34>
45.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한국대학신문. 04.2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595>
46.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데일리한국. 04.24.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004/dh20200424154316148510.htm?s_ref=nv
47.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교수신문. 04.24.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88>
48. [아침시평] 사립대학 위기 극복 위한 국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무등일보. 04.24. <http://m.honam.co.kr/detail/IBZuon/601526>
49. 조선대 이사회, 사학 최초 시민 참관인 도입
뉴스스. 04.25.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5_0001005816&cID=10201&pID=10200
50. 조선대 이사회, 사학 최초 시민 참관인 도입
톱스타뉴스. 04.25.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9618>
5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뉴스웨이. 04.25.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42514483102142>
52. 조선대 이사회 시민참관인제 도입
광주MBC. 04.25. <https://news.kjmbc.co.kr/node/312213>
53. 조선대 이사회 ‘시민 참관인’ 시도

- 광주드림. 04.26. <http://www.gi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323>
54. 조선대 이사회, 사학 최초 시민 참관인 도입
전남일보. 04.26. <https://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42616020823114>
55.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 ‘시민 참관인’ 첫 도입
광주매일신문. 04.26.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87891539508589062>
56. 조선대 이사회, ‘시민참관인’ 도입
남도일보. 04.26.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085>
57. ‘공영형 사립대’ 다시 수면 위로…실현 가능성에 촉각
한국대학신문. 05.1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048>
58. 문재인 정부 3년 . . . 고등교육 공약 평가 엇박자
한국대학신문. 05.15.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364>
59. ‘뚝 없는 출항’ 위태로운 공영형 사립대
e-대학저널. 05.25.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16>
60.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한국대학신문. 06.0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150>
61. 조선대학교-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다짐
오늘경제. 06.01.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5>
62.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맞손’
뉴시스. 06.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1_0001044171&cID=10201&pID=10200
63.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힘 모으기로
연합뉴스. 06.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33200054>
64.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키로
일요서울. 06.01.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177>
65.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맞손’
톱스타뉴스. 06.01.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95533>
66. 조선대학교-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협력
뉴스핌. 06.01.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1000954>
67. 조선대, 상지대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력키로
BBS NEWS. 06.01.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483>
68. 조선대와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력 합의
국민일보. 06.0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41551&code=611211111&cp=nv>
69. “조선대학교-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교수신문. 06.01.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2181>
70.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협력
광주드림. 06.01. <http://www.gi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029>
71. 조선대, 상지대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노컷뉴스. 06.01.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501>

72. 조선대-상지대, 공영형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06.01 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06.01.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006/dh20200601172303148510.htm?s_ref=nv
73.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력”
무등일보. 06.01. <http://www.honam.co.kr/detail/G3XMjU/604485>
74.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맞손’
전남일보. 06.01. <https://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60117350616119>
75.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내외뉴스통신. 06.01.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703>
76. 조선대·상지대, 교류협약…“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력”
남도일보. 06.01.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911>
77. 조선대학교-상지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위키�트리. 06.02.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7932>
78. 조선대-상지대, 사립대 공공성 강화 ‘맞손’
전남매일. 06.03.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1088596301292007>
79. ‘지원’ ‘감독’ 함께 늘려 사학 공공성 제고
단비뉴스. 06.06.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9>
80.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주제 학술세미나
베리타스 알파. 06.26.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531>
81.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주제 학술세미나
e-대학저널. 06.26.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45>
82.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주제 학술세미나
한국대학신문. 06.26.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531>
83.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정책 효용성’ 학술세미나
AI타임스. 06.26.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59>
84.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정책 효용성’ 학술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06.26.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2616405925052>
85.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주제 학술세미나
뉴스웨이. 06.27.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62715292017574>
86.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주제 학술세미나
위키텍트리. 06.28.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6865>
87. “대학교육 질 악화 . . . 정부 지원 절실”
전남매일. 06.30.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3511857302834007>
88. 조선대 3기 정이사 체제 출범
뉴스시스. 07.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1_0001079963&cID=10201&pID=10200
89. 조선대 3기 정이사 체제 출범
톱스타뉴스. 07.01.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6195>
90. 조선대 3년 만에 정이사 체제 전환 . . . 공영형 사립대 발판

- 한겨레. 07.01.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51776.html>
91. 조선대 3기 정이사 체제 출범
전남일보. 07.01.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70114181710997>
92. 조선대 새 이사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뉴스시스. 07.03.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3_0001083390&cID=10201&pID=10200
9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위키�트리. 07.0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8851>
94. 조선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제3기 이사장으로 선출
e-대학저널. 07.03.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44>
95.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조선대 이사장 선출
아시아경제. 07.0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0317363486842>
96.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뉴스웨이. 07.03.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70317340566903>
97. 조선대 제3기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뉴스핍. 07.03.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03000903>
98. 조선대 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07.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45100054?input=1195m>
99. 조선대 3기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무등일보. 07.03. <http://www.honam.co.kr/detail/G3XMjU/607579>
100. 조선대 제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헌법재판관 선출
노컷뉴스. 07.03.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472>
101. 학교법인조선대, 제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베리타스 알파. 07.0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34>
102. 조선대 제3기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조선일보. 07.03.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30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103. 조선대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광주드림. 07.04. <http://www.gi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849>
104.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조선대 이사장에 선출
데일리한국. 07.05.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007/dh20200705120501148510.htm?s_ref=nv
105. 조선대 제3기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광남일보. 07.05.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93928223360366018>
106. 조선대 신입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전남일보. 07.05.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70517574531781>
107. 조선대 이사회 이사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전남매일. 07.05.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3940139302986005>
108. 조선대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 광주매일신문. 07.05.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93939582516341062>
109. 조선대 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前 헌법재판관
 남도일보. 07.05.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763>
110.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제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선출
 한국대학신문. 07.06.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891>
111. 조선대 신입이사장에 김이수 前 헌법재판관
 법률신문. 07.0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56>
112. 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방안 모색 위한 포럼 개최
 e-대학저널. 07.09.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67>
113. [포토뉴스]상지대 4개대학 총장협의회 포럼
 강원일보. 07.10. <http://www.kwnews.co.kr/nview.asp?s=201&aid=220070900112>
114. 상지대학교, 대구대학교, 조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포럼 개최
 교수신문. 07.10.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43>
115.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교수신문. 07.1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4751>
116.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열려
 뉴스1. 07.16. <https://www.news1.kr/articles/?3998274>
117. 윤영덕 국회의원,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 개최
 위키트리. 07.17.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53231>
118. 윤영덕, ‘공영형 사립대 토론회’ 개최
 광주매일신문. 07.17.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94953546517792054>
119. 윤영덕 의원 “공영형 사립대 성공,국회 입법전략과 국민 공감대 형성 투트랙 전략 필요”
 뉴스프리존. 07.17.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52>
120. 윤영덕 국회의원,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 개최
 뉴스워커. 07.17.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00>
121. 윤영덕 의원 “공영형 사립대 도입·육성 필요”
 무등일보. 07.17. <http://www.honam.co.kr/detail/ilgftp/608705>
122. 윤영덕 국회의원, “공영형 사립대 성공...입법전략과 국민 공감대 형성 투트랙 전략 필요”
 블록체인밸리. 07.18.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312#0AXD>
123.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국회도서관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 진행
 위키트리. 07.19.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53684>
124.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 진행
 뉴스웨이. 07.19.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71917232664007>
125. 윤영덕, 공영형 사립대학정책 현실화 과제 토론회
 전남매일. 07.19.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5149625303582003>
126. 사립대 성공... “입법전략과 공감대 형성 투트랙 필요”

한국교육신문. 07.20.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900>

127.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 육성해야”

광남일보. 07.20.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95231295361568018>

128. 민영돈 조선대총장 “공영형 사립대 도입 조속히 추진돼야”

남도일보. 07.20.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38>

129. 민영돈 총장 “공영형 사립대 도입해야”

전남매일. 07.21.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5322511303662007>

130. 지역과 함께 . . .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선도

무등일보. 08.09. <http://honam.co.kr/detail/G3XMjU/610477>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관련 언론 보도자료(세부)

1.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용역 수행

(20.02.19. 연합뉴스 정희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26400054?input=1195m>



조선대학교 본관 (출처: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희성 기자 = 조선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수행 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 도입은 학교법인 이사진 과반을 공익형 이사로 꾸리고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대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 20~25%를 지원한다. 국내 대학교육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공영형 사립대 핵심 요소를 운영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교육·행정·정치·경영·법 분야 7명의 연구원이 참여했다. 최종보고서는 올해 6월 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 교수는 "조선대는 시도민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대학인 만큼 공영화 체계 도입이 큰 의미를 갖는다"며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시발점이 될 이번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 조선대, 정이사 체제 구성 나서...공영형 사립대 위한 첫 단추

(20.03.15. 한겨레 김용희)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2598.html#csidx38f858d252705ce81e4f9e5099eb82a>



조선대학교 전경 (출처: 조선대학교)

국내 첫 민립대학인 광주 조선대학교가 제3기 정이사 체제 구성에 나서며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15일 조선대학교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대 각 학내기구는 13일까지 개방이사를 제외한 정이사 후보 지원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통보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20일까지 후보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사분위는 제168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대 정이사 후보자 22명을 추천받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천 후보자 22명 중 교육부가 4명, 전·현직이사협의체가 6명, 조선대 대학평의회가 2명, 조선이공대 대학평의회, 조선간호대 대학평의회, 조선대 부속 중·고교 운영위원회, 조선대 여자중·고교 운영위원회가 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는 6명을 선발한다. 사분위가 후보자 중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정이사 9명을 선임하면 조선대는 3년 만에 다시 정이사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조선대 측은 이번 정이사 체제 구성이 공영형 사립대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미부여하고 있다. 조선대는 1988년 옛 경영진이 물러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학내 파벌 갈등으로 2017년 다시 임시 이사체제로 돌아서며 공영화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 조선대 민주동우회 관계자는 “추천 후보자를 초빙할 때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한 공감이가 주요 기준이었다. 조선대가 진정한 민립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정이사 체제가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위한 첫 공청회 개최

(20.04.14. 한국대학신문 이다숨)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159>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 공청회 (출처: 조선대학교)

[한국대학신문 이다숨 기자]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이 10일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토론하는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조선대는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단’ (연구책임자 지병근)이 마련했다. ‘조선대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 을 주제로 잡았다. 공청회는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안병철·이건근 공동연구원이 ‘조선대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을 주제로 진행하고, 이후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에 대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이대용 부총장, 변재영 기획조정실 부실장, 양고승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준연 총학생회장 등 대학의 주요 구성원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병근 교수는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지닌 조선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변화와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이번 실증연구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선대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한편 공영형사립대는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고,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 용역사업에 선정된 사립대학에 공영형사립대의 핵심요소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4.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 검증 첫 공청회

(20.04.14. 무등일보 이윤주) <http://www.honam.co.kr/detail/G3XMjU/600542>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단'(연구책임자 지병근)이 '조선대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안병철·이건근 공동연구원이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이후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이어 조선대 이대용 부총장, 변재영 기획조정실 부실장, 양고승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준연 총학생회장 등 대학의 주요 구성원 대표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병근 교수는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지닌 조선대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변화와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이번 실증연구를 최선을 다 해 진행하고 있다”며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올해 초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사업에 선정됐다. 공영형사립대는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고,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 용역사업에 선정된 사립대학에 공영형사립대의 핵심요소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선대 연구단은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법학 분야 등에서 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으며 학내 재정분야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 학내 구성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연구(FGI)를 진행할 예정이다.

5. “조선대, 시민에게 이사회 개방해야 민립대 정체성 찾아”

(20.04.15. 한겨레 김용희)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37125.html>

광주 조선대학교가 국내 첫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참관제도 등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선대학교는 이달 10일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실증연구단' (연구단)이 연 첫 공청회 내용을 공개했다. 책임연구원을 맡은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 발표에서 조선대는 사립대와 민립대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사립화 강화를 지지하는 쪽은 재정기여도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학교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반면 민립화(공영형 사립대 전환)를 주장하는 쪽은 시민에게 이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사립화 강화에 대해 또다시 학내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민립화는 이사진이 시민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지 교수는 “학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필요하지만 이사회 참관제도,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지역 자문단 구성, 이사회 중임 제한 등을 통해 이사진 책임을 강화하고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선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교육

부가 발주한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20~25%를 지원받는 정책이다.

6. 조선대학교 이사회, 사립대 사상 최초 ‘시민 참관인’ 시도

(20.04.24. 광주일보 채희중)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87706872694371006>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시민 참관인’ 시도 (출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한국 사립대학 최초로 이사회 회의를 시민사회에 공개했다.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2020년 ‘제5차 이사회 회의’ 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이사회 공개는 조선대 이사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립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5·18기념재단의 박진우 연구실장과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태운 사무국장이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조선대는 최근 ‘공영형 사립대’ 로의 전환을 포함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대학의 취지를 살려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7. ‘공영형 사립대’ 다시 수면 위로…실현 가능성에 촉각

(20.05.11.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048>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그동안 잠잠했던 공영형 사립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지대와 조선대에 이어 실증연구 대학으로 선정된 평택대가 지난 1일 공영형 사립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다. 이에 3개 대학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영형 사립대 실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핵심 국정과제다. 일부 사립대의 왜곡된 족벌경영과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내 이사회의 상당 부

분을 공익이사로 선임, 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이 지나도록 예산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예 정책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공영형 사립대를 기다린 대학 입장에서는 정책연구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직 정책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로 읽힌다.

.....<중략>.....

■실질적 공영형 사립대 전환까지는 갈길 멀어...물꼬 터 기조는 이어가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6월말 정책연구 기간이 끝나지만 진행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 이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학진흥재단과도 별도의 가이드라인 모델 연구를 하고 있어 3개 대학의 정책연구를 참고,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립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모델에 대해서는 정부 내·외부의 반대가 있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겠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며 “정책연구를 비롯한 기타 연구 모델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인 움직임을 주문하고 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 없는 지원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면서 “한국의 사립대가 존립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사립대를 공영화한다는 흐름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교육 문제가 정치화돼 있어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뒤집히는 건 시간문제”라면서 “꼭 공영형 사립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장기 플랜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조선대가 아니더라도 정책연구에 그치지 않고 공영형 사립대의 후속 모델이나 프로그램 등이 이어져야 한다. 최소한 모델 대학 운영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힘 모으기로

(20.06.01. 연합뉴스 전승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33200054?input=1195m>



조선대학교-상지대학교 협약 단체사진 (출처: 조선대학교)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조선대학교와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과 상지대 정대화 총장 등 양 학교 관계자들은 1일 조선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포함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 교수 및 학생의 학술 활동 교류 ▲ 학술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이다. 또 ▲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환 ▲ 시설물의 상호 이용 ▲ 학생 해외 봉사,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동운영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일부 사립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사립대는 공익형 이사를 두는 등 반 국립처럼 운영하는 형태를 이룬다. 현재 조선대, 상지대, 평택대 등 3개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 자체 용역을 실시 중이다. 정대화 총장은 “광주는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이한 해에 방문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에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임시이사 체제, 구재단 문제 등 조선대와 상지대는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으며, 이제 양 대학은 아픈 역사를 딛고 공영형 사립대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한다”면서 “양 대학이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견인해 나가자”고 말했다.

9. ‘지원’ ‘감독’ 함께 늘려 사학 공공성 제고

(20.06.06. 단비뉴스 박영신 임지윤 이나경 박두호 강찬구)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9>

지난달 1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대에서 ‘대학의 질적 향상과 평택대 공영형사립대 모델’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선재원(공영형사립대 추진위 연구대표)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과잉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고등교육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라고 소개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대신 이사진의 절반기량을 외부의 공익형 이사로 선임해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심포지엄에서 박지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방안’ 발제를 통해 “평택대는 국립대 수준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교수·직원·학생·회계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평택시와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남부 지역에 기여하는 공공 고등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시의 상지대도 지난달 4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결의했다. 정대화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방침에 적극 호응해 이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와 조선대도 지난 4월 10일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선대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 을 주제로 첫 공청회를 열었다.

평택대, 상지대, 조선대는 국내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가장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용역사업에 선정돼 연구 예산 각 1억5천만 원씩을 지원 받았다. 이들 대학은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교내 구성원과 일반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전문가·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국내 대학에서 사립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힘들고, 교육의 질과 대학의 책임성도 높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전국 4년제 일반대 191곳 중 사립대는 157곳으로 81.7%를 차지했다. 재학생 수로 보면 전체 일반대 재학생 200만1643명 중 사립대 재학생은 153만9706명으로 7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 과 ‘감독’ 을 함께 늘려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구상이 나온 것이다. 사립대 지배구조를 공영화하는 방식으로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공공 이사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강한 방식’, 대학평의회(교원·직원·학생·동문 대표 등으로 구성)에 학교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중간 방식’, 대학운영위원회(교원·학생·직원 대표, 이사회·교육부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에 예·결산 심의권 및 인사·재정·회계 의결권을 부여하는 ‘약한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대학의 공공성을 높여, 정부 책임 하에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한국의 사립대 편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1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정부의존형 사립교육기관 포함)의 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 캐나다의 경우 100%, 덴마크는 99%, 프랑스는 82%에 이른다. 국공립비중이 절반이 되지 않는 곳은 한국(25%), 일본(25%), 칠레(20%) 뿐이었다. 자유시장 논리가 지배적인 미국도 국공립대학 비율이 63%나 된다. 미국은 1862년 주립대 설립을 위해 국유지의 무상 증여를 규정한 ‘모릴법’ 제정 이후 공공 지원을 받는 주립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주립대의 한 해 등록금은 지역 주민 기준으로 6천~1만5천 달러 수준이고, 사립대는 4만~6만 달러 정도다.

교육부 공영형사립대학정책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12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해방 이후 70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자기 대학 서열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는 사립대 위주로 운영되면서 학벌사회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입시경쟁과 막대한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왜곡된 교육구조를 갖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 하에서 제대로 된 학문, 교육, 연구는 기대할 수 없다” 며 “이 상태를 해결하려면 서열화한 대학체제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독립 사립학교의 비중을 줄여 공적이고 질 높은 고등교육을 펼쳐야 한다” 고 말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의 주된 목표는 국가가 사립대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교육 및 연구, 대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학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사립대는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데, 학생 인구 감소로 갈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공적 재원을 들여 고등교육 상황평준화를 이루고 그에 알맞은 공적 책임을 대학에 지우겠다는 구상이다. 임 교수는 “지금 대학별로 교육여건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서울 소재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서열이 매겨져 있는데, 대학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대학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경쟁은 완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통해 각 지역 주요 사립대의 교육수준을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며 “그래서 50~60개 대학이라도 상향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이 대학서열에 목매달고 입시 때문에 쓸모없는 에너지를 빼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라 예측한다” 고 덧붙였다.

“공영형 사립대는 특히 각 지역 대학의 수준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역 대학을 나와도 학벌 차별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그 지역에 취업해 자리 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학을 나와 그곳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 지역 대학을 나오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수준을 높여줘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출신이 차별 없이 입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 공영형사립대실증연구단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교수는 지난 4월 24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사립대의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늘어난 재정으로 교수를 더 뽑고 등록금을 더 내리는 등 구체적으로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한 가운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학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지역대학 출신들이 지역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정책의 의의(2020)’ 논문에서 공영형 사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란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역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는 응용학문 중심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과 역할을 특성화·전문화한 통합(연합)네트워크를 형성해 집중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지역의 국공립대학과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울 일극 중심의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해소하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지역대학의 총역량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역량으로 묶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은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참여 대학이 입시, 교육과정개발, 교수인사, 학위수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대입경쟁을 줄이고 대학서열을 완화하며, 전문적이고 특성화한 대학교육을 실현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학자별로 공영형 사립대를 더 강조하거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더 강조하는 경우는 있지만, 두 아이디어는 대체로 같은 목적을 지니고 함께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할 ‘패키지’로 여겨진다. 김명연 교수는 지난달 10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공영형 사립대는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라는 정책과 연결돼 있다”며 “따로 떨어져 있는 각 개별 대학의 역량을 국가 전체의 총 역량으로 엮어내는 게 바로 통합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대학이 서열화 돼있고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는 지방 사립대 혼자 결코 제대로 된 전문화·특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 평생교육중심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권역별로 연합해 교수충원과 교육과정에 역량을 모으고 집중 육성하면 카이스트(KAIST)나 포스텍(포항공과대)처럼 지방대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영형 사립대 논의에도 반대 또는 우려가 있다. 사립대를 사적 소유물로 보고 공공의 개입을 개인 재산권 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들여 부실대학을 지원해주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 부실대학은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두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성인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52.3%)는 의견이 찬성한다(28.5%)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 김명연 교수는 “부실대학의 상당수는 서울 중심 구조로 인한 지역불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 때문에 애초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생겨난 결과이므로, 이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낙인찍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학들을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므로 위기대학 정책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전체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홍 교수는 “우리나라도 유럽과 북미 등 대학 공공성이 높은 나라들처럼 국가가 대학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지고,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적 고등교육’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과 정책을 통해 불평등,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영형 사립대와 대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 완화와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는 공약을 제시했고,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어 교육부가 2019년 예산안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812억 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며 전액 삭감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87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확보한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 예산 10억 원 중 기획재정부가 불용 처리한 3억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활용해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임재홍 교수 등의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2018)’ 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따라 교비의 50%를 교부할 경우 일반 사립대 30곳, 전문대 20곳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데 연간 1조8380억 원이 들 전망이다. 또 사립대 10개와 전문대 5개를 전환하는 경우 5천803억 원의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방 대학생들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 동아대 문기범(22·전자공학) 씨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추진돼 학교가 더 투명해지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 학교를 믿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며 “정부 지원이 늘면 학생들 등록금 부담도 낮아지고 지방 사립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 환영한다” 고 말했다. 충북 건양대 이준성(22·기계공학)씨는 “공영형 사립대가 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주변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언론과 전문가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며 “학생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총학생회 등을 통해 학교나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10. “대학교육 질 약화 . . . 정부 지원 절실”

(20.06.30. 조기철)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3511857302834007>



학술세미나 현장 사진 (사진제공: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은 최근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의 연구는 공영형사립대의 핵심 요소를 사립대학

현장에 도입하고 그 결과를 연구하여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지난 3월부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연구단(연구책임자 지병근) 이외에 한지영(조선대 법학과) 김춘식(동신대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과), 김정연(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연구경향과 핵심 요소의 효과(문헌 분석 및 실증분석)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양적 연구)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인식(질적 연구)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이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최근 정부가 국립대학만 재정지원을 두배 가까이 증액하면서 대학교육의 80% 정도를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교육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공영형사립대 모델이 시행될 경우 조선대를 포함한 사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학의 비전 제시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주문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개별 사학이 아니라 전체 사학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진하려면 전국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단은 회의 장면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신청자들에게 공개했으며, 회의 동영상은 편집을 거쳐 차후 구성원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단의 최종보고서는 당초 6월 예정이었으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구기간을 연장했다. 연구단은 최종보고서를 내달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1. 조선대 3년 만에 정이사 체제 전환...공영형 사립대 발판

(20.07.01. 김용희)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51776.html>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했던 광주 조선대학교가 3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조선대는 “교육부가 오늘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이사 9명의 취임을 승인하면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체제가 본격 시작됐다”고 1일 밝혔다. 제3기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이사는 김무영 목포기독교치과의원 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백란 호남대 교수,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공공혁신본부장, 신윤숙 전남대 교수, 이문수 전남도민일보사 대표, 임동운 조선대 명예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조은정 목포대 교수로 구성됐다. 제3기 정이사의 임기는 2023년 6월30일까지 3년이며 3일 첫 이사회 회의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학원민주화를 통해 1988년 옛 경영진이 물러난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었다. 하지만 옛 경영진의 측근 이사들이 포함된 제2기 정이사들과 학내 구성원간 갈등으로 2017년 11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사학분쟁위원회는 올해 2월 제168차 전체회의에서 조선대 정이사 후보자 22명을 추천받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정이사 선임 절차를 본격 시작했고 5월25일 제17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개방 이사 3명을 포함한 정이사 9명을 선임했다.

조선대는 이번 제3기 정이사 취임으로 학교 정상화와 함께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제3기 정이사 선임으로 민립대학으로 설립정신을 구현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12. 조선대 3기 이사회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20.07.03. 장덕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3145100054?input=1195m>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중 기자 = 조선대학교는 3일 제3기 이사회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김이수 전 헌법 재판관을 선출했다. 회의에는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전 재판관을 선출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대는 2년 7개월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하고 최근 정이사 체제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학원 민주화를 통해서 1988년 구 경영진이 물러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구 경영진의 측근 이사들이 포함된 제2기 정이사들과 구성원 간 갈등으로 2017년 11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조선대는 “이사장 선출과 함께 제3기 이사회가 대학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고 공영형 사립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 상지대학교, 대구대학교, 조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포럼 개최
 (20.07.10. 장정안)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43>



포럼 현장사진 (출처: 교수신문)

상지대학교(총장 정대화), 대구대학교, 조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는 7월 9일(목)오후 4시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공영형 사립대, 그 실행 방안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4개 대학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참석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참여 4개 대학의 총장 인사말과 상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각 공영형 사립대 운영의 효과성 연구내용의 발표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 교수(전 성신학원 이사)의 논평이 진행되었으며, 공영형 사립대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대학의 대란도 문제이지만, 대학은 대학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인들의 자성 또한 필요하다. 현재 낡은 사립대학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 낡은 패러다임은 시간이 흘러 가면서 없어지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립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낡은 대학의 문화인 비리대학, 학생과 구성원이 홀대 받는 문화가 변화하여야 한다. 대학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 4개 대학이 사립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함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영형 사립대 실현을 위한 협력과 추진 방안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 하다고 말하였다.

14.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육성해야”

(20.07.20. 김인수)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95231295361568018>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출처: 광남일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 에서 패널로 참석한
 조선대 민영돈 총장은 “조선대는 1988년 1·8항쟁을 통해 민주화된 이후 급속도의 발전을 이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공영형 사립대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총장은 이어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고등교육 담론의 프레임이 전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안현호 대구대 교수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주제로, 방정근
 상지대 교수가 공영형 사립대학 현실화 과정을 상지대 실증연구 중심으로 발제했다. 2부에서는
 조승래 청주대 명예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영돈 조선대 총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박거용 상명대
 명예교수, 김명환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조선대 출신이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운영덕 위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의 육성은 기존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고 강조했다.

.....<중략>.....

이날 토론회는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단을 비롯해 상지대 연구단, 평택대 연구단,
 서동용·운영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서열구도의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올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사업’ 을 조선대, 상지대, 평택대와
 진행하며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다.

15. 지역과 함께 . . .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선도

(20.08.09. 이운주) <http://honam.co.kr/detail/G3XMjU/610477>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제공: 조선대)

지역 공영형 사립대 선도를 위한 조선대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충장로와 첨단, 완도 등 3 곳에 거점센터를 개설하고 도심 활성화, 청년기업 지원 등 지역과의 동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완도 청년기업 '꿈틀 프로젝트'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 제품이 나와줘야 합니다.“ “장아찌를 캠핑용으로 소포장 묶음 판매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비싼 재료만 고수하지 말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시장 공략에 좋습니다.“

지난 6일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 내 완도산학협력거점센터.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완도 꿈틀 프로젝트'에 참가한 완도지역청년기업협의회와 산학협력단 교수들이다. 사업단은 완도 신지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에 완도산학협력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청년 기업 30곳 이상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6월 16개 지역 청년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리고 '완도 꿈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시장진입의 높은 문턱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한차례씩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해조류 가공·판매, 양식기자재 생산, 일반 소매업 등 업종도 다양하다. 사업단은 CJ, CU 등 대기업 출신, 학과중심 교수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기업들이 품고 있는 애로사항을 풀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시제품 개발과 관련 대기업 2곳 탐방,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 그리고 내년에 열릴 국제해조류박람회 참가를 위한 시제품 생산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 aT 등과 연계해 해외 수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산학협력단은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완도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의 대표주자로 성장, 후배 청년기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멘토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충장로 상권 부활을 위하여

조선대 링크플러스(LINC+)사업단은 광주 동구 충장로1가 조선대 총동창회 건물에 산학협력거점센터 설치공사를 진행중이다. 다음달 초 개소될 이곳은 사업단과 충장로 상인회가 힘을 합쳐 구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공영형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점 공간이다. 지난달 '충장로 상권활성화와 충장로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단과 상인회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멘토-멘티 프로젝트'다. 충장로 4·5가 주단의 거리를 터전으로 수 십년을 살아온 장인들과 조선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멘토-멘티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단의 거리 포목점에서 30~40년 종사해 온 장인들이 학생들에게 원단을 고르고 구입하는 방법부터 재봉질, 바느질 등을 직접 전수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오는 10월 충장로축제에서 선보일 패션디자인학과 졸업패션쇼 무대에 오른다. 무엇보다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광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가 크다. 충장로 점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오래된 가게' 59곳을 안내하는 지도를 조선대 미대 교수들과 제작해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점센터에서는 1인 미디어 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화 제작, 충장로 상인과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티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들을 통해 충장로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도시의 중심 충장로 부각을 위해 신개념 외국어교육, 무역상담을 위한 번역실 운영, 트레일 관광을 위한 통실 운영, K-컬처의 얼굴 '충장로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또 충장로 소상공인과 조선대 학생들간 제휴할인을 위한 '원-원 협약'도 진행된다.

◆첨단·하남산단 맞춤형 기업 컨설팅

첨단지구 정부종합청사 건너편에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에 있는 첨단산학협력거점센터는 첨단·하남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위한 공간이다. 캠퍼스 입주기업 28곳을 중심으로 대표자와 종사자 교육을 전담한다. 또 첨단·하남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조선대 창의 자산을 활용해 해당기업에 대한 맞춤형 경영·기술·디자인·포장·물류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ICC(Industry Cooperation Center)와 연계해 기업과 협업 프로세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조선대 산학협력단 김종원 교수는 “조선대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목표로 대학의 전문인력을 거점센터 내 배치해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충장로 상권 부활과 지역 기업들을 위한 지원에 조선대의 자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부록 1> 추진 일정

사업명	순번	일시	장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비고
연구단회의	1	20.02.25.	사회대 공용세미나실	8	추진 일정 논의	
교육부 출장	2	20.03.06.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6	연구 전반에 관한 교육부 고지 및 요청사항 논의	
교내 간담회	3	20.03.09.	본관 소회의실	13	가칭 ‘재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연구단회의	4	20.03.12.	경상대 토크존	9	설문조사 실시계획안 및 설문항 초안 공유	
연구단회의	5	20.03.16.	빌라로마	6	패널조사 계획 진행 경과 및 설문조사지 수정 논의	
연구단회의	6	20.03.23.	사회대 공용세미나실	6	사전설문지 논의 및 재정 관련 기구 비교 분석안 논의	
이사회	7	20.03.26	본관 이사장실	9	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가결	
연구단회의	8	20.04.06.	경상대 토크존	7	응답자용 조사 설문항 논의 및 심층인터뷰 계획 및 질문 세부 사항 논의	
교내 공청회	9	20.04.10.	본관 소회의실	14	재정위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학교법인이사회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사전 설문조사	10	20.04.17.	교내		교내 구성원 설문조사 시작(20.5.14.마감)	
이사회	11	20.04.23.	본관 이사장실	9	실증연구단 이사회 참관	<참관인> - 연구단: 최선, 조운형 - 외부: 이태윤(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박진우(5·18

						기념재단 연구소 실장)
이사회 참관 인터뷰	12	20.04.23.	사회과학연구 원 세미나실	4	사전/사후 인터뷰	이태운(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박진우(5·18 기념재단 연구소 실장)
연구단 회의	13	20.04.27.	경상대 토크존	5	일정 논의 및 설문항 전반 논의	-
재정위원 회	14	20.05.08.	본관 소회의실	12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사후 보고 및 2020년도 추경자금예산안 논의	연구단 참관 (지병근, 조운형, 최선)
재정위원 회 인터뷰	15	20.05.08.	본관 2114	5	사전/사후 인터뷰	-
긴급재정 위원회	16	20.05.18.	본관 소회의실	16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익 사업 확대 방안	연구단 참관 (지병근, 조운형, 최선)
이사회	17	20.05.21.	본관 이사장실	17	실증연구단 이사회 참관	<참관인> - 연구단: 지병근, 최선, 조운형 - 외부: 김용태(광주전자공고 교장), 김건오(시교육청 노조위원장)
이사회 참관 인터뷰	17	20.05.21.	본관 2105	4	사전/사후 인터뷰	김용태(광주전자공고 교장), 김건오(시교육청 노조위원장)
협의	18	20.05.29.	교육부	5	교육부 방문	조선대, 상지대, 평택대, 사학진흥재단 연구단 관계자
협의	19	20.06.01.	조선대	2	상지대 조선대 방문 재정위원회 심층인터뷰	-
사후 설문조사	20	20.06.02.	교내		교내 구성원 설문조 사 시작(20.6.15.마감)	-

협의를	21	20.06.18.	조선대	5	재정위원회 관련 기획조정실 협의	-
발표/협 의	22	20.06.24.	조선대	7	사학진흥재단 연구단 조선대 경험 청취	-
발표	23	20.06.25.	조선대	-	실증연구 학술세미나	
발표	24	20.07.09.	성신여대	-	실증연구결과 발표	대구대, 상지대, 조선대, 성신여대 관계자
참관/협 의	25	20.07.16.	국회도서관	-	상지대 실증연구결과 발표 참관, 민영돈 조선대총장 토론	실증연구단 후원 학술세미나
FGI	26	20.07.14.	총학생회실	9	학생	-
FGI	27	20.07.15.	직원노동조합 사무실	8	직원	-
시민 간담회	28	20.07.22.	광주시	19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
시민 간담회	29	20.07.24.	참여연대 사무실	-	참여연대 활동가	-
추가 설문조사	30	20.07.23.	광주전남/ 전국	-	시민대상 추가조사(20.07.28.)	-
교내 보고회	31	20.08.06.	조선대 본관 회의실	-	이사장 외 이사8인, 법인 사무처직원	-
보고서	32	20.08.18.	-	-	초안 교육부 제출	-
교내 보고회	33	20.08.27.	조선대 본관 소회의실	-	총장, 부총장, 실처장	-
보고서	34	20.09.16.	-	-	수정안 교육부 제출	-

<부록 2-1> 사전조사 설문 문항

가. 교원·직원·학생 대상 설문지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핵심요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공적인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만을 사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사전, 사후 2차례** 진행되는 **패널 조사**로, 이에 모두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을 작성하신 분께는 소정의 답례를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

책임연구원: 지병근(교수/ 정치외교학과)

공동연구원: 조윤희(교수/ 경영학부)

황소미(연구원) 062) 230-6706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문 1. 선생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교원(☞선문2로)
- ② 직원(☞선문4로)
- ③ 학생(☞선문6으로)

<교원 응답>

선문2. 귀하는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 ① 글로벌인문대학
- ② 경상대학
- ③ 미술체육대학
- ④ 공과대학
- ⑤ IT융합대학
- ⑥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 ⑦ 법사회대학
- ⑧ 의과대학
- ⑨ 치과대학
- ⑩ 약학대학
- ⑪ 기초교육대학
- ⑫ 미래사회융합대학
- ⑬ 사범대학
- ⑭ 대학원 및 사업단
- ⑮ 기타

선문3. 귀하의 직위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조교수
- ② 부교수
- ③ 교수

<직원 응답>

선문4. 귀하는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 ① 각 개별 단과대학
- ② 기획조정실
- ③ 교무처/교육혁신원
- ④ 연구처/산학협력단
- ⑤ 취업학생처
- ⑥ 입학처
- ⑦ 총무관리처
- ⑧ 대외협력처
- ⑨ 대학원
- ⑩ 부속기관(중앙도서관, 정보전산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예비군연대, 미술관, 박물관 등)
- ⑪ 특별사업기구(링크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센터 등)
- ⑫ 기타

선문5. 귀하의 직위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팀장
- ② 직원

<학생 응답>

선문6. 귀하는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 ① 글로벌인문대학
- ② 경상대학
- ③ 미술체육대학
- ④ 공과대학
- ⑤ IT융합대학
- ⑥ 자연과학 · 공공보건안전대학
- ⑦ 법사회대학
- ⑧ 의과대학
- ⑨ 치과대학
- ⑩ 약학대학
- ⑪ 기초교육대학
- ⑫ 미래사회융합대학
- ⑬ 사범대학
- ⑭ 대학원 및 사업단
- ⑮ 기타

선문7.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투명하지 않다
- ② 별로 투명하지 않다
- ③ 투명한 편이다
- ④ 매우 투명하다

문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 ②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 ③ 민주적인 편이다
- ④ 매우 민주적이다

문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8.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문8-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8-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문8-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문8-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문8-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8-6. 대학의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문9.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1)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 2) 운영의 투명성 |
| 3) 민주적인 운영 | 4)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 5)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6)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 |
| 7) 기타 (_____) |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학에 정부가 대학의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에서는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공익핵 인사가 참여하는 재정 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10.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전혀 알지 못한다 ___ ② 일부만 알고 있다
___ ③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 ___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1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최대 3개까지 표기해주세요

- ___① TV, 라디오
- ___② 신문, 잡지
- ___③ 학교 홈페이지
- ___④ 행사(토론회, 공청회 등)/ 홍보자료
- ___⑤ 포스터, 현수막
- ___⑥ 지인/동료 등
- ___⑦ SNS (카카오톡, Facebook, 트위터 등)
- ___⑧ 인터넷(뉴스, 블로그 등)
- ___⑨ 기타()

문12.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___②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___③ 공감하는 편이다
- ___④ 매우 공감한다

문13.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① 적극 반대한다
- ___② 반대하는 편이다
- ___③ 찬성하는 편이다
- ___④ 적극 찬성한다

문14.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공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참여 보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대학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		→				
	1	2	3	4	5	6	7
문14-1.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문14-2.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문14-3.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문15.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		→				
	1	2	3	4	5	6	7
문15-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익형 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문15-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문15-3. 이사회의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문15-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문15-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문15-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	--	--	--	--	--	--	--

문16.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보 통 ← 이 다			매 우 → 그렇다	
	1	2	3	4	5	6	7
문16-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문16-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문17.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보 통 ← 이 다			매 우 → 그렇다	
	1	2	3	4	5	6	7
문17-1.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17-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7-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문17-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7-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18. 재정위원회 도입이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보 통 ← 이 다			매 우 → 그렇다	
	1	2	3	4	5	6	7
문18-1. 대학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된다							
문18-2.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문18-3. 대학 재정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문18-4. 대학 재정 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문19.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보통 ← 이 다			매 우 → 그렇다	
	1	2	3	4	5	6	7
문19-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19-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문19-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문19-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 화해야 한다.							

문20.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동일한 응답자에 대한 2차례 조사가 실시되며, 소정의 사례를 위해 선생님의 기초정보를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문2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① 남성

___② 여성

문2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세요.

출생연도 : ()년

출생연도는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를 입력해 주십시오.

♣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나. 시민 대상 설문지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인식조사

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세요. _____년 (대상자: 만19세 이상)

문3. 귀하의 거주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지도 2개 삽입(대상자: 광주)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핵심요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공적인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만을 사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응답이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사전, 사후 2차례 진행되는 **패널 조사**로, 이에 모두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을 작성하신 분께는 소정의 답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
 책임연구원: 지병근(교수/ 정치외교학과)
 공동연구원: 조윤형(교수/ 경영학부)
 062) 230-7396
 황소미(연구원)
 062) 230-6706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투명하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투명하지 않다 |
| <input type="checkbox"/> ③ 투명한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투명하다 |

문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
| <input type="checkbox"/> ③ 민주적인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민주적이다 |

문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 <input type="checkbox"/> ③ 그런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그렇다 |

문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부족하다 | <input type="checkbox"/> ② 부족한 편이다 |
| <input type="checkbox"/> ③ 충분한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충분하다 |

문5.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input type="checkbox"/> ③ 필요한 편이다 | <input type="checkbox"/> ④ 반드시 필요하다 |

문6.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참여하는 것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6-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6-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							

조선대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조선대학교의 운영전반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7-1.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문7-2.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문7-3.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청, 지역기반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문8.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8-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8-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문8-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문8-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문8-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8-6. 재정운영에 대한 별도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문9.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를 매겨주세요

- | | |
|---------------------|--------------------------|
| 1) 대학 구성원들과 의사소통 | 2) 운영의 투명성 |
| 3) 민주적인 운영 | 4)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 5)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6) 설립이념 구현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 |
| 7) 기타 (_____) |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학에 정부가 대학의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에서는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공적 인사가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10.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전혀 알지 못한다 ___ ② 일부만 알고 있다
 ___ ③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 ___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문1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최대 3개까지 표기해주세요

- ___ ① TV, 라디오 ___ ② 신문, 잡지
 ___ ③ 학교 홈페이지 ___ ④ 행사(토론회, 공청회 등)/ 홍보자료
 ___ ⑤ 포스터, 현수막 ___ ⑥ 지인/동료 등
 ___ ⑦ SNS (카카오톡, Facebook, 트위터 등) ___ ⑧ 인터넷(뉴스, 블로그 등)
 ___ ⑨ 기타(_____)

문12.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의 취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___ ②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___ ③ 공감하는 편이다 ___ ④ 매우 공감한다

문13.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적극 반대한다 ___ ② 반대하는 편이다
 ___ ③ 찬성하는 편이다 ___ ④ 적극 찬성한다

문14.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공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참여 보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대학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4-1.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문14-2.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문14-3.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문15.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5-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적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문15-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문15-3. 이사회의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문15-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문15-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문15-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6.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6-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문16-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문17.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7-1. 재정위원회에 대한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17-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7-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해야 한다							
문17-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7-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18. 재정위원회 도입이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8-1. 대학 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된다							
문18-2.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도움된다							
문18-3. 대학 재정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된다							
문18-4. 대학 재정 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도움된다							

문19.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9-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19-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문19-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문19-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문20.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2> 사후조사 설문 문항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2차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핵심 요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1차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단은 지난 2개월 동안 (1) 재정위원회 제도 도입 및 운영, (2) 이사회 외부 인사 참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공영형 사립대의 핵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공적인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립된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사전, 사후 2차례 진행되는 패널 조사로, 이에 모두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을 작성하신 분께는 소정의 답례를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

책임연구원: 지병근(교수/ 정치외교학과)

공동연구원: 조운형(교수/ 경영학부)

황소미(연구원) 062) 230-00006706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문 1. 선생님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___ ① 교원(☑선문2로)
- ___ ② 직원(☑선문4로)
- ___ ③ 학생(☑선문6으로)

<교원 응답>

선문2. 귀하는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 ___ ① 글로벌인문대학
- ___ ② 경상대학
- ___ ③ 미술체육대학
- ___ ④ 공과대학
- ___ ⑤ IT융합대학
- ___ ⑥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 ___ ⑦ 법사회대학
- ___ ⑧ 의과대학
- ___ ⑨ 치과대학
- ___ ⑩ 약학대학
- ___ ⑪ 기초교육대학
- ___ ⑫ 미래사회융합대학
- ___ ⑬ 사범대학
- ___ ⑭ 대학원 및 사업단
- ___ ⑮ 기타

선문3. 귀하의 직위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___ ① 조교수
- ___ ② 부교수
- ___ ③ 교수

<직원 응답>

선문4. 귀하는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 ___ ① 각 개별 단과대학
- ___ ② 기획조정실
- ___ ③ 교무처/교육혁신원
- ___ ④ 연구처/산학협력단
- ___ ⑤ 취업학생처
- ___ ⑥ 입학처
- ___ ⑦ 총무관리처
- ___ ⑧ 대외협력처
- ___ ⑨ 대학원
- ___ ⑩ 부속기관(중앙도서관, 정보전산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예비군연대, 미술관, 박물관 등)
- ___ ⑪ 특별사업기구(링크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센터 등)
- ___ ⑫ 기타

문15-3. 이사회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문15-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문15-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문15-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6.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보 통 ← 이 다			매 우 → 그렇다	
	1	2	3	4	5	6	7
문16-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문16-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문17.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보 통 ← 이 다			매 우 → 그렇다	
	1	2	3	4	5	6	7
문17-1.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17-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 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7-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문17-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7-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18. 재정위원회 도입이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록 2-3> 광주전남 시민대상 설문 문항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인식조사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세요. _____년 (대상자: 만19세 이상)

SQ3. 귀하의 거주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지도 2개 삽입(대상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① 광주광역시 ② 전라남도-중소도시, ③ 전라남도-읍/면지역

본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핵심요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공적인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만을 사용될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
 책임연구원: 지병근(교수/ 정치외교학과)
 공동연구원: 조운형(교수/ 경영학부)
 062) 230-7396
 황소미(연구원)
 062) 230-6706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투명하지 않다
- ② 별로 투명하지 않다
- ③ 투명한 편이다
- ④ 매우 투명하다

문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 ②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 ③ 민주적인 편이다
- ④ 매우 민주적이다

문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한 편이다
- ③ 충분한 편이다
- ④ 매우 충분하다

문5.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한 편이다
- ④ 반드시 필요하다

문6.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참여하는 것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6-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6-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1-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적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문11-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문11-3. 이사회에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문11-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문11-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문11-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2.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2-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문12-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문13.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3-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13-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문13-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문13-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문14-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광주광역시 혹은 전라남도의 발전을 평가할 때 다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소득 증진	①	②	③	④
(2) 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3) 집값 상승 억제	①	②	③	④

(4) 교육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5) 교통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6) 문화행사 확대	①	②	③	④
(7) 환경 개선(대기, 수질)	①	②	③	④
(8) 사회복지 확대	①	②	③	④
(9) 보건의료 개선	①	②	③	④

문14-2 지역발전을 위해 조선대학교를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조금 중요	매우 중요
1	2	3	4

광주, 전남지역 대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1.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은 어느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선대, ② 광주대, ③ 호남대, ④ 동신대

문15-2.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대학은 다음 중 어느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와 2순위

- ① 조선대, ② 전남대 ③ 광주대, ④ 호남대 ⑤ 동신대, ⑥ 목포대, ⑦ 순천대

문16.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에 다음의 대학들이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조금 기여함	매우 많이 기여함
문16-1. 조선대	1	2	3	4	5
문16-2. 전남대	1	2	3	4	5
문16-3. 광주대	1	2	3	4	5
문16-4. 호남대	1	2	3	4	5
문16-5. 동신대	1	2	3	4	5
문16-6. 목포대	1	2	3	4	5
문16-7. 순천대	1	2	3	4	5

문17. 앞으로 10년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에 다음의 대학들이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조금 기여함	매우 많이 기여함
문17-1. 조선대	1	2	3	4	5
문17-2. 전남대	1	2	3	4	5
문17-3. 광주대	1	2	3	4	5
문17-4. 호남대	1	2	3	4	5
문17-5. 동신대	1	2	3	4	5
문17-6. 목포대	1	2	3	4	5
문17-7. 순천대	1	2	3	4	5

조선대학교의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8-1. 조선대학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전혀 모른다
- ___ ②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
- ___ ③ 조금은 알고 있다
- ___ ④ 많이 알고 있다

문18-2.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적극 반대한다
- ___ ② 반대하는 편이다
- ___ ③ 찬성하는 편이다
- ___ ④ 적극 찬성한다

문19. 조선대학교의 운영전반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9-1.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문19-2.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문19-3. 조선대학교는 광주광역시청, 지역기반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문20.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20-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20-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문20-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문20-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문20-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20-6. 재정운영에 대한 별도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문21.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21-1. 재정위원회에 대한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21-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21-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해야 한다							
문21-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21-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통계처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 4. 전문대학교 재학/졸업 5.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6.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졸업
- 7.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이상

DQ2. 선생님의 가족 한 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가족의 월급·상여금·은행이자 모두 포함)

- 1.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 7. 600~699만원 8. 700~799만원 9. 800~899만원
- 10. 900~999만원 11. 1,000만원 이상

DQ3. 선생님께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층 2. 중상층 3. 중간층 4. 중하층 5. 하층

♣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4> 전국 시민대상 설문 문항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인식조사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를 기입해주세요. _____년 (대상자: 만19세 이상)

SQ3. 귀하의 거주지역을 선택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10	11	12	13	14	15	16	17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세종	

본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핵심요소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공적인 공영형 사립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만을 사용될 것입니다.

조선대학교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

책임연구원: 지병근(교수/ 정치외교학과)

공동연구원: 조운형(교수/ 경영학부)

062) 230-7396

황소미(연구원)

062) 230-6706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투명하지 않다 ② 별로 투명하지 않다
- ③ 투명한 편이다 ④ 매우 투명하다

문2.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②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
- ③ 민주적인 편이다 ④ 매우 민주적이다

문3.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4.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 ③ 충분한 편이다 ④ 매우 충분하다

문5.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 더 추가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반드시 필요하다

문6.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이사회에 공익이사가 참여하는 것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문6-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6-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이사가 참여해야 한다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1-1. 이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 등 공적이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문11-2. 이사회에 외부인사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							
문11-3. 이사회에 이사 정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문11-4. 이사의 중임(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							
문11-5. 총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문11-6.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2.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2-1.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							
문12-2. 지방사립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문13. 공영형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혀 아니다					매 우 그렇다	
	1	2	← 3	4 →	5	6	7
문13-1.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13-2. 도서관, 체육관 등 대학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							
문13-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문13-4.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문14-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광역시/도)의 발전을 평가할 때 다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소득 증진	①	②	③	④
(2) 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3) 집값 상승 억제	①	②	③	④

(4) 교육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5) 교통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6) 문화행사 확대	①	②	③	④
(7) 환경 개선(대기, 수질)	①	②	③	④
(8) 사회복지 확대	①	②	③	④
(9) 보건의료 개선	①	②	③	④

문14-2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일부 사립대학을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조금 중요	매우 중요
1	2	3	4

문15.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문15-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15-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문15-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문15-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문15-5.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15-6. 재정운영에 대한 별도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문16. 사립대학의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문16-1. 재정위원회에 대한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16-2.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학생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6-3. 법률가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해야 한다							
문16-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문16-5.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외부인사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통계처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 4. 전문대학교 재학/졸업 5. 4년제 대학교 재학/졸업 6.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졸업
- 7.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이상

DQ2. 선생님의 가족 한 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가족의 월급·상여금·은행이자 모두 포함)

- 1.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 7. 600~699만원 8. 700~799만원 9. 800~899만원
- 10. 900~999만원 11. 1,000만원 이상

DQ3. 선생님께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층 2. 중상층 3. 중간층 4. 중하층 5. 하층

♣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 [시론]¹⁾

지병근(조선대)

1. 조선대학교의 ‘주인’ 과 ‘대리인’ 의 문제

사립대학교의 이사회는 비록 일반적인 기업에서와 달리 재산권 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학을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권자이자 경영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사립대학교를 기업체에 비유하자면, 법인 이사회는 대학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직원을 임금노동자로 고용하며,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고 교육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립대학교와 다르며 이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주인’ 은 시·도민이며, 이사회는 시·도민의 ‘대리인’ 으로서 경영에 참여할 뿐이다. 이처럼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조선대학교의 경영을 책임진 이사회의 성격이 일반 사립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추상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법적으로 사립대학교이기에 법적 소유권은 시·도민이 아니라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가 대리인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대학교는 이처럼 민립대학과 사립대학이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대학들에 비해 훨씬 심각한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 문제를 안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주인’ 이 누구인지 누가 ‘대리인’ 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임시이사체제와 정이사체제를 반복하는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불안정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1.8항쟁을 통해 대학을 부당하게 사유화하고 교권과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던 ‘박철웅 체제’ 가 종식된 이후에도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사립대학교라는 법적 특성이 충돌하면서 이사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주인’ 과 ‘대리인’ 문제의 해법: ‘사립화’ vs. ‘민립대로의 복원’

1) 조선대학교 재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2020.04.10.)에서 발표.

이러한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의 해법은 크게 두가지이며 이들 모두 학교법인 이사회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는 사립대학교의 특성을 강화하여 ‘순수한’ 사립대로 가는 ‘사립화’ 이고, 다른 하나는 민립대학의 특성을 ‘복원’ 하는 것 혹은 민립대로 전환하는 ‘민립화’ 이다. 그리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정이사 체제로의 이행’ 은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경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립화’ 경로

‘사립화’의 경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이사 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학 경영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들은 다른 대학과 달리 조선대학교가 반복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법적인 주인인 이사회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위를 갖추면 조선대학교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는 이사회가 ‘구경영진’ 이든 누구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면 학내 구성원 단위나 소위 ‘외부세력’ 모두 조선대학교의 안정화를 위협하는 해악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임원직을 부여하는 일반 사기업처럼 재정기여도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믿으며 경쟁이 치열한 교육 시장에서 교육상품의 질을 높여 조선대학교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다.

2) ‘민립화’ 경로

반면, ‘민립화’ 경로를 따르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사회가 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들은 민립대라는 조선대의 역사성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미 민립대라는 가치가 대학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구성원들의 인식에도 내면화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조선대학교의 ‘민립화’는 소유권을 중앙정부 혹은 지방 정부에게 양도하는 국립화나 시립화와는 다르며, 조선대학교 이사회에 시·도민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이사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조선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은 ‘민립화’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려할 때 민립대로의 전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더라도 대학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가 ‘주인’이라는 법적 권한을 버리고 ‘대리인’을 자임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²⁾ 더구나 대학에 대한 법적인 실체가 분명한 국립대나 시립대와 달리 민립대

2) ‘민립화’의 경로를 따르는 이들은 ‘사립화’의 경로를 따르는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선대학교의 역사와 전

의 소유권을 행사할 ‘시·도민을 대표하는 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점은 대학경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다. 대학경영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이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사회에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대학교를 시·도민의 대학으로 전환시키려는 ‘민립화’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조선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만의 대학이 아니라 시·도민의 대학이다. 교수들만의 대학도 노조만의 대학도 학생회만의 대학도 총동창회만의 대학도 아니다. 민립대학이란 시·도민이 주인으로서 대학의 경영자인 이사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민립대학의 이사회에 대한 시·도민의 통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도민이 직접 경영의 주체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를 시·도민의 주요한 구성비(성비, 연령비, 직업비 등)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다. 소위 ‘유사 모형(resemblance model)’에 따라 대표할 사회를 닮은 대의체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민이 직접 이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조선대학교가 민립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민립대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가치보다 이사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한 갈등의 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는 학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사의 일원으로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총장, 혹은 전임 교수, 전임 직원, 총동창회장이 이어나 개방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대학경영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립대로의 복원은 조선대학교의 설립 정신에 따라 ‘주인’인 시·도민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마찬가지다. 물론 조선대학교는 그동안 호남을 대표하는 사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선대학교는 학내갈등으로 지역사회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구재단측’에게 대학을 넘겨주려고 한다거나 그들과 사적으로 연루가 되어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민립대로의 전환 혹은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도민의 대학으로 조선대학교를 경영하려는 의지, 능력, 경험을 갖춘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사회가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참관

개방이사제는 비록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는 점을 비롯한 한계점이 있으나 최소한 학내 구성원이 추천과정에 참여하여 시·도민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비록 이사는 아니더라도 시·도민이 이사회를 참관하며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있다.

2) 학내 구성원 단위 대표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이사회가 대학경영의 주체로서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2010년 정이사체제로 이행한 이후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구성원들과의 갈등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2기 이사회는 직선제의 취지를 위협하며 이사회 추천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을 시도했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구성원들과 충돌했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조선대학교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갈등 관계가 지속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사회가 구성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사들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일부 인사들과의 사적인 회합을 통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급급했고, 공식적인 학내 구성원 대표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들과의 만남은 주로 이미 심각한 갈등상황에 이른 후에나 이루어졌다. 학내 구성원 대표들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이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적과의 동침’으로 여기거나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3)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구성된 ‘정이사체제로의 이행’

2010년 이후 정이사체제로 이행한 이후에도 조선대학교가 안정화되지 못한 원인에는 이사진이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있다. 특히 학내 구성원들과 근본적인 불신관계에 놓여있는 ‘구경영진’ 측 인사들이 참여한 이사회가 대학경영의 정당성(legitimacy)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마치 독재정권이 안고 있는 정당성의 위기처럼 부도덕한 이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는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는커녕 도전을 받아야 했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사회를 학

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역사회 자문단 구성 및 의견 청취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정치권이나 경제계 인사들과 골프 회동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호남에서 민관학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조선대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상과 사명이 있다.

5) 이사회 중임 제한

조선대학교 정관에는 현재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사들의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이사회 내부의 담합을 통해 임기를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선대학교가 정관을 개정하여 중임 혹은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정이사들의 중임은 허용하되 연임을 1회만 허용하는 방안(총 6년 임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임시이사회가 1) 정이사체제로 이행하기에 앞서 정관 규정을 미리 개정하거나 2) 권고안으로 이를 결의하는 방안, 3) 대자협이 정이사체제로 이행한 직후 이사회에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사립학교의 이사임기에 관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정관재개정을 통해 연임제한을 번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임에 관한 제한을 민립대 이사회의 기본 규범으로 확립할 경우 법령개정 이전에도 이사회의 사유화를 예방할 수 있다.

<부록 4-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2020.03.26.)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7.1.1., 207.12.6.>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7.1.1.>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7.1.1.>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5.12.19.>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7.1.1.]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7.12.28.>

②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7.12.28>[본조 신설 207.1.1.]

<부록 4-2-1>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2011.1.~2020.05.)

연번	연도	회의차수	일시	안건	불참위원수	참석률
1	2011	제1차	2011.01.24.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소개 나.2011학년도신편입생등록금고지서가고지에관한건	1	88.9%
2	2011	제2차	2011.01.31.	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	1	88.9%
3	2011	제3차	2011.02.07.	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	1	88.9%
4	2011	제4차	2011.02.10.	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	2	77.8%
5	2011	제5차	2011.03.16.	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	2	77.8%
6	2011	제6차	2011.03.18.	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	4	55.6%
7	2011	제7차	2011.03.22.	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	3	66.7%
8	2011	제8차	2011.03.25.	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심의	4	55.6%
9	2011	제9차	2011.03.31.	가. 201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문 작성 및 서명	1	88.9%
10	2012	제1차	2012.01.12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소개 나.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일정논의	0	100.0%
11	2012	제2차	2012.01.16.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1	88.9%
12	2012	제3차	2012.01.20.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보고사항(대학신·편입생 등록금 가고지에 관한 사항)	1	88.9%
13	2012	제4차	2012.01.30.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보고사항(한국장학재단장학금, 학자금대출관련등록금액정보제출)	2	77.8%
14	2012	제5차	2012.02.06.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1	88.9%
15	2012	제6차	2012.02.13.~02.14.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1	88.9%
16	2012	제7차	2012.02.21.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1	88.9%
17	2012	제8차	2012.02.27.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1	87.5%
18	2012	제9차	2012.03.07.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1	87.5%
19	2012	제10차	2012.03.09.	가. 적정 등록금에 관한 심의	1	88.9%
20	2013	제1차	2013.01.10.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상건례 및 임명장 수여 나.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일정논의	1	88.9%
21	2013	제2차	2013.01.18.	가. 적정 등록금 심의	0	100.0%
22	2013	제3차	2013.01.19.	가. 적정 등록금 심의 및 약대 신입생 등록금 가책정에 관한 건	2	77.8%

23	2013	제4차	2013.0 1.29.	가. 적정 등록금 심의 및 신입입생 등록금 가책정에 관한 건	2	77.8%
24	2013	제5차	2013.0 3.27.	가. 적정 등록금 심의	3	66.7%
25	2013	제6차	2013.1 2.30.	가. 201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나.2013학년도등록금책정결과보고 다.등록금심의위원회개선사항안내	4	55.6%
26	2014	제1차	2014.0 1.06.	가. 등록금심의위원 소개 나.향후회의일정논의	0	100.0 %
27	2014	제2차	2014.0 1.13.	가.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나.적정등록금심의	1	88.9%
28	2014	제3차	2014.0 1.16.	가.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 의결 나.적정등록금심의	1	88.9%
29	2014	제4차	2014.0 1.20.	가. 병원(치과병원 포함)회계 예산(안) 심의 · 의결 나.약학대학신입생등록금심의	1	88.9%
30	2014	제5차	2014.0 1.24.	가. 학부 신입생 등록금 심의	1	88.9%
31	2014	제6차	2014.0 4.02.	가.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	2	77.8%
32	2014	제7차	2014.0 5.23.	가.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방안 나.2014학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2	77.8%
33	2014	제8차	2014.1 1.28.	가. 201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66.7%
34	2015	제1차	2015.0 1.14.	가. 등록금심의위원 소개 나.향후회의일정논의	0	100.0 %
35	2015	제2차	2015.0 1.15.	가.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 나.2015학년도교비회계본예산(안)심의	1	88.9%
36	2015	제3차	2015.0 1.16.	가.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 나.2015학년도교비회계본예산(안)심의	1	88.9%
37	2015	제4차	2015.0 1.22.	가. 2015학년도 등록금(학부, 대학원포함)책정 나.2015학년도교비회계본예산(안)심의 다.병원(치과병원포함)회계2014년도제1회추경예산 (안)및2015년도자금예산(안)심의	1	88.9%
38	2015	제5차	2015.0 2.24.	가. 2014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1	88.9%
39	2015	제6차	2015.0 5.08.	가. 201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나.2014학년도조선대학교병원결산(안)심의 다.2014학년도조선대학교치과병원결산(안)심의	1	88.9%
40	2015	제7차	2015.0 6.04.	가. 2015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2	77.8%
41	2015	제8차	2015.0 7.27.	가. 2015학년도 조선대학교병원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 심의	3	66.7%
42	2015	제9차	2015.1 0.01.	가. 2015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교직원명예퇴직수당1건	3	66.7%

43	2015	제10차	2015.1 2.04.	가. 2015학년도 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 심의 나.2015학년도교비회계제2회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4	55.6%
44	2016	제1차	2016.0 1.15.	가. 2016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나.2016학년도대학및대학원등록금채정 다.향후회의일정논의	2	77.8%
45	2016	제2차	2016.0 1.25.	가. 2016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나.2015년도치과병원회계제1회추가경정자금예산 서(안)심의 다.2016년도치과병원회계자금예산서(안)심의 라.2016년도교비회계자금예산서(안)심의	1	88.9%
46	2016	제3차	2016.0 2.16.	가. 2015학년도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0	100.0 %
47	2016	제4차	2016.0 4.29.	가.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66.7%
48	2016	제5차	2016.0 5.09.	가. 2015학년도 병원회계 결산(안) 심의 나.2015학년도치과병원회계결산(안)심의 다.2015학년도교비회계결산(안)심의	3	66.7%
49	2016	제6차	2016.0 5.31.	가.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	66.7%
50	2016	제7차	2016.1 2.01.	가. 2016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4	55.6%
51	2016	제8차	2016.1 2.30.	가. 2017학년도 의,치의학과(본과) 등록금(안) 채정 나.2017학년도대학원등록금가채정 다.2017학년도교비회계자금예산(안)심의	2	77.8%
52	2016	제9차	2017.0 1.03.	가. 2016년도 치과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나.2017년도치과병원회계자금예산서(안)심의 다.2016년도병원회계제1회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 심의 라.2017년도병원회계자금예산서(안)심의	4	55.6%
53	2017	제1차	2017.0 1.18.	가. 등록금심의위원 소개 나.2017학년도학부(의,치과대학본과포함)및대학원 등록금채정	1	88.9%
54	2017	제2차	2017.0 2.09.	가. 2016학년도 '잉여금 처리원칙' 심의	2	77.8%
55	2017	제3차	2017.0 5.10.	가. 2016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안) 심의 나.2016년도병원회계결산서(안)심의 다.2015년도치과병원회계결산서(안)심의	4	55.6%
56	2017	제4차	2017.0 6.02.	가. 2017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	66.7%
57	2017	제5차	2017.0 9.06.	가. 2017학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의 나.2017학년도치과병원회계제1회추가경정 예산서(안)심의	4	55.6%

58	2018	제1차	2018.01.19.	가. 등록금심의위원 소개 나.2017년도치과병원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다.2018년도치과병원회계자금예산(안)심의 라.2017년도병원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마.2018년도병원회계자금예산(안)심의 바.2018학년도대학및대학원등록금책정 사.2018학년도교비회계자금예산(안)심의 아.2017학년도잉여금처리원칙심의	2	77.8%
59	2018	제2차	2018.01.25.	가. 2018학년도 대학 미 대학원 등록금 책정	3	66.7%
60	2018	제3차	2018.01.31.	가. 2018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미래사회융합대학 신규 책정 포함)	3	66.7%
61	2018	제4차	2018.04.18.	가. 2017년도 치과병원회계 결산서(안) 심의 나.2017학년도교비회계결산서(안)심의 다.2017년도병원회계결산서(안)심의	4	55.6%
62	2018	제5차	2018.05.31.	가. 2018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2	77.8%
63	2018	제6차	2018.08.06.	가. 2018년도 치과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2	77.8%
64	2018	제7차	2018.12.18.	가. 2018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2	77.8%
65	2019	제1차	2019.01.21.	가. 2018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나.2019년도치과병원회계자금예산서(안)심의 다.2019학년도대학(원)등록금책정 라.2019학년도교비회계자금예산서(안)심의 마.2018학년도잉여금처리원칙심의 바.2018년도병원회계제1회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 심의 사.2019년도병원회계자금예산서(안)심의	2	77.8%
66	2019	제2차	2019.04.09.	가.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	77.8%
67	2019	제3차	2019.04.15.	가. 2018년도 치과병원회계 결산서(안) 심의 나.2018학년도교비회계결산서(안)심의 다.2018년도병원회계결산서(안)심의	3	66.7%
68	2019	제4차	2019.06.04.	가.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3	66.7%
69	2019	제5차	2019.10.08.	가. 2019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2019년도치과병원회계제2회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심의	4	55.6%

70	2020	제1차	2020.01.15.	가.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 심의 나. 2020학년도 대학(원)등록금 책정 다.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라. 2019학년도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마. 2019학년도 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 심의 바. 2020학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사. 2019년도 치과 병원회계 제3회 추가경정자금예산서(안) 심의 아. 2020년도 치과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2	77.8%
71	2020	제2차	2020.04.13.	가. 2019년도 병원회계 결산서(안) 심의 나. 2019년도 치과 병원회계 결산서(안) 심의 다. 2019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안) 심의	1	88.9%
72	2020	제3차	2020.05.07.	가. 2020학년도 교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	77.8%
평균					2	78.0%

<부록 4-2-2>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준번호	일반행정 재정예산팀 86	제정일	2020. 5. 7.
개정차수		최근 개정일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 제95조의5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장이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총무관리처장 등 5명(당연직)
2.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교원 3명
3.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선대학교 직원 2명
4.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재학생 2명
5.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동문 2명(최소 1명은 회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동문)
6. 조선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 1명
7.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재정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차기 위원회와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심의결과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그 중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지원)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하되,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 사업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록 4-3-1> 조선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및 시행세칙

조선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함) 정관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선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함)의 임명을 위해 총장후보자 선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라 함은 총장후보자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
2. “자격심사”라 함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이라 함)에서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말한다.
3. “총장후보자”라 함은 제19조에 따라 선거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1인의 후보자를 말한다.

제3조(총장초빙공고) 총추위는 이사회의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장 초빙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공고는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와 1 개 이상의 종합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입후보자의 자격)

①우리 법인의 송고한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 이상의 교원의 직위에 있는 자
2.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내·외부인사
3. 총장 입후보의 총 횟수가 3회 미만인 자

②부처장급 이상 보직자가 입후보할 경우에는 제3조의 총장초빙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③제17조 제8항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향후 5년간 조선대학교 총장이 될 수 없다.

제5조(지원서류) 제4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총추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공모지원서
2. 대학경영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발전기금 납입 영수증
5. 서약서 등 기타 총추위가 요구하는 서류

제2장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6조(총추위의 기능)

①총추위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장초빙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3.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4.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 구성에 관한 사항
5.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선관위 구성 전까지 선거관리사무에 관한 제반사항
7. 보도기사의 작성·배포 등 선거 홍보 관련 사항
8. 기타 총장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

②총추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있어서 부적합 결정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추위는 총장후보자 선출 사무에 관하여 관계 부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총추위의 구성)

①총추위는 13명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 직원노 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각 3인의 위원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총추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각 1명을 선출하며,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선임한다.

③총추위 위원은 선관위 위원, 입후보자, 추천인, 참관인,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입후보자 자격심사)

①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총추위 위원들의 적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자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자격심사의 방식 및 절차 등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관위의 기능)

①총장후보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두며,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투·개표 등 선거의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2. 선거인명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 각종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제반 사항
- 4. 기타 선거관리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②선관위는 선거관리 사무에 관하여 관계 부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관위의 구성)

①선관위는 13명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 추천 6명, 직원노동조합 추천 3명, 총학생회 추천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②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각 1명을 선출하며,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선임한다.

③선관위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선관위 위원은 입후보자, 추천인, 참관인,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선관위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신임 총장이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선관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참관인 및 선거운동원) ①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시 2명의 참관인을 총추위 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참관인으로 위촉한다.

②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 위원장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시 5명의 선거운동원을 총추위에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입후보자의 사퇴) ①제4조에 따라 입후보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관위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퇴한 입후보자는 다른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4장 선거방법 등

제14조(선거방법) 선거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권자의 직접·비밀 투표로 하며, 기표방법은 단기명투표로 한다.

제15조(선거권자)

- ①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휴직중인 교직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제단위 선거권 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정년계열 교원 75%
 - 2. 정규직 직원 13%
 - 3. 총학생회 회원 8%
 - 4. 총동창회 회원 4%
- ③제2항의 2,3,4호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결정 방법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와 총동창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 ⑤선거일 당일 해외에 체류 중인 교직원의 투표에 대한 방법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선거일과 선거공고)

- ①총장초빙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40일 이전까지 새로운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 ②선관위는 선거 일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등

제17조(선거운동)

- ①선거운동은 제8조의 자격심사 결과가 공고된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 ②입후보자 및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입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금품수수, 향응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집단적 서명, 집단적 시위, 모의투표, 인쇄 물의 제작·배포, 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다.
- ④입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당 교내 전자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는 3회로 제한한다.
- ⑤제3항에서 금지되는 부정선거운동 이외에도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일절의 부정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논의 후 경고조치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⑦제6항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입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결의를 통해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당사자의 징계를 요청한다.
- ⑧선관위는 금품수수, 향응제공,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중대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 없이 선관위의 결의를 통해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 당사자의 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 ①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

- ②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의 방법, 횟수, 시간 등의 상세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는 선관위가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후에 실시하되, 순서는 매회 발표직전 초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및 투표 장소에서는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정책토론회에서의 질의 및 응답 방법 등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6장 총장후보자 선거

제19조(총장후보자 선거)

- ①1차 투표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 1 인을 총장후보자로 한다.
- ②1차 투표결과, 동수 득표로 인하여 1위인 자가 3명 이상이거나 2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 전에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③1차 투표 또는 2차 투표 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 투표결과,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 1인을 총장후보자로 한다.
- ④1차 투표, 2차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는 반드시 선거 당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 ①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투표결과 공고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관위 위원장에게 문서(이메일 포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선관위는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가 당선되었거나, 투표와 개표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기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출규정 위반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결의를 통해 총장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 ③총장후보자의 당선 무효결정은 선관위 위원 정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재선거) 총추위는 제20조에 따라 당선무효가 선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16조의 선거공고에 관한 규정 중 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7장 이사회 추천 등

제22조(이사회 추천) 총추위는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23조(선거결과 설명) 총추위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4조(총장입후보자 등의 권리 제한) 총장입후보자, 총장입후보자의 참관인 및 등록된 5인의 선거운동원은 당해 총장의 임기 동안 부총장·대학원장·병원장·실(처)장 이상의 보직에 임명될 수 없다.

제25조(입후보자의 발전기금 기부 의무) 입후보자의 발전기금은 삼천만원으로 하되, 입후보 등록시 대학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기간의 적용) 이 규정의 기간은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4조(입후보자 자격)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제 17대 총장후보자 선출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제17대 총장후보자 선출부터 적용된다.

조선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조선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추위 위원 구성 절차 등)

①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함)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라 함)구성을 위해 각 단위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고, 각 단위는 추천의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총추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 일정을 정하여 소집을 통보한다.

제3조(총추위 위원의 준수사항 등)

①총추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입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의사 표시 금지
2. 총추위가 결의한 비공개 회의내용의 비밀 준수
3. 기타 총추위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②총추위 위원은 입후보자의 자격심사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비공식적으로 입후보자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③총추위 위원이 준수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추위의 의결로 제17대 총장선거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입후보자의 공지) 총추위 위원장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입후보자의 지원이 마감되면 입후보자 성명, 소속 등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 주요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자격심사 부적합 기표의 방법 및 부적합자의 결정)

- ①총추위는 규정 제8조에 따른 자격심사를 입후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②규정 제8조에 따른 자격심사는 입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용지에 각 입후보자에 대한 부적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총추위 위원은 입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표시할 때 입후보자의 과반수에 부적격 표시를 할 수 없다. 과반수의 부적격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④총추위 재적위원 전원이 부적합으로 기표하면 그 입후보자는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⑤총추위 위원장은 자격심사 결과 입후보자들의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기타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총추위는 자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입후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⑦총추위는 입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규정 제4조의 기준 요건에 미달할 경우 입후보자에서 제외한다.
- ⑧총추위는 자격심사 과정에서 입후보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와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선관위 위원 구성 절차 등)

- ①총추위 위원장은 선관위 구성을 위해 각 단위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고, 각 단위는 추천의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 명단을 총추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위 제1항의 기간 내에 위원 명단이 통보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위원 없이 선관위를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 및 첫 회의 소집은 총추위 위원장이 한다.
- ③선출된 위원이 유고되었거나 사퇴한 경우 총추위 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단위에 총원할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고, 해당 단위는 이 요청을 받을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선관위의 해산시기가 1주 미만이 남은 시점에서는 총원하지 않는다.

제7조(선거 공고) 선관위는 규정 제16조에 의해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선거일시
- 2. 선거장소
- 3.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8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선관위는 제 단위로부터 7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제출받고 그 다음 날부터 3일간 각 단위별로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 당일 투표장에 비치하여 선거권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관리)

- ①선관위는 선거공고 후 지체 없이 투표장소를 정하고, 투표장 내외에서는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벽보, 현수막, 유인물 배포는 물론 집단행동을 금지토록 관리위원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 ②모든 선거절차는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하며 지시에 불응하는 참가자에 게는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운동)

- ①선거운동은 공명선거 정신에 따라 선관위가 주관한다.
- ②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주요 경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한다.

제11조(투표소)

- ①투표소에는 기표용구를 비치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장막 등 필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②투표소에는 선거에 필요한 투표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투표용지)

- ①투표용지의 양식은 선관위가 정하며 투표용지에 선관위의 지정된 날인이 있어야 한다.
- ②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성명 하단에 기표란을 둔다.

제13조(투표함 설치 및 개표)

- ①교원, 직원, 총학생회, 총동창회의 투표함은 별도로 설치한다.
- ②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즉시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종료를 선언한 다음, 개표 참관인을 배석시키고 개표를 시작한다.

제14조(무효표) 다음의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의 지정된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2. 입후보자의 성명 사이에 기표된 투표용지
3. 기표 이외의 다른 표시가 있는 투표용지
4. 정수 이상 기표된 투표용지
5. 공식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관위가 무효로 판정한 투표용지

제15조(투표용지 보관 등)

- ①투표용지는 투개표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②총추위와 선관위는 총장후보자 선출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록 과 평가관련 자료 일체를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이 세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록 4-3-2> 공영형사립대형 총장선출모델(안)

공영형사립대형 총장선출모델

조선대학교 총장선출제도의 한계

- 민주성
- 공정성
- 학생중심 지향성
- 민립대학 정체성
- 학문대표성
- 정책중심성

민주적 총장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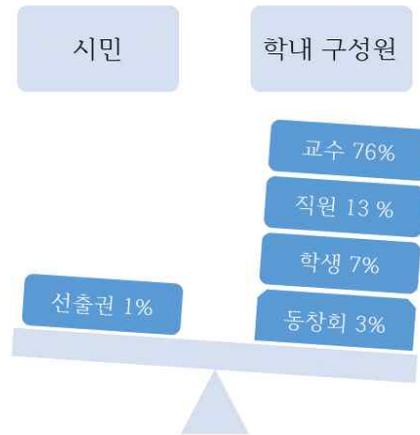
2

공정선거? 부자(富者)만의 선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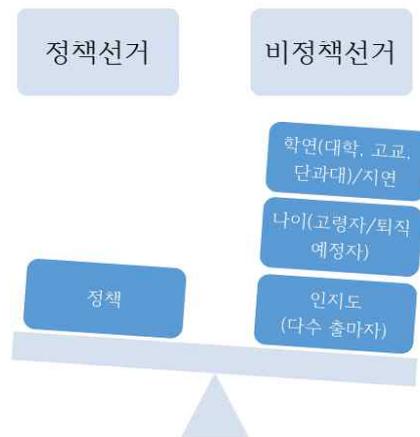
민립 대학? 무늬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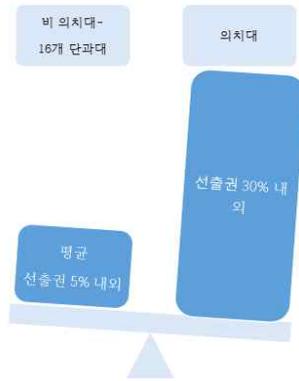
정책선거?:

조선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정책실현?
퇴직 예정자의 노후대책마련?



6

학문 대표성-다수의 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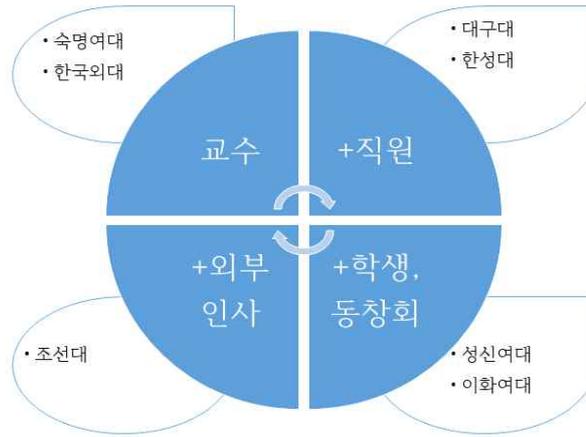
7

주요 대학의 총장선출권 구성

	총장선거									
	조선대 (2016)	이화여대 (2017)	봉산여대 (2018)	덕성여대 (2018)	상지대 (2019)	한신대 (2016)	여주대 (2018)	한경대*	한국외대 (2017)	숙명여대 (2016)
교수	76%	77.5%	76%	75%	70%	59%	82%	66.6%	100%	100%
직원	13%	12%	10%	12%	8%	25%	18%	33.2%		
학생	7%	8.5%	9%	11%	22%	25%				
동창회	3%	2%	5%	2%						
외부인사	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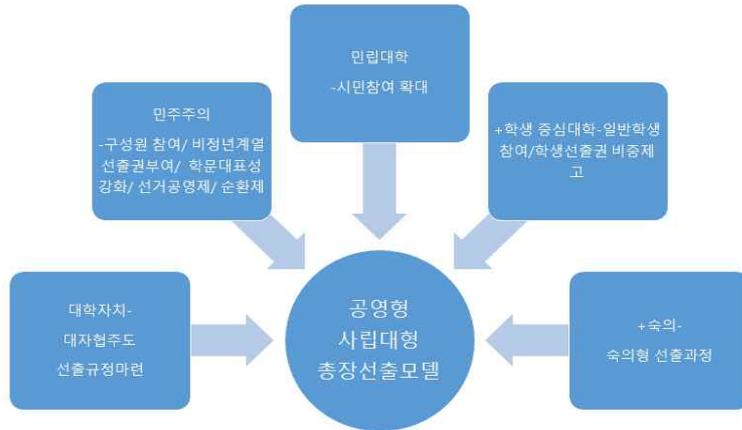
직선제 유형(참여단위)



대학자치형 총장선출모델(과거)



공영형사립대형 총장선출모델(혁신안)



11

민주성.공정성 강화

- 비정년계열 교수 선출권 부여
- 후보등록비 폐지 및 선거공영제 실시

<후보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실시(교황식)>

- 후보개방(교황식 후보선출, 전자투표 도입): 예비 선거에서 선출권자의 무작위 투표로 5위 이내 후보선별(출마의지 공개표명 불허)→
- 자발적 사퇴에 따른 후보 축소→
- 1차 투표에서 5위 이내 후보자(사퇴이전)의 유효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10위 이내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통해 5위 이내 후보 선별→
- 본선

12

학문대표성 강화-순환제

- 학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출권 조정
- 방안 1: 인문사회(외국어/사회/법학), 사범, 경영, 미체, 이공, 의치 등 학문계열별 최소 득표율 규정 마련(선거운동 과열 위험)
- 방안 2: 학문계열별 가중치 부여(복잡함)
- 방안 3: 순환제-연임 허용하되 3회 이상 동일계열 후보선출 불허

13

민주적 책임성 강화-퇴직예정자 임기 제한/출마횟수 제한

- 퇴직예정자의 책임성
- 방안 1: 출마 연령 제한(피선거권 제약 시비)
- 방안 2: 65세 총장 임기 제한(정관개정 필요)
- 방안 3: 출마 횟수 제한

14

시민참여 확대

- 시민참여단/배심원단 선발 및 선출권 부여
- 선발방식 1: 무작위 추출(참여도 저조)
- 선발방식 2: 분야별-시민단체대표 추천으로 제한(공정성 시비)
- 선발방식 3: 공영형 사립대 취지에 맞게 시장 등 추천(후보자와 시장 등 추천권자의 친소관계 작용 위험)
- 배제권 행사 허용(후보자와의 친소관계를 고려한 10% 이내).
- 운영: 참여자 대상 공론장 마련(주말을 이용한 사전투표일 1일, 5시간, 1인당 10만원 *100명 구성, 평가 후 사전투표 참가)

15

학생중심형 총장선출

- 학생중심대학-일반학생 참여 허용
- 선거권자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선거정보 제공

16

숙의형 총장선출-정책선거

- 정책 알림(자료집, 토론회 등)
- 숙의방식-정책평가단 운영(정책 및 후보자질 평가) 및 선출절차에 반영

17

공영형사립대형 총장선출모델

- *완전임명제-총추위 추천제(사전투표 없음)-총추위 주도 추천제(A: 사전 구성원 투표결과 고려, 고려대; B: 사전 총추위 추천-사후 구성원투표결과 고려)-사후 인준제(연세대)-간선제-직선제*
- 예비 선거를 통한 후보개방비정년계열 선출권 부여
- 시민과 학생 선출권 확대 및 일반학생 참여허용
- 후보등록비 폐지 및 선거공영제 도입
- 순환제(연임 제외 3회 이상 동일계열 후보선출 불허)
- 임기제한(65세) 혹은 출마 연령 제한, 출마 횟수 제한

18

총장선출절차



<부록 4-4> 조선대학교 개방이사 초빙 공고 알림(2020.03.10.)

학생 성공을 여는 대학 지역혁신을 이끄는 대학



조선대학교

수신자 광주광역시장
(경유)
제 목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개방이사 초빙 공고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선대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하고 조선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조선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개방이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자 개방이사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광주광역시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선대학교 개방이사초빙공고문 1부. 끝.

조선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담당	박성주	간사위원	장선웅	위원장	김성재
----	------------	------	------------	-----	------------

협조자

시행 개추위 20-02 (2020.3.10) 접수

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 www.chosun.ac.kr

전화 (062)230-7670 전송 / sungju7736@chosun.ac.kr / 공개

<부록 5-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오해들

I. 공영형 사립대의 의미와 지원 및 선정 기준

1. (정의) 공영형 사립대는 국공립대인가? 아니다.

-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이지만 정부가 대학 운영비의 일부(예, 50%)를 책임지는 하나의 대학 유형을 의미한다.
- 정부가 공영형사립대의 법적 대표자인 이사회의 이사 가운데 일부(예, 50%, ‘공익형 이사’)를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2. (선정 대상) 모든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만들자는 것인가? 아니다.

- (재정부담 때문에)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 가용 예산의 규모와 사립대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모든 사립대학이 공영형사립대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3.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은 사립대학이 원하면 가능한가? 아니다.

-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공영형사립대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정부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국가 및 지역의 발전(경제, 사회문화, 정치 등 다차원)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로는 지역단위별 인재양성규모(학생/졸업생의 수 및 비중), 연구성과(지역발전에 필요한 지식제공, 정책개발, 기술지원 등), 문화공간제공(대학시설 공개-도서관, 전시공간, 공연공간 등), 지역거버넌스 기여도(정부/민간 위원회 참여, 여론형성 등),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II.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필요성

4. (정책 우선성) 공영형사립대는 국가재정이 부족한데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주요사립대학들이 재정부족으로 생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교육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10여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
- 대학들이 시설투자를 중단하고 정년계열 교수를 뽑지 않고 있다.

5. (형평성) 재정난이 거의 모든 사립대학의 문제라면 공영형 사립대학에 투여할 재정

을 모든 대학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아니다.

-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 더구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고, 지급액이 너무 적으면 대학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장기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려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6. (법인참여의도) 정부가 재정지원만하면 되지 왜 이사회에 참여하는가? 사립대의 자율성을 국가가 침해하려는 것 아닌가? 아니다.

- 공영형사립대는 일반재정지원사업과 달리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정부재정을 투여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 재정지원만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학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경영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 사립대에게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Ⅲ.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효용성 및 재정마련방안

7. (목적) 공영형사립대는 부실대학을 살려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아닌가? 아니다

- 부실 대학 여부가 아니라 국가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선정기준이다.
- 국가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부실 대학은 선정할 이유가 없다.
- 공영형사립대로 지정되기 위한 ‘부실 경쟁’을 부추길 이유가 없으며, 부실대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8. (기대효과) 공영형 사립대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정부의 재정부담만 늘리고 철밥통 교수들 일자리만 늘리자는 것 아닌가? 아니다.

-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 지원은 대부분 사업비 지출만 허용되기에 교육환경개선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학마다 지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명하고, 엄정하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 교직원 인건비에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

9. (재정마련방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다.

- 권역별로 지역거점 공영형사립대학을 1개씩 선정한다고 해도 많은 수의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 공영형사립대 지원자격이 충분하지만 현재의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기에 시행할 경우 5개 내외의 대학이 지원하여 우선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이겠지만 지방정부도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법개정 필요성) 공영형사립대 정책은 현행 사립학교법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가? 그렇다.

- 가능하다. 정부가 사립대학과 법인 이사 추천 규모 및 지원액 등에 관해 협약을 추진하면 된다.
- 가령 ‘공영형사립대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 5-2> 공영형 사립대학 핵심요소 실증연구 최종 보고회(2020.8.27.) 발표문



목차

I. 공영형 사립대 논의 배경과 개념화	IV. 조선대 실증연구
II. 공영형 사립대 정책 쟁점	• 조선대 실증연구 개요
III.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 과제	• 주요 발견
	V. 결론 및 과제
	* 교육부 동향

2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아이는 나라가 키우겠습니다



온 나라에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돈 걱정애 아이를 못 낳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 아동에서 5세까지 재할 30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
- 육아휴직급여 두 배로 인상, 아바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이 부담 체로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06 공교육은 세우고, 교육이 부담은 줄이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공교육이 국가 책임 강화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대출 유아부터 완화

교실밖영양으로 사교육비 획기적 감소
혁신학교 전국 확대, 1수업 교과서제, E1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서열화 해소, 대학입시 단순화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의 사다리 교육
입시·사학비의 단절, 학력·출신학교 차별 완화, 함께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선망전형 의무화

특수 및 무이성취 → 교육은 국가 책임인 사학 / 최우선 과제
아방잡지 및 수능7시간 → 문제은행 개발 및 즉시 추진 / 입가 내
재원 조성 방안 → 입건외계 및 기금 예산 반영 확대 / 세입 확대 등

10대 공약/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8번째 공약 일부 발취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과제목표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주요내용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공영형사립대의 개념화

임재충안	법적 요건: 50% 이상의 공익이사 추천권 부여 재정 운영의 특성: 대학 운영비의 50% 이상 지급
문 제 점	개방이사의 수를 고려하면 사립대 성격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음 (예: 9인 가운데 3인의 개방이사, 5인의 공익이사, 1인) 가용재원의 한계
대 안 적 개 념 화	법적 요건 완화(30% 또는 개방이사 포함 50%) 및 가용 재정을 고려한 점진적 운영비 지급규모 확대 공영형사립대에 준하는 기능과 역할을 의미에 포함 (과도한 개념확장의 경우 지역혁신지원사업과 중복)

5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저항담론

▼

()안은 주요 저항주체

과도한 정부재정부담 해결책 제시 부재(정부-기재부): 재정배분의 효율성/시급성
 시행 대학 특혜론(일반 사립대-보편적 재정지원 요구): 보편적 교육혜택 부여
 '부실대학' 구제방안론/ 사립대 '모럴 해저드' 촉발론(보수적 시민단체): 사립대 책임론
 사립대 자율성 침해론(사립대학 법인): 국가의 사립대 관여 거부

6

공영형사립대의 특성 I: 사회적 기여

기여분야	세부 기여사항	지역사회 발전 효과
교육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인재양성	인적자원 제공
연구	지식제공, 정책개발, 기술지원,	지식경제활성화
문화공간제공	시설개방(도서관, 전시공간, 공연공간)	문화발전
지역거버넌스	정부/민간 위원회 참여, 여론형성 주도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7

공영형사립대의 특성 II: 대학 민주화

분야	제도화	효과
교육	지역사회 수요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의 질 제고
연구	지역사회 수요기반 연구 지원 및 활성화	연구의 질 제고
재정	재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안정성, 투명성, 전문성
법인운영	공익이사+참관인 제도	초기 혁신과정의 진통, 그러나 안정화

8

III. 공영형사립대 정책 추진 원칙

배경	국가재정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강화의 필요성
	지방분권화에 조응하는 지역대학 육성의 필요성(지역고등교육의 기반 붕괴 시작)
목표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실현 기반 조성
	공익적 대학운영-지역사회 및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및 지식기반 구축
방법	공영형이사회를 통한 법인의 책무성 강화
	재정위원회를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지역사회/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추진내용	사회적 중요도와 기여도를 고려한 지역 사립대 육성(지역발전)+ 법인운영 개선
추진전략	재원의 한계를 고려한 점진적 추진
	사립대의 의지를 존중한 자율적 선택
	'위기'에 처한 사립대의 참여의지 활용(기회)
	* 공영형 사립대 인증제 ? : 기본 자격 보유여부 인증

무엇을 할 것인가?

- ▶ 대기문/무임승차문 극복(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 ▶ 보상 수단(구조조정 회피수단/직업안정성확보/등록금 인하)보다 **민립대학의 기본 역할에 대한 신념/가치를 따라 추진**
- ▶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공영화'의 방향 설정-지역사회와의 협력?
- ▶ 단기적 추진체 구성
- ▶ '공영화'를 위한 추진 사업 구상 및 실행, 그리고 성과 평가 및 홍보
- ▶ '공영화'를 위한 법인 개혁
- ▶ '공영화'를 위한 대학 역량 구축
 - 인력풀 DB 구축(시도의 위원회 참여/의사)
 - 학과체계 조정 및 인력 배정
 - 지역사회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학생 및 교직원
 - 지역발전연구원 신설

협력체제 및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위 구성안 초안



공영형사립대 (재)선정기준(안)

국가정책 일치성 (고등교육 강화,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기여도	대학운영의 건전성 (재정투명성, 민주성)	지역사회 지원	대학의 실행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동일 비중 선정(비수도권 소재 대학 우대) • 중요 정부사업 참여대학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규모) • 지식경제활성화 • 지역문화발전 • 지역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p>* 권역별 중요도 (여론조사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투명성 보장 기구 운영 • 민주적 이사회 구성 및 대학총장 선출 • 개방이사 선출여부 및 비중 • 공익이사의 참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 지자체 지원 협약 • 시의회의 지원 협약 <p>* 국가책임교수제 도입(강남훈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부설 지역발전 관련 연구소 운영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공표 •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른 교직원 평가 제도 변경

IV. 조선대 실증연구

▶ 연구목적

-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 효과 분석

▶ 조선대학교 사례 분석의 장점

1. 공영형사립대 취지와 일치하는 민립대학의 특성
2. 공익이사들에 의한 법인운영의 풍부한 경험
3.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구성원들의 높은 이해도와 추진의지

▶ 연구방법

1.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

- 1) 공익이사 이사회 참여
- 2) 이사회 참관인제
- 3) 재정위원회

2. 인식조사를 통한 평가 분석

- 1) 교수, 직원, 학생 대상 사전/ 사후 패널(panel) 조사 및 시민 대상 설문조사(2회), 광주전남/전국 시민대상 설문조사(각 1회)
- 2) 교내외 인사들의 심층인터뷰 및 학생, 직원 대상 FGI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요소 기존경험 요약

시기	주요 경험	세부 성과/과오
설립(1946)	1922년, 조선민립대학설립운동 좌절 1946년 조선대학설립동지회 결성	인재양성 시작
구경영진 체제 (1946~1988년 이전)	1인독재 체제 하에서 각종 재단비리(부정일학, 부정 교수채용, 교비 유출) 및 이에 저항한 교수 및 학생 탄압, 병원장 구타 및 학생 구타	-1960년 교수 20여명 사임/해임, 학생 21명 제적 -1980년 강패 동원 학생구타, 교수 해직
1.8항쟁 이후 (1988~2010; 2018~20)	공익인사 임사이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제 정산 및 민주적 대학운영(1988) • 최초 대학생합법동조합 출범(1990) • 공정한 교수공채 시스템 구축·운영 • 대학 혁신(2018~19) 및 공영형사립대 추진(2020)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재정투명성 확보
정이사 체제 (2010~17)	대학자치기구 활성화 (대자협: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맹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돈병 인권변호사 등 공익적 인사의 총장 영입 • 1992년 이후 총장직선제 주관(시민참여 허용 시도) • 공영형사립대 전환 추진결의(2017~18)
	구경영진 추천인사 이사회 참여 (정원 9인 가운데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1인,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 - 이사 1인, 부총장에게 폭언, 무고·상해·폭행 혐의로 징역형 -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로 인한 구성원 장기천만농성(2016) - 대학 부실관리로 인한 2018년 자율개선대학탈락 - 개방이사의 선인 지연 및 학교법인 운영에 중대한 장애 초래

조선대 실증분석결과 개요

-공영형사립대 핵심요소 도입

항목	세부 실행 내용	효과
법인 이사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출신 공익 ○ 공익적 인사 이사외적 인사들로 이사회 구성 ○ 개방이사의 민주적 선출 및 지역시민단체 출 사외 직관제도 도입 및 신 이사 추천 ○ 광주광역시장 개방이사 후보추천 요청 ○ 이사회 직관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간의 갈등 완화 및 이사회에 대한 집단반발 부재 · 지역사회 요구 반영 가능성 제고(개방적 이미지 제고, 혁신 의지 공표) · 직관인제 도입에 따른 정제된 이사회 운영(광정성 증대) 가능해짐 · 지자체의 이사후보 미추천으로 실행되지 못한 이사회 운영의 불편함(비공개사안처리 어려움), 학내 인사 직관 부재
민주적 대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수 확대와 임 · 임 제한(결고) · 법인의 사유화 방지 및 공익이사 참여기회 확 대 * 기타: 학과자율성 존중 교원인사, 연구윤리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형사립대로의 전환을 고려한 이사장수 조정의 필요성 및 사유화 방지책으로 임 · 임 제한에 대한 학내외의 지지 확인 · 정이사 체제 이행기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음 · 이사회 정원의 한계로 추가 개방감사의 수 늘리기 어려움 · 학과 자율성을 존중한 교원인사 관행확립으로 채용투명성 및 학내갈등 완화 · 연구윤리규정 신설(2020.3.31)에 따른 연구윤리시 제고 및 지역대학 모범사례 참 · 용(특립성, 학부/대학원/연구원으로 대상 확대, 위원의 전문성 강화) · 대학재정의 어려움으로 비정년계약 교수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우려 · 연구윤리기준 마련 미흡
재정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통해 신설 운영(법 · 인 정관 개정, 위원회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투명성 강화, 재정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논의 가능해짐(외부 회계사 참여) · 등심위/태평과 기능중복, 장기적·체계적 재정개혁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이사회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취약
지역사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과 지 · 발자치단체, 지역산업체, 지역시민단체와의 협 · 력 강화 * 지역사회와의 협력 범인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공공성의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명시하는 방안 · 대학법인의 설립목적에 공공성의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명시(결고) · 링크+ 사업단,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산업체와 협력 강화(2020.3.1 이후 광주광역시 · 시장, 전남도청 등 관공서 혹은 민간기관 75개와 MOU 체결)

1. 주요 발견 I: 공영형사립대 인식-FGI

공영형 사립대 인식: 기대, 실망, 기대, 불안

학생들은 공영형사립대를 통한
#등록금인하를 위해
일반학생들도 사위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
우려하는 것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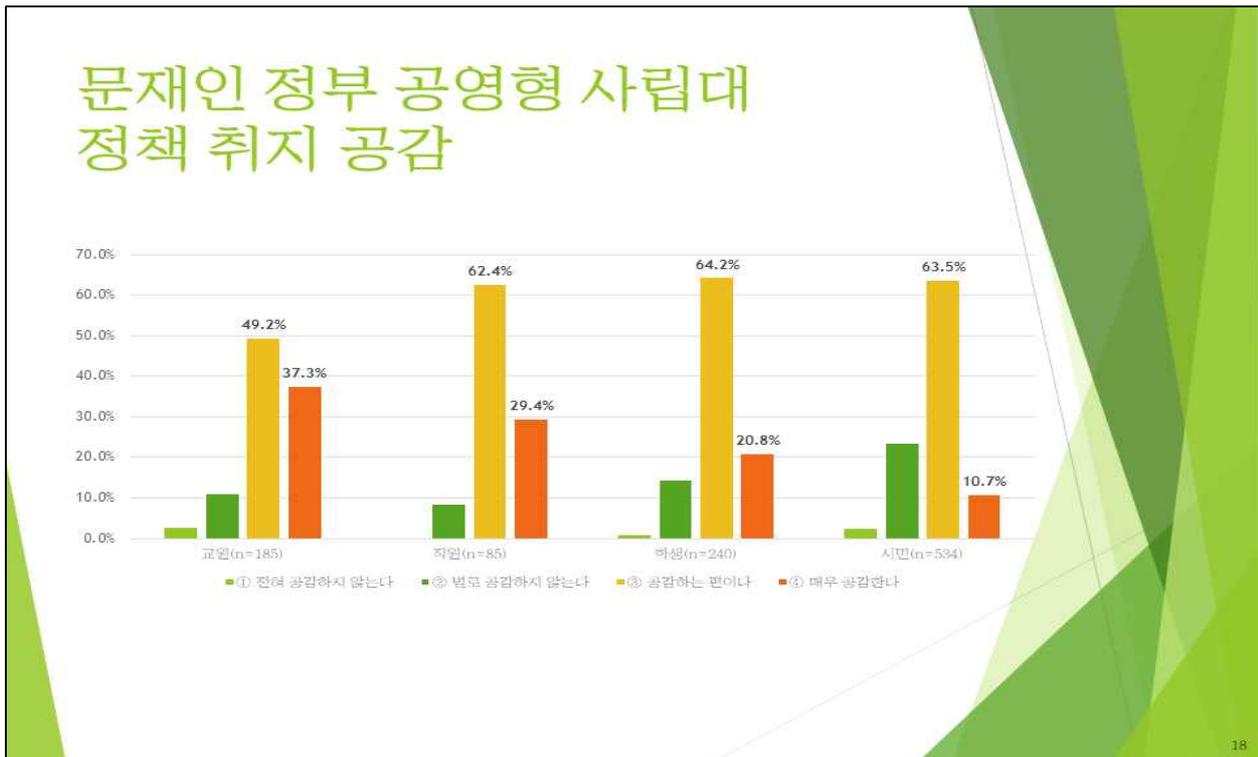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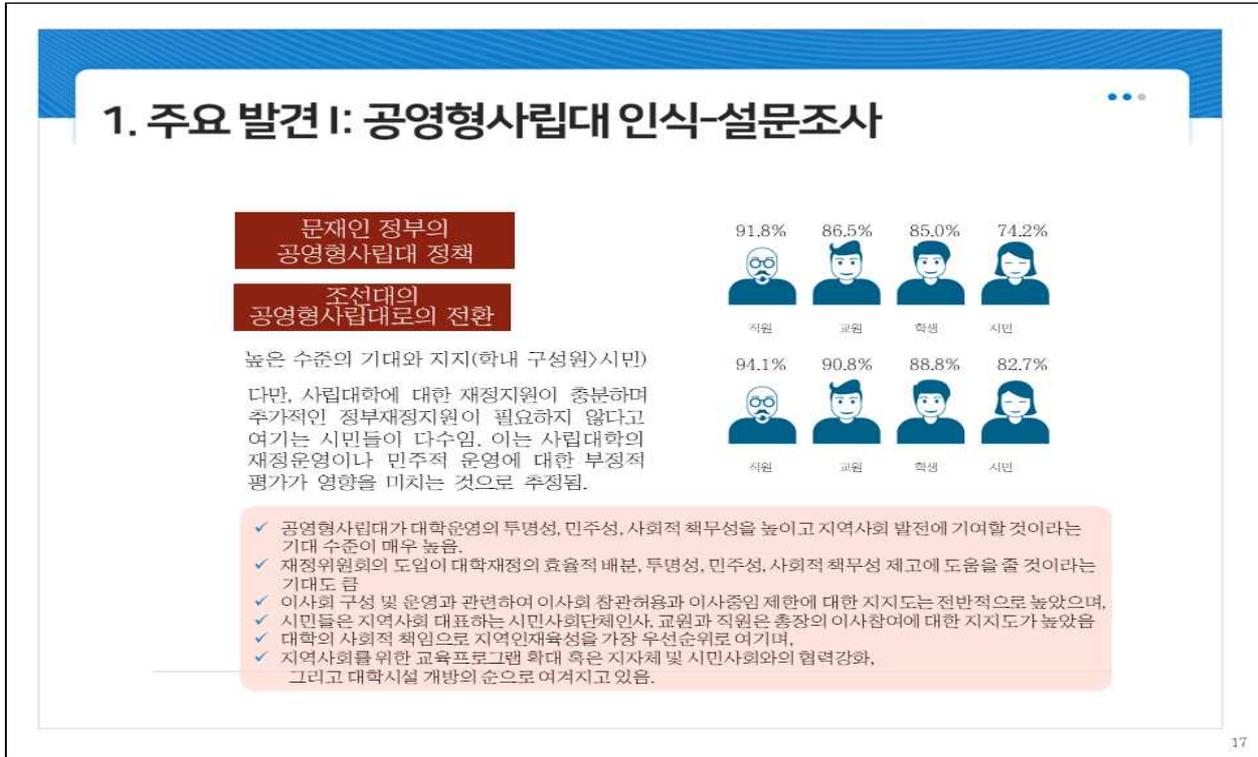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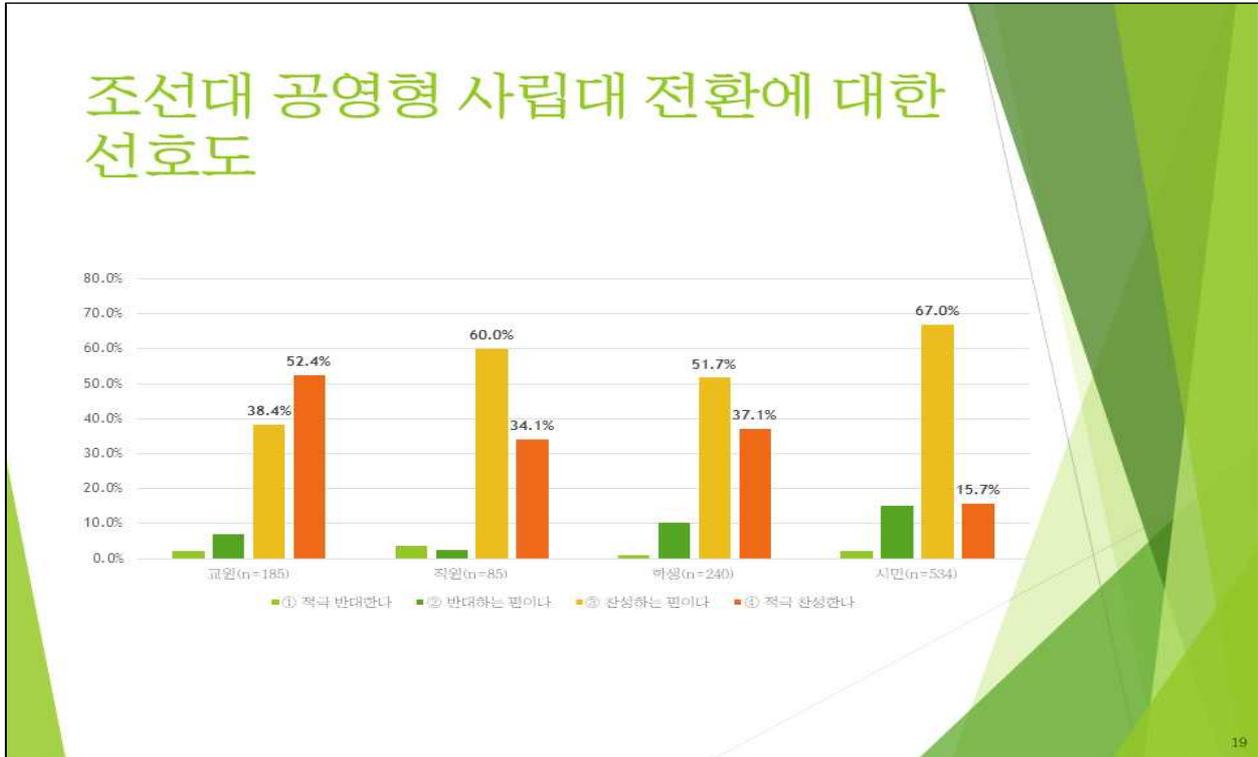
직원들은 공영형사립대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직원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대학안정

공영형사립대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기대가 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과 대학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
공영형사립대를 대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이해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대학의 공공성을 스스로 강화하기보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
노동조합의 경우 공영형사립대의 위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음.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적음: 이미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함(의대, 체대 등)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사학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 조선대의 과제로 인식하는 국지주의적 인지 성향(parochial perception)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대학의 기본 역할로 여기는 대학문화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음(Identifying public role of university education)
대학의 공적 역할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권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 혹은 교육이 필요함(strengthening engagement)





- ### 사립대학 운영 현황 및 공영형 사립대 인식
- ▶ 시민들은 물론 학내구성원들은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음:
 - ▶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공익이사의 필요성 공감
 -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추가적)정부재정지원에 대하여 학내 구성원들 가운데 과반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면, 시민들의 경우 그렇지 않음
 -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공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참여 보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대학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 시민들은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반대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학내구성원에 비해서 많은 편임.
- 20

○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교원(n=16)	직원(n=6)	학생(n=20)	시민(n=34)
① 매우 부족하다	68 (36.8%)	53 (88.3%)	18 (7.5%)	19 (3.4%)
② 부족한 편이다	108 (69%)	46 (54.1%)	133 (65.9%)	187 (35.0%)
③ 충분한 편이다	8 (4.3%)	6 (7.1%)	82 (34.2%)	290 (69.9%)
④ 매우 충분하다	1 (0.5%)	0 (0.0%)	7 (2.9%)	49 (8.2%)
평균값(표준편차)	1.69 (0.6)	1.68 (0.3)	2.33 (0.7)	2.67 (0.9)

○ 교육당국의 사립대학 추가재정지원

	교원(n=16)	직원(n=6)	학생(n=20)	시민(n=34)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0 (0.0%)	4 (1.7%)	51 (8.0%)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8 (4.3%)	0 (0.0%)	14 (5.8%)	222 (81.7%)
③ 필요한 편이다	73 (39.5%)	22 (25.9%)	97 (41.6%)	214 (61.1%)
④ 반드시 필요하다	104 (62.2%)	63 (94.1%)	125 (62.7%)	47 (8.8%)
평균값(표준편차)	3.32 (0.9)	3.74 (0.6)	3.43 (0.9)	2.41 (0.7)

○ 정부 재정지원 및 공익인사 참여

	교원(n=16)	직원(n=6)	학생(n=20)	시민(n=34)
1)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립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나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가 높아진다	5.21 (0.6)	5.31 (1.4)	5.53 (1.2)	5.99 (0.9)
2)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에 공익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5.31 (0.5)	5.54 (1.4)	5.95 (1.3)	5.79 (0.7)

2) 조선대학교 운영 전반 사전/사후 진행 -> 7점 척도

○ 조선대학교 운영전반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34)
	사전 (n=18)	사후 (n=15)	사전 (n=6)	사후 (n=6)	사전 (n=24)	사후 (n=19)	
1) 조선대학교는 민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4.41 (1.49)	4.68 (1.42)	4.72 (1.56)	4.74 (1.37)	4.20 (1.28)	4.52 (1.33)	3.84 (1.33)
2) 조선대학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5.05 (1.27)	5.06 (1.22)	5.28 (1.27)	4.91 (1.09)	4.85 (1.31)	4.85 (1.30)	4.09 (1.39)
3) 조선대학교는 공수권역시정 시책(기반 시설)에 시민이단체 등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	4.42 (1.29)	4.58 (1.29)	4.78 (1.22)	4.71 (1.09)	4.56 (1.28)	4.79 (1.39)	4.03 (1.32)

○ 조선대학교 재정 운영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34)
	사전 (n=18)	사후 (n=15)	사전 (n=6)	사후 (n=6)	사전 (n=24)	사후 (n=19)	
1) 재정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09 (1.39)	4.35 (1.3)	4.74 (1.47)	5.03 (1.16)	3.60 (1.30)	4.00 (1.32)	3.51 (1.30)
2)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4.41 (1.48)	4.72 (1.5)	5.73 (1.25)	5.68 (1.12)	3.32 (1.27)	3.84 (1.42)	3.16 (1.30)
3) 재정운영 계획이 민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4.18 (1.43)	4.48 (1.38)	5.12 (1.42)	5.28 (1.11)	3.64 (1.20)	3.97 (1.43)	3.41 (1.27)
4) 재정운영 계획에 지역사회가 참여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고 있다	3.77 (1.24)	4.01 (1.3)	4.35 (1.42)	4.38 (1.04)	3.96 (1.18)	4.21 (1.45)	3.53 (1.29)
5)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와 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04 (1.44)	4.41 (1.48)	5.27 (1.42)	5.25 (1.24)	3.51 (1.30)	3.86 (1.43)	3.26 (1.30)
6) 대학의 재정은 감시당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감소한다	5.07 (1.44)	5.01 (1.39)	4.32 (1.53)	4.74 (1.30)	5.56 (1.29)	5.56 (1.29)	5.21 (1.5)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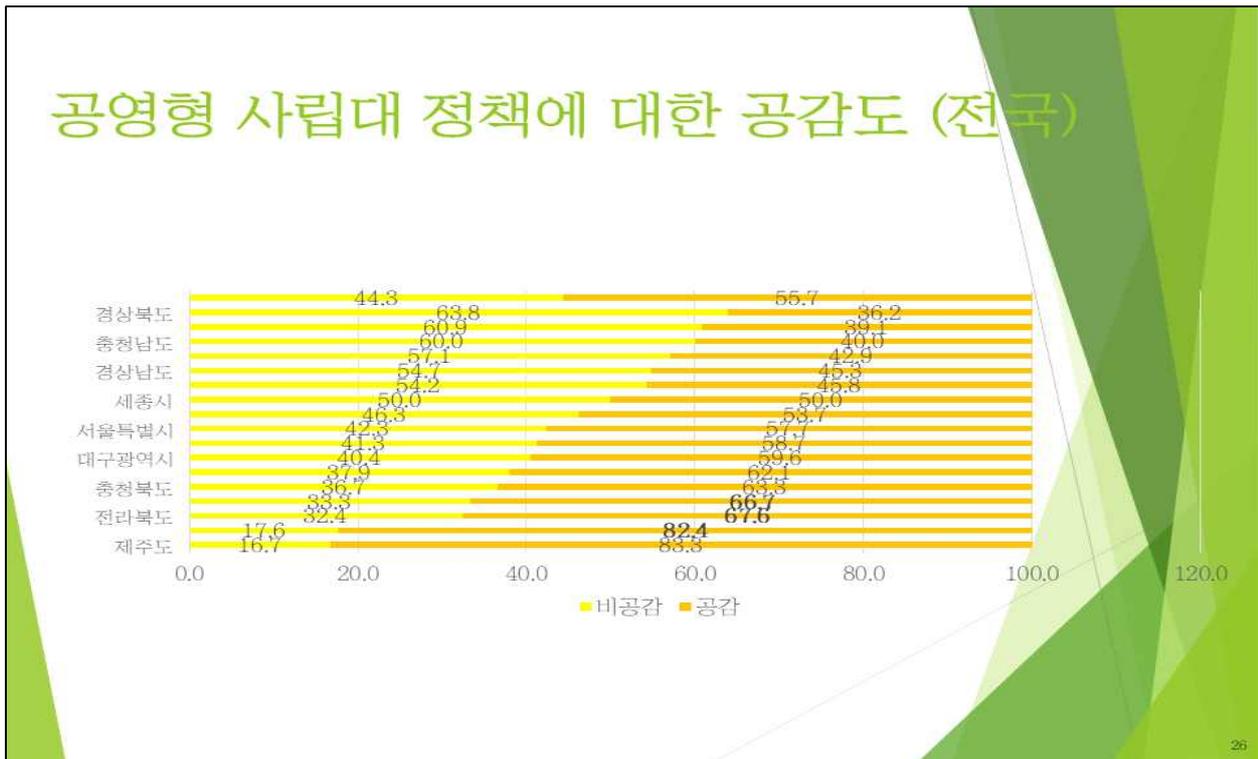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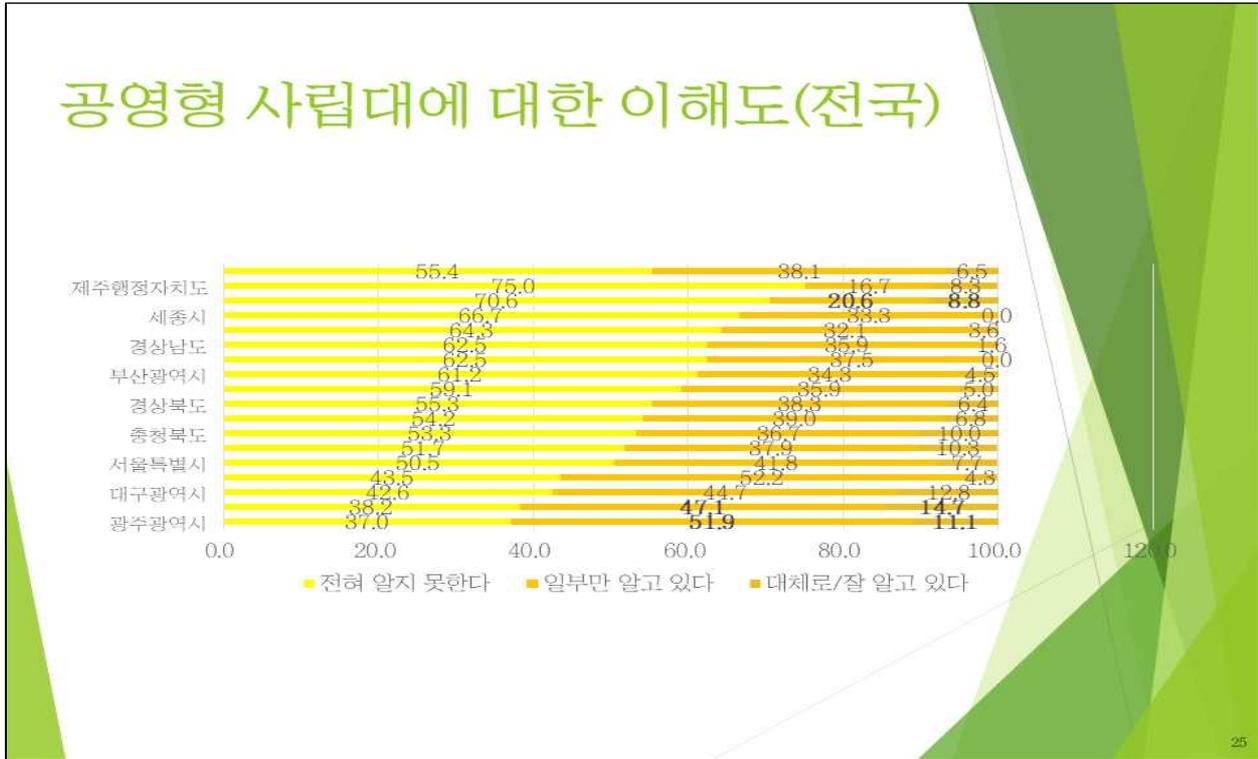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0)
	사전 (n=185)	사후 (n=183)	사전 (n=85)	사후 (n=89)	사전 (n=240)	사후 (n=193)	
1) 이사회에 교원 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4.83(1.57)	4.97(1.47)	4.87(1.47)	4.74(1.35)	4.88(1.43)	5.13(1.32)	4.87(1.31)
2) 이사회에 대한 인사 의 권한이 교원 에 있어야 한다	5.30(1.53)	5.41(1.35)	4.98(1.51)	5.16(1.22)	5.20(1.30)	5.41(1.26)	5.44(1.21)
3) 이사회에 이사 의 정수가 많다 가 적어야 한다	4.88(1.57)	4.97(1.32)	4.51(1.35)	4.65(1.43)	4.81(1.27)	5.19(1.18)	4.87(1.25)
4) 이사회 의 구성이 교원 과 학생 이 적당 하다	5.35(1.43)	5.01(1.30)	5.28(1.47)	5.28(1.23)	5.15(1.34)	5.05(1.23)	5.23(1.25)
5) 총경이 충분 하지 아닌 다	5.99(1.30)	6.08(1.20)	5.56(1.83)	5.32(1.56)	4.62(1.34)	5.04(1.23)	4.42(1.41)
6) 지역사회를 대상 으로 학생 의 참여가 적어야 한다	4.32(1.84)	4.21(1.98)	4.40(1.61)	4.04(1.60)	4.94(1.41)	5.32(1.35)	5.25(1.29)

○사회적 책임

	교원		직원		학생		시민 (n=530)
	사전 (n=185)	사후 (n=183)	사전 (n=85)	사후 (n=89)	사전 (n=240)	사후 (n=193)	
1) 지역 의 이익 을 위 하여 노 력해야 한다	6.15(1.10)	6.16(1.00)	6.14(0.94)	6.10(1.00)	5.68(1.12)	5.84(1.09)	5.61(1.09)
2) 도서관, 체육관 등 대 외 시설을 지역 주민에 보 다 기 여해야 한다	5.48(1.35)	5.45(1.33)	5.40(1.27)	5.32(1.09)	4.58(1.45)	4.90(1.54)	5.31(1.27)
3) 지역 사회를 위 한 교 육 공 헌 노 력을 행 해야 한다	5.74(1.21)	5.67(1.23)	5.69(1.24)	5.68(1.09)	5.12(1.25)	5.40(1.29)	5.42(1.19)
4) 지 방 사 회 에 대 한 시 민 사 회 를 과 연 하 는 노 력 이 적 다	5.65(1.29)	5.57(1.29)	5.71(1.21)	5.59(1.11)	5.21(1.25)	5.49(1.31)	5.45(1.23)

○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 원칙_1순위

	교원 1순위		직원 1순위		학생 1순위		시민 1순위 (n=530)
	사전 (n=185)	사후 (n=183)	사전 (n=85)	사후 (n=89)	사전 (n=240)	사후 (n=193)	
지역 의 이익 을 위 하여 노 력해야 한다	70 (37.8%)	45 (30.0%)	37 (43.5%)	27 (30.3%)	77 (32.1%)	68 (35.8%)	61 (11.4%)
운영의 투명성	27 (14.6%)	24 (13.0%)	11 (12.9%)	8 (9.0%)	68 (28.3%)	58 (30.6%)	304 (57.3%)
민주적인 운영	21 (11.4%)	22 (14.7%)	7 (8.2%)	6 (6.7%)	22 (9.2%)	13 (6.8%)	58 (10.9%)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0 (0.0%)	4 (2.7%)	1 (1.2%)	1 (1.4%)	3 (1.3%)	0 (0.0%)	16 (3.0%)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27 (14.6%)	19 (12.7%)	13 (15.3%)	13 (14.8%)	64 (26.7%)	41 (21.8%)	69 (12.9%)
신입이던 구원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실현	37 (20.0%)	33 (22.4%)	14 (16.5%)	14 (20.3%)	5 (2.1%)	10 (5.3%)	25 (4.7%)
기타	3 (1.6%)	3 (2.0%)	2 (2.4%)	0 (0.0%)	1 (0.4%)	0 (0.0%)	1 (0.2%)



2. 주요 발견 II: 법인 개혁 -이사회 참관인 제도

- ▶ 이사회 이사들이 참관을 고려하여 이사회 진행에 신중성을 기하게 되었음.
- ▶ 이사회 참관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들이 이사회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학현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 ▶ 이사회 참관인 선정 기준(학내외 인사), 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 정책적 함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건강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참관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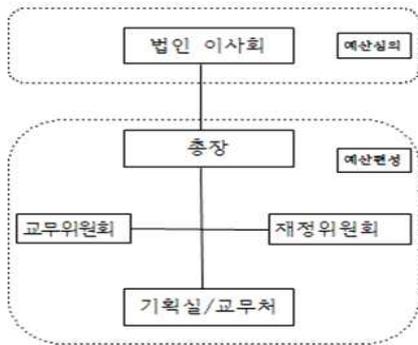
3. 주요 발견 III: 재정투명성 기구 -재정위원회

- ▶ 재정위원회가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 **현행 등심위 및 대평과의 역할 조정, 외부인사 비율 및 전문성 제고, 이사회와의 권한 조정, 대학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변화가 필요함**
- ▶ 정책적 함의
 - 1) 대학재정 관련 제도기구는 <대학재정위원회> 기능으로 일원화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한해서 심사하고, 대학평의원의 예결산에 관한 자문기능을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재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법인 산하 특별기구로 두거나 가칭 '대학발전위원회' 산하 재정관련 심의기관으로 신설하여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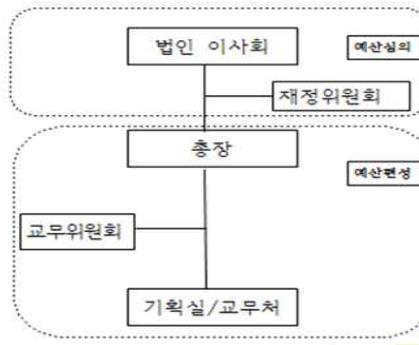
28

재정위원회 위상

대학본부 산하 재정위원회



법인이사회 산하 재정위원회



V. 결론

-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태도
 - 공영형사립대에 대한 기대(등록금 인하, 대학안정화)가 매우 크지만 정책실행에 대한 의구심이 큼
 -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취지 및 조선대의 공영형사립대 전환에 대한 지지수준이 매우 높음
 - 공영형사립대 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립대의 투명성, 민주적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사립대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재정지출에 대한 지지 창출)
- ▶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의 효과성
 - 참관인제도가 법인 운영의 효율성 및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 리더들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을 줌
 - 재정위원회 신설이 재정투명성 제고에 도움을 줌
 - 여론조사 결과 이사중임제한에 대한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 대학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역인재육성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지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사회의 경우 이사회 중임제한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의 일부만 실행하여 검증은 시도함
 - 온전한 공영형 사립대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모범 사업 추진해야 함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1. 대학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와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재정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기존 대학재정기관과의 기능 조정 및 사립대학 법인이사회의 권한을 고려한 재정위원회의 위상 설정
2. 이사회 참관인의 자격 개방 및 선정 기준과 참관 범위(사안)에 대한 규정 마련
3. 대학운영 과정에서 총동창회 이외에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교감 형성(일방성 탈피)
4.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제도화: 대학-지방정부-산업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간의 협의체제 구축(Leydesdorff 2012)과 정기협의회 개최
5.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도시연구소 등 시스템 구축(수요조사, 중장기 사업기획 및 추진, 성과평가, 고영구 2012)
6. 대학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국립대 자원관리시스템인 KORUS에 준하는 회계시스템 운영) 및 대학의 '도덕적 해이' 현상 사전 예방(김훈호 2014)

2020 교육부 추진 방안-사학혁 신선도대학

- ▶ 추진 의지는 강하나 낙관적이지 않으며, 소극적인 전략, 불확실한 목적
- ▶ 불확실: 80억원? 7개 대학 500억원? 5조원? 300억원?
- ▶ ‘사학혁신 선도대학’으로 추진
 - ‘사학혁신’을 위한 비용에만 국한하여 지출 목적 제한?
 - 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 담당 법인직원 인건비 포함
 - 대학 투명성 강화 및 민주화에 필요한 비용(총장선거비용, 투명한 교수임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재정지원 요청 항목(추정)

- ▶ I. 대학본부 관련사항
 - ▶ 1.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비용(1회 개최 비용, 연간 개최 횟수)
 - ▶ 2. 구조조정 컨설팅(대학 간 통계합, 학과 통계합 등) 비용
 - ▶ - 전문 컨설팅, - 전문가 회의, - 구성원 회의 등
 - ▶ 3. 학교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직급, 연봉)
 - ▶ 4. 법인 또는 학교 교직원 연수, 특강 등 비용
 - ▶ 5.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사업비 구체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구체화 하여 그에 필요한 세부 항목별 경비로 작성
 - ▶ 6. 투명한 교직원 채용절차 구체화(합후 채용절차를 구체적인 것으로 옮겨하고, 각 단계별 비용발생 부문에 대한 산출기초로 작성)
 - ▶ 7. 총장 직선제 관련 처리비용 구체화(해당 권역에 총장직선제 시행중인 대학 자료 참고 작성)
- ▶ II. 학교법인 관련 사항
 - ▶ 1. 외부회계감사 처리 비용 :
 - ▶ 2. 최근 법인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직급, 연봉),
 - ▶ 3. 이사회 개최 비용(1회 개최 비용, 연간 개최 횟수)
 - ▶ 4. 법인 또는 학교 교직원 연수, 특강 등 비용
 - ▶ 5. 법인 법률 컨설팅, 노무 컨설팅, 경영 컨설팅 비용(실제 사례가 없는 경우 업체 유선 견적 등을 통해 확인 후 작성)

사립대와 국립대 간 격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확보율, 주당 수업시간



대학별 추진 현황

조선대

- 대
- 지역사회 연계추구
- 공영형사립대로 전환 논의 추진
- 대학의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한 재정지원(지방대학 육성)
- * 중요도 고려

상지대

- 중소
- 사학혁신 대학(혁신성)
- 공영형사립대로 전환 의결
- 재단 혁신성을 고려한 재정지원(혁신 대학 육성-부패사학 근절방안)

평택대

- 소형
- 평택시 지역사회 연계추구(지방대학 육성)

<부록 6-1>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교원응답)

○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들을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공영형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불필요하게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고 봄
- 구성원들에게 순기능, 역기능 등 솔직하게 가감없이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적극적인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 주민 대상 공청회/토론회 개최
-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온라인 녹화공개
- 설문조사 시행 뿐만 아니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하며, 그 누구도 사익을 추구하기위해 참여해서는 안된다.
- 공영형 사립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패널토의 등으로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영형 사립대의 추진은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조용히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구성원들 및 지역민들과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부가 소신을 갖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대학 구성원이 공영형 사립대 전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영형 사립대 논의의 장을 보다 확대하여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10년전 처럼 김칫국만 마시는 과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화 논의가 이제 본격화 되었으면 합니다.
- 조직구성원의 소통과 혁신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형 사립대를 반대하는 교수들(정년을 앞둔 교수들, 또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수들)도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 함
- 준비 단계에서 부터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 관련 지식이 짧아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 설문조사에 그치지 말고,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 교내구성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1-2회 정도 개최하는 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지금보다 원활히 반영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학교 구성원 대상의 공청회를 통하여 본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관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함
-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자세한 정보공유 및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가 되었을 때 장단점 공유

○ 대학 지배구조 이슈(이사진과 총장) 및 교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의 역할

- 학교이사진 및 총장 등 구성원 대상 중간평가 실시하여 부적합 시 퇴출, 향후 이사진 재선임 차단
- 이사회 구성에서 특정 분야 전공자만의 참여보다 다양한 전공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가 부재한 것이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리더(총장)의 리더쉽이 발휘되고 그에 뒷받침하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하며, 구성원이 사활을 걸어서 대학의 부활에 기여하여야 조선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선대학교는 가급적 공영형 사립대로 가야하며, 이사회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 20년 넘도록 국내 논문 한편 없는 교수가 월급 받아가며 학과 내에서 큰 목소리 내는 건 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 이를 위해 정이사체제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공영형 사립대는 재정의 안정이라는 우리나라 지방 사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것은 맞지만, 재정 안정성 이외의 민주적 운영이니 재정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은 담보하지 못한다. 그것은 누가 이사가 되었던 운영의 문제일 뿐이다. 특히 지역민의 참여로 설립된 대학이니까 이사회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느니? 지역 단체장이 참여해야 한다느니? 외부 졸업생 단체가 끼어드는 것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자들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조선대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명망있는 이사진 자체로 운영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사회의 결정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지난 시절, 민주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관선이사회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운영된 결과가 오늘날 조선대의 위상이다. 그들이 책임을 지나? 누가?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오늘날 조선대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대학이 되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사회의 제도적 횡포를 막을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 공영형 사립대의 이사회구성에서 너무 지역성을 강조하지 말고, 지역인사보다는 전국적 명망과 전문성을 가진 공적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낼 역량과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국민들의 귀한 혈세 지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수준에서 그친다면, 그런 제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사회적 존재가치가 없는 기구를 떠받들기 위해 국민들의 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만큼 조선대 구성원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이 제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구성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100년 후의 공익성 결과를 얻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
- 학교 내 불평등 구조 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시간강사-비정년트랙-정년트랙 등)

- 이사선임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에 고민해주세요.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각종 이해집단의 자기이익 챙기기 위한 참여의 구실로 사용되면 안되겠습니다.
- 총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 선임시 어느 특정집단의 목소리가 아닌 조선대의 위상에 맞는 사심 없는 사람들이 선임되어야 한다
- 정확한 운영의 주체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여러 사회단체의 참여는 공영형 사립대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재정위원회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사회적 책무성 확보

- 교내외수익사업(용역, 자판기, 납품 등) 현황 전수 조사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있을 시 즉시 철수, 재정수익관리의 투명성 제고
-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 재정운영위원회는 시장과 교육감, 총장 추천과 지역 전문가 등을 책임 있는 인사들로 균형 있게 구성해야하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회, 노조, 교평,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익단체, 외부세력과 결탁 등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대학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학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방안 또는 장기적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적극 추천하며 이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 외부인사가 이사회나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더라도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에 항상 대립하거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에 대한 감독 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본교의 경우, 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입학에 따라 학생 맞춤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 또한 이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외의 비본질적인 사업들에의 재정투입은 차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

- 공영형의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이 중요함 공영형 사립대의 문제가 특정 정부의 치적이 되기 보다 보편화된 대학 모델로 자리 잡고 성공적인 사학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대학 규모의 한 지방 사립대에 연 800억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지요 영호남 4개 사립대학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연 3,000억원이 넘는다는 소린데.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 확보)**

- 재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에서 대학에 이사로 참여한 다면 대학의 역할은 정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음 민주적인 정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기 때문에 대학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공영형 사립대의 장점도 분명 있겠지만 대학은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며, 각 교수들도 이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하는 집단이므로, 재정은 건정성을 위해 대학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정부에서 대학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설립정신에 맞추어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운영(재정확보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의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미래를 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예산확보 포함) 대정부(교육부)나 국회(모교출신 및 지역사회 국회의원 등)를 통한 가시적 성과(향후 일정과 예산 등)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미래를 바라보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이익을 떠나 대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민립 조선대학교는 반드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협조와 민주적 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정지원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학문의 고른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함
- 우리대학이 반드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공성과 자율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대학, 오늘로부터 독립된 대학이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 재정운영의 주체는 반드시 조선대에 귀착되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시민사회의 과도한 참여는 자칫 운영의 효율성, 신속성 등을 방해하여 옥상옥의 폐단과 부작용이 뒤따를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의 독립된 자율성을 확보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기능, 역할, 그리고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 조선대학교 건학이념 실천을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가 추진되어야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름만이 아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하루속히 수립되어 우리 대학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 등 지원을 한 경우에 지원한 만큼 권한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한다.
- 공영형 사립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선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구성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선결문제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학생을 국내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는데 주점을 두고 개인 및 지역사회의 이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조선대는 뿌리 깊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역사회의 인식되어졌고, 지금도 시정의 인식이 그렇다. 이런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타입의 체제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학내의 교직원들도 정의롭고 투명한 사람이 대우받는 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개인의 비리와 부정을 학교가 나서서 방어해 주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행동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게까지도 부병 부패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이 제도가 힘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 구성원들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할 필요성.
- 지역사회 발전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절실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 보고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 조선대학교의 선도적 참여를 기대한다
- 조선대가 국공립대학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가 공영형 사립대학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경영난을 극복하는 길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립대를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대학에 비리가 있다면 좀 더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공립 사립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우리대학에서 국립으로 옮기는 동료들 물어보면 국립이라서....그것이 이유이라면 할수 있다면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대학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대의 경우는 그 지역 발전에 일임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는 공영형에 찬성하는 쪽이다.
-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로 가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 재정적 지원, 투명한 운영, 지역사회 연대 및 활성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규제 강화, 간섭, 강제성의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학교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사립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는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조선대학교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국은 기득권이 안정된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월적 지위 유지에 공영형 사립대라는 껍데기를 씌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특정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을 지정하여 국가세금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국가가 그러한 부담을 끌어안고 공영형 사립대학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지 라는 효과성 문제, 그리고 국가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설립을 이끌어 갈 경우에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사립대학들이 이를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과 대정부 로비를 할 것임이 자명한데,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나 공영성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영형 사립대학을 승인할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영형 사립대를 출범하고 지역(광주 전남 전북 일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서 필요한 업무 및 지식을 위탁 교육하고 그 인력의 일정 비율을 책임 취업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봐야 될 듯 합니다.
- 미래를 위해서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꼭 필요하다
-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교원의 연구역량(연구비 증액) 개선 유도, 타교와 대등한 교원급여 인상, 재학생 장학금 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이다.
- 광주광역시에는 국립대학이 없다. 전남대학은 전남도의 국립대학이지 광주광역시의 국립대학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것부터가 광주 지역사회에 대한 차별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 국가가 광주광역시에 새롭게 국립대학을 만드는 것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갖는 즉,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을 국립화하는 것은 재원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강화, 대학의 정상화 및 인지도향상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 등 다양한 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권, 대학의 구성원, 지역사회는 이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운영체제나 방식, 재정위원회의 문제도 중요하나, 공영형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여론, 관심과 지지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고, 대학의 사회적 공헌이 특히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 되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궁극적으로는 지역 대학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이나 전국을 나누지 않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 지역사회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으면 하고, 현재 주인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립이념과 사회의 기여, 육재육성,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조선대학교의 위상과 역사, 그리고 전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어렵다는 부분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여 해결점을 제시한 후 공영형 사립대의 설립에 당위성을 높이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립대 재정 위기와 지속적인 신입생 기피로 대학의 위상 저하와 재정적 악화가 최근들어 두드러짐. 조선대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할 방법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구성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교내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민립대학으로서의 취지는 좋지만, 주인이 없이 표류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사립대로서 격변하는 미래에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학의 발전방향을 확실히 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설립이념에 맞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 대학이 대학본연의 기능(교육, 연구)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반대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듯이 기존의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이에는 반대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주변 환경이 아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구성원들의 희생이 너무나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앞으로 교육 방법론의 변화(현재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로 인한 대학 재정 수입 변화가 발생되어 대학의 생사문제와 지배구조 변화는 당연하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가 대대적으로 발생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대안으로 공영형 사립대가 한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 과연 어떤 사람이 공익 이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칫 잘못된 낙하산식 추천(혹은 독선적 지역단체 대표의 횡행)으로 대학 본분을 상실하고 우리학교의 격을 낮추게 되지 않을까, 희망보다 걱정이 큼니다.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교육이 아닌 다른 이해를 가진 외부 세력의 개입이 학교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형 사립대에 반대합니다)
-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된다

○ 기타

- 없습니다/ 없음/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6-2>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직원응답)

○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홍보

-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여 무조건 따르고 취할 것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합니다.
-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공유를 통해 진행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 구성원들에게 공영형 사립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길 바람.
-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운영에 있어서 현재 학교 구성원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없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 구성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일 좋을 듯하다.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 확보)

- 조선대학교 미래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역량진단이 진행되면서, 조선대학교의 경우 대학역량진단 지표에 초점이 맞추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타 다른 사립대학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립학교 재정운영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등록금 동결에 따라 교육부의 재정정책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예산집행보다는, 교육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교육수요자에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지표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과, 비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예산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두번째는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운영이 사립대학교보다는 비교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를 추구하는 바도 이와 비슷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립대학은 설립기준만 사립대학일 뿐 운영하는 비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공익의 성격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으며, 공익의 추구는 해가 지날수록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교육부에서 원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조선대학교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공영형 사립대학이 기존의 사립대학보다는 재정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립대학의 설립취지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 필수 전제 라고 사료 됩니다.
-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대학설립 취지를 근간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이 지역을 리더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 유치를 위한 우리 대학의 내부 역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공영형 사립대학교라는 타이틀에 알맞은 형식과 틀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대학과 교육의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사립대와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논의는 자칫 제도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음 제도가 지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결국 제도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접근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대학 운영의 효율성이나 자주성 등은 두 제도 중 어느 하나가 더 잘 보장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오랜 세월 사립대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등이 골고루 조화롭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선대학교는 반드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가야한다
-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대학의 특성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눈앞에 닥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의견을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선대학교의 민주적 민립대학의 태생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시민대학으로의 환원은 구성원들의 반대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영화란 결국 보편적이면서 공익적인 평균화와 객관화를 위해 노출되는 개인의 이익적 부분에 대한 감수가 분명 뒤따르기 때문임
- 결국은 미래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는 눈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대학의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건설적 교육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됨 이를 위한 과제로 지속적 홍보/ 준비/ 거부감해소/ 고용 및 기본권(급여)보존에 대한 안심/등에 대한 불안요소를 연구결과물로 내어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기에 앞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만나지 못했기에 충분히 해낼 수 있지만 두려울 수 있습니다.
-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 국내의 유일한 민립대학인 우리 조선대학교의 정체성과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루속히 공영형 사립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구심점이 없는 대학의 운영은 자유롭고 객관적일 수 있겠지만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의 전환으로 보다 지역사회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대학이 되었으면 하며,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지방대학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활로의 돌파구가 되길 바랍니다.
- 합리적인 학과 통폐합 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해야 한다.
- 위기에 빠져있는 지방 사립대학 특히 그 한가운데에 있는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직원의 감당해야 할 변화와 책임감이 높아지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모두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점 공영학교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 문재인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에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 최대한 빠르게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을 하여 학교가 안정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사립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대학의 공공성 문제를 융합한 현실 가능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

-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따라만 가기 보다는 우리학교 현실에 맞게 추진여부가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 대학 지배구조 이슈(이사진과 총장) 및 교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의 역할

- 우리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에 외부인사 참여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일 거라 생각합니다.
-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나, 기존의 이사선임 방식이나 조선대학교의 목소리를 내는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동창회 등의 운영현황을 보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우려 된다. 그들은 대표 몇 명 위주로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 법인과 대학 집행부 그리고 대학구성원(대학자치 단체 포함)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정위원회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사회적 책무성 확보

- 학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재정이 건전할 경우에는 전환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가 재정이 악화되는 시점부터 공론화 된것 같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인 없는 대학이라 하기 어려운 학교법인의 재정확충을 위한 자산 활용에 있어 변화가 될 수 있는 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록 6-3>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학생응답)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 확보)**

- 공영형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나오는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인지하고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조선대는 입결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교수님들의 쟁쟁한 학벌과 전공수업의 심화적 수업력으로 웬만한 지방대학에서는 수준 높은 강의력(전공수업에서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역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인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고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된다면 입결도 상승하고 더욱 좋은 이미지의 대학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학생을 위한 투명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 공영형사립대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범대학 교육학과 재학생입니다. 우리대학은 광복 후, 국민들이 십시일반하여 설립한 민립 대학입니다. 따라서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나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의 공공인사와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조선대학교가 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합니다. 더군다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산하 2개의 전문대학 그리고 4개의 중. 고교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병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대학이 발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곳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비단 조선대학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립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발전과 기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랜기간 일부 인사의 독단적 운영과 주인없는 대학미명하 각종 알력 다툼에 시달려 왔습니다. 학생들은 변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면 그 변화는 설립초기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학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지역이 설립하고, 지역민이 운영해야 할 자랑스런 역사를 지닌 민립대학이라는 점입니다.
- 어느 지방의 애물단지 대학의 학생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숭고한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상생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 공영형 사립대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은 곧 지역민의 바람일 겁니다. 부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선정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1.등록금인하 2. 공영형 사립학교 확정 3.단과대학 학과별로 취업팀 창설
- 공영형 사립대 시범대학이 된 만큼, 타의 모범이 되도록 사회적 책무성, 학생의 의견듣기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됐으면 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가 되는 것에 찬성 합니다
-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 국립대처럼 대학 간 교환 파견 활동 확대 바람

- 완전 찬성입니다!
- 민주적인 운영방식
- 조선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학교 비리가 너무 많다고 느꼈다.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고 있다. 공영형으로 전환하여 횡령 각종 비리 등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하고 퇴출 시켜야 한다. 최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
- 투명하지 않은 사학재단의 학교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재정적 지원과 감사가 이루어지면 높아진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현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더욱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없습니다
- 현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학교입니다. 그동안의 잘못 되었던 운영에 대해서 정부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 현재 조선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의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공영형 사립대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 꼭 필요합니다.
- 비리가 문제 될 바에는 공영형 사립대로 바뀌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
- 현재 조선대는 소위 말하는 지잡대의 이미지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것 때문인데, 한시라도 빨리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여 역량강화대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던져 봅니다.
- 반드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어야함!
- 민립대학으로서의 조선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영형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아주 좋습니다.
- 대학의 발전이 크게 기대됩니다
- 투명한 운영 및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학생부담(등록금) 감소, 취업 및 교육환경 개선

- 등록금 인하 좀 해주세요
- 학생의 입장에서 사립대의 큰 단점이 등록금이 비싸다는 점인것 같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로 변환된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탈피 할 수 있을 것이다
-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학기 등록금 반만 때[떼어] 주세여 교수들 수업 대충하는데 돈 아까움
- 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세요.

- 지역 공기업과 연계해서 취업도 보장되면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교육이란 공간, 시간적 제약을 넘어 배움의 열의가 있는 자에게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점에 대해 시험은 오프라인과 시험신청 비용, 온라인은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학생들에게 학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정위원회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민주성/사회적 책무성 확보)

-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반드시 공영형 사립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등록금은 내려간 적이 없는데 교육의 질이 높아진 적 또한 없어보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 되어지는 지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조선대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는 가운데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설문조사하시는 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잘 마쳐주셔서 조선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해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현재 일반 사립대학 체제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등록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최근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져 학생들의 관심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된다면 재정 투명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조선대학교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선대학교를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공영형 사립대의 전환이 조선대학교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

- 사실 아직 정확히 어떠한 내용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 그걸 체감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변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그 변화를 겪어보고 싶습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해야한다
- 학교 구성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 지배구조 이슈(이사진과 총장) 및 교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의 역할

- 대학교 구성원에 대한 강력한 평가도 이루어져서 대학구성원이 주인의식을 품을 수 있도록 또 무능한 직원 및 교수 등의 구성원들의 주머니로 피땀이 녹아있는 등록금 및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한다.

- 외부 인력을 끌어들이며 서로 견제하여 좀 더 투명한 조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영형 사립대 일 지라도 지역사회보다 학생이 우선이면 좋겠습니다
- 교수와 학생 간의 의견교환, 교수와 교수 간 의견교환은 권위에 의해서 사고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된다.

○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 반대

- 사회적 인식만을 고려해 공영형 사립대를 추구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
-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이지, 왜 공영형 사립대학이 됩니까?

<부록 6-4>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자유의견 (시민응답)

○ 조선대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 확보)

- 투명한 운영과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학교운영을 요망
- 제발 좀 해야 하는 곳
- 처음시도라 잘 갖추어져서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고 지역을 위했으면 한다.
- 투명하게 운영하길 바랍니다.
- 조금 더 투명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
- 경영의 투명성
- 취지에 공감하며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임
-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하며 민주적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투명성이 확대되어서 기존에 있던 비리를 막고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키워서 지역사회발전과 학생들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장점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찬성합니다
-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 문제가 많다. 비정규직 강사 문제도 그렇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수업의 질도 떨어진다. 전남대 처럼 일반인들에게 도서관이[라]도 개방되어야 하고, 학비를 누적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학생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운영이 투명해지고 공적지원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생각을 가진 학교가 될 것이다.
- 좀 더 수업료도 현실화하고, 공공성격의 사립대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 사립대학으로 돌려야 된다.
- 이름만 공영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지역 발전에 도움 되었으면 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최 우선.
-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학교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쓰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광주에서 전통있는 학교가 살아있어야 하므로 공영형 사립대라도 해서 유지 되었음 좋겠다
- 제발 투명
- 현 사회에서는 대학때의 이용한 등록금 학자금으로 고생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영형 사립대로 바뀌면서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인재들이 학교 경영에 참여 하여서 민주적으로 대학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해졌으면 함
- 빨리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졸업생을 위한 혜택강화
- 투명한 운영
-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보다 투명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실질적이게
- 잘 부탁
- 교육건전성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진정 학생과 지역을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히 보입니다.
- 등록금을 좀 인하해주면 좋겠다
- 투명성
- 나 말고 내 가족 중에 두 명이 조선대 출신인데, 제발 제대로 운영해서 좋은대학 만들어 봅시다.
- 지역사회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공모제도 도입
- 예전부터 말 많았는데 이번기회로 바뀌면 좋겠다
- 처음이야 뼈격거리겠으나 후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교육의 질적 향상
- 투명성 있고 지역 발전에 더욱 힘써 주세요
- 대학의 사유화를 없애고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역인재 육성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원 채용 등의 고용창출에 노력
-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학경영이 될 거 같습니다
- 설립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교육과 학생들의 교육에 맞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이 조선대학교가 인구절벽에 당면해 있는 현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해도 또 내부 인사와 결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영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운영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방침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합니다.
- 투명성
- 학생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가는 정책 추진
- 운영의 투명성
-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학문의 질적 성장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됨을 인식하는 조선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수 학생! 삼박자가 잘 맞아야합니다.
- 투명한 관리로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 미래 지향적으로.
- 감사 강화로 충분합니다
- 경영진 투명성
-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투명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 좋겠다
- 등록금인하

- 보다 투명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및 사회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 조선대학교는 조금은 시끄러운 학교인 것 같다. 앞으로 잡음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며 정직하고 투명한 대학교가 됐으면 한다.
- 잘모르겠다
- 투명성에 의심이 가네요. 공정한 경영 투명한 경영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관계없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공립의 중간으로 볼 수 있으며 사립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임
- 중지를 모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 미래의 인재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할 것 같네요
- 좀 더 투명한 운영자금 계획 실천과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모색
-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 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조선대가 첫 공영형 사립대가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는 만큼 전보다 투명한 재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길 기원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게 되면 대학 내 이용시설 등을 지역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생각함
- 채용비리 기타 비리 등을 근절하는데도 공영형 사립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 청렴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발전에 좀 더 기여해 주세요
-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어야한다
- 찬성
- 올바르게 투명하게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 괜한 외부인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함 재정에 대한 감사 정도만 제대로 감시되면 좋을것 같음
 괜한 외부인 끌어들여서 괜히 엉뚱한 의견이나 엉뚱한 일에 쓸데없는 인력, 시간, 돈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필요한게 무엇인지,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률이 낮은 세대가 왔을 때 대학에 대한 메리트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대학 운영진의 인원감축이나 심각하게는 문을 닫는 상황도 올 수 있음을 미리 염려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 투명
-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많은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영입되어 투명하고 질높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 등록금 인하 되었으면 합니다
- 민주적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자유로운 의견들을 수립 할 수 있으면 좋을꺼 같네요

- 조선대가 사립인 줄만 알았음
- 저 또한 조선대 출신으로서 인재육성을 위한 자율적인 교육과 지역사회에 공헌하여야 하고 좀 더 나아가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연구에 매진 하였으면 좋겠다
- 투명한 운영으로 학생들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비를 반드시 낮추어야한다
- 투명하게 운영되었음 합니다
- 민주적인 학교 운영
-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사립대학의 정보, 즉 봉사활동 등 시민과의 연대 등 정보가 너무 없음 그리고 공영형 사립대가 되든 안되든 일반시민에게 주차장을 조금 저렴하게 개방하면 좋겠음(일반주차장 보다 더 비싸거나 비슷함)
-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진보적 발전
- 무조건 공영화
- 잘하겠지
- 사립학교이든 공영형이든 형식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심과 이권의 흐름이 되도록 자라 융화되어 흐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끌고 밀어주면 되는 이상적인 생각을 적어본다.
- 학생들 학습의 질이 높아져서 지역발전의 인재로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 투명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면 좋은 방안인 것 같다
-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 재원에 대한 분배(교원 및 직원 등)를 형평성 있게 편성하여 지급하며, 학교 발전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이사들에 대한 무임금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 보다 더 투명성 있는 학교 행정을 유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 조선대학은 사학비리가 워낙 많았다. 사립대학에 대해 정부지원을 줄이고 자체대학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건비등 너무 방대하여 지출이 많아서 대학스스로 독립해서 정부지원을 줄여야 한다
- 좋은 제도를 받아 들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의 질이 이루어져야하고 총장의 권한이 축소 되어야한다
- 재정을 감사 관리하는 법률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 방만 운영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교수 연봉이 전국 최고라고 들었다.
-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거 같다
- 주민들과의 소통
- 추진되면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간의 조선대는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적인 예였다고 본다.

-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계획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세부적인 운영과정에도 공공성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규칙이 세워지길 바란다.
- 인재육성이 잘 되어야 한다
-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 광주에 큰 두개 대학 전남대와 더불어 조선대가 있다.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 모델로서 시범을 보여서 광주 지역사회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꼭 공영형 사립대가 되어, 한 모범예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조선대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일을 해결해나가길 바랍니다.
- 좋은 곳에 쓰여지길
- 보다 투명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한다
-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 아무래도 학비가 문제가 될텐데, 공영형으로 바뀌며 학비가 줄어도 교육의 질을 수준높게 유지해야함
- 지역 주민들의 문화강습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시켜서 등록금부담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했으면 한다. 질의내용과 다소 동떨어진 대답 양해 바랍니다.
- 지역발전의 발판을 기대합니다.
- 보다 더 질 높은 교육 향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내용을 실현했으면 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시 재정, 인사 등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재정자립도를 위한 방안이 빨리 구축되었음 함
-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 최근 일어난 잡음을 빠르게 해소하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으면서 초심을 잃지않는 대학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 투명하게 하십시오.
- 맨날 경영비리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진짜 창피합니다.
- 후...건물 그만 좀 부수고 그 돈으로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쉬운방법이 아닐까요?
- 투명한 경영
- 조속한 제도 도입
-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더 발전이 있을 것 같다.
-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정화가 절실하다.
- 학교의 제정비와 학과의 다양성을 추진해야한다.
-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공헌하고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진 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 투명한 절차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 투명하게
- 일단 조선대학교 등록금이 광주 전남권에서 제일 비싸서 합격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조선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의대 치대 빼고는 취직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싸고 한 번 가서 인터뷰 해본적 있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좀 많았다. 그리고 재정문제 때문에 어떤 이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정말 철저히 구현해줬으면 좋겠다.
- 조선대는 비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숨기고 등록금은 허버 높잖아요
-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고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조정하여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다양한 모델을 참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제발 투명성 있게 학교 운영하자
- 투자만이 다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교육관을 펼치는 교육행정가가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진정 무엇이 학생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졸업을 하고나서도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게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 상생하는 지역과 산과 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금만 더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동생이 조선대 졸업생입니다 . 사범대를 졸업했지만 시간제 교사맡곤 길이 없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사립대의 자격증이 광주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문합니다 .(오틀가 없어 시험을 보려하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자녀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서요 .) 그렇게 지역적인 특수성이 강한 조선대 라선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제안해봅니다 .실제 동생의 성악과는 교수와 학생간의 시위로 몸살을 앓아 이미지에 데미지가 컸답니다 .재정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기했으면 합니다 .
- 예산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어야한다
- 지방이나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커지지 않게 운영해야함
- 비리로 인해 자주 메스컴에 나오는데 공정하게 운영했음 한다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과 학생들의 취업
- 밖에서 보기에는 이사회는 민주적 운영이 조선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처럼 보인다
- 본인들도 전문가이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자신들의 일을 확인해 보는 것은 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등록금 비싸다
- 되도록이면 빨리 실행되어 정착 되기를 바랍니다
-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투명성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
- 공영형이 더 낳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특히 광주는 뒤돌아 보면 다 인맥이여서 그 어떤 걸 선택하든 자유롭지 못 함
- 투명성 확보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투명한 운영을 기대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 보다 구성원으로 의견을 토대로 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 같고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에 많은 재정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음 합니다
-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반대**

-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가 생기면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학생들이 더 힘들어 하고 혼란스러워 질거 같아요
- 솔직히 말해서 사립대도 기업이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사립대도 재단이 있지만 그 재단을 설립한 사람의 재산이다. 개인의 재산을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공영으로 바꿀 수 없다.
- 사립대를 만들라
- 공영형 반대한다
- 공영형 사립대가 되면 또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국가세금을 지원하는 공영형은 반대한다.
- 그냥 학교 문 닫는게 최선
-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사립대에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생각 말고 쓰잘떼기 없는 대학이나 없애라

○ **재정위원회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사회적 책무성 확보**

- 납부금 사용용도의 투명성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
- 조선대학교는 돈을 깨끗하게 안쓰는 거 같아요
- 외부 인사를 많이 참여시켜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대학 총예산을 공개하라
- 조선대학교가 뭐가 되었든 간에 제발 비리와 재정에서 퇴하여서는 제발 뒷돈 챙기거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홍보**

-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겠습니다.
-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에게 대학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관심 없는 사람은 완전히 관심이 없어서 설명도 필요할 듯
- 좀 더 생각하고 적어야겠습니다. 아직은 적을 수가 없습니다.
-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 **대학 지배구조 이슈(이사진과 총장) 및 교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의 역할**

- 투명하고 중립적인 이사회 구성
- 총장 및 재단 이사진들의 운영개입을 될수록 배제해야한다
- 기존 관련자 전원 배제
- 이제 방만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소위 말해 조선대 직원들을 하는 없는 땡보라고 했다. 이런 쓸모 없는 이들의 인적청산과 비효율의 구조조정 없이는 공영형은 공염불일 뿐이다.
- 광주광역시청에서 1명 이상, 교육부에서 2명 이상 이사를 임명하여 투명한 학교 운영을 실현시켜야합니다.
- 조선대 근처를 가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아무대나 쓰레기도 버리고 다니던데요 공영형을 떠나서 기본을 좀 갖췄으면
- 조선대학은 관련 인간들이 사심이 없어야 제대로 혁신이 가능하다
- 조선대는 너무 많은 재단측 이사가 정통적으로 오랫동안 지배해온 결과물이 너무 좋지않다.
- 철밥통을 개선해야 함
- 조선대학교는 이사장의 비리부터 뽑아야하지만 그러하지 못하였다. 조선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버리고 탈피해야한다.
- 이사회 구성을 좀 더 투명하게 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운영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 좋은 대학문화를 만들어주세요.
- 적폐세력을 일소하고 이사회를 정상화하라.
- 제가 조선대학교의 한 대학생으로써의 말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비싼 등록금을 걷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만한 혜택과 그만한 취업률과 그만한 실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돈을 걷어가는데 불구하고도 돈이 없다고 적자라고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총장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비리 아니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쇼 총장님
- 외부인사의 이사 영입으로 인한 또 다른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함
-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 확대
- 조선대학교는 재정이 그리 열악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몇몇의 사람들이 호위호식 하고 총장이 직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학원이 비리사학으로 점점 변하는 것 같네요.
- 무엇이던지 투명한 경영이 원칙인데 숨기기에 급급한 총장 및 사외이사들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 다수의 민간단체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오히려 운영에 해가 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인기영합적인 발언이나 제도 등을 하자고 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속단체가 탈퇴의 방식으로 운영위원회 등을 파행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과반이하, 약 30~45% 정도의 민간단체 인사가 참여했으면 하는 의견임
- 총장문제 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 이사회도 투명하지 못하는데 학생회는 오죽할까...
-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자립성 확보
- 전반적 운영에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 인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됨 우수인재를 교원으로 활용하여야 함

<부록 6-5> 공영형 사립대에 관한 재정위원 인터뷰

재정위원 1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립대학 이사의 50%를 공영이사로 선임하여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하여 재정지원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 실행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국립대 법인(예: 서울대, 인천대)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됨. 즉, 국립대 법인은 국가 출자 법인이지만 등록금은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법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공영형 체계로 운영되는 형태임. 아마도 공영형사립대는 출자는 사학재단이지만 운영은 국립대 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현재 지방대(조선대)의 재정구조상 학교법인에서 전입금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는 명백히 발생할 것임. 따라서 현재 체제에서는 정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공영형 사립대의 편입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 편입을 위해 대학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명백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다른 사학법인들보다 조선대학교는 법인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하지만 대학본부와 구성원들 간에 대학재정과 관련된 정보공유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상당한 정보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음. 이는 대학의 효과적인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부재하고, 단기적 의사결정만 해오던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과거 총장, 보직교수,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것임. 현재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단기에산편성과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할 것임. 더불어 대학의 재정운영계획을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 협조를 구하고 갈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교내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 투명성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움. 재정운영은 경제적 영역이지 정치적 영역이 아님. 통찰력 있는 대학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자원을 조달 배분하는 의사결정이 재정운영임. 이러한 재정운영에 민주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구분해야 할 것임. (1) 재정계획의 수립 - (2)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감시절차 - (3) 재정집행의 실행능력.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을 평가하고자 함.

(1) 재정계획의 수립

대학의 재정운영계획은 학교장이 수립하는 것임. 하지만 과거부터 조선대학교는 전문성이 낮은 학교장이 선출되었고, 또한 전문성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보직교수들이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 계획수립자의 능력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이러한 의사결정자의 무능은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과 합리적 조직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임. 더불어 과거 총장들이 운영하던 각종 재정위원회도 전문성보다 정치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해 왔음. 이러한 이유로 과거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이고 비효율적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악화를 막지 못했던 주요한 원인이었음. 비록 재정운영계획이 기획위원회-교무위원회를 통과하여 채택되더라도 관련위원회의 위원들도 재정전문가가 아니므로, 합리적 평가 없이 계획안이 채택되어 실행되는 경향을 보여왔음. 따라서 본인은 대학본부의 재정계획수립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음.

(2) 계획에 대한 감시절차

대학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감시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절차적 과정이 명시되어 있음. 즉,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 이사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감시절차는 대부분 형식적이었으며 실질적이지는 못했음. 그 이유는 위원 및 이사들의 전문성이 낮고, 정치적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비판보다는 각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었음. 특히 대부분 단기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만 있었을 뿐이며, 재정위기가 도래한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계획수립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안의 수립, 평가와 합의 절차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 대학의 계획안에 대한 감시절차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3) 재정집행의 실행능력

재정계획 안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실무부서임. 그러나 실무부서로 넘어와서 세부실행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실행안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 목적달성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음. 따라서 형식보다 실질에 초점을 맞춘 행정력이 필요할 것임.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조선대학교가 호남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선대 구성

원은 대학을 유지 발전시킬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부분적인 희생은 불가피할 것임. 하지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온전히 사립대학의 몫은 아님. 원론적으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대학과 국가가 재정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음. 조선대학교는 사실상 재정기여 재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고 학내 구성원이 효율적 대학 경영을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투입하여 낙후된 지역 사회의 발전에 우리 대학이 공헌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 재정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여 자문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각 단위의 추천에 따른 단순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전문성 요건을 갖춘 위원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예를 들면, 관련 전공 교수, 관련 실무직원 및 기획실 보직역임자, 타대학 재정관련 업무를 역임한 교수 및 직원, 관내 행정조직의 기획예산관련 공무원, 대기업 재정 및 기획업무 종사 경력자 등. 참고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은 회계와 세무 전문가이지 재정전문가(특히 기획)는 아님. 과거 공인회계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공헌한 정도는 미약하다고 판단됨).
- 재정위원회 설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존의 등심위-대평-이사회와 중복된 의사결정기구라는 것임. 따라서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학에서 재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양 의사결정기구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즉 재정위원회 설치 시 의사결정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사립대학의 의사결정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만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현재 조선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위원회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학의 재정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재정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선임하고 심도 있는 대학 재정계획 평가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비율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더 중요함.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선임하고 그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흡수하여 대학발전의 토대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 재정위원회의 외부인사비율은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의 재정기여도가 매우 높다면(예를 들면, 교직원 인건비의 50% 지원) 최대 50%까지 외부인사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그 비율은 낮아져야 할 것임.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국가의 재원이 사립대학에 충분히 투입되고, 재정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존 사립대 의사결정 체계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재정위원회의 도입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재정위원 2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재정위원회 위원이 된 후 급하게 공부를 했음. 회의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살피고 관련 발언을 함.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함.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투명성, 민주성 등 높다고 생각함. 다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봄.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봄. 큰 예시로 최고경영자 과정을 중단했는데, 학교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안타까움.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구성 취지나 구성원 비율은 좋아 보임. 다만, 내용이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타 학교의 경험 상 거의 형식적이고, 일부의 교수님들만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전년 대비 변동사항 말고는 적절한 편성인지를 알 수는 없음. 따라서 사안별, 쟁점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임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 상대적으로 실속 있게 운영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돌고 재정위원회가 노력해야 함

재정위원 3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대학평의원회 등 다양한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며 들은 것이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함.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오

- 동창회에서는 줄곧 원했음. 1.8항쟁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음. 민립대학의 설립정신에도 맞고,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등 좋음.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 조대의 투명성은 상당한 위치에 있다. 주인이 없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대부분 공개하고 있으므로 여타 대학보다 확실히 담보되고 있음.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 조선대는 ‘민주’와 잘 어울림. 동창회가 총장선거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조대가 유일할 것임. 민주적 특성임.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 링크사업 등 호남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학교라고 생각함. 관련된 국고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 의대, 치대, 약대 등이 더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함.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오

- 총장님 이하 고심한 것이 느껴짐. 외부인사를 비율을 높이고 한 것이 객관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진정성이 보여서 좋음. 전문가들을 모셔서 좋음. 매우 만족스러움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현재 약 29%가 된다고 하니, 비율을 괜찮아 보임.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네.

재정위원 4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공영형 사립대학”은 지방 사립대학들의 구조 개혁과 대학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인구 절감의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의 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시오.

-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현재, 지방거점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을 통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대학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지만 대학의 역사나 규모에 비해 아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대학평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나 전문성이나 투명성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민립대학으로서의 특수한 설립역사와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위치 및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재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재정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측면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재정 자문 및 심의 기구들과의 구조변화와 충돌지점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 대학에서 나타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재정 위원회 간의 한계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대학평의원회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의 자문형식의 성격과 재정위원회의 성격이 일부분 중복된다고 생각하며 재정적 부분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구들 간의 단계적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우리 대학의 설립 역사를 고려해보았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생대표의 참여가 증가해야 하고 학생들이 가진 전문성의 한계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책무 향상을 위해 외부 인사의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재정위원회의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사회적 책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기구들과의 구조상 충돌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위원 5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

십시오

- 조선대학교는 지역민의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설립된 민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이지만 공공성을 갖춘 대학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단됨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조선대학교는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예산을 공개하였고, 대학평의회의 전신인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협의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해와 재정은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조선대학교는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예산을 공개하였고,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소위원회, 사업성 예산심의 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편성되고 있어 매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됨.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조선대학교는 등록금 환원율이 150이상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투자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책무성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됨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조선대학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단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된 재정위원회 설치의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됨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정위원회는 대학평의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정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현재의 외부인사 비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재정위원 6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 추진 배경 및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에 가장 적합한 대학이 조선대학교라고 생각하며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은 대학 재정 및 정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 재정운영의 투명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 재정운영의 절차는 민주적이라고 생각되나 특정 단계에서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 사회적 책무성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되나 대학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 졌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심의 결과가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 대학평의회와 재정위원회의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재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 된다면 대학평의회에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자문은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요

- 교수평의회 추천인원을 2명으로 줄이고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인사를 2명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은 우리 대학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무성은 외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어느정도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위원 7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약간 앓(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부정비리 차단, 공공성 높이고, 정부가 운영경비 일부지원)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십시오.

- 공영형 사립대 전환 찬성(개인의견)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현 총장님 이후 재정운영 투명하다고 여김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상/중/하 중, “중” 으로 추정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재정운영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좋은 제도다. 재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각자 제도의 목적, 임무 및 역할 충실, 제도간 기능 중복시 통폐합 등 정비 필요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외부인사 비율은 구성원의 2/3이상(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책무성 향상에 매우 도움(단, 제도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전제)

재정위원 8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동창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잘 전달받고 있고,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십시오.

- 대학도 변화해야 하고, 그럴 때 공영형 사립대의 전환은 바람직함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특정 세력이 재정운영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를 개선해야 함. 재정위원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봄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있다고 봄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 자료가 미리 여유있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위원회 등 보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비율은 괜찮아 보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좋음.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야 함.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상대적으로 실속 있게 운영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위원회가 노력해야 함.

재정위원 9

질문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현 사립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사진 중 일부를 정부에서 파견하여 이사회에 전횡을 막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학 재정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면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3.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주시십시오

- 우리 대학 1년 예산이 약 2,500억원 규모로, 대부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초기 계획이 20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었고, 이 액수는 우리 대학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구성원 누구라도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상태나 의지를 고려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고집하기보다 인천대학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4.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우리 대학의 예산(안)과 결산(안) 자문에 1년 넘게 참여한 결과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는 중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조선대학교의 재정운영이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민주적인 것이 좋다.’ 라는 전제로 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 ‘눈먼 돈’ 이 많고 불필요한 지출이 많은 것을 ‘민주적’ 이라고 하면 민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재정을 좀먹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 6. 조선대학교 재정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대학은 법인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정말 미미한 정도입니다. 거의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사회적 책무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없이 ‘등록금심의 위원회’,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나 ‘대학평의회’와 같은 기구에 더하여 ‘재정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사회적 책무성’을 만족할 수준으로 높이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7.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대학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모든 제도는 운용하는 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다부터 썩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깝기는 하지만 만일 우리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가 된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기구라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8. 재정위원회가 기존의 대학평의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의 기존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평의회’나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재정위원회’와 다른 성격의 기구입니다. 왜 이 기구들과 ‘재정위원회’를 충돌시키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평의회’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자문’ 기구입니다. 새로운 기구인 ‘재정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역할 분담을 조율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9.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외부인사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제가 알기로 ‘공영형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은 거의 1/2의 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학 5: 외부 4 또는 4 : 5).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더 많은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머릿수보다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10. 재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우리 대학은 ‘주인 없는 대학’이라는 오명(또는 장점이거나 단점)을 가진 상황임을 직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학교가 운영된다면 ‘재정위원회’와 같은 ‘옥상옥’ 기구가 필요할 것인가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영형 사립대’가 된다면 전술한 내용과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구가 존재하더라도 잘 운영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된다면 아무리 구속하는 제도나 기구가 많더라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강승구·이민환. 2004. “지방대학과 지역경제의 효과 : 소득창출효과의 관점에서.” 『경제연구』 22권. 3호, 233-264.
- 고영구. 2012.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중요성, 위기와 대책.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 서울: 201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고영삼. 2003. 『울산지역 국립 종합대학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서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7-74.
- 구균철. 2014.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9권. 1호, 33-75.
- 김명연. 2018. 『공영형 사립대학의 운영방안과 쟁점. 공영형 사립대학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평택: 전국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협의회 간담회, 18-43.
- 김명연. 2019. 『지방사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국가균형발전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의 의의.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광주: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19년 특별세미나, 1-15.
- 김명연. 2020.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정책의 의의” 『경희법학』 55권 1호, 35-69.
- 김미란. 2014.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및 시사점” 『The HRD Review』 17권. 6호, 48-60.
- 김병규. 2017. “학생이 없다” ... 저출산 위기에 日 사립대들 공립 전환 러시. 연합뉴스 (2월5일).
- 김봉철. 2012. “재단법인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제3자 기부” 『교육법학연구』 24권. 1호, 25-44.
- 김성재. 2017. 『조선대 정이사체제의 붕괴와 극복 방안』 광주: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주관, 조선대학교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공익형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 김재훈. 2015. “지방교육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재설계” 『한국지방재정논집』 20권. 2호, 35-69.
- 김정희. 201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연구” 『지방정부연구』 17권. 1호, 105-135.
- 김진영·장덕희·최영훈. 2015.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R&D 예산지원이 지방정부의 R&D 예산지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331-334.
- 김현국. 2016.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안” 『우리교육』, 82-91.
- 김현진. 2006.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조사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권. 1호, 313-337.
- 김훈호. 2014.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 재정구조의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권. 4호, 297-326.
- 나중식(2002), 『예산정치론』, 서울: 형설출판사.
- 문명현. 2018. “일본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

- 구』 19권. 2호, 269-292.
- 문미성. 2010. “미국 지방정부의 기술혁신 정책 연구” 『정책연구』, 1-84.
- 문상일. 2019. 『인천대학교의 공영화 과정과 과제.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광주: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19년 특별세미나, 16-20.
- 민기. 2004.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8권. 2호, 185-200.
- 박지윤·조정래. 2014.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권. 4호, 417-447.
- 반상진. 2015.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패러다임 탐색” 『공학교육연구』 18권. 2호, 14-26.
- 반상진. 2016.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의 재정 변화와 회계운영의 쟁점과 개선 논의” 『教育行政學研究』 34권. 2호, 147-170.
- 반상진. 2017.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教育財政經濟研究』 26권. 2호, 93-118.
- 백일우·김동훈. 2012. “교육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교육투자 수익 분석-더비 도구변수를 이용한 학교급별 수익률 추정” 『교육재정경제연구』 22권. 1호, 93-111.
- 백종윤·조연주·최영훈. 2009. “지방정부의 대학 연구개발 지원 규모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3권. 4호, 359-380.
- 변기용·손인영. 2018.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권. 2호, 51-79.
- 서영인·최상덕·김지하·문보은·박상미. 2019.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손경미·안영훈. 2011. 『대학과 지역사회 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65-295.
- 신현호. 2010. “공기기업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노동연구』 19권. 127-169.
- 신희권. 2007.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 지역혁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간 협력 방안” 『사회과학연구』 18권, 49-66
- 안종석 외. 2012.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안현호. 2018. 『공영형 사립대학 의의와 효과. 공영형 사립대학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평택: 전국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협의회 간담회, 11-17.
- 연덕원·임은희. 2019.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방안』 서울: 대학교육연구소 12호.
- 염대봉. 2015. 『대학시설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도시재생』 광주: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41-253.
- 윤지관. 2015. 『대학구조조정 국면에 대응하는 한국 대학개혁 대안 정책』 서울: 한국대

- 학학회 대학구조개혁 정책대안 발표회 자료집, 1-49.
- 윤지관. 2017. “변혁기 대학체제 개편과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담론 비판: 미국 및 프랑스 사례와 관련하여” 『비교문화연구』49권, 181-199.
- 이건근. 2018. “지방분권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 『민주평화연구』1권. 1호, 37-???
- 이건근. 2019. 『조선대학교의 공영화 가능성 진단.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 광주: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19년 특별세미나, 21-37.
- 이건근. 2020. “사례로 본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조건” 『인문사회21』 11권. 1호, 321-330.
- 이건근·정종희. 2020. “공영형 사립대의 지역균형발전형 재정위원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권. 2호, 717-730.
- 이은민. 2016.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방송정책』 28권. 15호, 1-22.
- 이종열. 2010.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서울: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43-153.
- 이태희·박소은·김태현. 2016.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1권. 1호, 57-75.
- 이필남 외. 2010.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필남. 2011. “국립대학 정책비교 분석 및 시사점” 『비교교육연구』21권. 1호, 1-30.
- 임승달·권영섭·변세일. 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 임재홍. 2012.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법학연구』20권. 1호, 137-162.
- 임재홍. 2015.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교육청.
- 임재홍. 2017.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법 제정과 추진 방향,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대전: 전국교수노동조합 토론회발제문
- 임재홍·강남훈. 2015.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교육청.
- 장은하·강현주. 2018. “산학관 협력을 통한 대학의 지역인재양성 방안: 전라북도 J대학교 산학관 커플링 사례를 중심으로” 『HRD연구(구 인력개발연구)』20권. 3호, 299-329
- 정수진·이선영. 20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 협력시스템 개발” 『경영교육저널』4권, 243-259.
- 정순여·김순기·이창대. 2004. “정부조직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참여와 공정성 지각이 예산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4권. 2호, 1-35.
- 조선대학교 링크+. 202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3차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조선대학교.
-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2019. 『2018-2019 조선대 혁신위원회 백서』광주: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 조선대학교.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조선대학교.

- 조선대학교. 2020.4.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조선대학교.
- 조선대학설립동지회기념사업회. 2009. 『조선대학교 발전약사: 설립정신 구현과 민주화 과정을 중심으로(1946~2000)』. 도서출판 신성.
- 지병근. 2018. “조선대학교의 공영형사립대 추진 현황과 과제” 평택: 평택대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역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대학의 공공성과 공영형사립대학) 자료집.
- 지병근. 2019a. “지방정부 연계형 공영형 사립대학 모델” 공영형 사립대학의 특성화 모형 『지역밀착형 공영형사립대학과 지방정부연계형 공영형사립대학』 01. 17. 대구대학교. 교육부 공영형사립대학 정책연구단. 18-37.
- 지병근. 2019b.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백서(2018-2019)』 광주: 조선대학교 혁신위원회.
- 지병근. 2019c. “총장직선제의 현실과 과제: 조선대 총장선거(1988~2019) 사례분석” 『교육문제연구』 32권. 4호, 137-162.
- 지성구·박성환. 2013. “대학 예산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이 예산만족과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립 H 대학을 중심으로” 『회계연구』 18.3. 1-20.
- 채원호. 2002. “일본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헤게모니와 지방대학: 지방분권개혁과 대학의 구조개혁” 『인문연구』 42권, 193-224.
- 최기성. 2015. 『대졸 청년층의 교육투자 및 편익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최영훈·백종윤. 2009. 『대학과 지역발전의 관계』 부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25-441.
- 최정인·문명재.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지방정부연구』 21권. 2호, 305-323.
- 하봉운. 2011.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전략 연구” 『산업경제연구』 24권. 3호, 1323-1342.
- 한국교육개발원. 2013. 『지방 대학과 정부, 기업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해외 동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상훈. 2001.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개발연구』 28권, 129-152.
- Ahmad, Abd Rahman, Alan Farley, and Moonsamy Naidoo. 2012. “The Study of Government-University Relationship in Malaysian Higher Education System.”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Vol. 5, No. 5, 25-34.
- Akabayashi, Hideo. 2006. “Private Universities and Government Policy in Jap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Vol. 42, 17-19.
- Calderon, A J. 2018. 『Mas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 Revisited』. Melbourne: RMIT University.
- Chatzinikolaou, Dimos, and Charis Vlado. 2019.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Linkages and the Helix Theor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y of Th

- essaly, Department of Economics, Volos, Greec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Economics. INSTITUTIONS & THE KNOWLEDGE ECONOMY.
- Corten, Rense, and Jaap Dronkers. 2006. “School Achievement of Pupils from the Lower Strata in Public, Private Government-dependent and Private Government-independent Schools: A Cross-national Test of the Coleman-Hoffer Thesis.”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Vol. 12, No. 2, 179-208.
- Dagnino, Renato, and Léa Velho. 1998.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on the Periphery: the University of Campinas, BrazilMinerva』, 229-251.
- Delpierre, Matthieu, and Bertrand Verheyden. 2014. “Student and Worker Mobility under University and Government Competi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10, 26-41.
- Frietschler, A. 2009. “Growing Government Demands for Accountability vs. Independence in the University.” in A. Lee Fritschler, Paul Weissburg and Phillip Magness, eds. *Liberal Education*. New York: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CQ Press. 40-47.
- Levy, Daniel C. 2013. “The Decline of Private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Policy*. Vol. 26, No. 1, 25-42.
- Leydesdorff, Loet. 2012. “The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forthcoming in: Elias Carayannis and David Campbell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Springer.
- Luke, Hanabeth, et al. 2013. “Developing the Lismore CSG Poll—A University/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Vol. 15, No. 3, 6.
- McKinsey and Company. 2012. 『The world at Work: Jobs, Pay, and Skills for 3.5 Billion People』. New York: McKinsey Global Institute.
- OECD. 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Richardson, Sarah. 2011. “Higher Education & Community Benefits: the Role of Regional Provision.” *Joining the Dots Research Briefing*. Vol. 1, No. 5, 1-10.
- Startup, Richard. 1974. “Why Students Wish to Reform University Government.” *Research in Education*. Vol. 11, No. 1, 69-82.
- Sutherland, Eric. 1993. “Local Government, University and Management Education for the 1990s.” *Strategic Change*. Vol. 2, No. 5, 293-297.
- Wachenchauer, Rosita, Osvaldo Clúa, and María Feldgen. 2007. “Work in Progress—Promo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itiative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 *37th Annual Frontiers In Education Conference -Global Engineering: Knowledge Without Borders, Opportunities Without Passport*

s. IEEE: T2E1-2.

濱口道成. 2014. 『高校と大学』. IDE: 566, 2-3.

신문기사

- 김미란. 2016.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교육 대응 방안” 「교육개발」 http://edzine.kedi.re.kr/2016/autumn/article/world_01.jsp(검색일: 2020. 3. 2.).
- 김병규. 2017. “‘학생이 없다’ ... 저출산 위기에 日 사립대들 공립 전환 러시” 「연합뉴스」(2월5일), <http://yna.co.kr/view/AKR20170205025200073>(검색일: 2020. 3. 2.).
- 김성재. 2014. “조선대, DJ정부 때부터 논의되던 공영화 왜 아직도...” 「프래시안」(1월 5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no=110434#08gq(검색일: 2019. 5. 30.).
- 박경미. 2018. “정책자료집_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보도자료, <https://khei-khei.tistory.com/2290>(검색일: 2020. 4. 20.).
- 반상진. 2017. “대학체제 대전환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체제 혁신” 「프래시안」(7월 10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62845#08gq(검색일: 2018. 4. 20.).
- 변기용. 2018. “고등교육 재정과 공영형 사립대”, 교육부(2018.03),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03&nttId=8238(검색일: 2020. 4. 30.).
- 손봉선. 2018. “2018.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명분, 공영형 사립대 과연 가능한가?” 「매일일보」(10월 11일),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59584>(검색일: 2019. 6. 7.).
- 오소혜. 2020. “상지대·조선대·평택대 등 ‘공영형 사립대’ 선봉에 섰다”, 『Daily U's Line』(1월 29일),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0>(검색일: 2020. 4. 4.).
- 채경욱. 2016. “일본 교육혁명 주목하라”, 「매경포럼」(4월 25일),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6/04/299500/>(검색일: 2020. 4. 5.).
- Nietzel, Michael T. 2019. “College Enrollment Declines Again. It’s Down More Than Two Million Students In This Decade”, *Forbes* (Dec 16), <https://www.forbes.com/sites/michaelnietzel/2019/12/16/college-enrollment-declines-again-its-down-more-than-two-million-students-in-this-decade/#1388b56f3d95>(검색일: 2020. 3. 10.).
- Selingo, Jeffrey J. 2013. “Colleges Struggling to Stay Afloat” *The New York Times* (April 12). <https://www.nytimes.com/2013/04/14/education/edlife/many-colleges-and-universities-face-financial-problems.html>(검색일: 2020. 1. 12.).
- Tamrat, Wondwosen and Damtew Teferra. 2018. “Government-University Relations: A Troubled Matrimony” *University World News*.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81009144147891>(검색일: 2020. 1. 12.).

Wong, Alia. 2016. “Where Are All the High-School Grads Going?” *The Atlantic* (Jan 11). <https://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2016/01/where-are-all-the-high-school-grads-going/423285/>(검색일: 2020. 3. 11.).

웹사이트

교육부. 2014.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m=0201&s=moe &page=59&boardID=339&boardSeq=52452&lev=0&opType=N>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https://kess.kedi.re.kr/post/6684864?itemCode=04 & menuId=m_02_04_02

교육부. 202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9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main/>

대학재정회계센터. <https://support.kasfo.or.kr/>

법제처. 2015.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152&lsId=&efYd=20160101&chrClsCd=010202 &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조선대학교 홍보팀. 2020. [2020학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20학년도 상반기 호남·제주권 1위 명문 사학의 긍지! 조선대학교! . <https://www3.chosun.ac.kr/chosun/217/su 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Y2hvc3VuJTJGMTE3JTJGMjE1NzZmJTJG YXJ0Y2xWaWV3LmRvJTNG> (2020.06.12.)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한국사학진흥재단. 2017. “사립대학재정분석보고서”, http://ebook.kasfo.or.kr/new/html /kfpp/book_view.html?UserDumy=kfpp&gid=170918092601428&sid=02&bid=180412132 841486

한국사학진흥재단. 2018&2016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분석자료집”, http://ebook.kas fo.or.kr/new/html/kfpp/book_list.html?UserDumy=kfpp&gid=170918092601428&sid=03 &gnum=5&snum=3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7. “Table 317.10. Degree-granting postsec ondary institutions, by control and level of institution: Selected years, 1949-50 th rough 2016-17”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programs/digest/ dl7/tables/dt17_317.10.asp

文部科学省. 2020. “私立学校の振興”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mai n5_a3.htm